



2022.12.31.

국회미래연구원 | 연구보고서 | 22-17호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 이머징 시티즌과 미래 대화

박성원, 박헌석, 이상직, 김태경, 박상훈, 전준, 이승환,
한국미래전략연구소W 외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 이머징 시티즌과 미래 대화



연구진

내부 연구진

박성원 연구위원(연구책임)

박현석 연구위원

이상직 부연구위원

김태경 부연구위원

박상훈 연구위원

외부 연구진

전준(충남대 사회학과)

이승환(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미래전략연구소W

박경숙(대구경북연구원)

양철(강원연구원)

류유선(대전세종연구원)

전희진(전북연구원)

심미경(광주전남연구원)

좌민석(제주연구원)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발 | 간 | 사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창립한 해부터 꾸준히 국민과 함께 미래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미래연구가 일부 전문가나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다양한 개인의 참여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강원도 DMZ 접경지역 주민, 대전과 세종시의 다문화 이주민 여성, 대구의 공연예술인, 전북의 귀농귀촌 청년, 전남 광주의 고령장애인과 돌봄노동자, 제주도의 해녀 등 다양한 시민 120여명을 만나 미래를 전망하고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미래와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에서 시민들은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본 연구는 입양, 장애인, 빈곤, 가축 살처분,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와 사회활동가들을 만나 소수와 약자의 관점에서 우리사회가 어떤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지 연구했습니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하기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만났습니다. 탈북 청년들도 만나 한국에 정착하면서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도 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2021년 국회미래연구원이 제시한 선호미래상으로 '무엇보다 소수와 약자를 돌보는 성숙사회'를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시민들, 소수와 약자, 청년들을 만나서 들은 현재와 미래의 문제들을 분석해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의 긴밀한 협업이 이뤄졌고, 그 결과 '선호미래의 실현성을 높이는 과학기술'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는 시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미래의 징조로 생각된 사진을 직접 찍어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한 '미래사진전'도 공동개최했습니다. 관련 연구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해주신 6개 지역 시민들, 사회활동가, 전문가, 청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는 다가올 미래에 다수가 될 현재의 소수와 약자를 이머징 시티즌(emerging citizen)으로 호명합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는 곧 우리사



회 전반으로 확산할 문제들이며, 이들의 활동에서 미래의 대안을 엿볼 수 있고, 이들을 포용하는 정책이야말로 지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미래 대화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사회에 대안적 미래를 제시하고 진전시키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 현 곤**



제1장 이머징 시티즌의 선호미래	1
제1절 선호미래 연구의 필요성	3
1. 선호미래 연구를 지속하는 이유	3
2. 새로운 선호미래의 필요성	5
제2절 올해 연구의 특징과 프레임	7
제3절 이머징 시티즌의 등장과 성숙사회의 도래	13
제2장 누구에게는 ‘더 불안한’ 미래	17
제1절 미래 인식의 분류	19
제2절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 인식	24
1.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는 사람들	24
2. 미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25
3.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	26
제3장 지역사회 ‘고유한’ 선호미래	31
제1절 6개 시도연구원과 미래워크숍	33
1. 미래비전으로 성숙사회의 의미	33
2. 지역사회의 이머징 시티즌	36
3. 이머징 시티즌의 모집 방법	40
4. 미래워크숍 프로그램	42

제2절 시민들과 미래 대화 45

- 1. 전북 귀농귀촌 청년들 45
- 2. 대구 지역공연예술인들 54
- 3. 강원 DMZ 접경주민들 63
- 4. 대전 다문화 이주민 여성 노동자들 73
- 5. 전남 고령장애인과 돌봄노동자 81
- 6. 제주 해녀들 91

제3절 선호미래의 의미와 실현을 위한 쟁점 101

제4장 소수(약)자의 ‘배제된’ 선호미래 105

제1절 이머징 소수의 정의와 연구 설계 107

- 1. 왜 소수인가? 107
- 2. 잘 듣지 않았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108
- 3. 우리가 만난 삶/사람들 110
- 4. 어떤 식으로 정리했나? 111

제2절 우리가 잘 듣지 않았던 존재들: 입양, 장애, 빈곤, 동물, 죽음 112

- 1. 아이들이 있다 112
- 2.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 118
- 3. 반빈곤의 관점에서 미래를 말하다 125
- 4. 살처분, 자본주의가 생명을 다루는 방식 131
- 5. 죽음, 생애 마지막 시기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 139

제3절 우리가 생각한 것들 150

- 1. 자본주의에서 배제되고, 민주주의로 보장되지 못한 생명들의 이야기 150

2. 민주화 30년의 사회적 단면	151
3. 현장의 목소리	153
4. 선호를 ‘포착’한다는 것	156

제5장 청년세대의 선호미래 15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표: 왜 청년인가? 왜 미래인가?	159
---------------------------------------	-----

제2절 청년 정책연구의 설계	163
-----------------------	-----

제3절 청년들의 현실인식과 선호미래	169
---------------------------	-----

1. 청년들의 현실 인식	170
2. 청년들의 미래 전망	177
3. 청년들의 미래 전략: 회피 미래와 선호 미래	185
4. 청년들의 정책 참여 동인 및 청년 정책의 정당성	190

제4절 이머징 소수로서의 청년	193
------------------------	-----

제5절 탈북 청년들의 미래상과 사회 참여의 정당성	196
-----------------------------------	-----

1. 탈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대화의 의미와 필요성	196
2. 탈북 청년 미래대화(FGI) 결과 분석	203
3. 탈북 청년들의 정책적 참여를 통한 한반도 미래전략 구성의 의의	213

제6장 선호미래 실현성을 높이는 과학기술 217

제1절 선호미래 실현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219
------------------------------	-----

1.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	220
2.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에서 보는 선호미래	223

3. 백캐스팅을 통한 선호미래 실현	225
제2절 선호미래, 정보통신기술로 접근하다	231
1. 실용적 접근의 필요성	231
2. 귀농귀촌 청년: 농업 진입장벽 해소	233
3. 지역공연예술인: 디지털 창작·발표 활성화	239
4. DMZ 접경지역 주민: 생태보전지역 탄소흡수 기여 인정	246
5. 이주민 여성: 실생활 문화수출 활성화	252
6. 제주해녀: 제주 해녀문화 보존	258
7. 고령장애인: 내 집에서 늙어가기	265
제7장 연구의 의미와 미래 과제	271
제1절 연구의 의미	273
제2절 연구의 미래 과제	276
1. 연구의 한계와 개선점	276
2.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277
3. 지역사회의 선호미래 실현의 조건들	281
참고문헌	287
1. 문헌자료	289
2. 웹사이트	296
Abstract	297

〈표 1-1〉 성숙사회의 비전과 지향 가치	6
〈표 1-2〉 선호미래 연구의 목표, 대상, 접근법	12
〈표 2-1〉 응답자의 미래 인식 분포	20
〈표 2-2〉 미래 인식 유형별 연령분포	22
〈표 2-3〉 미래 인식 유형별 거주지역 분포	22
〈표 2-4〉 미래인식 유형별 월평균 가구 소득 분포	22
〈표 2-5〉 미래인식 유형별 주거형태 분포	23
〈표 2-6〉 세대별 낙관론자 분포	24
〈표 2-7〉 거주지역별 낙관론자 분포	24
〈표 2-8〉 세대별 참여론자 분포	26
〈표 2-9〉 거주지역별 참여론자 분포	26
〈표 2-10〉 세대별 기대론자 분포	27
〈표 2-11〉 거주지역별 기대론자 분포	27
〈표 2-1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대별 기대론자 분포	28
〈표 3-1〉 시도별 협업 연구기관, 참여자, 미래워크숍 주제	39
〈표 3-2〉 미래전망워크숍 참여자 모집 개요	42
〈표 3-3〉 미래워크숍 프로그램	43
〈표 3-4〉 미래 트렌드 카드	44
〈표 3-5〉 대안 발굴 활용 질문	44
〈표 3-6〉 전북 미래워크숍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	45
〈표 3-7〉 귀농귀촌 청년들이 꿈은 악당	49
〈표 3-8〉 귀농귀촌 청년들이 꿈은 히어로와 정부에 요구 사항	50
〈표 3-9〉 대구 미래워크숍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	54
〈표 3-10〉 대구 공연예술인들이 꿈은 악당	58
〈표 3-11〉 대구 공연예술인들이 꿈은 히어로와 정부에 요구 사항	59

〈표 3-12〉 강원 미래워크숍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	64
〈표 3-13〉 강원도 인제 거주민들이 꼽은 악당	67
〈표 3-14〉 강원도 인제 거주민들이 꼽은 히어로와 정부 요구 사항	68
〈표 3-15〉 대전 미래워크숍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	73
〈표 3-16〉 대전세종 다문화 이주민 여성들이 꼽은 악당	76
〈표 3-17〉 대전세종 다문화 이주민 여성이 꼽은 히어로와 정부에 요구사항	76
〈표 3-18〉 전남 미래워크숍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	81
〈표 3-19〉 광주전남 돌봄노동자들이 꼽은 악당	83
〈표 3-20〉 광주전남 돌봄노동자들이 꼽은 히어로와 정부에 요구사항	84
〈표 3-21〉 광주 온라인 미래워크숍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	84
〈표 3-22〉 광주전남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꼽은 악당	86
〈표 3-23〉 광주전남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꼽은 히어로와 정부에 요구사항	86
〈표 3-24〉 제주 미래워크숍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	92
〈표 3-25〉 제주 해녀들이 꼽은 악당	94
〈표 3-26〉 제주 해녀들이 꼽은 히어로와 정부에 요구사항	95
〈표 3-2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관련 연도별 지원 실적	96
〈표 3-28〉 해녀어업 보존·육성 및 문화 전승 기본계획에 제시된 해녀 수 변화 결과	99
〈표 3-29〉 이머징 시티즌이 경험한 사회적 문제들과 주요 내용	101
〈표 4-1〉 ‘이머징 소수’ 세미나 참석자	111
〈표 5-1〉 미래워크숍에 참여한 청년들	164
〈표 5-2〉 미래워크숍 질문과 주요 주제	165
〈표 5-3〉 청년세대 인터뷰의 범주와 주제	167
〈표 5-4〉 인터뷰에 응한 탈북청년들	201
〈표 5-5〉 초점그룹인터뷰 과정과 주요 내용	202
〈표 6-1〉 이민자 성별 취업·복지 실태	254

[그림 1-1] 가능-선호-정책 미래의 순환성	4
[그림 1-2] 미래실현성을 높이는 3대 조건	5
[그림 3-1] 전북 미래워크숍 프로그램 과정	46
[그림 3-2] 대구 미래워크숍 프로그램 과정	55
[그림 3-3] 강원 미래워크숍 프로그램 과정	64
[그림 3-4] 대전 미래워크숍 프로그램 과정	73
[그림 3-5] 전남 미래워크숍 프로그램 과정	81
[그림 3-6] 광주 미래워크숍 프로그램 사진	84
[그림 3-7] 제주 미래워크숍 프로그램 과정	92
[그림 5-1]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198
[그림 6-1] 불연속적 혁신과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222
[그림 6-2]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의 'Both and' 프레임	223
[그림 6-3]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연구 프레임	224
[그림 6-4] 'Both and' 프레임의 3차원 확장에 따른 3차원 미래공간	225
[그림 6-5]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의 백캐스팅	227
[그림 6-6] 사회기술로드맵(society-technology roadmap)	228
[그림 6-7] 선호미래 실현 과정과 과학기술의 역할	230
[그림 6-8] 귀농 청년가구가 응답한 정착/영농활동에서 어려운 점	235
[그림 6-9] 농업자동화 AI 상상도	238
[그림 6-10] 농업 진입장벽 해소와 관련된 PEST 환경, 니즈 및 ICT 접근방법	239
[그림 6-11] 코로나19 발발 이후 문화예술 직접 관람 횟수 및 관람률 감소	241
[그림 6-12] 제페토에서 선보인 '잃어버린 얼굴 1895' 주요 장면	243
[그림 6-13] 디지털 창작·발표 활성화와 관련된 PEST 환경, 니즈 및 ICT 접근방법	246
[그림 6-14] 국내 산림의 기능별 공익가치 평가액(2018)	248

[그림 6-15] 생태보전지역 탄소흡수 기여와 관련된 PEST 환경, 니즈 및 ICT 접근방법 ...	251
[그림 6-16] 여성 이민자 산업별·직업별 취업 현황	254
[그림 6-17] 실생활 문화수출 활성화와 관련된 PEST 환경, 니즈 및 ICT 접근방법	258
[그림 6-18] 근력증강 웨어러블 로봇 활용 사례(한국타이어, cj대한통운)	261
[그림 6-19] 지능형 안전 수경 상상 이미지	264
[그림 6-20] 제주해녀문화 보존과 관련된 PEST 환경, 니즈 및 ICT 접근방법	264
[그림 6-21] 주거 지원 인프라,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개념도	267
[그림 6-22] 신체증강 기술 및 반려로봇 기술 상상도	269
[그림 6-23] '내 집에서 늙어가기'와 관련된 PEST 환경, 니즈 및 ICT 접근방법	270
[그림 7-1] 보충성원리에 비추어 행정적 층위에 맞게 강화되는 자치분권 운영도	282
[그림 7-2] 읍면동 단위의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	284
[그림 7-3] 읍면동 생활권 단위 지역발전의 3단계 모델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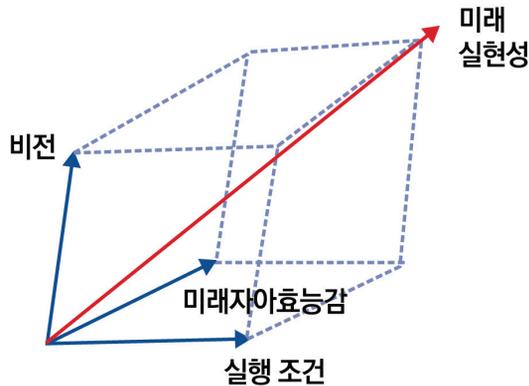
요 약

1 서론: 이머징 시티즌의 선호미래

□ 선호미래 연구의 필요성

- 미래실현성은 선호미래(비전), 실행조건, 미래자아효능감으로 구성
 - 선호미래는 현실의 조건을 지속해서 개혁하도록 동기 부여
 - 실행조건이 형성으로 선호미래에 대한 기대감 제고
 - 선호미래와 실행조건을 연결하는 개인은 미래자아효능감*이 높아야 함
- * 미래자아효능감: 미래사회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

[그림 1] 미래실현성을 높이는 3대 조건



□ 올해 연구의 특징과 프레임

● 이머징 시티즌과 미래 대화

- 이머징 시티즌: 아직은 소수지만 조만간 다수가 될 시민으로, 미래 다가올 문제를 앞서 경험하고 대안을 내놓으려고 노력함
- 이머징 시티즌, 우리말로 창발적 시민으로 호명하고 이들을 찾아 미래대화를 시도하려는 것이 올해 과제의 핵심 목표
-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특별한 주민들, 소수약자를 위한 활동가, 청년세대와 미래 전망 워크숍을 통해 미래 대화

● 과학기술과 사진전을 통한 선호미래 실현 연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협력해 미래사진전*을 공동 개최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선호하는 미래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
- * 미래사진전: 시민들에게 미래의 징조(희망, 기대, 두려움, 불안)를 내포하는 일상의 사진을 찍도록 하고, 이를 선별해 시상하고 국회에서 전시함

2 누구에게는 ‘더 불안한’ 미래

□ 미래를 더 불안하게 생각하는 개인의 특징 조사

● '21년 미래정책 국민선호 조사에서 응답한 3,000명의 미래인식을 분석

- 지역사회 주민, 소수약자, 청년세대 중 미래를 더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목적
-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는 사람들
 - 20~30대 미래 낙관론자 40.6%, 40~50대는 63.2%, 60대 이상은 65.5%
 - 지역별 특징은 나타나지 않아 세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미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 20~30대 미래 참여론자 36.7%, 40~50대는 49.6%, 60대 이상은 50.2%
- 미래를 낙관하지 않기에 개인이 사회변화에 참여해 바꿀 수 없다고 믿음

-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

- 20~30대 미래 기대론자 45.9%, 40~50대 64.7%, 60대 이상 67%
- 수도권의 20대 기대론자 38.6%, 비수도권의 20대 기대론자는 51.2%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0대 인식 차이가 두드러짐

⇒ 분석 결과, 남보다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전망하는 그룹에서 세대별 특성이 두드러졌으며 주로 20~30대가 미래를 낙관하지도, 기대하지도, 참여하지도 않는 경향이 확인됨

3 지역사회의 '고유한' 선호미래

□ 6개 지역주민과 미래대화

- 강원도 비무장 접경지대 주민, 대전 다문화 이주민, 대구 공연예술인, 전북 귀농귀촌 청년, 전남 고령장애인과 돌봄노동자, 제주 해녀 등

- 기후위기, 남북갈등, 불균형 발전, 거주 불안, 가족해체, 기술격차, 환경 파괴 등 심화하는 사회적 문제를 몸소 경험하는 주민들과 미래대화
- 현재와 미래에 겪을 어려움, 어려움을 가중하는 사회적 요인과 대안 논의

- 대안을 찾아야 할 사회적 문제들

- 6개 지역 시민들과 미래 워크숍에서 나눈 사회적 문제와 주요 내용(표 1)
- 주요 내용을 보면 특정 지역과 계층, 그룹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문제들로 분석됨
- 이 문제들을 풀지 못하면 더 많은 시민에게 불안과 좌절을 안겨줌

〈표 1〉 6개 지역주민이 경험한 사회적 문제들과 주요 내용

지역주민이 경험한 사회적 문제들 (지역별 미래대화에 참여한 시민들)	주요 내용
꿈을 빨리 실현하지 못하면 쫓아내는 정부 정책 (전북 귀농귀촌 청년들)	정책 대상의 초기 유입 단계만 집중, 단기에 양적 성장만 추구하는 정책
외형에만 투자, 문화 자산은 축적하지 않는 정책 (대구 공연예술인들)	문화시설, 행사유치에만 지원 집중, 문화를 만드는 창작자의 역량, 창작물 보 호, 창작자 생태계 조성은 소홀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지속적 갈등과 대안 부재 (강원 DMZ 접경 주민들)	중앙정부와 지역 정부 갈등 지속, 거주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정책 과정
사회가 불안하면 소수와 약자부터 차별하는 문화 (대전과 세종시 다문화 이주민 여성 노동자들)	경제적 기여를 기준으로 차별하고, 성장의 기회를 독점하려는 사회지배층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 사회적 돌봄의 약화(전남 고령장애인과 돌봄노동자들)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들의 증가, 돌봄 노동자의 역할 축소
미래세대, 미래환경을 파괴하는 정부의 무책임 (제주 해녀들)	경제발전과 도시개발을 명분으로 환경파괴, 인재 양성 시스템의 관료화

4 소수(약)자의 ‘배제된’ 선호미래

□ 주요 내용

● 소수자의 목소리를 청취

- 다수성보다 소수성, 일반성보다 특수성, 대표성보다 전형성에 주목하고, 이를 ‘이머징 시티즌’의 특성으로 간주
- 연구 질문: 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 관계론적 관점에서 볼 때 소수자는 ‘정치적 아웃사이더’로 정의, 이들을 통해 주류(다수자)의 특징을 확인, 한국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탐색
- 입양, 장애인, 빈곤, 가축 살처분, 죽음의 문제를 다룬 저자 인터뷰

● ‘정상성’에서 벗어난 시설에 갇힌 생명의 목소리

- 이들의 목소리에서 확인한 존재는 생산성과 상품성이 낮다는 이유로 한 국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온 생명

-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생명에게 주어진 공간은 시설이고, 시설에서 생명은 사회적 죽음 상태에 놓여 있음
- 질서에 맞지 않는 생명을 고립된 장소에 가두어 관리하는 방식은 근대 자유주의 산물, 한국은 ‘압축적’ 발전을 겪으면서 발전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
- 다섯 명의 이야기는 1987년 절차적으로 민주화된 이래 30년간 한국 사회가 사람들의 삶을 규정해온 방식
- 자본주의로부터 배제되고, 민주주의로 보장되지 못한 삶의 이야기이며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로 해석

□ 정책적 시사점

● 현장에 바탕을 둔 소수자의 목소리를 의회에서 듣는 것

- 다섯 명이 공통된 목소리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기지 않는다거나, 전문가적 논리로만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비판
- 이들의 목소리는 ‘대화하는 곳’으로서의 의회라는 장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함
- 의회에서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쉽지 않지만 의미 있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의회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5 청년세대의 선호 미래

□ 주요 내용: 청년세대 인터뷰

● 청년세대와 나눈 미래대화에서 발견한 점

- 청년들은 지금 겪고 있는 사회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증언하지 않고, 미래를 상상할 기반이 없는 자신의 상황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토로
- 이러한 “미래를 향한 기반의 부족” 현상은 기성세대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후속 세대의 몫으로 미루어 왔기 때문

- 누적된 유예의 결과, 이제 더 이상 청년들은 이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을지, 그 안에서 자신의 미래는 남아있을지 근본적인 위기의식을 느낌

● 정책적 시사점

- 현재의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거주 문제, 취직의 문제에만 관심, 청년들은 근시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만으로 만족 못함
- 청년들은 자신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는 미래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지금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
- 더 이상 그것들을 후대의 몫으로 떠넘기고 싶어하지 않음
- 청년정책은 '청년을 위한 정책'의 범주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통합적 사회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주요 내용: 탈북 청년 인터뷰

● 탈북 청년들의 한반도 미래 전략 추진의 방향성을 모색

- 탈북 청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특유의 '소수자'의 위치성을 가짐
- 기존의 통일·평화 담론,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에서 한국 사회에서 주변화된 탈북 청년들의 미래전망, 미래선호는 거의 포괄되지 못함
- 탈북 청년의 한반도 미래대화는 다원적 가치 존중 등 성숙사회 요건들에 강한 미래선호를 가짐을 보여줌
- 이들은 국내 탈북민 인구에 대한 포용, 남북한의 비대칭적 격차 완화 및 대등한 관계 설정을 미래실현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지적
- 통일의 가능성은 회의적 시각이 주를 이뤘고 실현가능한 통합의 시나리오로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 관계적 전환을 중요하게 강조함

□ 정책적 시사점

- 중장기 미래전략에 탈북청년들의 선호미래를 포괄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성숙사회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기
- 한반도 맥락에서 통합의 미래 구상에 중요한 담론적 자원 제공

- 탈북 청년들 특유의 ‘소수자’적 위치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미래선호를 중장기 미래전략에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숙사회 비전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의의가 있음
- 탈북 청년들은 초국경 이주의 맥락에서 ‘복수적’ 정체성을 가지며 통합의 상대측인 북한 주민들의 입장을 일정하게 대표하는 미래선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들의 미래선호를 포괄하는 것은 한반도 미래전략 설계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짐
- 한반도 평화 과정, 통합 정책이 진전과 정체, 퇴행을 반복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탈냉전 민주화 이후 영향력이 증대된 국내 정치, 선호의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통합의 미래상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주의적 기반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임
- 중장기 한반도 미래전략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통합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균열, 논쟁이 정치화를 통한 극심한 갈등, 교착에 빠지지 않도록, 갈등하는 모든 당사자를 포괄하는 협의의 공간,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수적
- 한반도 미래전략을 위한 협의주의적 기제를 형성하고 탈북 청년들의 한반도 통합에 대한 강한 선호, ‘복수적’ 정체성, 내부의 이질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한반도 통합의 미래전략을 구축하는 민주주의적 거버넌스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할 것임

6 선호미래 실현성을 높이는 과학기술

□ 주요 내용

● 선호미래 실현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사회변화의 동인임과 동시에 인구, 에너지, 경제, 환경, 문화, 거버넌스 등 다른 사회변화 동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

- 과학기술은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사회기술시스템의 새로운 궤적을 그리는 방식으로 선호미래 실현에 기여하는 역할 수행
- 한편, 선호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수동적인 관망보다는 미래실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도출하는 백캐스팅이 필요
- 이를 위한 방법으로 과학기술-인문사회가 서로 융합되는 사회기술로드맵(society-technology roadmap)을 제안
- 사회기술로드맵은 선호미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확보와 더불어 입법과 정책적 접근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에서 작성
- 이를 활용한다면 미래기술과 정책/제도의 순차적 연계를 고려하여 이머징 시티즌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선호미래, 정보통신기술(ICT)로 접근

- 성장사회의 관성에서 벗어나 성숙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미래상을 실현한 작은 성공담들의 축적 필요
- 과학기술은 성숙사회를 위한 성공담을 축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써,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사례로 제시
- 이를 위해 6개 시·도 지역사회 시민이 처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적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니즈 및 이를 위한 ICT 접근방법 도출

□ 정책적 시사점

● 국회의 역할과 권한 측면에서 할 일

- (입법) 헌법 제127조에서 정의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대하여 경제성장의 수단은 물론 성숙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여도 함께 포함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안을 제안·의결함
 - 이와 연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한 과학기술 관련 법률의 입법도 함께 추진함
- (재정) 정부 부처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미래 의제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국가 프로젝트(National Project) 추진이 가능하도록 재정 관련 계획과 법률을 마련함

- 국가 프로젝트는 이머징 시티즌을 위해 포용, 공존과 같은 가치 실현을 목표로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이 기획은 물론 수행과 확산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함
- (국정) 장기 지속이 필요한 국회 정책과제와 대통령 임기 단위의 정부 국정과제의 정렬과 연계를 위한 정책통합 체계를 마련함
- 이를 위해, 핀란드 의회와 행정부의 미래 의제에 대한 국정 협력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국회 정책과제 추진과 신규 수립에 반영

7 연구의 의미와 미래 과제

□ 이머징 시티즌의 발굴과 이들과 나눈 대화의 기록

- **다가올 미래에 다수가 될 현재의 소수와 약자**
 -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곧 우리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문제들
- **소수약자를 위한 활동가와 미래대화**
 - 이들의 활동에서 우리가 장차 소수와 약자가 될 수 있음을 공유
 - 소수약자를 포용하는 정책의 실현으로 도시와 주거환경의 변화를 앞서 파악하고 대비
- **청년세대와 미래대화**
 - 청년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보이지 않으며,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존재’
 - 미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주체로서 청년 연구의 방향 제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개 시도연구원과 협업

- **지역주민의 현재와 미래 문제를 과학기술로 풀어낼 대안 제시**
 - 6개 지역연구원과 협업, 지역주민을 만나 농업의 진입장벽 해소, 디지털 창작의 활성화, 생태 보존 지역의 탄소흡수 기여 인정, 다문화 이주민의 문화적 배경 활용법, 제주 해녀 문화 보존, 거주지에서 삶을 마감하는 방

안이 필요함을 확인

- 과학기술로 이런 문제를 풀어낼 단초를 제시하고 공유

□ 연구의 한계와 개선점

● 지역주민, 자치와 분권으로 사회의 전환을 추진하는 방법은 미래 과제

- 지역주민, 소수약자, 청년세대 등이 참여하는 풀뿌리시민공론장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법과 제도적 변화를 모색
- 예를 들면, 지역의 문제에 천착하는 지역정당의 창설을 막고 있는 정당법 개정과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

● 지역사회 선호미래 실현의 조건은 지속해서 조사하고 연구

- 전국의 마을만들기, 주민자치회 등에서 실천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조사하고 지역주민이 품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 조건과 정책을 연구
- 지자체는 중장기적 미래비전을 만들고 실현하는 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지역 내부에서 공론장을 형성하고, 실천을 통해 시행착오를 축적하는 과정의 필요
- 대도시와 농촌, 통합시와 농산어촌 등으로 구분해 지역마다 다른 비전과 과제를 확인하고, 다양한 참여를 통한 비전 실현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

제1장

이머징 시티즌의 선호미래

제1절 선호미래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올해 연구의 특징과 프레임

제3절 이머징 시티즌의 등장과 성숙사회의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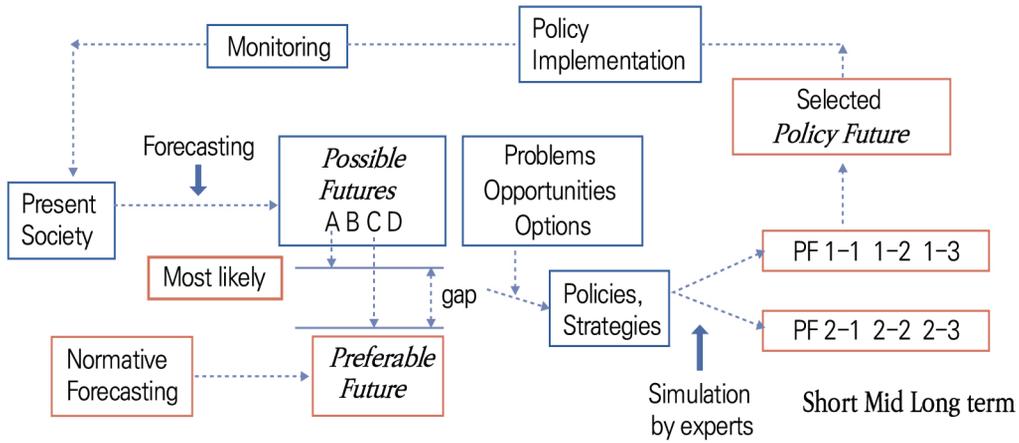
제 1절**선호미래 연구의 필요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선호미래 연구를 지속하는 이유

국회미래연구원은 2018년 설립 이후 해마다 국민과 함께 선호미래를 전망했다. 전국 단위에서 지역별, 성별, 세대별 인구 비중을 고려해 선호미래 예측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5시간 이상 미래를 전망하는 미래워크숍을 개최했다. 시민들을 해마다 수백 명씩 모으고 정교하게 구성된 미래 전망 프로그램에 따라 선호미래를 논의하는 연구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연구기관은 국회미래연구원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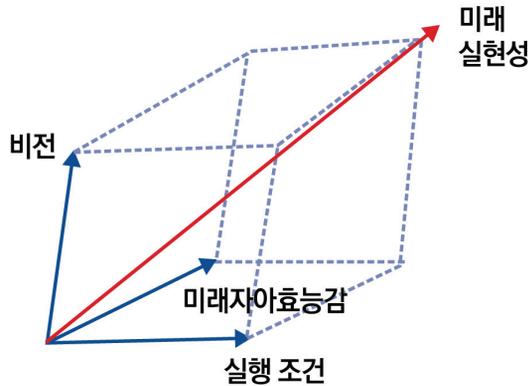
우리가 ‘선호미래’를 지속해서 연구하는 이유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미래연구의 과정에서 선호미래 논의를 종종 생략하기 때문이다. 미래연구는 가능미래(possible futures)의 탐색에서 시작해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선호미래(preferable futures)를 밝혀내고 그 선호미래를 실현할 정책(policy futures)을 도출하는 데서 완성된다(그림 1-1 참조). 그러나 대부분의 미래연구는 선호미래가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민이 어떤 미래를 선호하는지 탐색과 논의의 과정을 생략한 채 미래를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 현실과 유리된 정책이 도출되고, 그 정책은 시민의 생활세계에 스며들지 못한다.



[그림 1-1] 가능-선호-정책 미래의 순환성

선호미래를 논의하지 않는 사회는 필요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거나 추구하지 않는 사회로 볼 수 있다. 선호미래상 없이 정책을 구상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현재의 조건에만 껴맞춘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의 사회적 조건에서만 실현할 수 있는 미래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연속이다. 현재의 사회적 조건을 뛰어넘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어야 대안적이고 창의적인 미래사회상이 도출된다.

미래의 실현성을 여부를 따지려면 비전(선호미래)과 실현의 조건이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그림 1-2 참조). 비전은 현실의 조건을 지속해서 개혁하도록 동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실현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사회는 미래의 비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비전과 조건이 비슷한 힘으로 서로 밀고 당겨야 미래는 역동적으로 바뀐다. 이 구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비전과 실행조건을 연결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미래자아효능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가 이런 신념을 갖게 된 것은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몸소 체감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작지만 변화를 위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런 사람을 ‘이머징 시티즌(창발적 시민)’으로 호명한다.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1-2] 미래실현성을 높이는 3대 조건

역동적인 미래는 기존의 사회적 경쟁에서 승자가 된 주류에게 때론 위협적이다. 새로운 미래는 새로운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통하던 성공의 방식은 제한적으로 작동한다. 이렇므로 사회적 주류는 역동적 미래보다는 안정적 미래, 과거와 별다르지 않은 미래상을 선호한다. 이런 미래상이 지속해서 유포되고 반복되면 사회는 정체되고 시민들의 불만이 쌓인다. 사회에 새로운 도전과제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주류 세력이 기존의 성공 방식을 고집하면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쇠퇴, 붕괴한다.

2 새로운 선호미래의 필요성

지난 4년 동안 국회미래연구원이 시민과 함께 새로운 선호미래상을 논의한 결과, 어느 지역이든, 성별이든, 세대가든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은 ‘경제성장 중심의 미래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박성원 외, 2019; 박성원, 2020; 박성원, 2021). 더 이상 매년 경제성장률만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판단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었다.

경제성장에 관한 한국 사회의 성공 신화와 이를 지속하려는 사회적 관성을 깨기란 쉽지 않다. 사회의 모든 문제 해결이 경제성장에 달려있고,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도 경제

성장이 정체되었기 때문이라는 ‘도식적’이고 ‘습관적’ 진단에서 벗어나는 길은 요원해 보인다.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당과 후보는 달라도 경제성장을 제1의 공약으로 꼽은 것을 보면 국민과 정치권의 선호미래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2021년 국회미래연구원은 ‘성장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선호미래상을 제시한 바 있다(국회미래연구원, 2021). 2021년 초,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15년 앞의 선호미래상을 국민과 함께 전망한 결과 성숙사회라는 미래상이 도출되었다. 성숙사회는 국가 주도적 성장을 지양하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성장을 정의하고 추구하는 사회, 중앙집권적 거버넌스를 넘어 지역사회의 자율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사회,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돌보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표 1-1 참조). 아직은 개념이 정교하지 못해 구체적 실천의 전략을 내놓기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양적 경제성장, 대기업 중심의 성장, 엘리트들만의 성장, 대도시 중심의 성장, 물질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은 선호미래상으로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이같은 숙의토론형 공론조사뿐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연구기관이나 대학, 학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경제중심, 경쟁중심의 성장사회를 극복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재확인했다(박성원 외, 2019; 박성원, 2021; 김석호 외, 2021; 민보경 외, 2020, 한국행정학회, 2021).

그렇다면 이런 국민 공통의 목소리는 적어도 대안적 미래비전으로 인식하고 그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의 비전을 당장에 대체하는 미래상으로 삼기는 어렵더라도 대안적 미래비전의 후보군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선호미래상은 많을수록, 그래서 서로 경쟁할수록 사회 발전에 유익하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의 근원을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창조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1〉 성숙사회의 비전과 지향 가치

비전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
지향가치	1. 국가 주도에서 자율과 분권으로 발전하는 사회
	2. 경제성장 중심에서 다원가치 중심
	3.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따뜻한 공동체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2021

제2절

올해 연구의 특징과 프레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우리는 올해 선호미래 연구를 성숙사회라는 미래비전이 추구하는 여러 방향 중에서 ‘소수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미래’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리사회에서 소수와 약자는 다양하다. 누굴 소수와 약자로 정의할지 의견이 분분하고, 때로는 당사자가 소수와 약자로 불리는 것에 반발할 수도 있다. 소수와 약자의 처지를 자랑스럽게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에겐 소수와 약자의 처지를 벗어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당한 소수와 약자임을 사회에서 인정받는 분위기를 필요로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과 미래워크숍

연구진은 이런 논의를 통해 2022년 선호미래 연구를 지역사회 주민, 소수 약자를 위한 사회활동가, 청년세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경우 그 지역의 특징을 드러내면서 지금까지 미래사회 전망이나 선호미래 탐색의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낼 기회가 적었다고 판단되는 시민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비무장지대(DMZ)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나 경상북도는 대구의 지역 공연예술인들, 전라남도에는 고령장애인과 이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나 활동가들이다.

비무장지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성숙사회가 지향하는 환경적 가치(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등)와 성장사회가 지향하는 경제적 가치(각종 개발사업)가 충돌하는 지역에 거주하는데도 이들이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우리사회가 논의한 적이 거의 없다.¹⁾ 대구의 지역공연예술인은 성장사회의 부정적 영향으로 빚어진 여가 없는 삶이나 과로사회 탓에 자신의 예술적 창작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없었음에도 이런 성장사회에 관해 비판적인 의견이나 새로운 대안 미래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우리가 고령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도 효율성과 능력주의를

1)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된 사업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하고 있지만, 사안에 초점을 맞출 뿐 장차 그런 사업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들이 선호하는 미래상에 비춰 어떤 부정적, 긍정적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논의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웠다.

중시하는 성장사회의 그늘을 더 깊이 파악하고 이들이 바라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듣기 위해서다.

시도별 시민들을 만나 이들이 바라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듣고 분석하는 프로젝트는 17개 시도연구원 협의회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연구기관 중에서 올해 국회미래연구원과 함께 지역주민들과 미래워크숍을 공동 개최하기로 한 곳은 강원연구원, 광주 전남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전북연구원, 그리고 제주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다(가나다 순). 이들 연구원과 함께 미래워크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민 그룹을 살펴보고 이들을 통해 들어야 하는 의견이 무엇인지 논의했다. 미래워크숍에 참여하는 시민 그룹은 성장사회와 성숙사회의 경계선에 있다고 판단되며 성장사회가 던진 여러 사회문제에 많이 노출된 시민들이라고 판단했다.

소수약자를 위한 활동가와 미래 대화

우리는 소수약자로 불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회활동가들도 만나보았다. 전국입양가족연대의 활동가,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을 펴낸 저자,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가축 살처분의 과정을 오랫동안 추적한 사진작가, 한국인의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 등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않았던 소리를 들으려고 했다.

입양을 다룬 이유는 여러 이유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이들을 집단시설에서 키우고 있는 현실과 이 아이들의 닫힌 미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다. 시설에 갇혀 새로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또 다른 시민은 장애인들이다.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도 도시에서 활동하기란 생각보다 무척 어렵다. 이들과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활동가를 만나 이들이 원하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들어보았다.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50%에 육박한다.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빈곤이 형벌화되는 사회에서 이들은 어떤 꿈도 꿀 수 없다. 사회보장제도는 강화되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더구나 사회보장제도의 손길이 닿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의 혜택을 누린다기보다는 '수급자'라는 낙인을 씌우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치욕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우리사회가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때는 가축을 대거 살처분할 때이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퍼지면 사람들은 가축들을 무자비하게 살처분한다. 게다가 대규모 살처분에 동원되는 인간 노동자들은 이 과정에서 정신적 상처를 깊게 입는다. 이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어디 가서 해소연할 데도 없다.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는 인간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비슷하다. 고통스럽게 연명의료로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방법은 거의 없다.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스스로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들도 부족하다. 우리 사회는 죽음을 두려워할 뿐 죽음을 준비하고 삶을 마무리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죽음을 의료문제로만 접근하지, 죽어가는 사람과 남아 있는 사람들의 삶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존엄한’ 죽음은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요원하다.

청년세대와 미래워크숍

우리는 청년세대의 미래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청년을 소수약자로 볼 수는 없지만 소수약자의 특징을 보이는 청년들을 만나보았다. 이들은 직업의 불안정으로 이삿짐을 풀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mobile’의 특징). 이들의 주거지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이 많아 사회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다(‘invisible’의 특징). 그리고 이들은 기성세대에 눌러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낼 기회가 적다(‘silent’의 특징). ‘mobile, invisible, silent’의 특징은 전형적인 소수 약자의 처지를 대변한다.

흥미롭게도 이런 청년의 특징을 내포하는 단어는 자연과 동물의 특징이기도 하다.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Biodiversity: The Dasgupta Review)을 펴내 세계적 공감을 얻고 있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자 파르타 다스굽타는 인간의 환경파괴로 소멸하는 자연과 동물의 특성을 mobile, silent, invisible이라는 세 단어로 빗대어 설명했다(Dasgupta, 2021). 그는 이 보고서에서 자연을 경제활동의 자산(Asset)으로 간주하고, 경제적 성과를 따질 때 자연의 훼손 정도를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적 개념으로 포용적 부(Inclusive Wealth)를 제시하면서, 자연을 자산으로 포용해서 이 자산이 훼손될 경우 부의 크기는 줄어든 것으로 보자고 제안했다. 그의 주장을 청년에게 접목하면 청년들이 mobile, invisible, silent의 특성을 보일수록 우리사회의 미래는 훼손당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부(富)의 크기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청년들에게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 이들은 어떤 미래사회가 도래하기를 바라고 있을까. 선호미래가 있는 청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미래를 실현하려고 할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들고 20명의 청년(만 19~34세)을 만나보았다. 이들이 제기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 그리고 청년들을 괴롭히는 주거와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미래 인식에 관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우리는 탈북청년들도 만나보았다. 여러 이유로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이주한 탈북민 중에서 청년들(20~40세)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 이들이 애초 북한을 떠날 때 가졌던 미래상과 막상 한국에 정착하면서 갖게 된 미래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들이야말로 앞서 언급한 청년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일거리를 찾아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며,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몸을 숨기며 생존하고 있는 이들은 잘 보이지도 않고 정치적 의견을 제기하기도 힘들다.

과학기술과 사진전을 통한 선호미래 연구

이번 선호미래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과학기술과 선호미래를 접목하려는 시도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22년부터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두 연구기관은 선호미래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을 연구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의 선호미래 연구를 '신개념'으로 간주하고, 이 신개념을 반영하는 정보통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두 연구기관은 2022년 공동의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미래사진전, 시도연구원과 협업한 주민 대상 미래워크숍의 결과, 그리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소수약자의 선호미래 실현의 사례를 발표한다. 미래사진전은 미래에 관한 희망, 기대, 걱정, 우려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현장을 시민들이 직접 사진으로 찍어 그 이유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발하는 프로젝트다.

이런 작업을 사회과학에서는 '포토 보이스'(photo-voice)라고 부른다. 사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는 전략이다. 말이나 글보다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현실성과 상징성은 매우 강력할 때가 있다. 특히 공중에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쓸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회의 소수와 약자들에게 사진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문제와 차별, 의견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Wang, 1997). 이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은 사진 작업을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기록하고 대안을 논의하면서 공동체 연대의식을 고취할 수도 있다(Castleden and Garvin, 2008). 한국에서는 공공보건학계에서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방법으로 포토 보이스를 활용한 사례가 있다(유승현, 2015).

우리는 여러 사진 전문 매체와 자체 구축한 ‘미래대화’ 웹사이트(미래대화.kr)를 통해 시민들에게 미래징조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장면을 일상에서 사진으로 찍어 10월11일~21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공모했다. 사진을 제출할 때 왜 이 사진이 미래의 징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지 200~300자의 설명을 붙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시민들이 어떤 미래징조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미래사진전은 12월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상하고 전시했다.

선호미래 연구의 목표, 대상, 접근법

기존 미래비전 연구가 국가적 성장, GDP(국내총생산) 같은 총량적 부의 증대를 위한 방법론에 연구의 목표를 두었다면 2022년 국회미래연구원의 선호미래 연구는 개인적 성장, 다양성 추구, 삶의 질 향상 등을 이루는 방법을 찾는 데 목표를 두었다(표 1-2 참조). 국내 미래비전 연구들이 성장의 주체를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이라고 간주했다면 국회미래연구원의 선호미래 연구는 소수약자, 사회적 경계인, 지역사회 주민에 맞춰 추진되었다. 이들이 맞닥뜨린 곤란한 미래가 조만간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국내 미래비전 연구들이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과 비교해 국회미래연구원의 선호미래 연구는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행 미래워크숍, 사진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인터뷰, 시도연구원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정리하면 국회미래연구원의 선호미래 연구는 시민의 시각에서 미래를 전망하고 선호미래, 회피미래를 논의하며 어떤 정책과 전략을 내놓아야 할지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2〉 선호미래 연구의 목표, 대상, 접근법

	국내 미래 비전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미래 비전 연구
성장의 목표	국가적 성장, 총량 추구(GDP 성장)	개인적 성장, 다양성 추구, 삶의 질(wellbeing)
성장의 대상, 주체	도시 중산층	소수약자, 경계인, 지역사회 시민
연구 방법	전문가 중심 논의	시민참여 미래워크숍, 미래사진전, 인터뷰, 시도연구원과 협업

제3절

이머징 시티즌의 등장과 성숙사회의 도래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지역사회의 시민이면서 국가적 미래사회 비전 작업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 소수 약자를 위한 사회활동가, 정치적 약자이자 각종 사회문제를 안고 사는 청년들을 우리는 ‘이머징 시티즌(emerging citizen, 창발적 시민)’으로 개념화해보았다. 이 세 그룹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지역, 소수, 청년이다.

공간의 측면에서 지역사회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비교해 덜 발전한 곳으로 볼 수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추세가 강화되면서 지역사회는 소멸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사회가 새로운 비전을 실험하고 희망의 씨앗이 될 가능성에도 열려 있다.

사회계층의 측면에서 소수 약자는 다른 계층과 비교해 차별받는 그룹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차별이 쌓이면서 소수 약자의 불만도 함께 누적되고 이것이 언젠가는 사회에 하나의 사건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시간의 측면에서 청년은 기성세대와 비교해 사회적 약자로 비친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은 미래세대를 대표하며 향후 사회를 변화시킬 주체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소수, 청년은 지금의 시각에선 사회적 약자이지만 미래의 시각에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이자 주체로 나설 수 있다고 보는 편이 좀 더 균형적인 시각이 아닐까. 미래학에서는 아직 정보가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낮아 트렌드로 성장한다고 예단하기 어려운 이슈를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라고 부른다. 그러나 트렌드로 성장한다면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킬 이슈들이다. 이런 시각에서 지역 주민, 소수 약자, 청년을 이머징 시티즌으로 보는 것은 어떨까.

이머징 시티즌은 우리말로로는 창발적 시민인데,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하나는 우리사회가 경험할 문제를 앞서 경험했다는 점이다. 이머징 시티즌은 앞서 언급했듯 미래학의 ‘이머징 이슈’에서 그 개념을 빌린 것인데(박성원, 2021), 이머징 이슈가 사회

전반에 확산할 것으로 예측하듯, 이머징 시티즌이 경험한 문제는 이들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다. 곧 우리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겪을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험은 현재적이자 미래적이다.

둘째는 앞서서 경험했기에 대안을 구상하는 데에도 한발 앞서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인간은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도 하고 대응도 하면서 진화하고 발전했다. 현재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의 대응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머징 시티즌과 대화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사회가 겪을 문제와 이를 풀어낼 대안의 씨앗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창발적 시민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대안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창발적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귀중한 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들을 만나 이들이 겪는 문제를 들어보고, 이 문제를 풀어낼 선호미래를 논의하고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서 듣는 선호미래는 앞으로 미래세대가 맞이할 선호미래의 모습과 가까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남 광주에서 우리는 고령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만났다. 고령장애인은 우리사회에서 조만간 다수가 될 시민들로 예측할 수 있다. 고령화 추세에서 대부분 시민은 100세 가까이 혹은 넘어서까지 생존할 것이고, 이들은 여러 이유로 장애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상식적이다. 그렇다면 지금 고령장애인을 만나 이들이 원하는 미래사회를 들어보고 이 미래를 실현할 정책을 내놓는 작업은 곧 대부분 시민이 필요로 하는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일 가능성이 크다.

성장사회에서 고령장애인은 애물단지로 간주할 수 있다. 이들이 집을 나와 거리로 나올 때 도시의 거리는 이전과 달리 매우 '느려'질 수 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을 가정해보자. 그 노인이 휠체어를 끌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다면 그 버스나 지하철은 비장애인이 탈 때와 비교해 정차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이 음식점이나 백화점에 간다면 휠체어를 탄 노인이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거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야 한다. 어찌면 이런 작업은 도시의 높은 (그러나 단기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성장사회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기에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시설에 수용하고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사회가 지금까지 운영되었지 않았는가.

그러나 고령장애인은 사회의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가 급진전 되면, 노인의 경우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성장사회적 관점이 아니라 성숙사회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다. 누구나 이런 소수, 약자가 된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 이전의 작동 방식으로는 사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때가 곧 닥쳐온다.

물론, 이들이 당장에 변화의 주체가 된다거나 근사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될 것으로 평가하거나 전망할 수는 없다. 우리 연구는 이들을 우선 사회에서 눈에 띄게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들의 소수약자적 처지를 드러내고, 이들이 겪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꿈꾸고 있는 변화의 씨앗을 도출해보고 이 씨앗이 장차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가늠해보려고 했다.

올해 우리의 선호미래 연구는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실현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머징 시티즌의 관점에서 필요한 변화를 모색하고, 이머징 시티즌이 바라는 선호미래를 탐색하려고 한다.

제2장

누구에게는 '더 불안한' 미래

제1절 미래 인식의 분류

제2절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 인식

제 1절 미래 인식의 분류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제1장에서 정의한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 인식은 사회 주류의 미래 인식, 그리고 평균적인 미래 인식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지역, 소수, 청년의 세 가지 키워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올해의 연구는 이머징 시티즌과 만나 이들의 구체적인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수합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요 연구 방법으로 삼고 있다.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사전 조사로서 우리는 2021년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머징 시티즌의 시각에서 분석해 보았다. 우리는 수도권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주민들, 청년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미래 인식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단초를 설문조사 결과에서 찾기 위해 작년 연구에서 제시한 미래에 대한 낙관론, 참여론, 긍정론의 개념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3,000명을 대상을 한 설문자 응답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56.8%가 15년 뒤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지금보다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25.4%,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8%로 나타났다.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를 **낙관론자**로 분류한다면 낙관론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에게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긍정의 마음이 엿보인다.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미래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다.

사회적 변화에 관한 개인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45.7%(1,372명)의 응답자들이 개인이 변화에 일조한다고 응답하였고, 33.2%(997명)의 응답자들은 사회적 변화보다는 오늘의 내 일에 집중한다고 대답했으며, 21.0%(631명)의 응답자들은 개인은 사회적 변화의 추세를 바꿀 수 없으며 적응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변화에 개인이 일조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참여론자**로 개념화하였다.

한편, 59.5%(1,784명)의 응답자들은 자신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이 15년 안에 많은 부분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35.3%(1,060명)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미래에 별 관심 없다는 답을 선택한 응답자는 5.2%(156명)로 나타났다. 자신이 바

라는 사회의 모습이 실현될 것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들을 **기대론자**로 분류하였다. 앞서 낙관론자와 비교하면 실현론자는 자신이 기대하는 미래상이 있으며, 지금은 그 미래가 이뤄져 있지 않지만 장차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에서 낙관론자와 다르다.

세 가지 영역의 미래 인식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낙관론자이면서 참여론자이고, 동시에 기대론자일 수 있다. 개인별로 세 가지 영역의 미래 인식의 조합을 따져보면 총 8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표 2-1>은 8가지 유형별 응답자의 미래 인식 분포를 보여준다.

<표 2-1> 응답자의 미래 인식 분포

유형	낙관론자	참여론자	기대론자	명 (%)
(1)	○	○	○	811 (27.03%)
(2)	○	○	×	121 (4.03%)
(3)	○	×	×	197 (6.56%)
(4)	○	×	○	574 (19.13%)
(5)	×	○	×	259 (8.63%)
(6)	×	○	○	181 (6.03%)
(7)	×	×	○	218 (7.26%)
(8)	×	×	×	639 (23.10%)
계				3,000 (100%)

총 3,000명 중에서 낙관론자이면서 참여론자이고, 동시에 기대론자로 분류할 수 있는 응답자가 811명(27.03%)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낙관론자가 아니고, 참여론자도 아니면서 동시에 기대론자도 아닌 응답자는 639명(23.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두 그룹을 합하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절반을 넘는다. 사회변화에 개인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기대하는 미래를 실현하려는 사람이 27%, 현재와 미래 모두 부정적 전망으로 사회변화에 개인의 역할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3%인 셈이다.

이어서 낙관론자이면서 기대론자이지만 참여론에는 동조하지 않는 유형의 응답자가 574명이었다. 이들은 미래를 낙관하고 기대하지만, 사회변화에서 개인의 역할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사대상자의 19%를 차지해 세 번째로 높은 그룹이었다.

참여론자이지만 낙관론과 기대론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259명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그룹이었다. 이들은 사회변화에 개인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자신도 사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란 태도로 살아간다.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사회 참여 그 자체에 더 중요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다.

기대론자이지만 낙관론과 참여론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218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7.26%였다. 이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좀 더 깊이 분석해야겠지만, 기술낙관론자의 유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기술낙관론자들은 기술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풀어줄 것으로 강력하게 믿고 있으며, 기술 그 자체에 발전의 동력이 있어서 사회가 기술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들은 미래를 선불리 낙관하지 않는다. 끊임없는 기술개발의 노력으로 조금씩 사회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진행한 연구는 지역, 소수, 청년의 세 가지 키워드에 초점을 두고 지금 시점에서는 약자의 비전이지만 향후 대안적인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정책 선호에 대해 분석하는 작업에 초점을 두었다.

본 장에서는 2021년에 실시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 인식의 특징에 대해 개괄해 볼 것이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의 특성상 지역, 소수,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렵지만, 수도권 및 비수도권, 광역시 권역 및 일반 시군지역, 연령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한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미래 인식이 대비되면서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유형 (1)과 유형 (8)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 인식에 대해 추론해 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할 것이다(표 2-2).

유형 (1)에 해당하는 낙관론, 참여론, 긍정론에 모두 공감했던 811명 응답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6.5%, 30대가 10%이고, 40대와 50대가 각각 21.9%, 24.5%, 그리고 60대 이상이 37.1%로 나타났다. 반면 낙관론, 참여론, 긍정론에 모두 공감하지 않는 유형 (8)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20대가 24.6%, 30대가 22.4%를 차지했고, 40대와 50대는 15.6%, 14.4%, 그리고 60대 이상은 23%였다.

유형 (1)의 경우 20대와 30대가 16.5%지만, 유형 (8)은 47%로 청년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미래에 대해 낙관하지 않으며, 참여를 통한 변화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며, 원하는 미래가 다가올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하는 비관적인 미

래 인식을 지닌 유형 (8)은 젊은 세대가 절반 가까이 점유하고 있었다.

〈표 2-3〉에서 〈표 2-5〉까지는 유형별 거주지역, 가구 소득 및 거주 형태의 분포를 요약한 자료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권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본 결과 유형 (1)과 유형 (8)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거주지역 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 소득 분포의 경우도 유형 (1)과 유형 (8)이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거 형태의 경우 유형 (1)은 자가 거주가 63.6%이고 유형 (8)은 50.5%로 유형 (1)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자가 거주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 유형 (1)은 37.1%, 유형 (8)은 23.0%로 다소 차이를 보여주었다.

〈표 2-2〉 미래 인식 유형별 연령분포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4세	계
유형 (1)	53 (6.5%)	80 (10%)	178 (21.9%)	199 (24.5%)	301 (37.1%)	811 (100%)
유형 (8)	157 (24.6%)	143 (22.4%)	100 (15.6%)	92 (14.4%)	147 (23.0%)	639 (100%)

〈표 2-3〉 미래 인식 유형별 거주지역 분포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권	그외지역	계
유형 (1)	408 (50.3%)	403 (49.7%)	359 (44.3%)	452 (55.7%)	811 (100%)
유형 (8)	326 (51.0%)	313 (48.9%)	292 (45.7%)	347 (54.3%)	639 (100%)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 서울 및 광역시와 세종시

〈표 2-4〉 미래인식 유형별 월평균 가구 소득 분포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계
유형 (1)	112 (13.8%)	308 (40.0%)	197 (24.3%)	97 (12.0%)	53 (6.5%)	44 (5.4%)	811 (100%)
유형 (2)	110 (17.2%)	292 (45.7%)	118 (18.5%)	60 (9.4%)	30 (4.7%)	29 (4.5%)	639 (100%)

〈표 2-5〉 미래인식 유형별 주거형태 분포

	자가 거주	그 외	계
유형 (1)	516 (63.6%)	295 (36.4%)	811 (100%)
유형 (8)	323 (50.5%)	316 (49.5%)	639 (100%)

3,000명 응답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에 대해서는 박성원 외(2021:121)에 제시되어 있다. 올해 보고서에서 응답자 수 분포를 통해 나타난 결과와 같다. 분석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낙관론, 참여론, 긍정론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수도권 거주자일 경우 긍정론자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낙관론, 참여론의 경우 수도권 거주 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본 경향성으로 보면 미래에 대해 낙관하지 못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참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회의적인 사람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절반 가까이가 20대와 30대의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측면에서 보면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며, 참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는 응답자들과 이와 상반되는 비관적 응답자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에서는 청년들의 특징은 뚜렷하게 드러났지만, 소수자의 미래관, 지역별 미래선호의 특징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분석을 위한 개괄적 논의로서 다음 절에서는 설문조사 자료에 나타난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 인식에 대해 미래관 유형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 인식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는 사람들

청년, 소수약자, 지역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낙관론, 기대론, 참여론 등 미래 인식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세대별, 그리고 거주지별로 낙관론을 가진 응답자와 낙관론에 동의하지 못하는 응답자들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20~30대는 청년을, 비수도권, 비광역시권은 지역의 미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자료로 활용하였다. 2021년에 실시했던 설문조사는 소수약자의 선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고 소수약자를 포괄하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본 절에서는 청년과 지역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 주목한다.

〈표 2-6〉 세대별 낙관론자 분포

	전체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낙관론	1,703 (56.8%)	382 (40.6%)	741 (63.2%)	580 (65.5%)
낙관론 부동의	1,297 (43.2%)	560 (59.4%)	431 (36.8%)	306 (34.5%)
계	3,000 (100%)	942 (100%)	1,172 (100%)	886 (100%)

〈표 2-7〉 거주지역별 낙관론자 분포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권	비광역시권
낙관론	869 (57.5%)	834 (56.0%)	749 (56.4%)	954 (57.1%)
낙관론 부동의	642 (42.5%)	655 (44.0%)	580 (43.6%)	717 (42.9%)
계	1,511 (100%)	1,489 (100%)	1,329 (100%)	1,671 (100%)

〈표 2-6〉과 〈표 2-7〉은 연령대별, 지역별로 낙관론자의 비율을 보여준다. 먼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대의 경우 낙관론자가 40.6%인 반면, 40~50대는 63.2%, 60대 이상은 65.5%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낙관론자의 비율이 확연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세대의 낙관론자 비율이 낮았고, 40~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낙관론자의 비율이 60%를 상회했다.

반면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권과 비광역시권 모두 낙관론자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낙관론자의 비율인 56.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낙관론자의 비율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거주지역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나눴기 때문에 보다 작은 단위로 지역을 나누는 대규모 설문을 실시할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고 볼 때 현재 단계에서는 **지역보다는 세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미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여론자들은 개인이 사회적 변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 응답자들이다. 전체 응답자 중 참여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000명 중 1,372명으로 45.7%였다. 참여론자의 세대별 분포는 낙관론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20~30대의 경우 참여론자가 36.7%로 전체 비율보다 확연히 낮게 나타났으며, 40~50대는 49.6%, 60대 이상은 50.2%로 전체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63.3%에 이르는 청년 세대들의 다수는 참여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표 2-8〉 세대별 참여론자 분포

	전체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참여론	1,372 (45.7%)	346 (36.7%)	581 (49.6%)	445 (50.2%)
참여론 부동의	1,628 (54.3%)	596 (63.3%)	591 (50.4%)	441 (49.8%)
계	3,000 (100%)	942 (100%)	1,172 (100%)	886 (100%)

낙관론과 참여론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사회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지만,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역할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뒤집어서 해석할 수도 있다. 예컨대, 사회변화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추가적인 분석 없이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설의 형태로 제시해볼 수는 있겠다.

〈표 2-9〉 거주지역별 참여론자 분포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권	비광역시권
참여론	685 (45.3%)	687 (46.1%)	602 (45.3%)	770 (46.1%)
참여론 부동의	826 (54.7%)	802 (53.9%)	727 (54.7%)	901 (53.9%)
계	1,511 (100%)	1,489 (100%)	1,329 (100%)	1,671 (100%)

낙관론과 마찬가지로 거주지역별 참여론자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권과 비광역시권 모두 참여론자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긍정론자 비율인 45.7%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3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대론자들은 15년 뒤에 자신이 원하는 미래가 실현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 응답자들이다. 낙관론, 참여론과 유사하게 기대론의 경우도 세대 변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기대론자는 59.5%였다. 하지만 20~30대는 45.9%로 평균과 큰 차이로 낮게 나타났고, 40~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64.7%, 67.0%로 평균을 상회하였다. 청년세대에 속할수록 자신이 원하는 미래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장년이나 고령층에 비해 확연히 낮았다.

반면 거주지역의 경우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나, 낙관론이나 참여론과 달리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들의 경우 기대론자 비율이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거주자들은 기대론자가 57.2%로 전체 응답자 중 기대론자 비율인 59.5%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들의 경우 기대론자의 비율이 61.7%였다. 세대 변수와 비교하면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낙관론과 참여론의 경우 지역별 비율과 전체 응답자 사이의 비율이 거의 같게 나타났음을 고려하면 수도권 변수가 일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0〉 세대별 기대론자 분포

	전체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기대론	1,784 (59.5%)	432 (45.9%)	758 (64.7%)	594 (67.0%)
기대론 부동의	1,216 (40.5%)	510 (54.1%)	414 (35.3%)	292 (33.0%)
계	3,000 (100%)	942 (100%)	1,172 (100%)	886 (100%)

〈표 2-11〉 거주지역별 기대론자 분포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권	비광역시권
기대론	865 (57.2%)	919 (61.7%)	784 (59.0%)	1,000 (59.8%)
기대론 부동의	646 (42.8%)	570 (38.3%)	545 (41.0%)	671 (40.2%)
계	1,511 (100%)	1,489 (100%)	1,329 (100%)	1,671 (100%)

반면 광역시 변수의 경우 광역시 지역과 비광역시 지역 모두 기대론자 비율이 전체 표본 중 비율인 59.5%와 거의 같은 59%, 59.8%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를 분류한 수도권 변수는 단순히 대도시와 그 외 지역의 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수도권 거주자와 비수도권 거주자가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 소멸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거주자 중 기대론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는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기대론자 분포의 차이를 보다 밀착해서 파악해 보기 위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세대 변수가 기대론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 2-12>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수도권의 20대의 경우 기대론자의 비율이 38.6%인 반면, 비수도권의 20대는 기대론자의 비율이 51.2%로 절반을 넘었다.

30대의 경우 기대론자의 비율이 수도권은 45.8%, 비수도권은 49.3%로 20대보다는 차이가 줄었으나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40대 이상의 경우 두 지역 모두 공통으로 기대론자의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20대와 30대의 기대론자의 비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체 표본 중 기대론자의 비율에 비해 확연히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수도권 20대의 기대론자 비율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

<표 2-1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대별 기대론자 분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수도권	기대론	98 (38.6%)	120 (45.8%)	186 (62.4)	186 (62.6%)	275 (68.8%)	865 (57.2%)
	기대론 부동의	156 (61.4%)	142 (54.2%)	112 (37.6%)	111 (37.4%)	125 (31.2%)	646 (42.8%)
	소계	254 (100%)	262 (100%)	298 (100%)	297 (100%)	400 (100%)	1511 (100%)
비수도권	기대론	110 (51.2%)	104 (49.3%)	184 (66.7%)	202 (67.1%)	319 (65.6%)	919 (61.7%)
	기대론 부동의	105 (48.8%)	107 (50.7%)	92 (33.3%)	99 (32.9%)	167 (34.4%)	570 (38.3%)
	소계	215 (100%)	211 (100%)	276 (100%)	301 (100%)	486 (100%)	1489 (100%)

미래에 관한 인식을 낙관, 참여, 기대라는 시각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분석한 결과, 이 세 가지 시각을 모두 보여주는 시민 그룹과 그렇지 않은 시민 그룹이 우리사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두 그룹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세대별 특성이 두드러졌다. 20~30대일수록 후자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세대변수만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자가거주자일 경우 전자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의 경우 미래를 기대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와 비교해 낮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만난 이머징 시티즌은 주거의 안정성, 지역의 소멸 가능성, 지역사회에서 낮은 참여 기회 등으로 미래를 낙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제3장에서 이머징 시티즌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려고 한다.

제3장

지역사회의 ‘고유한’ 선호미래

제1절 6개 시도연구원과 미래워크숍

제2절 시민들과 미래 대화

제3절 선호미래의 의미와 실현을 위한 쟁점

제 1절

6개 시도연구원과 미래워크숍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미래비전으로 성숙사회의 의미

국회미래연구원은 2021년 3,000명의 온라인 조사와 20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형 공론조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비전을 도출했다(국회미래연구원, 2021). 그 비전은 '성장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 진입하자는 것이었다.

경제적 성장은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목표지만, 경제적 성장만이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아니라는 점을 시민들은 분명히 짚어주었다. 시민들은 '성장'이라는 단어 앞에 '국가' '경제'라는 말만 붙여온 우리사회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장이라는 말을 다각도로 해석해보자. 생물학적 관점에서 성장은 '몸집이 커지는 성장',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성장',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치유하는 성장'으로 나뉘볼 수 있다.²⁾

첫째, 몸집이 커지는 성장은 경제성장률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의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씩 하락했다. 대통령의 정치적 진영을 막론하고 벌어진 일이다. 게다가 인구도 감소해 국내총생산(GDP)의 양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미래워크숍에서 만난 시민들이 지적하는 성장사회의 한계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인구만으로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세계시민과의 연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의 개념을 거주인구가 아닌 '관계인구'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진심 바라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한 세계시민이 증가해야 하고, 이들이 우리나라를 자주 방문하면서 국내 경제활동을 늘려가야 한다는 얘기다.

2) 이 부분은 다음의 신문 칼럼에서 발췌 및 인용: 박성원. (2022.5.16.). 새 대통령이 살피야 할 3가지 징조. 한겨레.

둘째,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성장은 출산율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지표를 보면 쉽지 않다. 합계출산율은 지속해서 하락해 2021년 0.81까지 떨어졌다. 성인 남녀가 만나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는 경우가 증가해야 하는데, 추세를 전환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관점을 바꿔보자.

사실, 생물학에서 성장은 세포의 분화다. 이를 사회적으로 적용해보면, 사람이 사람을 낳고, 창업이 창업을 낳아야 하며, 정치적 정당이 정당을 낳아 그 수가 증가하고 다양해져야 한다.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성장 기회를 가로채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고, 양대 정당이 다른 정당의 탄생과 성장을 가로막는다면 성장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

앞서 언급한 두 번째 성장의 징조는 사회적 돌봄의 추세에서 나타날 것이다. 만약, 1인 가구만 증가하고 서로 돌보지 않으며, 고독사와 자살률이 계속 증가한다면 두 번째 성장은 요원하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선택 가족(chosen family)’ 제도를 도입해 혈연과 혼인이 아니어도 원하는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가족으로 신고한다. 이런 가족의 목표는 서로를 돌봐주는 것이다. 돌봄이 확대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생존 기반은 약화한다.

마지막으로, 손상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성장은 건강형평성을 살피야 한다. 정부는 세대와 계층, 사회경제적 위치, 거주지역, 성별에 따른 건강 격차, 산업재해율, 과로사와 과로자살률을 살피야 한다. 아파도 미안하지 않고, 아프면 쉴 수 있으며, 아파도 각자의 처지에서 생존할 수 있다면 세 번째 성장이 가능하다.

‘성숙사회’는 앞서 언급한 성장의 3가지 방향 중에서 첫째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방향을 지향하는 사회일지 모른다. 몸집만 커지는 양적성장을 넘어서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사회적 성장, 환경적 성장을 일궈내는 사회, 미래세대에게 희망이 되는 사회,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는 사회, 성장의 부정적 효과를 치유하는 사회로 볼 수 있다.

‘성숙사회’는 효율성과 능력주의에 기반한 국가 주도의 경제적 성장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사회다. 각 개인의 처지에 맞게 성장의 기회를 주는 형평성, 사회적 신뢰나 연대, 건강의 증진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생물다양성 보존과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다.³⁾

3) 이 부분은 다음의 신문 칼럼에서 발췌 및 인용: 박성원. (2022.2.28.). 성장사회와 성숙사회. 한겨레.

2021년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물과 흙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면서 “전국에 웬만한 땅 파보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온다”고 증언했다. 또한 “경제성장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한 방향으로만 가는 사회에서 끝이 없는 경쟁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성장을 위한 기계로 사람을 취급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의견들은 성숙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짐작하게 한다.

성숙사회의 원류를 찾아보면 물리학자(197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이자 시대사상가인 테니스 가보르(Dennis Gabor)가 1972년 펴낸 책(Mature Society, 성숙사회)이 나온다. 그는 성장사회가 잃어버린 개인의 행복 능력, 놀이와 여가, 다양성을 회복하는 것이 성숙사회의 과제라며 시급히 성장사회에서 퇴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보르의 성숙사회는 한동안 잊혔다가 유엔(UN)이 설립한 대학에서 2013년 성숙사회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다시 언급되었다. 이 자리에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경제학자 파르타 다스굽타(Partha Dasgupta)는 GDP(국내총생산)로 성장을 측정하는 관행을 비판하면서 자연 자본과 개인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는 성장을 주장했다. 그는 미래세대의 웰빙까지 고려해야 성숙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성숙사회를 일본의 관점에서 비전으로 제시하는 시각도 있다. 일본 교토대학 히로이 요시노리가 2019년에 펴내고 2021년 국내에 번역된 ‘AI가 답하다. 일본에게 남겨진 시간은?’에서 일본이 지속가능하려면 도시집중에서 지역분산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람과 물건, 돈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분산형 사회시스템이 성숙사회를 실현하는데 결정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제 막 개념화되기 시작한 성숙사회가 일반시민들에게 성장사회를 이을 대안적 미래비전 또는 우리사회가 앞으로 장기간 추구해야 할 선호미래로 받아들여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성숙사회라는 비전을 추구하면 우리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는지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이해되려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사회의 곳곳에서 성숙사회를 실현하는 지역이나 공동체, 개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많은 곳에서 성숙사회의 씨앗을 심어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비전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문화적 전통에서, 다양한 사회적 실험에서, 개인 단위의 실천에서 성숙사회를 구성하는 조각들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며, 이를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지역사회의 현안과 미래를 다루는 시도연구원과 협업하기로 했다. 2021년 도출한 선호미래 '성숙사회'에 대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성숙사회가 대안적 미래사회상이 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전히 성장사회가 더 추구되어야 하는지, 성숙사회의 실현을 위해 이미 지역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지역사회의 현안과 성숙사회 실현을 위한 현안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묻고 싶었다.

2 지역사회의 이머징 시티즌

우리는 지역에서 만난 시민을 '이머징 시티즌(emerging citizen)'이라고 명명했다. 우리말로는 창발적 시민인데,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하나는 우리사회가 경험할 문제를 앞서 경험했다는 점이다. 이머징 시티즌은 미래학의 '이머징 이슈'에서 그 개념을 빌린 것인데, 이머징 이슈는 장차 사회가 겪을 미래 이슈를 뜻한다. 이머징 이슈가 사회 전반에 확산할 것으로 예측하듯, 이머징 시티즌이 경험한 문제는 이들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다. 곧 우리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겪을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험은 현재적이자 미래적이다.

둘째는 앞서서 경험했기에 대안을 구상하는 데에도 한발 앞서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인간은 외부 환경변화에 적응도 하고 대응도 하면서 진화하고 발전했다. 현재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의 대응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머징 시티즌과 대화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사회가 겪을 문제와 이를 풀어낼 대안의 씨앗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창발적 시민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대안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창발적이다.

이머징 시티즌은 그 단어가 내포하듯 소수나 약자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수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에서도. 정치적 목소리가 작아 어떤 사회적 문제를 겪어도 그 문제로 벌어지는 고통을 외부에 알리는 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중장기적 미래의 관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과 파급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기에 이들의 이야기를 공론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품고 있는 이머징 시티즌을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찾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머징 시티즌 연구에 뜻을 같이하는 6개 시도연구원과 협업하기로 했다. 시도연구원은 지역사회의 문제뿐 아니라 지역의 관점에서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면서 지역에서 발신하는 기회나 희망을 먼저 포착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는 이머징 시티즌을 만날 때 세 가지 기준을 만들었다.

첫째,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면서도 소수나 약자 그룹에 속하는 시민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예컨대, 우리는 대구에서 공연예술인을 만났다. 대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출가 흥해성(1893~1957)을 배출한 곳이다.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인 최초로 일본 극장의 전속배우로 활동했고, 귀국해 극단을 조직해 '모란등기' '벚꽃동산' '검찰관' 등을 연출했다. 우리나라 근대극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⁴⁾

1950년대 교통의 중심지로서 대구는 수많은 연극인이 활동한 곳이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곳에서 상실의 사회적 분위기를 연극인들이 달래주었다. 대구는 1984년부터 시작한 대구연극제, 2004년에 시작해 2019년에 막을 내린 대구 호리(공포) 연극제, 2007년부터 시작한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등 국내 공연예술 축제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다(박경숙, 2022).

그러나 대구의 지역공연예술인들은 열악한 제작 여건으로 정부의 지원금에 다수가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극장 시설은 노후화되었다. 공연으로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 연극계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줄어 연극인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미래 전망 워크숍'에서 만난 연극인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 택배, 대리운전 등 2~3개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

공연예술인은 경제성장에 매몰되어 여가 없는 한국인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앞으로 출생률이 더 낮아지고 인구가 더 줄어들면 공연을 보러오는 관객들도 줄어들 텐데 이들은 어떤 미래를 전망하고 있을까.

제주에서 만난 해녀들도 지역을 대표하지만, 소수와 약자 그룹에 속한다. 이들은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문화적 보존 가치가 높지만, 제주에서 이들은 철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저한 약자에 속한다. 해녀들도 자신을 “약자”로 표현한다. 생활의 터전인 바다가 육지의 개발로 오염되고 망가져도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가들에게 가닿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바다 생태계가 악화하고 외래종의 유입으로 제주의 바다 색깔이 변해가는 데도 이들은 이런 환경의 부정적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둘째, 성숙사회와 성장사회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원도의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이 거주하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은 군부대가 많아 환경과 삼림 규제가 많다. 천혜의 자연을 갖추고 있어 한국의 ‘폐’ 기능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주요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다(양철, 2022).

외부인의 시각에서 보는 강원도와 내부인의 시각에서 보는 강원도는 차이가 작지 않다. 외부의 시선에서 강원도는 환경보존과 군사적 평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곳이다. 그러나 내부자의 시각에서 이들 지역은 늘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으며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이 점차 낙후되고 있다. 북한과 경계를 맞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경기도와 비교하면 강원도민의 상실감은 심각하다.

이들에게 성장사회가 필요할까. 그러나 미래를 전망하면 기후위기 심화, 생물다양성의 악화, 환경파괴의 심각성, 바이러스의 잦은 창궐 등으로 성장사회의 미래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들은 성장사회와 성숙사회의 적절한 배합을 주장할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의 충돌에서 이들은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할까.

셋째, 경계인의 특성을 보이는 시민들을 만나려고 했다. 도시에서 출생해 자랐지만, 시골에서의 삶을 꿈꾸고 귀농 귀촌한 사람들, 문화와 언어적 배경이 다르지만 한국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사람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을 모두 경험해본 고령장애인과 돌봄노동자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세계를 교차하면서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를 예리한 시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예컨대, 대전에서 만난 다문화 이주민 여성들은 한국에서 여성, 아내, 어머니, 직장인으로 살면서 다양한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사회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주민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이들의 삶이 극명하게 나타낸다. 특히, 경제발전의 정도가

더딘 제3세계에서 온 이주민 여성들은 가난한 곳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의 가족과 이웃, 직장 동료로부터 모욕적인 경험을 겪는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까.

온라인으로 만난 귀농·귀촌 청년들은 도시에서 살다가 전라북도의 한 시골에서 새로운 생활의 터전을 잡았다. 이들은 왜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갔을까. 이들이 떠난 '성장지향'의 도시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농촌에서 이들은 농부로서, 귀촌인으로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을까. 시골 마을의 새로운 공동체에서 이들은 잘 적응하고 있을까. 이들이 전망하는 농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전라남도 광주에서 만난 고령장애인은 우리 대부분이 겪을 삶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이 초고령화되면서 대부분 예전보다 더 오래 살게 되지만 노인이 되면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사고로 늘 장애를 걱정해야 한다. 지금은 소수지만 앞으로 다수가 될 고령장애인의 삶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이들이 다수가 되는 사회에서 대비책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들을 보살피는 돌봄노동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령장애인의 삶을 더 자세히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고령장애인을 돌보는 노동자들의 삶이 고단하며, 이 직업의 지속가능성이 작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만난 지역별 참여자들의 특성과 논의의 주제는 <표 3-1>에서 정리했다.

<표 3-1> 시도별 협업 연구기관, 참여자, 미래워크숍 주제

시도별	시민 참여자	미래워크숍 주제
전북 (전북연구원)	귀농귀촌 청년가구	- 불균형발전, 대도시화의 문제점 - 청년 농업인의 빛, 불안정 거주지, 지역정부의 정책집행 투명성, 1인/비친족가구 증가
경북 (대구경북연구원)	지역공연 예술인	- 예술창작자에게 필요한 사회적, 제도적 환경과 선호미래상 - 늘어가는 지역, 서울에만 집중되는 기회, 지역 청년 외면 정책, 프리랜서의 어려움, 창작지원, 인력, 공연장 부족
강원 (강원연구원)	DMZ 접경지역 거주민	- 북한과 접경지역 거주민의 선호미래상 - 미중/남북갈등, 환경보존, 인구감소, 고령화, 개발중심의 성장 사회 문제점, 접경지역 주민의 소외감
충청 (대전세종연구원)	다문화 이주여성	- 다문화 이주여성의 선호미래상 - 이주 전후, 한국 인식의 변화, 직장 내 외국인/여성 차별, 외국과 분쟁 시 다문화 차별

시도별	시민 참여자	미래워크숍 주제
전남 (광주전남연구원)	고령장애인과 돌봄 노동자	- 고령장애인이 원하는 미래 - 시설공화국의 문제, 돌봄노동자들의 직업 전문성, 민간중심 돌봄 서비스 문제, 가족해체, AI로봇의 돌봄 대체
제주도 (제주연구원)	제주 해녀	- 바다 환경과 해녀의 미래 - 해양 플라스틱/육지 개발 쓰레기, 수산자원 감소, 채취물의 판로 협소, 해녀 지원정책 축소, 기후대응과 생물다양성보존

3 이머징 시티즌의 모집 방법

미래전망워크숍 참여자 모집을 위해 시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섭외를 진행했다. 본 프로젝트는 특정 지역의 특정 참여자를 모집하는 특수성이 있기에 이를 반영하여 모집해 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움이 필요했다. 각 시도연구원에서 적합한 참여자 모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표 기관을 소개해 주었고 이 기관들을 중심으로 섭외를 진행했다.

전북은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무주군청 청년분과’, ‘순창군 소소한방아실’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완주소셜굿즈센터’를 통해 소개를 받았으며 ‘무주군청 청년분과’는 ‘무주군청 귀농귀촌과’를 통해 소개를 받았다. 각 기관은 전북의 귀농귀촌 청년들이 소속되어 교류하는 곳으로서 모집을 위해 숙의토론의 취지를 담은 행사개요와 공문, 포스터를 전달하였고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지원을 받아 23명의 참여자 모집을 완료했다.

대구는 ‘대명공연예술연합회’와 ‘대구연극협회’, ‘대구뮤지컬협회’를 통하여 참가자를 모집했다. 참여자 19명 중 16명은 연극협회에서, 2명은 뮤지컬 협회에서, 1명은 클래식 연주 공연자로 모집을 완료했다. 이 밖에도 연극인 1명을 개별적으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처럼 지역별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한 이유는 미래전망워크숍에서 다루지 못한 깊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개별 인터뷰는 그 지역의 문화와 삶의 터전 등을 파악할 기회이기도 했다.

강원은 ‘인제군청’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다. 인제군청에서 진행하는 지역혁신리더

양성교육 교육생, 인제군번영회, 인제군 주민자치협회 등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했다. 총 19명으로 모집을 완료했다. 이밖에도 강원연구원의 도움으로 강원도 해남면에 거주하는 주민도 만나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전은 '대전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모집했다. 대전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생활 적응과 지역 내 정착지원을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모집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 대전 내 타 기관에도 모집을 요청했으나 현재 일을 하고 있고, 한국어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최종 10명으로 모집을 완료했다.

전남은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의 '엠마우스복지관'을 통해 돌봄노동자를 모집했다. 최초 계획은 광주와 전남 돌봄노동자를 10명씩 모집하려 하였으나 전남지역의 돌봄노동자를 한 자리에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광주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16명과 활동지원사 4명을 섭외하였다. 요양보호사는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하는 광산구종합재가센터, 북구종합재가센터, 서구종합재가센터 세 곳을 통해 모집했는데 모두 공공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였다. 그만큼 민간기관을 통해서도 모집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활동지원사는 엠마우스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활동지원사를 모집했다. 아울러, 고령장애인은 한 곳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기 어려워 이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가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리는 광주에서 70대 남성 고령장애인과 60대 고령장애인을 만났다.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를 통해 모집했다. 먼저 제주시 해녀문화유산과에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 해녀협회를 소개받아 모집을 진행했다. 해녀문화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해녀협회는 제주 전역의 어촌계와 교류하고 있었다. 총 11개의 어촌계에서 22명의 해녀를 모집했다. 이 밖에도 제주 용두암에서 해녀 1인을 일터인 바닷가에서 만나 개별 인터뷰했다.

〈표 3-2〉 미래전망워크숍 참여자 모집 개요

지역	대상	토론일	모집 기관명	기관 성격	모집 인원	참여자
전북	귀농귀촌 청년	22.09.20.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	18명	23명
			순창군 소소한 방아실	민간	3명	
			무주군청 청년분과	공공	2명	
대구	공연예술인	22.09.23.	대구연극협회	민간	16	20명
			대구뮤지컬협회	민간	2	
			개인 섭외	-	1명	
			개인 인터뷰		1명	
강원 인제	DMZ 접경지역 주민	22.10.18	인제군청	공공	19명	20명
			개인 인터뷰		1명	
대전 세종	여성 외국인 노동자	22.10.22	대전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공공	10명	10명
전남 광주	돌봄노동자	22.10.25	광주사회서비스원	민간	16명	22명
		22.10.31	엠마우스복지관	민간	4명	
	고령장애인	22.10	개인 인터뷰		2명	
제주	해녀	22.10.2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협회	민간	22명	23명
			개인 인터뷰		1명	
전체						118명

4 미래워크숍 프로그램

이머징 시티즌이 참여한 미래전망 워크숍은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표 3-3 참조). 프로그램은 총 4단계로 구성되었다. ① 과거부터 현재까지 겪고 있는 어려움 공유, ② 관계, 환경, 기술, 경제, 정치, 국제 등 6개 분야의 카드를 활용한 미래 전망, ③ 악당과 히어로 개념을 활용한 미래 대안 발굴, ④ 팀별로 논의한 내용을 공유하는 전체 토론 등이었다.

〈표 3-3〉 미래워크숍 프로그램

단계 및 시간 배분	주요 내용
오프닝(15분)	미래워크숍 목적 및 선호미래/회피미래 개념 소개
과거-현재 탐색(20분)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 공유
미래 전망(40분)	미래 트렌드 카드를 활용한 미래 전망
대안 발굴(60분)	현재와 미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발굴
전체 토론(30분)	팀별 발표 및 토론
클로징(15분)	질의응답

가. 과거-현재 탐색

과거-현재 탐색 과정은 참가자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며 미래 전망의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전북의 경우 '전북의 귀농·귀촌 청년'이라는 대표성에 집중하여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는데, 이 어려움이 예전부터 있던 것인지 새로운 것인지를 파악하며 '전북 귀농·귀촌 청년'의 미래까지 생각을 확장할 수 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온 문제, 이런 문제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인지를 상상하는 과정이다.

나. 미래 전망

미래 전망은 과거-현재 탐색을 토대로 미래문제를 발굴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미래 트렌드 카드를 활용했다. 미래 트렌드 카드는 관계, 환경, 기술, 시장, 정치, 국제 6개 분야에 대한 주요 이슈를 뜻한다(표 3-4 참조). 분야별로 2개씩 미래 이슈를 제공했는데, 우리사회에서 통상 미래를 전망할 때 자주 논의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 이슈들은 과거로부터 누적된 문제면서 앞으로 더 심화할 문제로 가정했다. 자주 언급되는 미래 이슈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전망하는 내용은 다양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미래전망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이 하나의 이슈를 골라 자신의 삶과 연결해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대구공연예술인이 '고령화' 이슈를 고를 시, 고령화와 관련하여 대구공연예술인이 겪을 미래 어려움, 변화 등을 이야기하도록 했다. 미래 트렌드 카드는 참가자들이 개인적 삶과 사회변화를 연결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기존의 시각으로 전망하지 않던 다양한 미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표 3-4〉 미래 트렌드 카드

분야	미래 트렌드	
관계	저출생, 고령화	가족해체
환경	도시와 농촌의 발전 격차	기후 위기의 심화
기술	일자리 양극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경제	경쟁 중심의 경제발전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정치	정치 양극화	정부와 국회 신뢰도 저하
국제	남한과 북한의 갈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

다. 대안 논의

대안 발굴은 1, 2단계에서 도출한 과거-현재-미래의 어려움을 토대로 어려움의 주요 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과정이다. 참가자들이 좀 더 과정에 몰입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어려움의 원인은 ‘악당’, 대안은 ‘히어로’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표 3-5 참조). 또한 주위에 히어로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있는지 질문하여 실천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고민하도록 하고, 참가자가 바라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묻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완료했다.

〈표 3-5〉 대안 발굴 활용 질문

대안 발굴 활용 질문
1) 이 미래에서 맹위를 떨칠 악당은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악당은 세션 1에서 밝힌 어려움을 가중할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은 당신이 악당을 물리칠 유일한 히어로였습니다. 당신이 어떤 능력을 갖추었을 때 위의 악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3) 주위, 혹은 유명인 가운데 당신이 말한 히어로의 모습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누구인가요?
4) 히어로의 등장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기구)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2절

시민들과 미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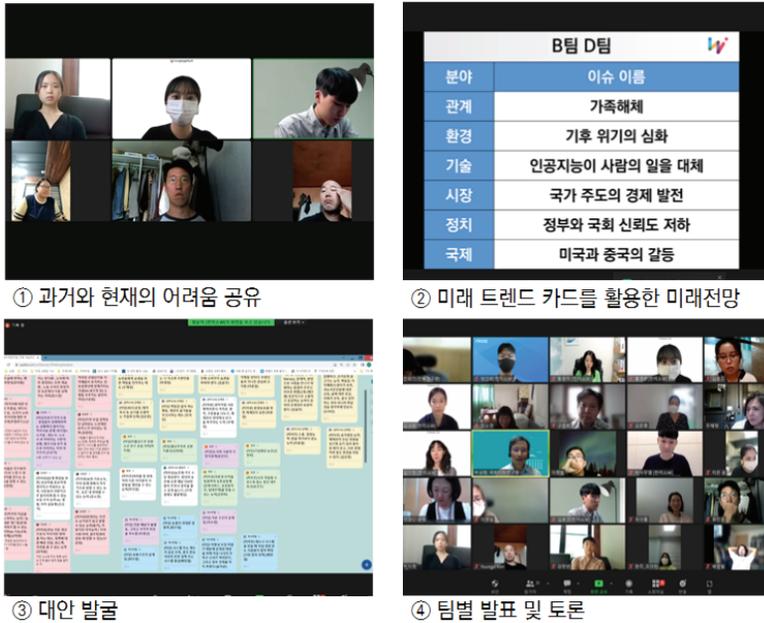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전북 귀농귀촌 청년들

전북 미래워크숍 참여 대상자는 전북에 거주하는 20~40대 귀농귀촌 청년이었다. 추가 참여 조건은 본인의 의지로 귀농귀촌을 한 사람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했다. 이를 토대로 모집한 참여자는 총 23명이었다.

〈표 3-6〉 전북 미래워크숍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

		인원수 (명)	%
전체		23	100.0
성별	남자	8	34.8
	여자	15	65.2
연령별	20 ~ 29세	2	8.7
	30 ~ 39세	14	60.9
	40 ~ 49세	7	30.4



[그림 3-1] 전북 미래워크숍 프로그램 과정

“도시에서 노년을 맞는 거는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으로 내려오면 소박하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40대 남성)

이처럼 도시보다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전북으로 들어온 20~40대 귀농·귀촌 청년 23명을 온라인에서 만났다. 이들에게 현재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부터 물어보았다. 이들은 귀농·귀촌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 불안정한 주거, 대출 규제 등을 꼽았다. 전북 무주의 귀농 11년 차 청년은 “농사에 전념하려고 시골에 내려와 청년자치단체장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농사 초창기에 빌렸던 자금을 갚지 못해 불안하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에 정착해 귀농 1년 차라고 밝힌 청년은 “농사에 필요한 자금을 농협에서 빌리는데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거주할 주택을 개량해야 하는데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주거가 불안해 농사일을 배우는 데 전념하기 힘들다고도 했다.

거주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는 청년쉐어하우스, LH행복주택 등을 귀농한 청년들에게 임대하는데, 거주한 지 2~3년이 지나면 나가야 한다(행복주택의 임대 기간은 2년, 최대 6년까지). 이런 상황에서 귀농 청년들은 농촌에 들어오자마자 안정된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고, 농사일에도 숙달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농부가 아닌 일반인 또는 자영업자로서 생존하는 것도 쉽지 않다. 40대 한 여성은 “농촌에는 개인이 내려와 일자리를 얻고 이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며 “어떤 단체에 소속하지 않으면 개인은 정부의 지원정책도 받기 힘들다”고 전했다.

“20년 후의 미래라면 이곳에 산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산에 나무들이 존재할까. 공기도 안 좋아질 것 같고, 건강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은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미래 논의에서는 “인구감소로 지역은 소멸하고 개발사업만 지속해서 환경은 파괴될 것” “농사하면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갈 것”, “미래에도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으며, 인건비와 재료비만 올라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결혼을 포기하고 도시로 떠날 것”, “병원 시설이 부족해 이대로 미래가 된다면 아파도 참아야 할 듯”이라는 의견이 언급되었다.

한 여성 귀촌인은 “여성으로서 읍면에 사는 것이 쉽지 않다”며 “부동산에 가거나 마을에 일이 있어 동네 어르신을 만날 때 남편을 앞세워 가지 않으면 자신은 지워지는 존재”라고 털어놓았다. 반면, 한 여성 청년은 “이곳에 ‘좋은 언니 커뮤니티’가 있는데 농사일도 도와주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수습해 고립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인으로서 맞을 미래도 걱정이 많았는데, 한 청년은 “청년이 사라진 미래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 누가 나의 집이며 유품을 정리해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나 국회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미래에 개인은 자신의 역할이 작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럼 농촌으로 들어오는 것이 대안일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작은 경험이라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귀농·귀촌 청년들과 미래 카드를 돌려보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가족의 해체’라는 키워드를 받아 든 청년은 “가족이 해체되면 내가 이제껏 경험한 농사일과 재산을 물려줄 자식들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우 불안해질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는 키워드를 고른 참가자는 “청소년들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주도의 성장’을 고른 참가자는 “환경오염시설을 국가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지역에 들여와 지역사회는 더욱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 간 분쟁의 증가’라는 키워드를 고른 참가자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와 밀 가격이 올라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식량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나 자립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고령화’를 고른 참가자는 “주거환경의 열악, 교통과 일자리 부족, 의료서비스 약화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100년 전만 해도 1,500종의 토종 벼를 눈에 심었는데, 지금은 수확량이 높은 일부 품종만 심어요. 생산성만을 높이기 위한 획일주의가 우리사회 악당일 것 같아요.”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을 악당으로 비유하고 논의해보았다. 이들은 “꿈을 빨리 실현하지 못하면 쫓겨나야 한다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정부 정책”을 꼽았다. 앞서도 언급했듯 이들은 지역사회에 정착하자마자 농부로서 자립해야 하고, 안정적인 거주지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떠나야 한다. 정부가 정책 대상의 초기 유입단계만 집중해 단기적으로 양적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노력과 성취가 이런 단기적 정책 탓에 허물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 청년 농부는 또 다른 악당으로 “국가가 경제성장을 이유로 지역을 재개발하거나 환경오염시설을 유치한 탓에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상황”을 들었다. 깨끗한 공기와 환경을 선택해 지역으로 내려왔지만, 개발압력 탓에 더 오지로 밀려간다고 했다. 또 다른 청년도 “도시에서 가져오는 응급 폐기물, 생활 폐기물, 각종 폐기물을 계속 매립해 여기 저기서 폐기물 침출수가 나온다”고 걱정했다. 그는 “시골은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식민지”라고 표현했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스마트팜을 우리는 대기업이 농촌을 장악하는 전단계라고 우려합니다. 농촌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단지 농장이 있고, 그곳에 필요한 단순 노동자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면 이곳에서 건강하게 자경하는 자영농들이 대기업 하청업자로 전락하거나 사라질 것 같아요.”

한 청년 농부는 “대규모 자금을 빌려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다가 태풍이나 여러 재난으로 시설이 붕괴되면 이걸 개인이 복구하기란 매우 힘들다”며 “기업화된 농촌에서 소규모 자영농이 생존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농산물의 유통 구조가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들은 농민만 싼값에 농산물을 넘기고 유통사만 비싼 값에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구조라고 말했다. 농업인을 위한 대출 시스템은 농업을 지속하려는 사람들 편에 서 있지 않다는 얘기도 들려주었다.

〈표 3-7〉 귀농귀촌 청년들이 꼽은 약당

약당
- 세대차이 및 배려가 부족한 인간관계
-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획일주의
- 농촌이 도시의 식민지로 기능
- 개인보다 대기업에 유리한 농업 생산 구조
- 생산자보다 중간에서 이익을 더 많이 취하는 유통 구조
- 환경을 훼손하는 난개발
- 꿈을 빨리 실현하지 못하면 쫓아내는 정부 정책

“혼자서 자립은 힘들어도 함께 기대는 연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럿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동지들이 히어로일 것 같아요.”

우리는 “직접 자신의 농지에서 수많은 토종 종자를 심고 실험하면서 주위에 나눠주는 농부가 히어로”라는 청년 농부의 말을 공유하면서 문제의 대안을 찾아보았다. 참가자들은 대안으로 “청년 농부의 어려움을 정부에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는 기회의 증가”, “군 단위 의회에 청년 농부의 참여를 보장해 이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도록 지원”, “군민 중에서 무작위로 시민들을 선정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 “기본소득제 시행”,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책” 등을 내놓았다.

특히, 지역 정부가 청년 농부의 문제 제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한 목소리가 많았다. 지역의 유지들로만 정책이 만들어지는 구조에서 탈피해 이주민이나 청년 농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청년은 “최근 군수님이 새로 왔는데 청년들에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정말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농부가 작은 벼농사 지역을 모아서 벼농사두레를 만들었어요.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땅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농사를 같이 짓는 실험을 해요. 서로 품앗이도 하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분이 히어로입니다.”

“기계나 재료들을 무상으로 빌려주시고 정착하도록 일자리도 알아봐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덕분에 어려움이 있어도 버텨요. 이분이 히어로 같아요.”

미래전망워크숍은 농촌을 지키고 땅을 매개로 귀중한 식량을 생산하며 함께 모여 즐거움을 공유하려는 히어로들이 있음을 알게 된 기회이기도 했다.

〈표 3-8〉 귀농귀촌 청년들이 꼽은 히어로와 정부에 요구 사항

히어로	정부에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그러한 태도를 공유 - 귀농귀촌 청년 공동체 형성 및 연대 - 정책 실행 후 지속적 관심과 관리 - 지역의 자치능력 향상 - 미래 대안을 위한 상상력의 확장과 행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청년이 입법 및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 적극적인 농촌 빈집 정책 - 농촌 거주 수당 제공 - 친환경에 기반한 산업단지 관리

전북연구원의 시각과 정책 제언⁵⁾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고민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의 인구감소는 단순히 수적인 부족만이 아닌 거주인구의 고령화에 따르는 지역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부재라는 문제

5) 전희진,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를 가지고 있다(2020년 기준, 60세 이상 농업경영주는 전체의 73.7%, 40세 미만 농업경영주는 1.2%에 불과).

동시에 일정 수준의 인구가 유지되지 않으면, 지역의 인프라를 작동하는 일도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해 고민하는 상황으로 연결된다. 공적인 영역은 유지된다고 해도 사적인 영역의 서비스는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만든다. 대부분 도시로 이주하고 지역에 남은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기반을 떠나 읍내로 나가거나 혹은 근처 도시에서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행정구역상 도시지역은 동으로 농촌지역은 읍면으로 구분하지만, 지역 거주민에게 읍과 면의 체감상 차이는 크게 다가온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귀농·귀촌을 포함한 청년을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것이다. 도시의 경쟁과 성과주의에 지친 사람 중 정서적·신체적 위로를 얻기 위해 귀촌이나 귀농, 혹은 한 달 살기와 같은 자연 친화적인 삶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은 농촌에서 “고소득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본인이 좋아하고,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로가 농촌에 있는지를 찾아오는 것이다(김정섭, 2021).

그러나 미래 전망 워크숍에서 참여자들의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농촌은 이들이 적응하면서 살기에 만만한 곳이 아니다.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일자리 중 특히 농업의 경우, 농촌 생산성은 사실상 떨어져 있고(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은 2021년 21.7%이며, 계속 하락하는 추세), 청년농은 농사만이 아닌 적어도 가공을 통해서라도 이중의 직업을 가지도록 강요받고 있다.

농업 외 소득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농업에 전념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책이 영농교육, 자금지원, 농지임대 등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지원정책의 많은 부분이 초기 유입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유입 후 정착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유정규, 2021).

또한, 대출을 통한 토지구매나 시설투자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요소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국가에서 선호하는 스마트 농업이나 농업의 효율화를 위한 시설투자를 통한 농촌의 재편성은 실제 대규모의 농업 기반을 상정하고 있어 1,000평의 농사를 지어도,

10만평의 농사를 지어도 하나의 드론 스테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면, 1,000평의 귀농인에게는 시설투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새로운 방식으로의 삶, 적게 생산하고, 적게 소비하고, 친환경적인 삶을 꿈꾸며 농촌으로 이동한 경우,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된다.

농가인구 중 여성이 50.3%(111.5만 명)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육아 등을 책임지며 농촌사회를 지탱하는 구성원이지만, 농촌사회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는 여성은 배제되어 있고, 노동 이외의 사회 참여와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며,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주민 회의를 비롯하여 지방정부의 농업 관련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농촌 여성의 삶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정책적 대안: 귀농·귀촌인들이 바라는 행복한 농촌의 기본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협동하는 공간일 것이다. 농촌사회가 단기적인 실험의 장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어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제공하려면, 현재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변화시키고, 여성 농업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여성농업인의 다중 노동실태분석과 노동 가치 인정 체계 마련은 여성 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농촌 공간 계획 수립에 있어 양성평등 인지적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급으로 여성의 농촌 정주성을 높여야 한다.

귀농·귀촌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농촌의 새로운 인구 유입의 역할에 더하여, 도시와 농촌을 매개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로의 개척 및 아이디어의 발굴 등 농촌사회를 변화시킬 주체로서 해야 할 역할이다.

변화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영농기술의 교육을 넘어 농촌 생활과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공동체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와 귀농·귀촌인들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원 사업의 주체로 정부나 사업 진행기관만이 아닌 지역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며, 귀농·귀촌인의 지역공동체 편입과 동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가지고 농촌 적응의 삶을 지속하기 어렵다.

전라북도의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사업'⁶⁾의 경우,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에 도시 청년 3명을 배치하는 방식의 프로젝트였다(김정섭, 2021). 귀농·귀촌 청년의 지원에 있어서, 마을과 연계되는 일을 할 때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결을 촉진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들의 정착을 돕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농업을 복원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청년들은 스스로 삶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에 이어,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은 '농업이 밝아지는 귀농, 농촌이 젊어지는 귀촌'을 비전으로 '귀농 5년 차 평균 가구소득을 농가 평균의 95%, 귀촌 가구 생활 만족도 85%'를 목표로 두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지자체가 단순 집행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 차원의 실효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정착의 양이 아닌 정착의 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농촌사회 문제는 단순히 청년들이 유입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청년들의 고민과 기대에 대해 지역과 청년이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청년농이나 귀농 지원정책에 대해 청년들은 지원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지만, 기존의 농민들은 지원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의 핵심 주체들의 갈등을 초래하는 방식이라면, 귀농·귀촌인의 고립을 막을 수 없다.

미래전망워크숍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완주소셜굿즈센터는 로컬푸드를 비롯, 문화, 교육, 돌봄, 육아, 의료, 에너지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회적 경제모델로 귀농·귀촌인들과 지역사회가 촘촘히 엮인 사업이다. 완주 로컬푸드의 성공은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생산에 참여하는 소농과 고령농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바탕이 되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 레스토랑, 공공·학교 급식사업, 농산물 가공사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프로젝트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완주군 내 폐교를 활용해 만든 '소셜굿즈 혁신파크'에 완주군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보금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6) 전라북도 '농촌과소화대응인력사업'은 전라북도 내 시·군에서 2017~2019년까지 진행되었고,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에 도시 청년 3인을 배치하여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공익적 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프로젝트였다. 이 중 "안성면 공동체활동화지원단"의 경우, 외지 청년 12명이 12개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사업들은 여성 커뮤니티 조성사업, 찾아가는 마을 미디어 사업, 산촌마당캠핑, 청년공동체 사업, 미디어 문화마켓사업,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안성면 소식지 발간사업, 무주군 공동체 백서 발간사업, 찾아가는 문화복지서비스 사업,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사업 등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으로 완주군에 2022년 6월 320개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동하고 있고,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는 귀농·귀촌 인구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적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신념에 맞는 실천의 기회도 제공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진다. 귀농·귀촌인의 신념에 부합하는 실험을 해볼 수 있고, 그로 인해 농촌공동체와 결합할 수 있는 구조 및 문화의 형성이 지역사회와 동등한 주체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 대구 지역공연예술인들

대구 미래전망워크숍 참여 대상자는 대구에서 활동하는 공연예술인이었다. 직업적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령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주로 연극 공연예술인을 모집하였으나 뮤지컬과 클래식 분야 등 대구 내에서 활동하는 공연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모집한 참여자는 총 19명이었다.

〈표 3-9〉 대구 미래워크숍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

		인원수 (명)	%
전체		19	100.0
성별	남자	11	57.9
	여자	8	42.1
연령별	20 ~ 29세	4	21.1
	30 ~ 39세	7	36.8
	40 ~ 49세	4	21.1
	50 ~ 59세	3	15.8
	60 ~ 69세	1	5.2



①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 공유



② 미래 트렌드 카드를 활용한 미래전망



③ 대안 발결



④ 팀별 발표 및 토론

[그림 3-2] 대구 미래워크숍 프로그램 과정

“대구라는 지역 특성 때문인지 미래가 늘 불안합니다. 불안은 해마다 반복되고요. 경제가 조금만 힘들어도 공연예술의 시간은 시민의 삶에서 생략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출가 흥해성씨를 배출한 예술의 도시 대구에서 우리는 공연예술인 19명을 만나보았다.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겪을 문제들, 그리고 대안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

“저희는 주어진 월급이 없고 당장에 행사가 들어온다든지 공연 섭외가 들어온다든지 해야 꾸려나갈 수 있는데.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 잘해도 이게 연계되어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고요.”

이들은 현재 겪는 어려움에 관해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꼽았다. 한 연극배우는 “물가는 올라가는데 저희가 받는 출연료는 계속 동결”이라며 “마치 원조 할머니 맛집처럼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니 경력을 쌓아도 계속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배우들은 대

구를 떠나 서울로 간다고 했다. 이들은 “힘들어도 서울로 가는 이유는 버티면 뭔가 잘 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역 정부가 배정한 예산 중에서 공연예술인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늘 부족”, “사회정책에서 예술인은 소외되는 상황”, “개인보다 단체에게 주는 지원사업이 많아 개인 공연예술인은 생존하기 힘든 여건” 등을 꼽았다.

“새로운 미디어, 메타버스, 블록체인기술 등 시대가 바뀌어 가면서 우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금방 새로운 기술로 갈아탈 거거든요. 우리는 도구였기에.”

이들은 미래를 전망하면서 기술의 변화를 많이 언급했다. 이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연극계에도 변화가 생겨 연극인이 아니라 기술 지원자로 살 듯”, “인공지능 배우도 등장해 우리 직업은 사라질 것”, “관객을 넷플릭스 같은 다국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빼앗길 듯”이라는 의견을 내주었다. 기술의 변화를 마냥 탓할 수도 없는 것이 대학에서 이런 기술의 변화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 연극인은 “대학에서 매년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니 학생들은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미래에 피아노를 치고 바이올린을 켜는 연주자는 대학 교수님 빼고는 없을 겁니다. 강사도 없고요. 지금도 진짜 졸업한 사람들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끝이에요.”

30대 예술인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 연극 무대인데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빈번해져 못 만날 것”이고 “인구가 감소해 객석 수가 줄고 결국 무대도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는 미래 키워드를 활용해 이들과 미래 논의를 이어갔다. ‘저출생, 고령화’에 대해 “연극의 주제가 노인의 삶에 대부분 맞춰질 것”이라고 했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 확대’에 관해서는 “대도시의 문화 환경만 구축, 개발되고 지역의 문화 인프라는 쇠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 중심의 사회’라는 키워드에 관해서는 “창작자보다 유통사의 배만

불리는 미래”, “경제는 발전하겠지만 개인의 성장과 발전은 도모하기 어려운 미래”라고 말했다.

‘대기업 중심의 사회문화’에 대해 “대기업이 문화예술계를 접수하면 다양한 소수의견을 내는 공연예술인들의 노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인은 새로운 사회의 모습, 대안적 미래, 소수 약자의 삶을 전달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역할이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족 해체 현상이 더욱 진전되면 공연에서 다룰 주제가 사라진다고도 했다. “예술은 관계, 사회, 인간의 얘기를 하는 곳인데 가족이 해체되면 할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의 지원 사업이 악당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경쟁시키고 1등과 꼴등 매기고, 수많은 지원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1천만원짜리 사업을 위해 내는 서류는 300장이 넘어요. 증빙서류는 1원까지 맞춰야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술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거든요.”

공연예술인들의 어려움을 가증하는 악당으로 이들은 “경쟁 중심의 문화”, “유통사의 착취”, “예술인의 배고픔은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 “늘어가는 도시, 청년을 배제하는 정책”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예술인의 가난을 조롱하는 문화는 곱씹어볼 만하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싸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경쟁 중심의 문화에서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하게 되고 이마저도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다. 이런 환경에서는 누구도 일을 통해 즐겁지 않게 된다. 이런 인식 탓에 예술인에게 최저시급을 줘야 한다는 정책은 나오기 힘들다.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약하다는 점도 악당으로 거론되었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공모전을 통해 취득한 저작물은 대기업이 소유한다. 이는 공연예술인의 성장을 대기업이 막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지자체 장의 입맛에 따라 바뀌는 공연예술 정책”도 문제로 거론되었다. 한 예술인은 “어느 특정 기간에 하는 축제가 있는데 지자체 장이 바뀌면서 축제는 5월과 10월에 다 몰아서 하라고 했다”며 “그 축제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랫동안 준비하고 역사가 있는데 그냥 한방에 끝”이라고 말했다.

〈표 3-10〉 대구 공연예술인들이 꼽은 악당

악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형에만 투자하고 문화자산은 축적하지 않는 정책 - 보조금을 바탕으로 간섭하는 시 정부 - 지방정부의 수장에 따라 바뀌는 공연예술 정책 - 복잡한 행정 절차와 문화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 공연예술은 가난하다는 편견 - 성공한 인생의 기준을 획일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대구 남구청에 박종규 문화 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여튼 우리가 공연 준비하면서 코로나로 신경 많이 쓸 때, 맨날 전화하고 점검도 하고, 소극장 운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받을 때도 필요한 서류 챙겨주시고. 이분이 히어로예요.”

지역공연예술인들은 악당을 물리칠 ‘히어로’의 예로서 “예술인을 위해 발 벗고 뛰는 공무원”, “공연예술인끼리 서로 도왔던 문화” 등을 꼽았다. 이들은 예술인에게 더 많은 희망을 만들려면 정부가 “연극인들을 위한 4대 보험 가입”, “지역공동체가 반짝이는 지역 인재를 찾아내 성장시키는 정책과 문화”, “예술인 최저임금제의 실행”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20년 뒤에도 내가 무대에 선다면 나를 히어로라고 말하고 싶다.”

예술인들이 활동을 멈춘다면 우리 사회는 대안을 제시하는 공간과 상상의 역량을 잃어버린다. 이런 점에서 지역공연예술인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책은 더욱 개발되어야 한다.

〈표 3-11〉 대구 공연예술인들이 꼽은 히어로와 정부에 요구 사항

히어로	정부에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예술인 커뮤니티 - 공연예술인 출신 정책 결정권자 - 예술인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공무원 - 유명 배우의 영세한 연극 출연 - 예술인을 돕는 워크숍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층이 포함되어 결정하는 정책 시스템 - 명확한 급여체계 - 연극인들을 위한 4대 보험 - 예술인 최저임금제 실행 - 공연 기술팀 비용 정량화 - 대구의 스타 발굴을 바탕으로 대구 공연 활성화 - 공연예술 인프라 확충 - 공연 장비, 장소 공공 렌탈

대구경북연구원의 시각과 정책 제언⁷⁾

지역 공연예술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예술 활동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제적 여건,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초예술의 한계,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역량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열악한 창작환경과 뒤쳐진 복지 제도를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이러한 공연예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크게 창작활동 지원과 예술인 복지측면에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연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기금』, 『대구시 문화예술진흥조례』와 같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근거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같은 문화예술 진흥기관을 통해 창작지원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공연예술 창작지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창작산실사업⁸⁾이 있으며, 지역에서는 연극, 무용, 음악 등 장르별 예술단체 지원 및 연극·뮤지컬 대본 공모, 개인 연주 활동 지원 등 개인 창작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 측면에서는 국가적으로 『예술인복지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제정과 예술인복지재단 설립(2012), 예술 활동 증명 제도 운영,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고용보험 도입 등을 통한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에 힘을

7) 박경숙, 대구경북연구원 메타버스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8)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창작오페라 등 공연예술 전 장르에 걸쳐 프리프로덕션, 공연, 재공연까지 성장단계별지원을 통해 우수창작 레퍼토리를 발굴하는 사업

쏟고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보급, 법률상담·컨설팅, 예술인 심리상담 등을 추진함으로써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내 예술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예술인창작 활동지원, 예술인 행정서비스지원, 예술인 컨설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예술가 육성지원’은 지역 청년예술가에게 2년간 월 80만 원의 정기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 창작활동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인해 예술인 복지혜택은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 공연예술인들의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공연예술 장르의 특성상 창작지원 사업은 공연예술단체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여러 장르를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사업의 성격상 공연예술 분야 개인 창작자의 창작 및 역량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의 규모나 예산의 비중이 적다. 이뿐만 아니라 창작지원 사업에 비해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의 규모는 더욱 적어 지역 공연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과 복지 기반 조성은 갈 길이 멀다.

지역 공연예술인이 겪는 문제를 개선하고 창작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공연 창작 여건을 고려한 정부의 기존제도 보완 및 확산이 필요하다(김지영, 2022). 국내 많은 예술인이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고 있지만 공연예술인의 프리랜서 비중은 타 장르 대비 높다.¹⁰⁾ 이에 프리랜서 공연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존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기존 제도의 경우 무엇보다 예술인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섬세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한 편의 연극이 연습에서부터 공연까지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았을 때 연극 편당 100만 원 이상의 사례비를 받는 경우는 지역에서 아직 드물다. 즉 소액의 사례비를 받는 예술인들은 예술인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9)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2022년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예산은 5,428,000천원인 반면, 예술인 복지관련 예산은 예술인복지 지원사업 285,000천원, 지역청년예술인 육성 예산 150,000천원 등 435,000천원에 불과함(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2022년 사업계획)

10) 2021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예술인의 78.2%, 겸업예술인의 72.2%가 프리랜서 경험이 있으며 이중 연극장르는 전업예술인의 80.2%, 겸업예술인의 80.6%로 타 장르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함(문화체육관광부, 2021)

않으므로 구직급여 등 혜택 역시 줄어들게 된다.¹¹⁾ 가입조건 및 유지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과 같은 우수 제도의 확산이 필요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육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예술 활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예술인 자녀 돌봄센터를 대학로 등 서울에 2개소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전국단위의 여타 사업과 비교할 때 수혜 인원이 많은 편이다. 이렇게 수요가 많은 사업은 서울에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대구의 대명공연거리 등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공연예술인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정책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대구시는 대학 진학과 좋은 일자리 등을 찾아 많은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¹²⁾ 이에 교육부터 거주까지 청년들의 삶의 과정을 지원하는 생애 이행단계별 맞춤형 정책,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시행으로 청년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구시의 청년정책은 지자체 청년정책의 성공 모델로서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일자리 및 취·창업지원 중심의 사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규모나 내용 면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

미래에는 청년 예술인의 감소로 노년층 중심의 공연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지역 공연예술인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시점에서 청년 공연예술인을 포함한 지역 청년예술인을 위한 정책 수립 노력이 필요하다. 공연예술인은 일과 수입의 주기 및 규모가 매우 불규칙하며 수입 금액 또한 절대치가 작아 예술 활동 외의 생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집단적 예술인 공연예술의 특성상 공연 제작 일정표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에 장기적인 직업을 가지기 어려워 대부분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력이 짧은 청년 공연예술인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데 지역의 많은 청년 공연예술인들이 카페나 식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교육활동을 하며 공연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지역 청년정책의 관점에서 청년 공연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11)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1개월 미만 단기에 예술인은 가입가능)

12)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대구를 떠난 인구는 7만5946명이며, 이 중 20대(20~29세) 청년들이 3만302명으로 전체 39.9%를 차지하고 있음, 20대 청년의 순유출은 2016년 4,813명에서 2018년 6,040명, 2020년 7,48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경북도민일보, 2021.07.06.)

예를 들어 청년 공연예술인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구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단기일자리 청년의 소액자산형성을 위한 ‘청년희망적금’의 참여 조건을 완화하고¹³⁾ 예술 활동과 병행할 수 있는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참여 가능한 ‘초단기 일자리 발굴 프로그램 마련’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셋째,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지역 공연예술인의 대응력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작품의 창제작, 유통, 소비, 향유 등 공연예술생태계 전반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대면 공연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언택트(untact) 공연이 확산하면서 무대공연과 함께 영상 작업 중심의 창작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연출가와 배우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관객과 호흡하는 연극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감동과 장점이 제한되면서 일반 드라마나 영화화되지 않도록 연구해야 한다. 무대 위 연기자들은 동선, 발성과 대사 톤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또한 VR, AR, XR, AI,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부각되는 기술과 메타버스 플랫폼 등이 문화예술 분야와 융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공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변화들은 공연예술계에 새로운 실험과 다양성을 확대하며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지역 예술인들이 이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온라인 공연을 제작하길 원하는 지역예술가 개인이나 소규모 예술단체들은 비용 문제와 장비, 축적된 기술의 부재 등으로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이를 작품에 적용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연예술의 관점에서 신기술의 이해도를 높이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적용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역 공연예술인들이 생각하는 미래사회의 모습은 지역이 처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 저출생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수도권 중심의 투자 등으로 지방 소멸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곧 국가의 위기로 직결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술인의 미래가 예술의 미래’임을 생각할 때 지역 공연예술인의 위기는 지역, 나아가 우리나라 예술계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13) 현재 대구시 청년적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단기일자리 종사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공연활동과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주로 종사하고 청년 공연 예술인의 경우 6개월 이상 지속근로의 조건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번 미래전망워크숍을 통해서 지역 공연예술인들은 미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지역 공연예술계와 공연예술인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대구의 공연예술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들이 미래사회에서도 공연예술인으로 남아 있으려면 '공연예술을 업으로 하면 배고프다'는 우리의 편견을 허물고 예술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공연계에서는 다음 스텝이 없다'는 청년 공연 예술인들의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에 정착하여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지역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미흡한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지난달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지역 청년 공연예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강원 DMZ 접경주민들

강원 미래워크숍 참여 대상자는 DMZ 접경 주민이었다. 많은 접경 지역 가운데 강원 연구원과 논의를 거쳐 DMZ의 특수성과 환경보존에 관심이 높은 인제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인제주민 가운데 지역에 대한 관심이 크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모집을 진행했다. 성별이나 연령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고령지역이라는 특성에 따라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모집되었고, 성별도 남성 참여자가 여성보다 많았다. 참여자는 총 19명이었다.

〈표 3-12〉 강원 미래워크숍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

		인원수 (명)	%
전체		19	100.0
성별	남자	15	73.7
	여자	4	26.3
연령별	30 ~ 39세	1	5.3
	40 ~ 49세	7	36.8
	50 ~ 59세	9	47.4
	60 ~ 69세	2	10.5



①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 공유



② 미래 트렌드 카드를 활용한 미래전망



③ 대안 발굴



④ 팀별 발표 및 토론

[그림 3-3] 강원 미래워크숍 프로그램 과정

“전국 2,000개의 군 사격장 중 과반수가 DMZ 접경지역에 몰려있어요. 이곳에선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수시로 포 사격, 총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감내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누구도 들여다보질 않아요.”

강원도 인제에서 DMZ 접경 주민 19명을 만났다. 이들은 현재 겪는 어려움으로 “DMZ 접경지역이어서 잦은 대포 소리와 총소리로 고통”, “병원, 교통, 문화 등 생활 인프라 부족”, “도시재생 사업을 명분으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상황”, “규제가 많아 더딘 발전”, “고령화 추세로 농촌의 소멸 우려” 등을 거론했다.

접경지역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남북대치에 따른 군사시설과 그 활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었다. 한 지역주민은 “나날이 첨단 무기가 개발되고 그 무기를 어디선가 실험해야 하는데, 인제군은 북한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고 인구가 줄면서 군 훈련장이 더 많이 생기면 이곳은 주민들이 살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인제에 정착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휴일에도 수시로 팽, 쿵 하는 군 훈련 소리,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이제는 적응할 만한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털어놓았다.

여타 농촌지역처럼 인제도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역의 소멸을 걱정했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져줄 청년층의 인구 유입이 감소하면서 인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주민들은 인구 유입이 활발한 다른 지역을 찾아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 최근에는 전남 영광과 해남지역을 다녀와 거주환경 개선으로 청년층을 유입한 사례를 보고 온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공사례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경우가 많아 기계적으로 인제군에 도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정주 여건, 거주환경의 개선은 새로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2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니깐 눈물이 나네요. 그때 되면 늙어서 어떻게 살까. 차를 운전하지도 못할 텐데.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들고. 급한 일이 있어도 인구소멸 시대에 부를 이웃도 없고.”

이들은 미래를 전망하면서 부족한 사회 인프라에 관한 걱정이 많았다. 한 지역주민은 “인제는 병원이 하나밖에 없다”며 “새벽 7시30분에 병원에 와도 내 앞에 27명이 이미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노인이 많다”고 말했다.

“미래에는 인간의 기능이 축소될 것 같아요. AI에 밀린 2인자로서 늘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태적 삶으로서 이런 기계문명과 일정한 거리를 뒀야 합니다.”

주민들은 미래 키워드를 받아 들고 전망을 이어갔다. 이들은 “가족해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 때문에 노인들의 고독사와 외로움은 심해질 것”, “중앙정부와 지역 정부의 잦은 갈등”, “지역 자치, 주민 자치의 필요성 증대”, “정치 양극화와 남북갈등의 심화로 불안감의 확대” 등을 꼽았다. 한 지역주민은 “만약 통일되어 접경지대에 군부대가 사라진다면 그때는 군부대가 오염시킨 토양이 문제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생물다양성도 떨어지고 농사도 잘 안될 수 있다”며 “인제군이라도 토종 씨앗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고작 가로등, 배수로만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다 정하는 탑다운(하향식) 방식이 악당입니다.”

어려움을 가중하는 악당에 대해 주민들은 “행정편의주의 공무원”,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고, 주민들과는 소통이 안 되는 시스템”에 대해 많은 의견을 들려주었다. 한 지역주민은 “주민 스스로 지방정부에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주민자치회 같은 걸 공무원이 만들어서 하다 보니 또 다른 공무원 밑의 사조직처럼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슈가 있으면 시민들과 며칠이 걸려서라도 끝장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은 “인구소멸과 지역소멸”, “지역이기주의와 주민 간 갈등”, “무분별한 개발주의” 등을 언급했다. 오랫동안 인제에 살았다는 한 주민은 “20년 뒤에도 우리 자식들이 인제에 살려고 할까 예상해보면 답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주거환경이 불안하고 일자리가 부족하면 남아 있는 청년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이중삼중의 인구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생에 이어 군부대 이전과 군인 감소 때문이다. 또 다른 인구감소의 요인은 지역의 재개발과 관련이 있다. 도시재생을 명분으로 지역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지역에 폐가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환경오염과 소음공해가 심해진다. 민간자본을 들여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결국 원주민들은 여러 문제에 시달리다가 고향을 떠나는 것이다.

〈표 3-13〉 강원도 인제 거주민들이 꼽은 약당

약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탐다운 조직문화 시스템 - 정권이 바뀔에 따라 변하는 정책 - 선주민과 후주민과의 갈등 - 경제 중심 사고로 지역에 애정이 없는 주민 - 지도자의 부족한 역량 - 유행에 따른 난개발 - 기후위기에 대한 개인의 안일한 의식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주민들은 여러 대안을 강구한다. 예컨대,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위해 비어 있는 군인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도 의논했다. 정주 여건 우선 조성, 공공일자리의 확충, 기업들의 재택근무 권장, 지역의 기업과 청년 일자리 협약 등의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우리가 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요. 인제군 주민이 3만2천명인데, 군인까지 합하면 5만명. 이곳에 오는 군인들도 주소를 인제군으로 이전해서 이곳에서 세금을 내야 지역사회가 돌아갑니다.”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인제군 주민들은 기존의 경제성장 일변도의 방법보다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주었다. 이들은 “환경교육의 확대, 생태환경의 중요성 강조, 주민참여형 건강 도시의 구축, 에너지 자립 지역 등으로 인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새로운 성장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제는 2040년 RE100(renewable energy 100%) 달성을 목표로 하며 자녀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교육을 시행해 미래세대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의 갈등에서 인제가 어떤 모범적인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표 3-14〉 강원도 인제 거주민들이 꼽은 히어로와 정부 요구 사항

히어로	정부에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자치 의정, 군청 감시조직 - 떠나지 않고 인제군에 사는 주민들 - 최선을 다하는 인제군 공무원 - 지역,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행정에 반영 - 빈 아파트 공공임대 및 거주 비용 지원 - 일자리 확보를 위한 스타트업 유치 - 인제군에 거주 중인 군인의 주소지를 인제군으로 이전

강원연구원의 시각과 정책 제언¹⁴⁾

남북관계의 악화와 호전, 이로 인한 군사 규제 강화,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국방인력 감축과 부대 이전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산림, 농업, 환경 분야의 규제까지 증첩되었다.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에 국가는 배려하지 않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췄다는 장점은 오히려 지역에 독이 되었다. 겹겹이 쌓인 규제는 지역의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했고, 이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졌다. 국가는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인구가 적은 접경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에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관망하고 있다.

상술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강원도는 물론, 접경 지역 5개 군도 많은 고민을 해왔다. 2008년 설립된 접경 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협의 기제이다. 인천, 경기, 강원도의 10개 접경 지역 기초지자체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접경 지역의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로부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접경 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활동은 지속되고 있다. 2021년에는 새만금개발청과 같은 대통령 직속 접경지역개발청의 신설을 요청했다. 국토부, 통일부, 환경부 등 10여 개 중앙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접경 지역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초광역협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접경 지역·DMZ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도 검토했다.

기후변화의 대응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접경 지역과 DMZ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접경 지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접경

14) 양철,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 책임연구원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의 해결방안과 접경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도 내 접경 지역 5개 지자체로 구성된 강원도 접경 지역 행정협의체도 운영되고 있다. 군납 농산물의 수의계약 유지,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 국방부가 무단 점유한 사유지 반환 등 주민들의 요구를 강원도에 대변하고 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지역소멸을 해소하고자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현대화 사업도 요구하고 있다. 침체된 지역 상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해 온 군 장병과의 상생 방안도 적극 건의하며 접경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 접경 지역 5개 군과 국방부로 구성된 민군상생발전협의회도 중요한 협의 기체이다. 강원도 접경 지역이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 해체 및 재배치로 강원도 접경 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협의회가 발족하였다.

접경 지역 지자체의 주요 요구사항은 군 소음 피해 대책 마련, 사격장과 항공대 이전,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 공공사업을 위한 미활용 군(軍)부지 활용, 지역 내 생산한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등이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는 국방부의 약속은 공허했다.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 대다수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접경 지역 지자체와 강원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불신만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강원도는 접경 지역 발전의 필요성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지자체 최초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고 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한 이유는 강원도가 남북교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접경 지역이 남북교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도 내재되어 있었다. '강원도 중장기 발전계획', '2040 강원비전'은 물론 '강소형 메가시티' 등에 포함된 접경 지역 발전전략에 남북교류, 북강원도와의 협력 등이 강조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순히 계획만 수립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여줬다. 2018년 분쟁과 소외의 상징에서 탈피하고자 접경 지역 대신 평화지역이라는 명칭을 선언하고 평화

지역발전본부를 신설했다. 본부는 5개 과와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50여 명의 공무원이 편제되었다. 이 중 평화지역문화과, 평화지역숙식과, 평화지역경관과 등에서는 접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발전 기반 조성을 전담했다. 민선 8기가 출범하며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접경지역과로 명칭을 바꾸며 접경지역 발전,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아가 2023년 6월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조항이 23개에 불과하다.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363개 조항이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 이에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조문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작업에 접경지역 현안과 관련된 조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접경 지역 5개 지자체에서만 100개가 넘는 사안을 특례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정부에 아무리 요구해도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숙원 사안을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해보고자 하는 접경지역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접경 지역 지자체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을 위한 노력에 중앙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정부도 접경 지역의 활로를 찾으려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상술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접경 지역이 국방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미비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낙후된 접경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까지 총 36회에 걸쳐 법안이 개정되었다. 이와 함께 ‘접경 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2011~2030년까지 165개 사업에 18.8조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2020년에는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2020’을 확정하고 53개 사업에 2,160억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편성된 계정으로, 접경 지역은 도서 지역과 함께 특수상황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균특회계를 통해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그린평화지대화과 기회발전특구 조성, 민군복합타운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접경 지역의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 마련되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해왔다.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관한 법률」은 명칭만 바뀌었을 뿐, 17~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

하고 23건이 발의되었다. 이외에도 「비무장지대 보전과 평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 「군유휴지 및 주변지역 발전 지원 특별법」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에 대해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물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주민 협의, 군부대 동의 등 불확실한 요인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제약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에 공감하지 못하는 주민의 목소리도 높다. 주민들은 경기도보다 더 낙후된 강원도 접경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 수와 예산이 경기도보다 적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특수상황 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할 말이 많다. 도서 지역이나 새만금 지역이 도대체 어떠한 희생을 감내했기에 우리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반문한다.

주민들의 불만은 선거철에 더욱 두드러진다. 지금까지 접경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수많은 공약이 제시되었다. 일부 공약은 이행되었지만, 접경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문제들은 여전히 진척이 없다. 강원도 접경 지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일·국방, 지방분권, 경제·산업 부문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아닌 소규모 잉여 예산만 분배되며 접경 지역이 미래발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접경 지역 기초지자체와 강원도,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접경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현안을 해결해 주기를 요청하고, 접경 지역의 발전을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이유는 이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접경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미래를 그려보라고 하나는 핀잔을 듣는다. 그러나 이는 나이 때문만이 아니다. 본인이 태어나 성장한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미래가 예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은 강원도의 발전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는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접경 지역은 지금과 같이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접경 지역의 상황은 개선될까? 수많은 투자자가

접경 지역이 아닌, 더 좋은 여건을 갖춘 북한의 일부 지역에 투자하지 않을까? 이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접경 지역이 '단순 통과지역(Bypassed Zone)'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김동성 박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결국 접경 지역이 지금처럼 소외되거나 앞으로도 계속 소외될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발전할 가능성이 없기에 청년들이 떠나고, 이는 고령화와 지역소멸로 이어진다.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제대군인의 정착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러스틱 라이프를 지향하는 이들이나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이들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에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도 같은 이유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아무것도 없는 접경 지역의 현실이 가로막고 있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줄기를 요청해 온 것이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미래에 한반도가 통일되어 더 이상 접경 지역이 아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발전된 모습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들이 바라는 미래는 '접경 지역이 아닌 접경 지역'이 아니라 지금보다 나은 환경이 조성된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이야 마을에 사람이 적기 때문에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혹은 이주민에 대한 텃세가 문제라고 하지만, 지금보다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이주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상술한 갈등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바람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인구가 점차 감소하며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더욱 집중될 것이다.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이 지방소멸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지역도 정부에 유사한 요구를 할 것이다.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달라는 요구,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는 요구가 점차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접경 지역에 해왔던 지원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것인가? 접경 지역은 지역소멸의 테스트베드가 된다. 접경 지역의 활성화 정도가 지역소멸 완화의 리트머스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을 고민할 시간이다.

4 대전 다문화 이주민 여성 노동자들

대전 미래워크숍 참여 대상자는 한국으로 이주해온 대전 외국인 여성 노동자였다. 이주 외국인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노동을 한 경험이 있어야 했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장기 거주 중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섭외가 진행되었다. 참가자의 최소 거주 기간은 9년, 최장 거주 기간은 22년이였다. 또한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 참여자가 많아 유일하게 주말에 진행되었다. 연령 또한 20대는 없었고 30~50대까지 섭외되었다. 이를 토대로 모집한 참여자는 10명이였다.

〈표 3-15〉 대전 미래워크숍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

		인원수 (명)	%
전체		10	100.0
성별	여자	10	100.0
연령별	30 ~ 39세	3	30.0
	40 ~ 49세	4	40.0
	50 ~ 59세	3	30.0



①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 공유



② 미래 트렌드 카드를 활용한 미래전망



③ 대안 발굴



④ 팀별 발표 및 토론

[그림 3-4] 대전 미래워크숍 프로그램 과정

“다문화 자녀는 공부 잘해요? 남편은 좋은 직장 다녀요? 결혼이민자는 늘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고 아이도 잘 키우기도 어렵다는 시선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나 시선이 상대에게 상처가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전에 거주하는 다문화 이주민 여성들과 함께 현재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들은 “다문화 이주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대우”, “외국인 아내를 부끄러워하는 한국인 남편과 시대”, “한국에서 낳은 자녀도 다문화 이주민으로 대하는 사회문화”,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 “소속이 없으면 능력을 의심하는 직업 문화” 등을 거론했다.

“시어머니 시대에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시아버지는 돈 벌러 나갔잖아요. 저는 제가 살았던 나라에서 살림은 빵점이었어요. 큰딸이어서 엄마, 아빠가 많이 예뻐해 줬어요. 그냥 학교만 다녔지 살림을 배울 시간이나 기회가 없었어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지 12년 된 한 여성은 “주위의 한국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돈을 받고 결혼한 줄 안다”며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도가 떨어져 편견과 오해가 심하다”고 털어놓았다. 중국에서 이주한 여성은 “한국 남자가 돈이나 학벌이 있었으면 한국 여자와 결혼했을 것이라는 주위의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한다”며 “한국의 남편들도 외국인 부인을 창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북유럽 등 이른바 선진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에게는 이런 편견을 갖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선진국에서 온 아내는 자녀에게 자신의 나라 언어를 가르치도록 한국인 남편이 권장하지만,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온 부인은 집에서 자녀에게 자신의 나라 언어를 쓰는 것조차 한국인 남편이 금지한다.

다문화 이주민으로서 받은 차별에 관해 “오래 한 곳에서 일해도 경험을 인정하지 않고 승진도 시켜주지 않는다”며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처지라 내년에도 일이 있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 다문화 이주민은 “처음에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한동안 우울했다”고 털어놓았다.

“노인이 되는 미래에는 매우 외로울 것 같아요. 한국사람들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동창들도 많잖아요. 저는 그게 다 없으니까. 게다가 친구를 만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커피도 사야 하고. 여기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친구도 못 만들고.”

이들은 미래를 전망하면서 “장차 퇴직하게 되면 이주민으로서 연금으로 살 수 있을지 걱정”, “건강하지 않아 일을 못 하면 한국을 떠나라는 압력을 받을 듯”, “앞으로 20년 동안 다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을 떠날 것”, “현재 외국어를 가르치는데 고령자가 된 미래에 누가 노인에게 외국어를 배우려고 할지 걱정”,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홀로 외로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주었다.

이들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 고립과 고독, 경제적 기여를 하지 못할 때 사회에서 내쳐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매우 컸다. 이런 불안한 마음은 미래 카드를 놓고 이야기하는 중에도 자주 터져 나왔다. 중국에서 이주한 여성은 ‘미중 갈등의 심화’라는 키워드를 놓고 “이대로라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혐오는 더 심해질 것 같고, 나처럼 중국 출신이 비난의 표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이주한 여성은 ‘정부의 신뢰도 저하’라는 키워드에 관해 “만약 한국 정부의 신뢰도가 지속해서 떨어진다면 아마 한국 정부가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외국에 대한 혐오를 부추길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나처럼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이 혐오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주민 여성은 ‘기후위기’에 대해 “경제발전보다 기후위기 대응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한국은 논밭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데,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본격적으로 식량난이 벌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우리를 지금의 모습 그 자체로 받아주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20년을 살아도 한국어 발음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한국인으로 귀화한 지도 오래되었는데, 일자리를 구할 때 여전히 제 외모와 발음을 보고 국적이 어디냐, 한국말 잘하냐고 물어보는데 상처도 받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들은 어려움을 가중하는 악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편견, 단일민족이라는 신화”를 많이 꼽았다. 심지어는 직장에 가려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때 한 한국인이 “아

이 돌봐주려고 외국에서 왔냐”고 물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외국인부터 나가라는 한국의 문화”, “독도 문제, 동북공정 등 외국과 분쟁이 벌어지면 외국인 출신 자녀들이 당할 차별”, “동남아시아 같은 제3세계에서 오면 더 차별하는 문화” 등을 거론했다. 편견, 차별, 배제, 압력의 단어가 이들의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했다.

〈표 3-16〉 대전세종 다문화 이주민 여성들이 꼽은 약당

약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정치인이 배제된 정치환경 - 이주 여성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는 한국인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비 부족 - 이주민의 정체성을 무시한 채 한국의 편을 들라고 하는 문화 - 화부터 내는 소통방식

이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문화 출신의 정치인 등장”, “다문화센터를 여러 곳에 세워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의 확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의 증가”, “다문화 이주민들의 잠재적 능력을 키워주는 전문 기관의 설립” 등의 아이디어를 내주었다.

이들이 느끼는 미래 불안감은 우리 사회의 소수 약자가 느끼는 불안감이다. “20년 뒤 나만 한국에 남아 있으면 매우 불안할 것 같다”는 어느 이주민 여성의 말은 우리 사회 누구나 느끼는 불안이기도 하다. 이주민의 불안은 곧 우리사회의 불안이며, 이를 완화하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 불안감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7〉 대전세종 다문화 이주민 여성이 꼽은 히어로와 정부에 요구사항

히어로	정부에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외국인 소통 네트워크 - 이주 외국인 대상 법률 교육 - 위기 다문화 가정 모니터링 시스템 - 다문화 가족 전문가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이주민에게 일자리 소개 및 알선 - 다문화 친화적인 정치환경 형성 - 한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 휴가, 휴일 제공 -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노동시간 선택권 제공

대전세종연구원의 시각과 정책적 시사점¹⁵⁾

대전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현재 및 20년 후 예상하는 미래의 어려움은 일자리, 노후, 자녀, 기후, 사회갈등 등 일반 시민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한국 사회의 소수자이자 비주류로써 이들이 온몸으로 체감하는 불안은 더 예민하고 다층적이며, 강도가 더 세다는 점이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왜 대전 이주민이 생각하는 오늘과 내일은 더 불안한 것일까?

첫째, 누구나 예상 가능한 다른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갖게 되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들이다. 이런 차이는 한국어 교육이나 다문화이해교육으로 가능해 보이고, 따라서 한국에 정착할 이주민, 사회통합대상으로 범주화되는 다문화가족에게는 이런 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대전 이주여성은 이런 제도가 내포한 관점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 선주민 관점으로 계획되고 만들어진 한국어나 다문화이해 교육의 대상은 이주민으로 한정된다. 이들의 가족, 혹은 직장 동료, 그리고 지역 이웃으로 지내는 한국 선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상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이주민은 한국어를 배우고, 의식주 관련 문화나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 등 한국문화에 동화되는 적응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받는 반면,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한국 선주민은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 태국어 등 언어나 이들 문화를 따로 배워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크지 않다. 이주민은 한국사회를 배워야 하는 교육 대상으로 존재한다. 물론 교육을 통해 얼마나 한국인이 되었는지 증명할 것도 요구받는다.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완성되지 않는 '한국인' 되기 프로젝트는 이주민이 한국에 사는 동안 진행해야 할 과업이 되고 있다.

특히 이주여성이 요구받는 한국문화 적응 노동은 성별분업과 남성 중심의 가부장 문화가 공고한 가족문화를 기반으로 한다. 이주여성은 개인보다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속에 명확하게 존재한다. 각각의 종교적, 문화적 배경에서 이주한 여성은 생애 기획을 가진 이주민, 시민보다는 다문화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엄마, 부인, 며느리로 한국시 민이 된다.

15) 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 실장

둘째, 이주여성은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려는 이유는 한국에서 형성한 '다문화가족'의 생활비 등 가족 생존이라는 실질적 필요와 함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출신국에서의 학력이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다.

미래 전망 워크숍에 참여한 이들의 일자리는 이주민 대상 통·번역이 주를 이루는데 이 일자리는 임시적이며, 불규칙적인, 불안정노동(*precarious labour*)의 특성을 보인다. '다문화' 관련 일자리의 특성이기도 하다. 이들은 소속된 조직이 없는 프리랜서로 자신을 설명할 명함을 갖고 있지 않다.

이주여성이 원하는 취업과 창업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그리고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기관은 많지 않다. 소속할 조직의 부재는 일자리의 지속성이나 안전과 직접 연계되지만, 장기적으로 경력 개발과 유지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이주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과정에서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과 돌봄을 경험해야 하는 여성 대다수의 문제지만 자원이 취약한 이주여성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동한다.

불안정노동에 참여하고 있기에 자녀 돌봄 문제는 심각하다. 이들 다문화가족의 자녀 돌봄은 출신국 부모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 '기타동거인'으로 불리는 이주여성 부모의 국내 체류 기간은 다문화가족 자녀 수와 연동된다. 이주여성의 사회참여와 자녀 돌봄, 그리고 부모 체류는 연결된 문제이지만 각각 다른 정책과 제도 위에 위치한다.

여기서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주여성의 부모는 다문화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한국 사회의 정착자로 사회통합 대상인 결혼이주민 관련 법, 정책과 제도에서 '이주민' 관점의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 범주가 이주민의 가족문화, 아시아적 가족 규범을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주 오랜 편견과 차별이다. 이주여성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지지해줘야 할 배우자와 가족이 자신이 '외국인'임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낀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지 못한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다는 오랜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주여성은 이런 느낌을 계속 갖게 될 것이다.

이런 편견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도 이어진다. 따라서 이주여성은 '다문화' 혹은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에 내포된 계급적, 민족적, 시혜적 정서를 거부한다. 중립적이며 초국적인,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내포한 새로운 언어를 기다린다.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범주의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주목적에 따라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다양하게 불리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이들을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혼해서 다문화가족을 이뤘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주노동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지만 결혼해서 가족을 형성하기도 한다. 학업을 목적으로 온 유학생도 학업을 마친 후 한국에서 취업하고 결혼하기도 한다. 처음 이주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법과 정책, 제도와 사업이 이주민의 실제 삶에 밀착되기 어렵다. 국제적 관점에서 이들 정책은 '이주'라는 큰 틀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일방적 교육과 적응에 대한 요구, 안정적 일자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노동시장, 다문화에 대한 편견은 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대전의 이주여성은 현재의 이런 어려움이 20년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국에서 20년을 살아도, 국적을 취득해도, '어디에서 왔냐?'는 질문은 계속될 것이고, 이 질문은 이들 자녀에게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완벽한 한국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다시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외국인'이기에 좋은 일자리 취업은 어렵고, 취업해도 승진에 있어 한국인 선주민과 비교해 차별받으며, 경제위기에 쉽게 해고될 거라고 걱정한다.

이주여성이 20년 후 희망하는 미래는 대전에서 가족과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이다. 이 '안전'은 경제적 안전이자, 외국인으로 차별받지 않는 정체성의 유지로 수렴된다. 그러나 지역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이 국가적 수준으로만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대전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은 자신의 삶을 국가적 수준과 글로벌 수준에서 교차해서 조망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들 개인과 가족의 정체성과 경제적 안정, 노후 문제 등은 거시적 관점으로 조망된다. 환경오염과 기후 문제, 중국과 미국의 주도권 경쟁에서 추측되는 한국의 어려움, 정부의 신뢰 저하와 사회 불안이 이주민 개인과 가족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즉 개인의 노력만으로 자신과 가족의 안정적 정착, 한국 사회에서 재생산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는 이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이주민의 관점

에서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고, 비자 제도를 고민하며, 외교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대표로 확장된다.

이주여성이 생각하는 사회악은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단일민족 정서다.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 정서가 파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이에 따른 한국인 정체성의 강요다. 이주가 일상화되면서 2021년 11월 현재, 총 인구의 4.1%인 200만 명이 넘는 이주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을 대표할 당사자대표는 없다. 가족 개념도 다양화되고 있는데,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 범주는 확장되고 있지 않다. 이주민 관점에서 이주민이 경험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구를 담아낼 정책과 제도도 기획되기 쉽지 않다.

이주여성이 생각하는 사회악은 '경제' 중심의 국가주의적 사고다. 한국보다 가난한 아시아 국가에서 온 이주민은 한국 사회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는 집단이라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진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기후 등 각각의 차이에 위계를 부여하는 근대적 이분법적 사고는 수평적이고 민주적 다문화 감수성의 결핍과 글로벌 시티즌십의 부재로 이어지고, 이는 실제로 거주하는 우리 사회 이주민의 오늘과 내일을 힘들게 한다.

결국 이주여성이 선호하는 미래는 사회 내부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선 성원권, 글로벌 시티즌십을 가진 개인이 존재하는 사회다. 모두가 동등한 개인으로 공존하는 사회는 존재 자체로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타자를 교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태도다.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사회참여에 차별을 경험하지 않으며, 이주민 스스로가 정치적 대표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 혹은 통합' 된다는 것과 '나와 가족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한국에서 살기' 라는 말의 결은 다르다. 이주민이 한국 사회의 기준에 맞춰 한국인이 된다는 것과 이주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이주국에서 미래를 기획하는 것은 주체의 차이를 드러낸다. 즉, **이주민 정책은 이주민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하고 나아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들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가 시급하다.

5 전남 고령장애인과 돌봄노동자

전남 미래워크숍 참여 대상자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돌봄노동자였다. 총 20명 가운데 요양보호사 16명, 활동지원사 4명이 섭외되었으며 워크숍은 각각 따로 진행되었다. 성별이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섭외했으나 중장년층 여성이 많이 활동하는 직업 특성상 요양보호사는 전원 여성으로 섭외되었고, 활동지원사도 4명 중 3명이 여성이었다. 요양보호사는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의 3개 센터를 통해 섭외했는데 16명 전원 공공기관 소속의 요양보호사였다.

〈표 3-18〉 전남 미래워크숍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

		인원수 (명)	%
전체		16	100.0
성별	여자	16	100.0
연령별	40 ~ 49세	1	6.2
	50 ~ 59세	13	81.3
	60 ~ 69세	2	12.5



①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 공유



② 미래 트렌드 카드를 활용한 미래전망



③ 대안 발굴



④ 팀별 발표 및 토론

〈그림 3-5〉 전남 미래워크숍 프로그램 과정

“10년 일해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시급제로 일해요. 위험수당도 없어지고 휴게시간도 없고 교통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센터에서는 우리에게 주당 59.5시간만 일하도록 해서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요.”

재가 요양보호사들과 현재 겪는 어려움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을 성토했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주로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중증 환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의료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결함”, “매우 기본적인 보호 활동만 하도록 부추기는 현재 요양보호 시스템의 문제”, “환자 가족들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몰이해와 갑질”, “환자마다 위기 상황에서 대처가 달라 매번 긴장해야 하는 상황” 등을 거론했다. 대부분 요양보호사는 어려운 처지인 사람들을 돕는다는 사명감에서 시작하지만, 실제 돌봄 노동자로서 겪는 차별과 부당한 대우는 자발적 의지를 꺾어놓는다고 털어놓았다.

한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노동자들은 노인들의 잔존 능력을 유지하거나 키우는 등의 전문적 활동을 하는데 환자의 가족이나 환자는 자신을 가사도우미 정도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때론 남자 노인들이 여성 돌봄 노동자들에게 성적 희롱과 성추행도 한다. 이런 일은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실상 돌봄 노동자들은 다반사라고 입을 모은다. 한 여성 요양보호사는 “이런 일이 많아 나는 남성 노인 환자는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돌봄노동을 하면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고 위급했다. 이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환자의 이름부터 부르는데 만약 대답이 없으면 쓰러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너무 긴장된다”, “심장약의 부작용으로 폐에 물이 찬 92세 노인을 돌보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누구도 나에게 이 환자의 병력에 관해 이야기해주지 않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난감했다”, “뇌출혈로 쓰러진 환자를 4년째 돌보고 있는데 언어수준이 7세 이하의 아동과 같아 무엇이 필요한지 눈치로 알아내야 하는 것이 어렵다”, “노인을 돌보러 갔는데, 집안에 들어가면 가족들의 빨래와 설거지가 놓여있고 이런 일부터 하라는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상한다” 등을 털어놓았다.

이들이 전하는 돌봄노동 현장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서 정작 노인들이 더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지, 노인이 되면서 얻게 되는 각종 질환은 무엇인지, 그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

는지 사실상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봄노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될 텐데 한국의 돌봄노동 시스템으로는 내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금은 이들의 희생으로 돌봄서비스를 지탱하지만 이들이 은퇴하면 그다음 세대가 이런 ‘정글’ 같은 일터의 현장에서 돌봄의 일을 하고 있을지 우려된다는 말이었다.

이들이 언급한 ‘악당’은 “고령 노인의 상태를 거의 모르는 사회에서 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 “전문 교육의 부재와 합당한 대우가 없는 현실”, “전문적 요양보호사를 키우려고 하지 않고 긴급돌봄만 중요하다는 복지체계”, “돌봄 노동자들을 돌보는 사람이나 시스템의 부재”, “사회적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 요양보호처럼 개인에게 밀접한 서비스는 매우 어려운 상황” 등 이었다. 특히, 돌봄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으며, 개인 휴식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쉬어야 하고 이동시간을 빠듯하게 인정해줘 과로에 몰리는 상황을 호소했다.

〈표 3-19〉 광주전남 돌봄노동자들이 꼽은 악당

악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을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민간센터장들 - 편법을 이용하여 사대보험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간센터 - 전문 교육의 부재와 합당한 대우가 없는 현실 - 전문적 요양보호사를 키우려고 하지 않고 긴급돌봄만 중요하다는 복지체계 - 돌봄 노동자들을 돌보는 사람이나 시스템의 부재

이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대상자, 그의 가족, 요양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 등이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직업적 처우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돌봄 대상자가 성희롱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는 제도”, “고령장애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이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각종 지원시스템의 확충”, “요양보호사의 주당 일하는 시간을 59.5시간으로 정해 4대 보험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운영기관과 제도의 보완”, “진짜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 서비스의 양극화 현상 타파” 등을 거론했다.

〈표 3-20〉 광주전남 돌봄노동자들이 꼽은 히어로와 정부에 요구사항

히어로	정부에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보호사와 어려움을 공유하는 동료 - 장애인 친화적 시설 - 부당한 일을 고발하는 내부고발자 -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 연장과 월급제 - 성희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시스템 마련 - 돌봄노동자를 위한 지자체의 소통 담당자 - 부정수급 처벌 강화 - 장애인 가족 돌봄 시스템 마련

우리는 돌봄노동자들과 미래워크숍을 진행한 후, 2차로 광주의 장애인 활동지원사 4명과 소그룹 인터뷰를 진행되었다. 요양등급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주요 업무다. 4명의 모집인 가운데 3명이 여성, 1명이 남성이었다. 광주의 ‘엠마우스복지관’을 통해 섭외를 완료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 3-21〉 광주 온라인 미래워크숍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

		인원수 (명)	%
전체		4	100.0
성별	남자	1	25.5
	여자	3	75.0
연령별	50 ~ 59세	3	75.0
	60 ~ 69세	1	25.0



〈그림 3-6〉 광주 미래워크숍 프로그램 사진

전남 광주에서 만난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에게서 현재의 어려움, 미래의 어려움, 그 어려움을 가중하는 악당과 이를 해결할 대안 또는 히어로, 정부에 건의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부모와 아이가 모두 중증장애인인 가족을 돌보고 있어요. 15년 넘게 이 가족을 돌보고 있는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4년이 되는 데 갈 곳이 없어요. 이들에겐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 우리 제도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부모마저 죽고 나면, 미래에 이 아이가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사들과 현재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장애인을 돌보는 현장의 참혹함에 대해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중증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는 “어느 기관이고 중증장애인을 받아주는 데가 없다”며 “이분들 사는 집은 늘 엉망이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때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활동지원사는 “이들과 거리에 나가면 딱 가는 길만 가야지 자칫 우회라도 하면 내 머리채를 잡고, 자동차 키도 빼버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돌봄 대상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여서 마음을 한시도 놓을 수 없다.

이들과 미래 키워드를 갖고 미래에 닥칠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들은 “고령장애인들은 요양병원에 가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기에 가기 싫어하는데 가족까지 해체되는 미래라면 이들의 미래는 매우 고독할 것”,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인구감소로 계속 악화하면 장애인처럼 약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울 듯”, “민간주도로 활동지원사 서비스가 더 확장되면 우리들의 처우는 더 나빠질 것” 등을 전망했다.

“활동지원사의 얼굴 표정이 어두울 때가 많아요. 이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받는 월급은 최저시급도 안되고요. 오랫동안 일해도 근속 수당도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도 안 되어 있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미래에 더욱 심해질 문제를 지속적으로 양산할 수밖에 없는 악당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들은 “활동지원사에 대한 보호자의 편견”,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민간센터”,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문

화”, “중증장애인 시설에 투자하지 않는 정부” 등을 거론했다.

〈표 3-22〉 광주전남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꼽은 악당

악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사에 대한 보호자의 열악한 인식 -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민간 주도 센터 -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문화 - 부족한 중증 장애인 시설과 감금되다시피 하는 수용소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심는 히어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한 활동지원사는 “광주의 엠마우스복지관이 직접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하고 거기다가 사회복지사를 투입하고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단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고 장기는 1년 동안 거기서 계속 돌보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한다”며 “광주시가 이런 역할을 확대해주면 중증 장애인의 부모들이 조금 힘을 덜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주었다. 이들은 “일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활동지원사”, “광주의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융합보호센터” 등을 희망의 근거로 꼽았다.

〈표 3-23〉 광주전남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꼽은 히어로와 정부에 요구사항

히어로	정부에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를 사랑하는 마음 - 일에서 느끼는 자부심 - 광주 중증장애인 돌보는 융합보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융합센터를 건설하여 사회복지 분야 공동 구성 - 요양 분야 통합관리를 통한 겸직 방지

고령장애인과 미래 대화

우리는 전남 광주에 거주하는 두 명의 고령장애인을 만났다. 고령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해 집밖으로 나가기 힘들어 직접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만나야 했다. 우리는 70대 남성 고령장애인과 60대 여성 고령장애인을 만나 이들의 어려움과 해결의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70대의 남성 고령장애인은 대학을 나와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살았다. 그는 과거 척추수술을 몇 차례 했으며 지금은 “대소변을 억지로 빼내는 장치를 달고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겪는 고통에 대해 “작열통처럼 피부가 타는 고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발현이 되지 않았을 뿐 누구나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장애인에게 무슨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마다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열어주는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존엄한’ 생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존엄한 생존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휠체어를 타고 나갈 수 있는 삶”이라며 “매년 지자체에서 새로 보도블록을 깔고 있지만 장애인이 다닐 길은 여전히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은 대부분 소외감도 느끼고 외로움도 큰데 병 치료와 관련이 없더라도 심리를 전공한 사람이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힐링과 위안이 된다”고 했다. 그가 제안하는 존엄한 생존은 비장애인에겐 일상이지만 장애인에게는 닿을 수 없는 환경이다.

우리가 만난 60대 여성 고령장애인은 암 투병과 지체 장애, 불편한 거동으로 거의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처지였다. 곁에서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요양보호사가 없으면 일상이 불가능해진다. 항암치료를 받는 날이면 병원에서 온종일 입원해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며칠을 앓아눕는다. 그럴 때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럴 사람도 없다. 겨우 인근 교회 교인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전화를 걸 수 있지만 이마저도 미안해서 참는다. 그래도 이들의 도움은 삶을 지탱하는 의지가 되어준다.

그는 “매월 30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는데 임대아파트 관리비로 13만 원을 내고 병원에 갈 때 차비 등을 제외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며 “요양보호사가 직접 쌀도 가져오고 반찬도 해줘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갈 때만 밖을 구경하는데, 이때 “꽃이 많이 피었구나. 벼가 많이 자랐다”고 느끼는데, 혼자 서라도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지체장애인으로 살면서 그는 스스로 기술을 익혀 자립하려고 했지만, 사회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저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분명 잘 할 수 있는데 했던 일이 많았는데 나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서 자신을 두고 “저 사람 저 일 못해요. 어디 하게 생겼냐”고 편잔을 줄 때마다 주눅이 들고 마음이 아파도 속으로만 삭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솔직히 사람들이 싫다”며 “그래서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즐겁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시각과 정책적 시사점¹⁶⁾

‘고령장애인’은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고령화된 장애인이란 젊어서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이 된 채 고령에 이른 장애인을 의미하고, 노인성 장애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리학적 기능 저하로 노인이 되어 장애를 얻은 경우다. 장애를 얻게 된 배경과 최초의 장애 발생 시점은 다르더라도 일반적으로 고령장애인은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 등록장애인은 지난 2007년 2,104,889명에서 2021년 2,644,700명으로 539,811명(2007년 대비 약 26%) 증가했다. 이중 고령장애인은 2007년 688,884명(전체 등록장애인의 32.7%)에서 2021년 1,357,215명(전체 등록장애인의 51.3%)로 급증하였다. 특히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전남, 전북, 경북 지역의 고령장애인은 급증했다.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수명연장으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며,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 역시 증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령장애인이 겪는 노화와 장애의 이중고는 향후 국가와 지역사회의 큰 숙제가 될 것이 자명하다.

최근 정부의 고령자 정책 기조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로 전환되고 있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는 시설에 가지 않고, 본인이 거주하던 집 혹은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의료, 커뮤니티 등 다방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령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국가나 지방정부도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고령장애인은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노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인정책이나 장애인 정책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질 뿐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사실상 부재하다. 노인정책에서는 장애인 정책으로, 장애인 정책에서는 노인정책으로 일종의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 고령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정책 개발은 사실상 없었다.

2021년 1월부터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에 대해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함께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그 배경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던 장애인들이 만 65세가 되면서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돼 서비스 급여량이 감소

16) 심미경,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연구실 책임연구위원

했고,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고령장애인의 고립감과 활동에 어려움이 컸던 것이 있다. 이 때문에 당사자와 보호자가 계속 개선을 요구해 마침내 개선되었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정책 설계에 있어 대상자인 고령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배려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증가하는 고령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확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들을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관련 조례는 주로 고령장애인 대상 실태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 계획에 따른 관련 사업 추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상 그동안 거의 방치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고령장애인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4고(苦)는 질병, 빈곤, 고독, 무위라고 한다. 그런데 이 노인의 4고(苦)는 고령장애인에게는 더 무겁게 작용할 수 있다. 장애로 인한 통증, 활동의 어려움, 이로 인한 고독과 무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은 악순환의 고리로 심화된다.

이번 연구를 위해 만난 고령장애인의 인터뷰에서 보듯이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병원조차 갈 수 없고, 집안에서 혼자 시간 대부분을 보낼 수밖에 없어 깊은 우울감과 상실감, 고립감은 더 커지게 된다. 다행히 가족이 함께 거주하거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식사나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요양보호사나 활동보조원, 혹은 사회복지사와 같은 외부 도움을 받아야만 아주 기본적인 일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고령장애인의 돌봄은 지역사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 대상자가 이용한 '휴블런스'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 동행이 어려운 건강 약자를 위한 원스톱 병원 동행 서비스이다. 간호 전문 경력을 가진 동행 매니저가 병원 이동과 접수, 진료, 검사, 약국 처방, 귀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LH광주전남지역본부가 결합해 센터 운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휴블런스 서비스는 고령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민-관 협력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community care)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이런 모델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 자원들의 발굴과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령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광주에서 만난 돌봄노동자들이 토로한 어려움과 현실은 비단 광주만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들이 제기한 직업적 자존감 향상과 처우개선, 지속적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현행 시스템의 한계로 발생하는 서비스 사각지대 문제 등은 전국 공통의 상황이다.

특히 이들의 처우가 워낙 열악해 돌봄노동자의 신규 유입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돌봄노동자의 연령이 상승해 실제로 ‘노(老)-노(老)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고령장애인은 훨씬 더 강도 높은 케어를 해야 할 수도 있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돌봄노동자가 다치는 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그러나 돌봄노동자의 대체인력이 없어 아파도 쉬지 못하고, 병원비 역시 오롯이 개인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서비스 대상자와 그 가족의 갑질 문제, 성희롱 등도 여전히 그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상에서 논의된 고령장애인과 돌봄노동자가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고령장애인의 실태와 욕구 파악, 그에 근거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과 서비스 제공이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설계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등에서도 적극 활용하여 진정성 있는 지역복지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더불어 급변하는 과학기술변화를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과 돌봄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복지 영역에서 과학기술과 복지의 결합은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건강, 이동, 주거, 노동 등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대안으로 인식해왔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이러한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전동침술이나 비데가 개발되었던 것처럼 최근에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욕창 예방을 위한 로봇 침대, 자동 기립형 스마트 비데, 낙상사고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스마트 슈즈 매트, 욕조 익사 사고 예방을 위한 센서, 재활치료용 의료기기, 웨어러블 로봇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은 현재 진행형이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위험 요소(전력 사용량, 일정 시간 동안의 움직임의 변화 등)를 감지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수면이나 복약 관리, 치매 예방 놀이, 건강정보 측정도 이미 보편화되고 있다. 아직은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원격의료 서비스도 결국 안정화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현장에서의 필요성은 높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예산, 기술 안정화, 이해관계자 간의 견해 차이 등 다양한 문제로 보편화가 더디지만 미래사회에 고령장애인의 존엄한 노후가 있는 생활환경 마련과 이들을 돌보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만큼은 함께하고 있다.

정부 역시 지금이야말로 건강한 지역사회 유지와 고령장애인과 보호자, 돌봄노동자 모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고령친화기술 개발과 산업화 기반 조성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다.

6 제주 해녀들

제주 미래워크숍 참여 대상자는 제주에서 활동하는 해녀였다. 일반적으로 고령자가 많은 직업적 특성이 있으나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자 20~40대 해녀를 전체 참가자의 절반 이상 모집하였다. 또한 해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경력에 따른 제한은 두지 않았다. 해녀들의 경력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0년이였다. 이를 토대로 11계의 어촌계 해녀가 워크숍에 참여하였고 참여자는 22명이었다.

〈표 3-24〉 제주 미래워크숍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

		인원수 (명)	%
전체		22	100.0
성별	여자	22	100.0
연령별	20 ~ 29세	1	4.6
	30 ~ 39세	7	31.8
	40 ~ 49세	6	27.3
	50 ~ 59세	3	13.6
	60 ~ 69세	3	13.6



①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 공유



② 미래 트렌드 카드를 활용한 미래전망



③ 대안 발급



④ 팀별 발표 및 토론

〈그림 3-7〉 제주 미래워크숍 프로그램 과정

“지금은 바다가 많이 오염되서 물건이 없어요. 소득도 적어서 해녀를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주에서 미래전망 워크숍에 참여한 해녀 22명과 개별 인터뷰한 해녀 1명을 포함, 총 23명을 만나 현재 겪는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았다. 이들은 “바다 온도가 지속해서 올라 성게 같은 해산물을 채취하기 어려워졌다”, “바다의 각종 쓰레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힘들고 때론 오징어 잡는 고리들 때문에 손을 다치기도 한다”, “기후변화로

외래종이 우리 바다로 들어오고 상어 떼도 출몰해 물질이 점점 어렵다”, “해녀가 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등의 의견을 들려주었다.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에 관해 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바닷물이 언제부터 짜지 않다거나 바다의 사막화로 불리는 백화현상(해조류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석회조류가 바다의 바위를 뒤덮는 현상),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제주에도 물범이 들어오고 이들의 유입에 따라 상어도 함께 들어오는 등 바다의 변화가 심상치 않았다고 전했다.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발전소에 항의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발전소에서는 육상의 생태계 조사는 철저히 했는데, 바다의 생태계 조사는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발전소 때문에 물건도 없고 바다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돈 들여 연구할 수도 없고.”

육지에서 버리는 폐수, 육지의 개발 과정에서 베어진 나무들의 잔해가 바다로 흘러들어와 근해에 쌓여 바다생물을 살지 못하게 하는 상황 등은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건들이었다. 해변가의 음식점들이 쏟아내는 배출수에 소라들이 썩어가며 해파리 떼가 출몰해 해녀들을 공격하는 현상도 빈번하다. 한 해녀는 “기후변화 때문에 미역이 바다에서 살지 못하고 흐물흐물 녹아 죽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래를 전망하면서 “해녀들의 고령화로 아마 20년쯤 지난 후에는 해녀를 보기 힘들 것”, “해녀의 연평균 수입은 300만 원이 되지 않는데 누가 해녀를 계속할지 모르겠다”, “바다 환경은 지속해서 나빠지고 양식이 증가하면서 폐수 또한 증가해 해녀의 일터는 날로 폐허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주었다. 해녀들의 연평균 수입이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말은 충격적이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2~3개 직업을 갖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지금 차박(차 안에서 숙박)이나 캠핑하는 사람들이 떠날 때 버리는 쓰레기나 환경오염이 엄청나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져야 해요.”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가중하는 악당으로 관광산업을 진흥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바다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활동을 내버려두는 정부를 꼽았다. 한 해녀는 “우리가 관광

객들에게 뭐라고 하면 싸움만 일어난다”며 “관광객들이 제주 바다를 경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정한 구역을 정해주고 이곳에서만 허용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다른 악당에 대해 “다양성과 지역의 특수성은 사라지고 대기업의 효율성, 획일성만 살아남는 한국의 경제시스템”, “해녀를 하고 싶어 한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일인데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 “해녀의 일터를 기후변화나 환경파괴로 잃어야 하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구조”, “미래세대 해녀를 키우지 않는 어촌계와 정부 정책”, “수협이 해산물의 판로를 독점해 해녀들의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 등을 꼽았다.

특히 수협의 문제는 여러 해녀가 공통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산물의 양과 판로를 획일적으로 지정하다 보니 해녀들이 상황에 맞게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별로 해산물의 포획량을 정해놓아 해녀들이 지역별 상황에 맞게 해산물을 채취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미래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

해녀가 되는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해녀 양성을 위해 해녀학교를 세웠지만 여러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진짜’ 해녀가 되려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20-30대에게는 2~3년 동안 해녀가 되는데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하지만 40대 이상의 지원자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해녀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녀들이 탈의하거나 물질이 끝난 이후 몸을 씻는 공간도 점차 폐쇄되고 있다. 바닷가 인근에 가건물을 짓고 오랫동안 해녀들의 탈의실로 썼지만, 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용두암 근처에서 만난 해녀는 “여기 탈의실도 곧 철거할 예정이라 앞으로는 바닷가에서 탈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 3-25〉 제주 해녀들이 꼽은 악당

악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과 지역의 특수성은 사라지고 대기업의 효율성, 획일성만 살아남는 한국의 경제시스템 - 해녀를 하고 싶어 한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일인데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 - 해녀의 일터를 기후변화나 환경파괴로 잃어야 하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구조 - 환경 파괴 후 보상하는 정책의 지속 - 미래세대 해녀를 키우지 않는 어촌계와 정부 정책 - 수협이 해산물의 판로를 독점해 해녀들의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

“제주도 각 지역의 해녀들이 이렇게 미래워크숍을 이유로 모여서 미래의 바다와 해녀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매우 좋네요. 이런 워크숍 더 했으면 싶은데요.”

우리는 해녀들과 미래대화를 이어가면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희망의 씨앗에 관해 서로 교류하는 자리가 부족했음을 확인했다. 한 해녀는 “나이와 사는 지역을 떠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문제점을 논의하면 해녀의 미래가 훨씬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자 제주해녀협회장은 “코로나 때문에 총회가 중단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회의를 재개하고 지역별로도 고향 해녀, 신규 해녀 등 함께 만나서 의견 교류하고 이를 전체에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해녀들은 “집안의 명맥을 잇고 싶어서”, “바다의 숨소리가 좋아서”, “비가 올 때 바닷속에서 밖을 보는 게 신비로워서”, “바다가 미치도록 좋아서” 해녀가 됐다고 했다. 이들에게 바다는 일터이자 삶을 지속하는 장소이다. 이런 바다가 오염되고 병들어가고 있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지만, 바다의 치유에 대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쓰레기를 줍는 것밖에는 없다. 이들이 육지의 배출수, 폐수를 고발해도 바뀌지 않고,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로 바닷가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 항의해도 경제발전을 이유로 무시되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들은 “해녀는 약자”라고 말한다. 약자여서 바꿀 수 없다는 자조였다.

젊은 해녀들 사이에서는 개선과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해녀가 잡은 해산물을 ‘라이브 커머스’ 형태로 판매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해녀들이 직접 해산물을 가공하는 공장도 운영하려고 한다. 해녀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런 힘을 바탕으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각종 원인에 대해 해결의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한 해녀는 “어촌계장들을 중심으로 해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서라도 더는 바다 오염과 해녀들의 고통을 참지 않겠다”고 말했다.

〈표 3-26〉 제주 해녀들이 꿈은 히어로와 정부에 요구사항

히어로	정부에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녀협회 - 다른 어촌계의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해녀 축제 - 해산자원을 키워 방류하는 시스템 - 해녀에게 전문지식을 길러줄 수 있는 여러 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격한 양어장 건설 및 관리 규제 -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에 걸맞은 전문부서 신설 - 바다 식목일 추가 지정하여 바다 살리기 정책 확대 - 지자체에서 어촌계 시설 등 개선사항 반영 (예: 해녀들이 잡은 물건을 육지로 끌어올려주는 크레인의 설치 등)

제주연구원의 시각과 정책 제언¹⁷⁾

제주 해녀는 숙종 28년(1702년) 「조선왕조실록」에는 ‘잠녀’, 숙종 40년(1714년) 「조선왕조실록」에는 ‘해녀’라는 역사적 기록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한편 해녀는 어업의 일종인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의미하고 있으며, 나잠어업은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신고어업)에는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낚·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제주 해녀들의 전통적인 수산물 채취방식과 문화는 고유성, 역사성, 예술성을 인정받아 해녀어업은 2015년 12월 16일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지정, 해녀문화는 2016년 11월 30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017년 5월 1일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해녀와 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복지, 소득, 작업환경, 문화전승 사업으로 구분하여 매년 2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비가 빠진 지방비(자체예산)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2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관련 연도별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22,772	24,280	22,177	23,836	25,582
복 지	소계(9개 사업)	10,151	10,499	9,935	11,863	12,236
	도 해녀협회 운영비 지원	42	43	30	28	28
	해녀진료비지원	5,569	5,569	5,517	6,868	7,272
	어업인안전보험가입비지원	62	61	58	60	59
	유색해녀복지원	1,173	1,284	1,069	973	903
	해녀태워보호망지원	34	32	31	30	30
	어촌계 신규가입비 지원	14	12	19	19	19
	현업 고령해녀수당지원	3,185	3,065	2,636	2,580	2,591
	고령해녀은퇴수당	-	376	517	1,230	1,259
신규해녀초기정착금지원	72	57	58	75	75	

17) 좌민석, 제주연구원 미래산업 관광연구부 책임연구원

사업명		연도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소득	소계(15개 사업)		8,624	10,024	8,860	8,655	9,056
	수산종자매입방류		2,445	2,758	2,800	2,580	2,180
	마을어장경영평가우수어촌계지원		150	135	121	121	121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80	20	11	7	7
	마을저야 갯녹음 분포도 조사		-	-	-	-	20
	소라 TAC 전수조사		-	-	-	-	13
	패조류투석		1,500	1,500	1,500	1,500	1,500
	패조류용어초투하		2,457	3,200	2,512	2,393	2,375
	해조류 PP마대 지원		40	32	30	19	20
	소라가격안정지원		1,652	1,720	1,788	1,879	1,721
	마을어장복원(시비살포)		60	87	90	110	854
	해녀탈의장 등 부지 대부료 지원		-	-	-	-	30
	고령어업인(해녀) 의료치료 지원 차량 구입		-	-	-	-	60
	해녀진료비 전산프로그램 개선		-	-	-	22	20
	소라유통협의체 운영		-	8	8	4	4
	소라판촉 및 소비촉진		240	564	-	20	131
	작업환경	소계(8개 사업)		1,749	1,278	1,191	1,076
해녀탈의장운영 지원			156	156	156	156	156
해녀공동작업장 보수			111	61	61	44	94
해녀탈의장 보수			258	163	156	170	159
어촌계작업도구지원 (소라, 성게껍질 분할기 및 분쇄기)			120	108	108	55	55
어장진입로 정비			500	280	280	256	310
안전조업장비 지원			64	60	70	35	35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540	450	360	360	360
해양생태환경(마을어장 갯닦기)			-	-	-	-	300
소계(19개 사업)			2,300	2,390	2,219	2,350	2,821
문화전승	해녀학교운영비지원등		208	274	217	210	200
	제주해녀축제 지원		298	238	280	313	344
	해녀공연운영지원		470	128	164	180	212
	제주해녀문화 콘텐츠 보급		100	50	50	40	40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55	50	50	40	40
	제주해녀 총서 발간		-	-	-	50	50
	제주해녀 해외 프로모션		-	100	100	50	80

사업명	연도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제주해녀일대기록			50	50	50	50
해녀박물관 운영		589	822	439	593	608
해녀어업 문화복원정비		-	-	-	100	70
제주해녀굿지원		-	118	118	160	160
제주해녀문화 전국방송 제작		-	-	44	50	130
해녀문화예술지역특성화 지원		530	510	592	460	460
제주 고령해녀 복지인식조사 연구		-	-	-	-	20
제주해녀 역량강화사업		10	10	10	14	14
제주해녀유산 네트워크 활성화		-	-	70	20	20
제주해녀 한방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	-	-	-	100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 행사		-	-	-	-	100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비		40	40	35	20	123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내부자료

이번 워크숍에서 해녀들의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백화현상, 해루질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해녀들의 소득창출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매년 수산종자방류사업 및 바다 숲·해중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루질과 관련해서는 2021년 4월 9일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인한 분쟁해소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비어업인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를 제정하였고,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를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기 위해 제주특별법(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미래에 겪을 어려움에 대해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해녀들은 고령화로 인해 20년쯤 지난 후에는 해녀를 보기 힘들 것이며, 연평균 수입은 300만원이 되지 않아 해녀는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해녀어업 보존·육성 및 문화 전승 기본계획에도 제시된 바 있으며, 특히 신규 해녀 가입이 연간 0명일 경우 20년 후에는 700명으로 현재 대비 80.63%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8〉 해녀어업 보존·육성 및 문화 전승 기본계획에 제시된 해녀 수 변화 결과

구분		신규해녀 연간 30명		신규해녀 연간 0명	
		해녀 수	증감율	해녀 수	증감율
현재	2020년	3,613	-	3,613	-
10년 후	2030년	2,231	-38.25	1,935	-46.44
20년 후	2040년	1,240	-65.68	700	-80.63
30년 후	2050년	850	-76.47	169	-95.32
40년 후	2060년	775	-78.55	42	-98.84
50년 후	2070년	752	-79.19	10	-99.7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21), 해녀어업 보존·육성 및 문화전승 기본계획

제주의 대표 상징인 해녀가 감소하여 사라진다면 국가중요어업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역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해녀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에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에는 나잠어업이라 정의되어 있는데 나잠어업이라는 용어는 과거 일제강점기 때 용어로서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해녀의 가치와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용어 개정이 필요하고, 나잠어업이라는 용어를 해녀 및 전통잠수어업으로 개정하여 해녀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잡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해녀에게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국비가 없는 지방비만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에 해녀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해녀는 여성어업인에 해당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인구 감소와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해녀를 포함시켜 해녀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육성하여 어촌의 활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제주는 기후 온난화와 해양환경 변화로 인해 연안 해역의 갯녹음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제주 마을어장 10m 이상의 깊은 수심대에는 자연적으로 감태 등 해조류 군락이 잘 형성되어 있으나 갯녹음이 발생하고 있는 천해역(수심 10m 이내)에는 해조류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녀들은 주로 수심 10m 이내에 분포하고 있는 수산

자원을 채취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천해역을 대상으로 한 모자반, 청각 등 천해역 중심의 해조장 조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해녀들이 물질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주요 수산물인 소라이다. 소라인 경우 채취량의 약 80% 이상이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나 코로나 19 감염병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수출량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제주도에서는 소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TAC(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있다. 총허용어획량이 결정되면 제주도에서는 지구별 수협(제주시, 한림, 모슬포, 서귀포, 성산포, 추자도)별로 연간 소라 어획량을 할당한다.

제주 소라는 TAC 대상 품종이고 전국대비 생산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획득하여 안전한 수산물로 고부가가치가 가능하다. MSC 인증은 MSC가 설정한 엄격한 환경기준을 갖춘 어획활동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이라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 지속가능한 어업임을 보증하는 표시이며 유럽, 북미 등 선진 국가에서는 지속가능한 어업 인증을 획득한 수산물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라를 대상으로 MSC 인증 획득을 통해 일본 수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동남아, 중국, 유럽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며 해양수산부에서도 국제적인 수산물 인증인 MSC 등 경쟁력을 갖춘 인증 취득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라를 대상으로 MSC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젊은 해녀들은 해산물을 '라이브 커머스' 형태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해녀들이 직접 해산물을 가공하는 공장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증인 MSC 인증을 획득하면 소라 판매량 또는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해녀들인 경우 '자신들은 약자'라고 표현하였고, 다양성과 지역의 특수성은 사라지고 대기업의 효율성, 획일성만 살아남는 한국사회의 경제시스템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해녀들의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 이들에게 '바다는 일터이자 삶을 지속하게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한 바다, 깨끗한 바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제3절

선호미래의 의미와 실현을 위한 쟁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이머징 시티즌이 마주하는 악당과 미래 문제들

우리는 6개 지역의 주민들과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미래에도 예상되는 어려움, 이런 어려움을 가중하는 사회적 요인과 해결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역별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다양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성장주의, 경쟁 중심의 성장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성장주의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 초점을 맞춰보면 공통적인 의견이 확인된다.

6개 지역 시민들과 미래워크숍에 나눈 사회적 문제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3-29>와 같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정 지역과 계층, 그룹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문제들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들을 풀지 못하면 더 많은 시민에게 불안감과 좌절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

<표 3-29> 이머징 시티즌이 경험한 사회적 문제들과 주요 내용

이머징 시티즌이 경험한 사회적 문제들 (지역별 미래 대화에 참여한 시민들)	주요 내용
꿈을 빨리 실현하지 못하면 쫓아내는 정부 정책 (전북 귀농귀촌 청년들)	정책 대상의 초기 유입 단계만 집중, 단기에 양적 성장만 추구하는 정책
외형에만 투자, 문화 자산은 축적하지 않는 정책 (대구 공연예술인들)	문화시설, 행사유치에만 지원 집중, 문화를 만드는 창작자의 역량, 창작물 보호, 창작자 생태계 조성은 소홀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지속적 갈등과 대안 부재 (강원 DMZ 접경 주민들)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갈등 지속, 지역주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정책 과정
사회가 불안하면 소수와 약자부터 차별하는 문화 (대전과 세종시 다문화 이주민 여성 노동자들)	경제적 기여를 기준으로 차별하고, 성장의 기회를 독점하려는 사회지배층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 사회적 돌봄의 약화 (전남 고령장애인과 돌봄노동자들)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들의 증가, 돌봄 노동자의 역할 축소
미래세대, 미래환경을 파괴하는 정부의 무책임 (제주 해녀들)	경제발전과 도시개발을 명분으로 환경파괴, 인재 양성 시스템의 관료화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미래 대화의 말미에 성장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말을 붙이면 좋을지를 물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성장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고 싶어서다. 이들은 다양한 성장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종합해보면 3가지의 방향이 확인된다.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줄곧 추진했던 성장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개인의 성장을 희생하고, 개인의 차이를 무시했던 국가적 성장주의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공존하는 토대를 허물었다.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국제현실에서 국가가 능력 있는 개인을 앞세워 지속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실력을 끌어올려 양적 성장률을 높이는 전략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경제성장이 국가의 목표는 될 수 있어도 개인의 목표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가난했던 과거에 경제성장에 집중했던 것은 일시적 과제였을 뿐 경제적 성장만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다. 예전처럼 삶이 피곤해도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일하겠다는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덜 여유롭더라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졌다. 500만 원을 벌면서 도시에 사는 것보다 200만 원을 벌면서 시골에서 사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미래전망워크숍에 참여한 시민들은 “적절하게 멈추는 성장”, “치우치지 않는 성장”, “이제 그만 성장”, “착륙하는 성장”, “평온의 성장”, “내면의 성장” 등 성장주의에 대한 성찰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들을 제시했다.

전북의 귀농·귀촌 청년은 성장 앞에 ‘착륙’을 언급했다. 그는 “바둑을 두는 일도, 치킨을 튀기고 커피를 타는 일도 인간보다 기계가 훨씬 잘하는 시대, 조만간 변호사와 의사의 역할도 인공지능이 대신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인류는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개인의 성장이나 환경보존, 계층의 공존 같은 걸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일귀농은 경제적 성장을 안전하게 ‘착륙’시켜야 하며, 착륙해야 하는 곳은 더 성장한 경제 선진국이 아니라 공존, 배려, 개인의 성장, 환경의 보존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둘째는 성숙사회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했지만 더욱 힘써야 할 성장에 관한 것이었다. 시민들은 경제성장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당장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보존 등의 세계적 과제도 놓여있다. 급격한 에너지 전환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래전망워크숍에 참여한 시민들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성장”, “포용과 의식의 성장”, “개인의 시민성 성장”, “문화적 성장”, “가치의 성장” 등 물질보다는 정신, 경제보다는 문화와 가치, 집단이나 사회보다는 개인, 불균형이 아닌 균형, 구별이 아닌 포용 등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에 대해 일부 추진한 경험이 없지 않지만, 성장의 목표를 재조정하고 그에 따라 시민과 사회의 역량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재논의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성장의 방향을 확인하기도 했다. 미래 전망 워크숍의 참여자들은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환경의 건강한 성장”, “다문화 성장,” “개인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며 살 수 있는 성장” 등을 제시했다. 이런 성장의 방향성에는 인간중심주의 극복을 암시하는 것도 있고, 한민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자는 제안,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미래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의 등장을 요구하는 것도 담겨 있다.

이는 이머징 시티즌의 전망과 대안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여러 대안의 방향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지역사회의 자율과 분권화의 강화, 다양한 시민들이 주권자로 공공의 문제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공론장의 형성, 국회의 지역 정책 강화, 바람직한 변화에 다가가는 사회적 신뢰도의 전반적 향상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앞으로 이머징 시티즌 연구는 이런 방향을 고려하면서 더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제4장

소수(약)자의 ‘배제된’ 선호미래

제1절 이머징 소수의 정의와 연구 설계

제2절 우리가 잘 듣지 않았던 존재들: 입양, 장애, 빈곤, 동물, 죽음

제3절 우리가 생각한 것들

제 1절

이머징 소수의 정의와 연구 설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왜 소수인가?

이 장에서는 '소수(약)자'의 선호미래를 살펴본다. 작업의 기본 취지는 보통 떠올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미래나 정책을 말해 보자는 것이다. 이것은 이 보고서 전체의 테마이기도 하다. 미래나 정책을 말할 때에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은 대표성이나 일반성 같은 것이다. 미래를 말할 때에 우리는 보통 주된 패턴을 읽어내려고 한다. 선호를 묻는다고 할 때에도 대표성 같은 것을 많이 따진다. 한국인들의 몇 퍼센트가 어떤 미래를 선호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다수성보다는 소수성에, 일반성보다는 특수성에, 대표성보다는 전형성에 주목하고자 했다. 그러한 성격을 표현한 것이 '이머징 시민'(emerging citizens)이다. 이 장에서 이머징 시민은 보통 소수자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질문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둘째, 그들은 누구인가? 셋째, 어떻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가? 넷째, 그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섯째,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보통 소수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로 언급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정상성을 낮설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들이 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다수자는 없기 때문이다. 이들 이유는 모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미래 연구의 맥락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갖는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한다.

미래학자 이나야툴라는 2010년대 초에 미래학의 성격을 논하는 글에서 지난 50년간 미래학의 초점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서 대안적인 미래를 그리는 것으로 이동해 왔다고 정리한다(Inayatullah, 2012:37). 그는 미래학의 접근법과 계획(planning)·예측의 접근법을 구별하는 미래학의 특징을 9가지로 정리한다(40쪽): ① 5-50년에 걸친 장기 관점을 갖는다. ② 다층의 시간을 고려한다. ③ 질적으로 다른 시나리오들을 그리고자

노력한다. ④ 현실을 다층적으로 해석하고자 노력한다. ⑤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중시한다. ⑥ 다양한 방식의 방법론을 활용한다. ⑦ 전략이나 계획 그 자체의 정교함에 신경 쓰는 만큼 미래의 과정에도 관심을 갖는다. ⑧ 실천 지향적이다. ⑨ 학문적 작업의 성격만큼이나 사회운동의 성격도 갖는다. 이 중 5번과 7번, 8번, 9번은 모두 변화를 강조하고 행동을 강조한다.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조한다. 미래를 말하는 것에 변화를 말하는 것의 의미도 있다면, 소수자의 목소리가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다.

다수자는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는 세력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현재의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이야말로 현재 질서의 성격을 보여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변화는 다수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변화는 소수가 만드는 것일 수 있다(남경태, 2006). 어떤 정책이 실질적인 의미를,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도 보통 소수자에서이다. 따라서 변화를 만들어야만 하는 이들은 소수자이다. 그것의 의미는 ‘맥락 있는 목소리’이다. 그것은 이른바 ‘여론’으로 불리는 추상적인 목소리와는 구별된다. 어떤 것에 대해 평균적인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현실을 유지하려는 것에 가깝다(박상훈, 2017: 303).

사전적 정의로 소수자는 어떤 속성의 측면에서 수가 적은 사람이다. 또는 약자(disadvantaged group)라는 뜻도 있다. 이런 정의는 물론 좋은 정의이지만 이 연구의 맥락에서 소수자를 집단이나 범주라기보다 관계의 의미로, 위치의 의미로 규정할 때에 더 많은 함의를 끌어낼 수 있다. 즉 누가 소수자인가라는 질문보다 소수자라는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적절할 수 있다. 관계로 볼 때 소수자의 의미는 정치적 아웃사이더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속성은 그가 속한 정치적 커뮤니티의 주류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통점은 어떠한 속성을 갖건 그것으로 인해 정치 공동체에 온전히 통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Preece, 2005: 9-11).

2 잘 듣지 않았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른바 ‘약한 신호’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미래학에서 통용되는 것이 ‘이머징 이슈’ 탐색법이다. 미래학에서 이머징 이슈는 “현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파열음”(박성원 외, 2021a: 5)이다. 그것은

가시화된 적은 없으나 장차 사회 전체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후보군이다(박성원 외, 2021a: 157).

이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대량의 문헌에서 키워드를 탐색하거나 델파이 조사로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갖는 한계도 있다(박성원 외 2021a: 158). 이러한 방식으로 확인된 이머징 이슈의 후보군이 되는 약한 신호조차 대개는 지식 엘리트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미디어, 학술데이터베이스,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자체가 엘리트의 담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잡히지 않는 소외된 약한 신호가 있을 수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던질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은 이머징 이슈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다(박성원 외, 2021a: 163). 이머징 이슈의 주어는 누구인가? 화자가 다양하다면 그들은 각기 누구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머징 이슈의 화자 집단에조차 속하지 못한 사회 집단은 누구인가? 선행미래를 확인하는 작업은 미래상을 찾는 것과 함께 미래상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찰도 동반해야 한다(박성원 외, 2021: 19) 이러한 맥락을 의식하면서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는 방법으로 우리가 주목한 것이 구술사 연구의 시각(김귀옥, 2014)이다. '구술사'는 지배자들이 만들어 낸 역사에 대항하는 역사 쓰기의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구술사 연구는 거대 사건의 자장에서 포착되기 어려운 '다수'의 삶을 보는 함의도 갖는다. 목소리 자체의 고유성이 갖는 힘에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 구술 연구자 최현숙은 구술을 "사소한 시민들 하나하나의 소문자 역사"(최현숙, 2018: 137)로, "우리 사회가 한 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최현숙, 2018: 135)로 규정한다.

구술사 연구의 관점과 방법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작업도 구술사 연구의 시각과 일정 수준 맞닿아 있다. 사회의 중요한 측면을 포착하고 고민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술 형태로 듣고, 그것을 구술자의 생애사적 맥락에서 해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다. 우리는 구술자가 어떠한 생애 맥락에서 우리가 듣고자 한 사회 현상을 접하고, 의식하고, 포착하고, 해석하고, 서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시간성을 드러내어 보고 싶었다. 개인과 사회가 만나는 지점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변화는 그러한 "시간성"에 대한 이해(박상훈, 2017: 14)에서부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 우리가 만난 삶/사람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만난 사람은 다섯 명이다(〈표 4-1〉). 이들은 소수자라고 불리는 존재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고민해왔다. 책으로까지 풀어낼 정도로 고민해왔다. 정은주는 아이를 입양해 키우면서 입양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녀가 쓴 책의 제목은 “그렇게 가족이 된다”이고 부제는 “핏줄신화를 넘어 또 다른 가족을 상상하며”(2021)이다. 백정연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발달장애인을 위해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녀가 쓴 책 제목은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이고 부제는 “다양한 몸 사이의 경계를 허물기 위하여”(2022)이다. 김윤영은 반빈곤 운동단체의 활동가로 일한다. 그녀는 서울시에 살고 있던 어머니와 딸 두 명의 동반자 살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사회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그녀가 정환봉과 함께 쓴 책 제목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2014)이다. 이 딸은 어머니가 자살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월세가 밀린 점을 사과하면서 마지막 월세를 담은 봉투 위에 남겼던 메모다. 문선희는 사진작가다. 그녀는 가축 전염병 예방을 이유로 동물을 살처분하고 묻는 매몰지 100곳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 책 제목은 “묻다”(2019)이다. ‘묻다’는 파묻다는 의미도 있지만, 질문하다는 뜻도 있다. 김형숙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지금은 간호학과 교수로 있다. 그녀의 책은 죽음의 문제를 다룬다. 책 제목은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2012)이다.

이 책들은 기본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일부는 당사자로, 일부는 참여자나 관찰자로 글을 썼다. 이들은 주류 질서의 이면을, 주류 질서가 드리운 그늘을 드러내는 작업을 한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표 4-1〉 '이머징 소수' 세미나 참석자

	이름	지위	제목	키워드
1	정은주	전국입양가족연대 활동가	가족 관계의 미래: 핏줄 신화를 넘어 또 다른 가족을 상상하며	가족 (입양)
2	백정연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 대표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 다양한 몸 사이의 경계를 허물기 위하여	장애
3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빈곤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말하다	빈곤
4	문선희	사진 작가	문다: 가족 살처분과 매장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	동물
5	김형숙	순천향대 간호학과 교수	한국인의 죽음	죽음

4 어떤 식으로 정리했나?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해당 주제에 관한 1시간 가량의 발표를 부탁했다. 발표 후에 연구진이 질문을 하고 발표자가 답을 하는 문답 시간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량 가졌다. 이 대화를 녹음했고, 녹취록을 작성했다. 다음 절에서는 이 세미나 내용을 구술 기록의 형태로 정리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내용은 흐름이 있도록 연구자가 일부 내용을 생략, 수정, 재배치했다. 중간의 소제목은 연구자가 발표자의 구술 내용을 참고해 연구자가 붙인 것이다.

이 작업은 정형화된 절차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면서 어떤 것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세미나의 내용을 특정한 이론적, 방법론적 관점에 따라 정리하지는 않았다. 다만, 다섯 명이 구술한 사회 현상의 성격이 최대한 맥락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의 스토리로 읽힐 수도 있도록, 구술을 재가공했다. 기본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되, 구술자 각자의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과 진단을 담고자 했다. 이어서 구술자 각자가 해당 현상에 대해 제시한 과제와 대안을 담고자 했다. 시간과 주제, 내용은 구술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형식에서, 그러면서도 세미나 참여자와의 대화라는 형식 내에서, 구술자가 말한 것을 하나의 의미 있는 스토리로 구성해보고자 했다. 스토리, 또는 내러티브를 포착하고 드러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 작업의 방법론적 특징은 서사적 인터뷰, 또는 내러티브 분석의 철학 및 기법(최종렬, 2012; Creswell and Poth, 2021)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우리가 잘 듣지 않았던 존재들: 입양, 장애, 빈곤, 동물, 죽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아이들이 있다

베이비박스

2009년부터 2022년 2월까지 베이비박스에 온 아이들이 약 2천명이에요. 이 중 거의 70%가 시설에 보내져요. 나머지가 입양되는데 정말 소수 시설장의 선의나 호의에 기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설에 가면 거의 다 시설에서 자라다가 만 18세에 보육원을 퇴소해서 혼자 살아야 해요. 베이비박스에 오는 아이들이야말로 친권이 완전히 포기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입양 대상자가 되어야 할 아이들인데 보육원으로 보내지는 거죠. 2009년도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었는데 초기에는 한 달에 한두 명 들어올까 하다가 2012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2012년부터 새로운 입양특례법이 시행되었어요. 핵심은 출생신고를 해야 아이가 입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모든 자기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 이름을 실명으로 올려야 해요. 그 후에 입양을 의뢰하면 입양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수많은 미혼모가 베이비박스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당시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이비박스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유기해도 되네?’ 생각하고 유기한다는 거예요. 입양특례법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베이비박스로 올라가는 계단이, 언덕이 무척 험난해요. 거기를 찾아오는 생모를 보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걸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를 자주 버리게 유도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예전 같았으면 입양기관에 의뢰될 아이들이 오롯이 베이비박스에 왔다고 봐요. ‘아이를 실명으로 신고할 수 없다, 밝혀지면 학교는 물론이고 집에서도 내쳐지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하는 편지가 많습시다.

그렇다면 왜 이 아이들이 시설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원래는 베이비박스에 아이가 오면 경찰에 연락되고 의료진이 검진하고 지자체에서 아이를 출생신고해요. 그 다음에 일시보호소에서 단기 보호를 하면서 입양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일단 시설에 가면 그 아이의 입양 길은 거의 막힌 거라고 봐야해요. 시설을 폼뿔하려는 건 아니에요. 시설의 생리상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오면 굳이 그 아이를 입양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빈 자리를 다시 새로운 아이로 채워야 하는 게 번거로울뿐더러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고 인원이 차야 지원 액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호의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양을 열심히 알아보시는 시설장을 몇 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굳이 입양 보낼 이유가 없거니와 '그냥 시설에서 크는 게 뭐 어때서?' 생각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설 퇴소 청년들의 삶이 너무 척박해요. 그들을 몽똥그려서 보지 않고 한 인간, 한 인간으로 만나면 그들의 눈물이라는 것은 상상을 불허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시설에서 크는 아이들에 대한 기본 연민만 있어도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베이비박스에 온 2000여명의 아이들 중 1,300여명의 아이들은 시설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 살 가능성이 큰 거죠.

입양가족들이 2018년 초에 전국입양가족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남인순 의원이 입양특례법을 개정한다고 공청회를 열었어요. 그것을 계기로 '이런 식으로 입양법이 개정되면 아이들이 결국 시설에 더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자생적으로 부모단체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노력했던 게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자는 거였어요. 베이비박스로 온 아이들이 시설로 가지 않도록 중간에 징검다리를 빨리 놔야 하는데 일시보호소는 그럴만한 인력도 없고 인프라가 전혀 없어서 아이들이 오면 시설로 바로 보내는 경로를 깨야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정위탁제도가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한시적으로 맡아서 키웠는데 이 아이를 입양해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일이 있어요. 실제로 몇 가정이 메르스 사태 당시에 임시보호로 시작해서 입양을 했어요. 가정위탁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입양으로 연계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위탁만 해주세요, 시기는 아주 제한적입니다'라고 말해도 입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보통은 한 2주로 봐요. 성분을 창설해야 하는데 그걸 지자체장이 해야 해요. 입양으로 의뢰하려면 법적 후견인이 있어야 해요. 이

것도 지자체장이 해요. 그런 서류 작업이 그 정도 걸려요. 이걸 한 다음에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보육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육원에 가면 보육원장이 법정후견인이 돼요. 가정위탁이 일시보호소나 시설보다는 아이에게 좋은 환경인데 이게 공공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그 어떤 공적 지원도 없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진짜 부모들은 그 절박함을 알아요. 그런데 공적 시스템에서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보호출산법

그래서 우리 입양부모들이 강조하는 게 보호출산법이거든요.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의사가 출생을 자동으로 신고하게 하는 출생등록제가 앞으로 통과될 것 같아요. 온 국민이 태어난 순간 등록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정당한 얘기 맞아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겠죠. 병원을 못 찾는 산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출산법이 얘기되고 있는 건데 이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어 있어요. 진보주의적인 정치권에서는 보호출산법 절대반대 입장이에요.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처럼 대립되는 상황이 무척 안타까워요.

자신의 출생을 알아야 할 권리는 천부 권리다. 누가 생부모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숨기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근본 논리로는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고, 아이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살아 있어야 부모를 찾는 자기의 뿌리를 찾는 할텐데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 그때의 알권리라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 의미를 갖냐는 거죠.

생존권과 알권리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유럽에서도 재판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비밀을 보장하는 익명출산제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비박스 아예 없어요. 원하면 의료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완전히 비밀로 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된 입양인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나는 나의 알 권리를 찾겠다. 생부모가 누군지 알아야겠다. 그리니까 익명출산제라는 제도 자체가 불법이다. 인권에 반하는 법이다.’ 여기에 인권재판소가 이렇게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어요. ‘인권에 반하는 제도가 아니다. 아이의 생존권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서구 사례를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했던 고민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 밟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경직되게 밟고 있는 거예요. 다른 쪽 의견이 뒤길래 저렇게 열심히 말하지,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는데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말만 해요. 들으면 너무 맞아요. 정말 천부인권이죠. 그런데 현실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는지 안타까워요.

입양 공공화 정책

2021년 6월 30일에 입양 공공화 정책이라는 것이 갑자기 실시되었어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정인이 사건이 굉장히 큰 한몫을 했죠. 대중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참에 공공화로 가야 된다고 해서 힘을 받은 거예요. 원래 입양기관에 가서 입양 상담을 받았는데 입양기관에 찾아가면 입양으로 결정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입양 보내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제시해야 되는데 입양기관은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니깐 그러지 않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생모의 상담을 맡는 식으로 체제가 싹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기관은 생모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공적 영역으로 넘어간 거죠.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데 아동보호 전담요원 이 사람들이 구청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모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하게 되는데, 담당자가 구청 직원이죠. 지나다니는 사람 있고 자기 사는 지역이고 심지어는 그 직원이 자기 아는 사람이고 동네 사람.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어요. 입양을 보내겠다고 찾아오기까지의 과정은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좀 받으면 키울 수 있나요? 그런 어떤 단편적인 사고방식에 저는 분노하는 것이고요. 전담요원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거죠. 입양 보내겠다고 생모가 왔으면 그들이 말을 터놓고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환경도 그렇고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절차가 무기한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해서 서류를 다시 입양기관으로 보내서 그 입양기관에서 하면 거기서 또 무슨 사례결정위원회인가에서 심의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자꾸 분절되는 거예요.

공공화를 주장하면서 헤이그 협약을 말하는데 헤이그 협약에서도 민간 기관을 배제하지는 않아요. 헤이그협약을 보면 “권한 당국과 함께 국가로부터 인가받은 민간기관도

공공의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입양기관들이 해오는 일도 공공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굳이 입양기관을 배제한다는 것은 제게는 입양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주장을 해외입양인단체나 미혼모단체 일부가 하는데, 해외입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을 하죠. 국내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좋죠.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해외입양을 안 가면 시설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양 수요가 정해져 있고 또 남자아이나 장애아는 거의 국내 입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시설에 남기겠다는 의도밖에 아닌데 ‘당신들이 정말 인권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서로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겸손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입양정책의 미래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다. 어떤 제도를 말할 때 시설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장 최우선에 놓고 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한 200개가 넘는 집단보육시설에 전국적으로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어요. 10년, 20년 장기보육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나라가 과연 있겠습니까?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집단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것을 누가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걸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1만 명 넘는 아이들을 집단수용을 하고 키우면서도 친권이 살아 있는 애들이라고, 입양 대상아가 아니라고, 입양 활성화를 얘기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한물간 얘기라고 말하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입양 활성화를 말하는 게 현장의 아이들에게 생명수 같은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주장해요.

국가가 나서서 입양 활성화를 강조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뭐라고 비유를 많이 하나면 ‘강에서 아기들이 막 떠내려 온다. 그러면 거기서 떠내려 오는 애들만 건지고 있을 거냐. 상류로 올라가서 누가 자꾸 애들을 떠내려 보내는지 그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아기만 건지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상류로 가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떠내려 오고 있는 아기

도 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이 해야지 왜 이거를 비판하고 저걸 해야 된다고. 이거는 양자택일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한쪽만 주장하냐?'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걸 물건이 아니잖아요. 떠나려가도 그냥 '이건 갔어, 저거 해결해야 돼' 이게 아니라 생명인데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입양가족의 의미

예전부터 있어 왔던 입양을 미래의 어떤 혈연을 넘어서 또 다른 특별한 제안으로 말할 것은 아니지만, 입양가족이라는 개념을 좀 사회적으로 확대가족 개념으로 확장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미혼부모 가족도, 시설 퇴소한 청년들의 공동체도 그렇고요. 입양가족은 뭔가 기득권자이고 정상가족의 범주에 들어가고 그래서 미혼모의 아이를 데려오는 정상가족 범위로 생각을 하는데 진짜 현실이 그런가라는 질문인 거죠. 입양가족으로서 받는 편견은 끊임없이 부닥쳐오거든요. 아직도 입양가족이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소수자 가족이라는 생각을 해요. 정상가족이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정상으로 보고 있나? 너무나 비정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을 늘 생활 속에서 하거든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입양가족을 보는 좀 새로운 시선이 있어야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드라마에서도 입양 얘기가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아빠 나 입양한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대사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되게 이상한 대사잖아요. 일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입양가족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는 이것도 새로운 가족 형태로 다시 한번 다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탈시설에 대한 시각

탈시설에 대한 시각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곳에 지금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낙인을 찍는 문제점을 봐야 하는 거예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탈시설인 목표로 가진 가되 실제 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물체를 우리가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탈시설 딱 지금 돼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죠. 베이비박스 폐쇄 이런 주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입양부모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시설에 있는 애들 너무 불쌍하고 안됐으니까 입양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쪽의 어떤 소외된 현장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도 애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문 닫으면 개네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면서 서서히 어떤 걸 해야지 '이건 나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혼모 인권을 위해서 입양은 하면 안 돼.' 그거는 마치 우리가 입양을 위해서 시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자꾸 경직되게 나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뭐 하나를 이렇게 콕 눌러버리는 식의 그런 행태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운동 논리가 돼버리면 특히나 아동 복지에 있어서는 그건 되게 큰 손실이라는 거죠.

항상 제가 생각을 해요. 내가 글을 쓰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든 그 목표가 뭔가를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것이 '아이들이 있다. 말 못하는 유권자가 아닌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누가 대변할 건가. 아무도 안 한다. 정치인도 안 하고 전문가도 안 하고. 그럼 그들과 가장 가까운 입양부모가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늘 생각하고자 노력을 하죠.

2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

사회복지사에서 사회적기업가로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어요. 졸업 후 다양한 복지기관에서 일을 했고요. 펀드레이징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경영대학원을 다녔고, 그리고 다시 펀드레이징에서 좀 벗어나서 장애인 쪽에서 계속 일하면서 현재는 사회복지 박사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 2017년에 '소소한소통'이라는 사회적기업을 창업해 어느덧 6년 차의 사회적기업가가 되었어요. 올 4월에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이라는 에세이를 썼는데요.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는 남편과의 일상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남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척수장애인인데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할 때는 미처 알지 못한 일상 속 차별을 남편과 결혼 후 장애인 가족이 되면서 세세히 알게 되었어요. 그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나 남편과 외출해서 이런 일을 겪었어. 결혼 전에는 미처 몰랐던 일들이야" 하며 SNS에 종종 올렸어요. 평소 친분이 있던 편집자가 그런 저의 경험과 생각을 보고 출간을 권유해서 책을 내게 되었어요.

장애를 만드는 사회

사회복지사로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과 편견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아주 사소한 일상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결혼을 한 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혼자 외출할 때의 사회와 남편과 함께 외출할 때 사회가 너무 많이 다른 거죠. 일단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저는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남편과 함께 지하철을 타면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깐 보통 2배는 걸려요. 또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시선인데요. '시선의 폭력'이라 칭할 만큼 불편한 시선이 너무 많아요. 남편과 외출했을 때 쳐다보는 시선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호기심. 저희 남편이 외출할 때 휠체어에 부착하는 전동이동보조기기가 신기하게 생겨 궁금해 하며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불편하거나 불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과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불편하게 쳐다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공간 안에서 배려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엘리베이터에 장애인이나 유아차 우선 탑승이라는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타지 못하는 저희 남편을 쳐다만 보고 있어요. 누구 하나 휠체어 사용자 먼저 타라고 양보하지 않는 거죠. 비장애인에게는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의 대안이 있지만 휠체어 사용자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면 층간 이동이 어려운데 말이죠.

이동권 관련해서 비장애인들은 시내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고속버스, 철도, 비행기 다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것에 반해 장애인들은 그런 환경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사실 탈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장애인 콜택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배차 시간이 너무 길고, 목적지 변경이 불가능해요. 콜택시라고 하면 사실 편안하기 위해서 타는 건데 결코 편하지 않은 거죠. 안전벨트가 휠체어 사용자의 몸을 완전히 고정해 주는 형태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의 위험 부담도 있고요.

장애인 정보 접근권에 대한 이슈도 중요한데요.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키오스크는 모든 사람에게 편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고 기술이 앞선 경우 장애인 등 소수자에게 불편한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외에 정책 정보나 일상에서 접하는 정보도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요. 발달장애인분들이 정책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는 신청주의라 신청하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 정보를 몰라

서 신청을 하기 어렵거나 신청하는 과정이나 절차 등이 어렵다는 얘기를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하고 계시고요.

제가 소소한소통을 운영하며 주장하는 것은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지원처럼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 또한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정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는 어려운 내용을 발달장애인에게 그대로 주고 ‘아~ 모르니까 발달 장애인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발달장애인이 이해를 못 하면 어려운 정보를 준 사람이 잘못된 거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보를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제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장애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장애가 장애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장애인이 가진 장애가 아닌 장애인이 접한 환경이 변화해야 한다’는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사회 분야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발달장애인법의 한계

2015년 11월에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됐어요. 이 법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정책 정보를 쉽게 바꿔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라고 되어 있으니 복지부나 서울시나 이런 곳이 해야겠죠. 그리고 ‘해야 한다’니까 의무규정, 강행규정이죠. 근데 아쉽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쉬운 정보를 직접 제작하는 일에 아직도 미온적이고요. 그 이유는 법의 허술함과 정부의 무책임에 있다고 생각해요. 법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정책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해요.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을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으로 만든 바가 없어요. 쉬운 형태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 정보를 쉽게 만드는 일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하여야 한다’라고 됐지만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발달장애인법 시행 준비 시점에 제가 보건복지부에 1년 2개월 파견근무를 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었으나 결국에는 만들어지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되었어요. 지금까지도 개정이 되지 않은 점이 안타깝습니다.

사회적 기업, '소소한소통'

2017년에 소소한소통을 설립했구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이유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이 섞여 있는데요. 마지막 직장에서 일을 하며 중간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 직장은 장애와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등을 만드는 일을 하는 공공기관이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장애인 가족이 되니 조직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기관인데 해당 업무보다 조직 자체의 운영이나 조직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일 등에 더 집중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고민과 회의감이 들던 찰나에 장애인단체에서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접거했었고 그때 제 입장이 충돌되는 경험을 했어요. 장애인 단체가 요구하는 목소리에 공감을 하는데 저의 몸은 입장이 다른 조직에 속해 있는 거죠. 결국에는 회사를 떠나게 되었어요.

사직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보니 어떤 조직을 가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한국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라는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사업 홍보물을 보고 쉬운 정보가 번개 치듯이 스쳐갔어요. 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법 시행을 준비하며 해외의 easy read를 살펴보며 '왜 우리나라에는 쉬운 정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이 없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조직도 만들고 쉬운 정보도 직접 만들어보자는 각오로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쉬운 정보

쉬운 정보는 생소한 개념일 거예요. 쉬운 정보란 이해하기 쉬운 글과 글의 이해를 돕는 이미지로 구성된 정보이고요. 사실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라 지향점과 지양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쉬운 정보가 되려면 해야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보의 흐름과 가독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적용되고요. 일 상에서 자주 쓰는 쉬운 어휘를 사용해서 복잡하지 않은 문법의 짧은 글을 써요.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심미성보다는 정보 전달을 위한 의미 부여를 고려하고요. 서식이나 홍보물, 교육자료 등 다양한 주제의 쉬운 정보를 제작하고 있고 활자로 된 정보 외에도 사인물이나 영상, 웹사이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에도 쉬운

정보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연구자들이 연구할 때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발달장애인도 설문에 응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설문지가 어려우니까 대리 응답이 너무 많은 말이에요. 최근에 설문지 자체를 쉽게 바꾸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쉬운 정보’라고 부르는 게 사회적으로 약속한 표현은 아니에요. 보통 읽기 쉬운 자료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소소한소통은 쉬운 정보라는 표현을 쓰기로 정했어요. 해외에서는 주로 ‘accessible information’이나 ‘easy read’라고 불리는데, 저희는 전자를 택한 거죠. 읽기 쉬운 자료라고 하면 활자로 된 인쇄물이 떠오르는데, 저는 눈으로 보는 모든 정보가 쉬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쉬운 정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요.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쉬운 정보의 주제는 꽤 다양한데요. 요리하기, 여행하기, 외국어 배우는 법부터 해서 전자제품 사용설명서, 집 구하고 계약하는 법, 돈 관리하는 법 등이예요. 어떤 분은 콘돔 사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고도 하셨어요. 남자친구도 본인도 콘돔 사용법을 모르고,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성교육 자료로서 만들어져도 좋겠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주제 중에 참정권과 관련된 쉬운 정보 요구가 가장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시각장애인분들에게는 점자로 된 공보물이나 음성파일이 집으로 전달되고 있어요. 투표소에는 점자투표판을 활용해 투표를 할 수 있고요. 발달장애인 분들이 원하는 참정권 보장은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림 투표용지입니다.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과 정당 로고를 넣어 글을 모르는 사람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쉬운 공보물입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이해하고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두 가지 모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매년 국회에서 개정안은 발의되고 있지만 통과가 되고 있지 않아요. 참정권은 성인이 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가지는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로 만들어져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장애에 관해 생각해 볼 몇 가지 문제

책 마지막에서 ‘장애에 관해 생각해 볼 몇 가지 문제’라는 주제로 5가지를 잠깐잠깐 언급했어요. “호기심은 불편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저희 남편하고 외출하면 그렇게 쳐다봐요. 특히 유모차 탄 애들이 ‘저 아저씨 어른인데? 어? 나랑 눈높이가 같잖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궁금함을 참지 못하는 아이들은 “엄마, 저 아저씨 뭐 탔어” 이렇게 물어 보는데, (엄마가)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호기심을 차단해요.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해요. 아마 그 아이는 장애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거나, ‘장애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장애를 나와 다른 존재로 분리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물어보면 정확히 알려주면 좋겠어요. “응. 이 아저씨는 장애가 있어서 걷는 대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야. 아저씨한테는 휠체어가 다리인 셈이지”라고 말이죠.

“장애인에게 엘리베이터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 한 엘리베이터 사용 배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비장애인에게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다른 대체제가 있다고 하면 장애인에게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사소한 배려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통합교육보다 더 중요한 일”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발달장애인분 중에 특히 본인의 장애를 인지하는 경증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발달장애인 중 특히 말투나 행동에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렸을 때 놀림, 따돌림, 왕따 등의 경험이 있어서 성인이 된 후도 학교폭력 트라우마가 남아 있고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리적 공간을 함께 하는 통합교육이 아닌 함께 생활하며 공부할,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진짜 통합교육이 필요해요. 저는 통합교육이 장애인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존재가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사는 사회로서 학교가 존재하니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필요한 일인 거죠.

“비대면 사회가 낳은 문제와 비접촉 시대가 감추는 비극”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가 나타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자신의 죽음과 자녀의 죽음을 함께 선택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 일부 발달장애인은 “동반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발달장애인을 부모가 죽인 거다”라고 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로서의 생존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의 부담과 책임을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온전히 전가한 정부가 이 상황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누군가는 새로운 고통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에 대한 해결은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도움벨이 아니라 도움벨 없는 사회가 필요하다.” 가끔 은행 등에 가면 도움벨이 보이는데요. 도움벨을 누르면 엄청 크게 소리 나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두 집중시키죠. 장애인분들이 도움벨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도움벨 없이 혼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원하죠. ‘내가 은행을 가는데 왜 도움을 받아서만 가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하철에서 휠체어 리프트 작동할 때는 ‘아름다운 우리 집’인가, ‘엘리제를 위하여’인가 하는 노래가 작동하는 동안에 계속 나와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안전하지 않은 리프트를 타는 거죠. 안전을 지키는 방법도 사용자를 고려해서 만들면 좋겠어요.

장애인으로 사는 법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이 출간되고 출판사 관계자, 남편과 함께 책거리를 하는데 저희 남편이 ‘장애인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본인이 30대 초반에 원인도 알 수 없이 해외여행 중에 장애를 갖게 되었고 그 이후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아무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해요. 휠체어는 어떻게 타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본인도 막막했고 가족들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살아야했던 거죠. 살면서 터득한 거죠. 장애유형이나 장애를 갖게 된 시기에 따라 다를 텐데 책이 되었던 교육이 되었던 장애인으로, 장애인 가족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의 시선과 관점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장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애인 스스로도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장애가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과 노력을 하지 않는 건 다른 건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사는 법이 필요한 주제죠.

제가 언젠가 “모든 집에 장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은 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라면 개인의 일이 아닌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라 치부하는 것 같아요. 사회가 변화해야 하는 일이 분명함에도 말이죠. 진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진짜 그래야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사회의 변화가 더더요. 장애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쓰려고 노력했어요.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함께 살기 위해 우리가,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3 빈곤곤의 관점에서 미래를 말하다

빈곤사회연대

저희는 2004년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2001년에 최옥란이라는 여성 장애인이 본인이 받았던 기초생활수급비 28만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반납하고 명동성당 앞에서 농성했던 적이 있어요. 이 농성을 지지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기초법 개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꾸렸는데 이 모임이 상시 연대체로 발전한 것이 '빈곤사회연대'예요. 저희는 빈곤이 일시적인 구호나 원조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가 빈곤과 불평등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도시에서 싸워온 전통적인 빈민들이 있어요. 1980년대부터 조직을 결성해 싸워온 철거민이나 노점상 같은 단체도 있고 200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빈민단체와 장애인 단체, 홈리스 쪽방 주민 공동체 같은 것도 있고요. 이들이 운동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이들 단체의 연대체로 활동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랄지 관련 제도의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바꾸는 활동도 하고 있어요. 도시 변화에 따라 위협 받는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한국의 빈곤 상황

한국의 빈곤 상황에 대해 제가 간략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기초연금 확대 등을 통해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전체로는 15% 정도이고 아동·청소년 빈곤율은 다소 낮습니다. 아동·청소년 빈곤율이 낮은 게 한국의 아동·청소년 복지 제도가 너무 잘 꾸려져 있어서일까요? 아동 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은 빈곤계층이 더 이상 가족을 구성하거나 출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시더라고요.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 소득을 상실했을 때 빈곤이 코앞에 닥쳐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가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미 포기를 해왔다. 그런 기간도 이미 지속이 됐다.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혼인이나 출산 같은 것들 역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허용되지 않는 일이 되고 있다.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소득 가구가 전체의 24.5%예요. 평균 가구원 수가 2.3명이라고 보면 저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 소득으로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잘 보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빈곤율이 상당히 낮아졌다고들 얘기하는데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소폭 낮아졌지만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빈곤율을 하락시키는 데 성공한 바가 있지만, 시장의 분배 구조 자체에 개입하는 데는 사실 실패한 것 아니냐. 계속해서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단지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넘어서 시장소득 자체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빈곤의 형별화, 도시의 고급화

가난한 사람을 범죄자로 보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2011년에 유엔에서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빈곤의 형별화 조치 보고서’라는 것을 채택했어요. ‘각 국가에서 빈곤이 어떻게 형별화되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고통이 가중되는가?’ 이걸 유형화해서 정리한 보고서였는데요. 4가지로 유형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빈민이 공적 공간에서 생계유지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과 규제, 관행이고, 두 번째는 공적 공간의 고급 주택화와 민영화와 관련된 도시계획 규제와 조치들이에요. 세 번째는 빈민의 자유와 개인적 안전을 위협하는 구금과 투옥을 과도하고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빈민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 및 가족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공적 서비스와 사회복지급부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강화함으로써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주목할 지점이 도시의 변형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훨씬 더 살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에 보고서가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민영화라든지 공적 공간의 고급화 같은 것 역시 형벌화 유형 중 하나라는 거죠. 도시의 고급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실패하나

그렇다면 사회보장제도는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질문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된 것은 99년도이고 시행된 건 2000년 10월이었거든요. IMF때 이 법이 제정된 거죠.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생활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수급 대상에서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했다는 점입니다. 그 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그리고 중증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만이 공공부조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였던 거죠. 저는 그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보장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호의 의무를 넘어서 급여의 보장을, 사회권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를 법률화한 최초의 제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가 언제나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2015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급여가 쪼개졌어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수급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2022년 3월 현재 한 210만 명 정도인데요. 주거급여는 월세를 지원받는 수준에 그치는 게 많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연결점이 되게 같아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숫자는 140만 명에서 160만 명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빈곤율이 15% 정도라고 볼 때,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숫자는 인구의 3% 정도 됩니다. 절대 빈곤율 역시 한 5~7% 정도는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둘 사이에

꽤 큰 간극이 있는 거죠. 선정기준을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0%, 40%, 46%, 50%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복잡한데, 수급 받으시는 분들한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제도인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나라 진짜 좋아졌지. 이런 게 다 있고. 나 이거 아니면 죽었어. 근데 너무 치사하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사는 거는.” 수급자가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렵죠.

정부에서는 보통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 하거든요. 수급자 선정기준을 넓힐 거냐,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줄 거냐, 아니면 수급자들이 받고 있는 보장의 수준을 높일 것인가. 이렇게 대답하는 문제로 자주 설명하는데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연결되어 있어요. 선정기준이 보장수준이기 때문에 그 선정기준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빈곤을 발견할 수 있는 선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기도 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으로 들어온 빈곤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보장수준이 높아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현재는 이것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수급자가 되기도 어렵지만 수급자로 사는 것도 너무 어렵다. 이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주소인 것 같아요.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렵다

4가지로 문제점을 나눠서 살펴보면, 일단 선정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소득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해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한 계산 방법은 또 따로 있거든요. 낮은 기본재산액, 복잡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 선정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탈락하기도 쉬워요. 약간만 소득이 초과해도 탈락하는 거잖아요. 소득활동을 조금 해도 괜찮으면 이것저것 조금씩 조금씩 해보면서 살 거 아니에요. 약간만 소득이 발생해도 “소득 발생하셨죠? 수급비 깎습니다”라는 연락이 오는 순간 사람들은 내가 안정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불확실한 소득활동보다는 그나마 안정적인 수급 안에 있는 게 나은 거죠, 확실히. 근데 그런 걸 안주하는 경향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게으르다고 이야기를 하죠. 제도가 만든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하나는 낮은 보장수준인데요.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매우 낮게 책정되고 인상율도 1-2%로 너무 낮아요.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논의도 활발한데 기준중위소득이

나 수급자들의 내년도 수급비를 결정하는 논의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고 심지어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아요. 보장수준 자체가 너무 낮은 것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고립이에요. 사람들과 만나서 편하게 커피 한잔 마시거나 밥을 한 끼 나눌 수 있는 그만큼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스스로 고립과 차단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생활보호법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넘어오면서 인구학적 기준이 폐지된 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활 일자리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서 일자리를 구해 와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임금을 받기 시작하면 또 그 임금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권리보장의 실패가 중요한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이잖아요. '보호'에서 '보장'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좀 이동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실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수급자들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정보가 완전히 비대칭이에요. 이 제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사람들도 자신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의 짐작하지 못한 채로 자신의 금융정보를 비롯한 모든 정보를 다 줘야 되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압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도 설계 자체가 단순해지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권리 실현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해서 가장 주요한 담론이 부정수급 담론이잖아요. 이런 담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앞에서 사람들이 계속 스스로도 주저하게 되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기 인식이 좀 부정적으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큰 함정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능력과 실패를 입증해야 해요. 수급자가 된 이후에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신호와 '당신이 여기에 머무르는 게 적당하지 않다'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무능력을 증명해야 도움 받을 수 있지만 능력을 통해 스스로 빠져나가라' 이런 주문을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들이 끊임없이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사람들을 계속 실패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성공할 수가 없는 과제잖아요.

빈곤 문제 없는 미래를 위한 과제

미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지만 ‘앞으로 어땠으면 좋겠다’, ‘어떤 것들을 우리는 해 나가고 싶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 복지제도의 특징을 개발국가 복지체제로 보기도 하고 자산기반형 복지체제로 분석하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빈곤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복지제도를 만든다고 할 때 필요한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0세기 노동자들이 쟁취했었던 괜찮은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데 새롭게 나타나는 일자리들은 거의 다 저질의 일자리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이 상황에서 빈곤층의 복지제도는 너무 느리게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무권리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기존에는 가족 중심의 사적 이전이 그나마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공백이 덜 눈에 띄었다면 앞으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가 지금 어떤 식으로 부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전 국민들이 금융투자자가 되어서 개인들이 투자하고 개인들이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사회도 그거를 계속 방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선택해도 괜찮은 길인가. 그렇게 되었을 때 개인들이 감당하게 되는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발생시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집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완전히 공백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정치도 그런 것들을 부채질하고 있고요. 경제 정의에 대한 미래 비전이 폭넓게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분열될 수밖에 없죠. 인종이나 계급 혹은 계층 문제들로 계속 서로 분열되고 사회적으로도 원한의 감정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공정이라든지 이런 담론에 기생해서 그러한 분열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현대사회의 빈곤 문제는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빈곤을 누군가 탈락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구조적인 결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동시에 이거를 그냥 구조적으로만 보게 되면 또 이것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생각을 못 하게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빈곤을 떠안고 있는 어떤 몸들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그 과정의 결과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의 복지 정치에 대한 비판인데요. 저희가 복지운동단체는 아니지만 복지 영역에서 활동을 계속하다 보니까 좀 비판적으로 보는 흐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술관료 중심의 정치 참여, 다른 하나는 정책 기획으로서의 사회복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책 기획으로 새로운 제도를 멀끔하게 잘 만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계급이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 없이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을 계속 불러오고 있는데, 이 환상이 빈곤층을 빈곤 문제 해결의 주체로 호명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한국에서 빈곤 문제는 계속해서 눈에 안 띄는 것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발화하는 사람도 빈곤층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이 있고요. 정부도 대화상대로 전문가를 선호하지 빈곤층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빈곤층 자신의 의견이 빈곤 문제에 대해서 발화되는 것은 오염된 의견이라고 아주 빠르게 치환돼 버려요. 보통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대표할 수 있잖아요. 빈곤층의 목소리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쉽게 치부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발언권 자체를 빼앗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정치적이 되어야 한다고, 그들의 시민권을 확대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4 살처분, 자본주의가 생명을 다루는 방식

2010년, 살처분

저는 주로 사진 매체를 활용해서 작업하는 작가예요. 제가 뉴스에서 살처분 장면을 처음 본 게 2010년이었어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봄까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에 막 퍼져나가서 TV만 틀면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와 일반인들이 처음으로 동물 전염병에 대해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언론에서 이런 지적을 했어요. 다른 나라는 아픈 동물이 발생하면 그 농장에 있는 동물만 파묻는데 우리나라는 반경 3km를 파묻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파묻는다. 그리고 반경 3km가 굉장히 비과학적이다. 지형에 따라 왕래가 전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지도에 반경 3km를 그려서 계속 파묻

는다고. 이에 대해 정부는 전염성이 너무 강하니까 빨리 잡아야 해서 그렇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결국 전국으로 다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냥 이 뉴스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돼지들을 구덩이에 파묻는데 새끼 돼지들이 가득 차 있는 트럭이 왔는데 새끼 돼지를 트럭에서 구덩이로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 뉴스가 오리를 모는 장면인데, 오리들이 처음으로 밖에 나와보니까 신나서 막 줄지어 달려가다가 구덩이 앞에서 후루루 떨어지고, 그 위에 또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21세기에 우주도 탐사하고 과학이 엄청 발전했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동물 전염병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이 고작 구덩이에 파서 파묻는 것인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원래 살처분은 안락사한 다음에 소각하거나 매몰하게 돼 있는데 생매장한다는 게 큰 이슈가 되었어요.

정부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구제역이 공기를 통해서 쉽게 전파되는 급성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그 농장은 24시간 안에, 반경 3km 이내 농장은 48시간 안에 파묻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모든 게 너무 부족하니까 다급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전 단순한 의문이 들었어요. ‘전염병이 생겼다. 근데 모두 다 파묻어버린다. 그러면 면역력은 어디서 생기지?’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농장 주인분들, 의사 선생님들, 현장에 계신 공무원들 모두 너무 지쳐 있는 상황에 그런 의문을 갖는다는 게 죄스러웠거든요.

그 사건이 있고 3년이 지났어요. 모두에게 잊힌 일이 됐죠. 우연히 어떤 예술 평론 세미나를 들으러 갔는데 쉬는 시간에 어떤 분들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아?” “뭔데?” “그때 조성된 매몰지가 법정 발굴 금지 기간이 해제된대.” “그게 무슨 뜻이야?” “그 땅을 써도 된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한 말도 아닌데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구덩이를 파서 그렇게 많은 동물을 파묻는 걸 뉴스에서 생생히 봤는데 그게 3년 만에 가능할까? 만약에 3년 만에 가능하더라도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다급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생명인데 동물들에 대한 예의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뉴스를 검색해 봤는데 뉴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3년 지나서 사용된다 그러면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어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다가 '혹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 근처에 매몰지가 한 곳 있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몰지에 가다

주소만 들고 갔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딱 도착했는데 바로 '잘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닐하우스 두 동이 있더라고요. 다 논이고. '아, 잘못 왔구나. 그래, 이런 주소로 이런 데를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지' 하면서 차에서 딱 내렸는데 오리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시골 분들이 무척 부지런하세요. 땅을 놀리는 법이 없어요. 특히 비닐하우스는 사계절 내내 농사를 짓겠다는 신념으로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놀리지 않는데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러지?' 하고 살짝 들어가 봤어요, 그냥 다 비어 있으니까. 그냥 땅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조금 안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밭이 '물컹'하는 거예요, 밭의 촉감이. 근데 그 물컹한 느낌이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보는 밭의 느낌이에요. 뭔가 진흙이나 눈을 밟는 거랑 완전히 다른 진짜 이상한 물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바로 도망쳐서 집으로 왔어요.

그때 이거 그냥 언론사에 제보할까, 아니면 농장 주인분께 말씀 드릴까. 언론사에 제보하면 여기만 힘들어질 것 같고 또 제가 알아보니 매몰지가 그때 조성된 게 4,799 곳이나 되는 거예요. 그중에 딱 한 곳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다녀보자' 했어요. '너무 생각 길게 하지 말고 무작위로 100곳을 골라 가지고 그냥 일단 한번 가보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실제로는 100곳보다 훨씬 많이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측사 안에 파묻은 데는 접근이 안 돼서 볼 수가 없으니까 딱 그냥 다녀봤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 농사가 시작됐어요. 제가 다닌 곳 중에는 100곳 중에 20곳 정도에 농사가 시작됐는데 발표된 걸 보니까 경기도는 땅이 귀하다 보니까 거의 절반에 농사를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갔던 비닐하우스에서 풀 같은 게 자라고 있었는데 그 다음해에 가보니 부추더라고요. 곰팡이가 나는 땅에도 부추를 심으셨던 거예요. 시도해 본 거예요. 나라에서 3년 지나면 멀쩡하다 했고 '거름 됐겠지', '비옥해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심으셨는데 안 자랐을 뿐이지.

저는 당연히 농사가 시작된 곳을 제가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농사로 땅이 덮여 있으면 ‘주소를 어떻게 찾겠어?’ 하고 갔는데 밭고랑 사이를 걷다가 사람 뼈 같은 걸 만난 거예요. 진짜 사람 뼈인 줄 알았어요. 뒤로 넘어갈 뻔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사진 찍어서 여쭙봤더니 전문가가 돼지 뼈라고 하시더라고요.

구제역이 뭐길래

도대체 구제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우리가 동물들을 파묻고 이런 부작용까지 시달려야 하나 너무 궁금해서 그제야 구제역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단순히 무서운 병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찾아봤더니 엄청 가벼운 감기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전염성이 엄청 강해서 그렇지 치사율이 생각보다 너무 낮고 심지어 그냥 놔두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유럽에 구제역이 항상 있었는데 그냥 다 지나가는 걸로 치유가 됐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구제역 기록이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구제역이 돌았었고 그때 회복률이 97.5%나 됐다는 거예요.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놔뒀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병으로 그렇게 많은 동물을 파묻었다는 거야?’

너무 의아해서 왜 파묻었나 하고 그 이유를 봤더니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구제역 청정국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예요. 청정국 지위를 유지해야 청정국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거야.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면 청정국 아닌 데서도 고기를 사야 돼. 근데 개네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가격이 경쟁력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 이런 이유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니 우리가 생각보다 육류를 많이 수입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나온 돼지는 거의 우리나라에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우를 좋아해서 한우는 거의 다 팔리고 한우가 부족해서 약간 수입하는 정도예요. 한우 값이 치솟고 뭐 해도 일단 우리는 한우가 1등인 거예요. 뭔가 비용적으로 계산이 안 맞아요. 그때 우리가 투입한 돈이 2조 7천억이 넘는 돈인데, 그 이후에 든 비용은 다 빼고, 그 당시에 쓴 돈이 그 정도였어요.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돈을 너무 적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쓴 상황인 거예요. 제가 열변을 토했더니 어떤 전문가분이 저한테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른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면 OECD 국가로서 위신이 떨어진다.” 아니, 제가 진짜 너무 의아했거든요. 우리가 위신이 떨어질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동물을 파묻어 가면서. 수의학 전문가분이 생각하는 의견이 일

반인인 제가 생각하는 상식과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때 347만 9,962마리의 소와 돼지, 염소, 사슴을 파묻었는데 그때 국내 돼지 34%를 파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를 파묻었거든요. 우리가 파묻은 동물의 99.999%는 다 건강한 동물이었어요. 그냥 걸릴지도 모르니까 3km씩 계속 파묻다 보니까 그냥 생으로 건강한 애들까지 다 파묻은 거죠. 현장에 가서 표지판에 쓰여 있는 숫자를 보면 저 숫자가 진짜 너무 무시무시하게 느껴져요.

전시, '묻다'

제가 찾아보니까 초기에 어마어마한 실수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마다 반복될 거라고 절대 생각 못 하고 '그때 엄청난 실수가 있었고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죽었고 너무나 많은 땅이 상처 입게 됐구나.' 저는 작가니까 '마지막까지 동물들의 죽음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동물들의 죽음을 애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시를 하게 됐어요.

사실 사람들이 관심 없을 거라고, 보러 오면 저한테 좀 화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전시하려고 할 때 전시할 공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 이 사진을 자기 공간에 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거 우리에게 왜 보여주냐?'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걱정됐었다. 거기가 그렇게 됐었다. 그때 너무 마음 아팠었다. 지금 이렇게 돼서 어떡하냐." 제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졌었는데 서로 그런 마음들을 확인하면서 마음이 밝아졌었어요.

규칙을 수행하는 사람들

그때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부는 전염병을 막아야 하니까 규칙을 만들고 규칙대로 뭔가 진행되길 바라요. 근데 그 규칙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예요. 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살처분 현장에서 그때는 공무원들이 하셨는데 진짜 너무 트라우마에 시달린 공무원들이 많았고 제가 아는 분도 말을 잃으셨어요. 부부관계가 아예 파탄 나고 이혼하시고, 정신적으로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동물들만 죽은 게 아니라 대지가 자정능력을 잃었고 뭔가 우리는 인간성에 상처를 입어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상처 입은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현장에 투입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그중에 170명이 다쳤고 9명이 죽었는데, 그 이후가 어마어마했어요. 현장에 투입됐던 공무원 중에 집계에 잡힌 사람들 가운데 34.5%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2015년부터 정부가 공무원들과 군인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용역업체에 맡기겠다고 밝혔어요. 이후에는 가난한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가 살처분 현장에 내몰리고 있어요. 수의대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골에 수의사들이 되게 없는데, 전부 다 개나 고양이만 전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농장 동물을 전공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해마다 전염병이 반복되기 때문에 수의사가 되면 시골에서 맨날 동물 죽이는 일만 해야 된대요. 너무 트라우마에 시달린대요. 소 같은 동물은 덩치가 크니까 안락사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수의사가 그걸 주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파생적인 사회 문제를 낳는 거죠.

제가 강연을 다니다가 용역업체 분을 만나봤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나면 해병대 출신의 이런 분들. 진짜 멘탈이 강하고 육체적으로 강하신 분들이 모여서 가장 어렵고 난이도 높은 일들을 맡아서 용역업체를 하는데, 규칙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24시간 안에 파묻어야 돼, 48시간 안에 파묻어야 돼. 근데 나라에서 알려준 그 방식대로 동물들이 그 시간 안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실험의 규모와 현장의 규모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계속 전화가 온대요. “지금 몇 마리 파묻었어요? 지금 몇 마리 파묻었어요?” 그러면 급하니까 새끼들부터 먼저. 더 큰 어른들은 가스나 뭐로 해도 죽지 않아. 이렇게 되니까 비명이 난무하고 같이 일하러 온 사람들이 혼절하고 외국인 노동자 구해오면 다 도망가 버리고 온갖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이렇게 하라고.’ 전화를 하시는 분은, 자기는 그런 선택권이 없어. 규칙은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제일 마음이 안 좋았던 거는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깨졌다는 거였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만약에 우리가 밀봉에 성공했다라면 동물들은 썩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완전 밀봉했으니까 부패균도 없어

요. 그러면 썩지 않았을 건데 3년 지난 다음에 그 땅을 써도 된다고? 밀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어떤 전문가분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서 제가 여쭙봤어요. “밀봉하면 썩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3년 후에 이 땅이 사용 가능합니까?”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나면 자기는 바이러스 전문가니까 밀봉하고 3년이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라질 거라고 말한 거지 그 땅이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순전히 바이러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다. 그러면 이 정책은 그분의 말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대부분 밀봉에 실패했어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비닐인데 산 채로 파묻으니까 동물들이 일단 발버둥을 치겠죠. 비닐이 다 훼손돼요. 침출수가 나가서 오염이 되고. 그런데 또 비닐로 막아놔서 잘 썩지도 못해. 그러니까 오염은 오염대로 되고 땅은 지금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룬데 “농사지어도 된다. 여기서 잡지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어이없는데 전문가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 근데 완벽하게 밀봉된 매몰지가 나온 거예요. 해마다 반복되니까 더 이상 파묻을 땅이 없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그때 자체적으로 파묻은 데를 꺼내고 거기다 다시 파묻자는 묘안을 생각해내요.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상황이었었는데 아무튼 3년 지났으니까 꺼내서 그걸 액비로 만들고 그 땅에다가 다시 파묻자는 기발한 생각을 해내서 그걸 실제로 꺼내요. 닭을 파묻었는데 완벽하게 밀봉이 돼 있어서 딱 꺼냈는데 닭이 그대로 있어요, 형체가. 그래서 최초로 밀봉에 성공한 곳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살아 있었어요. 바이러스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말한 건 뭔가. 파묻으면 바이러스는 죽는다는 거. 근데 왜 바이러스도 안 죽은 거야. 동물들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발언할 권리는 전문가밖에 없고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서 정책이 나오고 정책이 나오면 100만 명이 투입돼서 이 일을 해내야만 하고. 이건 뭔가 우리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전문적인 사회가 돼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니까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희망적이에요

제가 이 작업 하면서 마음이 되게 많이 어두웠었는데 영화 <해리 포터>에서 교장 선생님이 해리 포터한테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의 본모습은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선택에서 나온다.” 그 말이 저는 그렇게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거대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제가 했던 작업을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다니면서 느낀 건 이런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경제적으로 해야 돼', '합리적으로 해야 돼'라는 걸 주안점으로 자꾸 움직이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정말 그런 걸까? 우리가 원하는 게 그 가치뿐일까? 조금 더 이야기 해 보자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더 있지 않을까?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에 있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물이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기적이기에 이에 대해 싸움을 벌일 때조차도 경외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자연을 통제하기 위해 농약과 살충제 같은 무기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 부족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자연의 섭리에 따르면 그런 야만적인 힘을 사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함이다. 과학적 자만심이 자리를 잡을 여지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무기에 의존하는 거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섭리를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야만적인 힘을 사용할 필요도 없을지도 몰라요.

생명의 감수성이라는 게 국가에도 깃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갖고 있다면. 왜냐하면 국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여서 움직이는 곳이니깐. 그래서 저는 항상 희망적이게 말씀드리고 강연 듣고자 오신 분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뭔가 희망을 갖고 "그러면 저는 뭘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햄버거 새우버거로 바꾸시겠어요?" 이렇게 농담처럼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거죠.

5 죽음, 생애 마지막 시기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

집에서 병원으로

제가 1991년도에 병원에 입사했었거든요. 처음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임종이 다가오면 환자를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사망자들이 70% 넘게 댁에서 돌아가셨어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병원에서 돌아가시거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다가도 'hopeless discharge', 즉 '가망 없는 퇴원'이라고 해서 대부분 댁으로 가셨어요. 중환자실 인턴 선생님들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임종하는 분들을 댁으로 모시는 데 동행하는 거였어요.

죽음 장소가 변화한 맥락에는 사는 곳이 아파트로 바뀌고 이러는 것도 있겠지만, 의료 환경에서 보자면 1997년도의 보라매병원 사건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이긴 했지만, 어쨌든 뇌수술을 마친지 며칠 얼마 안 된 환자를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원시켜 집으로 보냈다가 문제가 되었죠. 그때 그 결정을 했던 의사들, 동행했던 인턴까지 포함하여 모두 살인미수인가 하는 죄목으로 구속되고, 굉장히 요란하게 문제가 되었었죠. 1997년도에 그 일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1998년도에 병원에서 장례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병원 영안실이 장례식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게 아마도 그때 이후인 것 같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영안실, 그야말로 시신을 안치하는 장소였던 거죠. 아마도 1997년, 1998년의 그런 변화가 함께 맞물리면서 병원에서 의사들은 '가망 없는 퇴원'을 안 시키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때 제가 근무하던 병원도 2001년도에 장례식장을 대대적으로 공사해서 지금과 같은 규모의 장례식장으로 바꿨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00년대에 접어들고서 본격적으로 환자들이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아요.

병원에서 죽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 가지 변화를 품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단순히 죽음의 장소가 병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보다는 죽음이 우리 일상에서 안 보이게 되고 일상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된 것,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병원 의료진의 문제로 축소시킨 것, 이게 제일 큰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병원에서 임종하게 되면서, hopeless discharge가 없어지면서 나타난 변화는 30분 이상 심장마사지를 하여도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죽음의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죽음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의사들도.

환자분이 원하지 않으면 연명의료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도 의료현장에는 지금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 것’이라는 동의서가 있었거든요. 내용상 지금의 ‘연명의료결정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1997년 이후에는 연명의료를 끝까지 다 해야만 의사들이 안심이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환자분들의 죽음이 너무 끔찍해지기 시작한 거고.

의사들이 DNR을 하자고 할 정도, 즉 심폐소생술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할 정도면 사실 소생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가족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거냐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물어보면 가족들은 “정말 끝이에요? 단 1%의 가능성도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면 “기적도 없어요”라고는 얘기하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장담할 수 없죠”하고 답하고, 이렇게 되면 가족들은 “해주세요”하고.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는 거죠.

연명의료

간호사들도 일반병동에만 근무하고 있으면 연명의료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면 사람들 대부분이 흥부 압박하는 것만 생각해요. 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심폐소생술을 받고 살아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기대들이 있죠. 그런데 말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은 회생할 가능성도 낮지만 그 자체가 환자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처치예요. 심폐소생술에는 흥부압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심폐소생술에는 연명의료로 나열되어 있는 처치들이 다 동반된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저희가 ‘중환자실 기본 세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오면 기도삽관을 해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카테터 삽입하여 투석기 달고, 소변줄, 코줄 삽입하고, 그다음에 중심정맥관, 동맥관 삽입해서 모니터하고, 진정제를 투입하여 환자분들이 몸의 기온도 완전히 빠지고 혼수상태로 되면 세팅이 다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질병을 낮게 하기 위한 과정에 겪어야 할 불가피한 과정이 아니라 말기

환자분들이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이런 고통스런 처치들을 받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환자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들이 엄청 고통스러웠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기도 삽입된 관을 제거한 후에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때예요. 기도삽관을 처치할 때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후두경을 가지고 목 안을 들여다보면서 삽관을 하려고 하면 숨 차고 고통스러우니까 환자분이 심하게 저항해요. 이러느라고 앞니가 몇 개 빠지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일들도 있어요. 부러진 이도 환자분 몸에서 나온 거니까 그것을 저희가 보호자한테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가족들이나 의료진에게도 너무 고통스럽고.

제 생각에는 그런 처치를 '한번 해보지 뭐' 하는 식으로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책을 쓸 무렵만 하더라도 그걸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결정을 내린 보호자들이나 주치의 선생님들에게 적대감 같은 감정이 드는 순간도 있었어요. 대부분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대신해서 가족이 결정하고 교수님이 결정을 이끌고, 그 결과를 환자가 감당하고. 그것을 지켜보거나 실제로 처치를 수행하면서 가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간호사도 함께 고통 받는 거니까. 결국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와 현장에 있는 의료인, 그 두 집단이 너무나 고통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상황이고 모든 것이 의료진한테 온전히 맡겨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의료진이 잘 대처해주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의료진도 죽음에 대해서는 일반인들하고 다를 바 없고, 어떻게 보면 더 준비되어 있지 않은 면도 있어요. 죽음이라는 거를 극복해야 할 문제로만 배웠던 사람들이라 이 죽음의 문제를 의료진한테 맡겨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들도 대부분 그래요. 인턴 선생님들은 중환자실을 한 달 돌고 가면서 그런 얘기 해요. “나는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어디 의사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절대로 연명의료를 안 할 건데, 그 당시의 분위기상 ‘만일에 내가 가족들한테 연명의료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가족들이 나 때문에 그 보라매 사 건처럼 연명의료중단에 동의해 줘서, 내 소망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별 수 없이 나도 이렇게 죽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연명의료결정법

책을 쓸 때 제 심정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다만 몇 명이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하면서, 내 가족들이 나중에 내가 연명의료 안 받는다고 했을 때 편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모여 지금 연명의료 결정이 제도화된 거잖아요. 사전의료계획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가능하도록 2016년에 법률이 만들어졌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우리가 아프기 전에, 평상시에 써놓을 수 있는 거죠.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됐을 때 주치의한테 환자가 연명의료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치의가 처방 형태로 ‘이 환자는 인공호흡기 하지 마시오’ 등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도 만들어져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죽음의 문제를 연명의료 결정 문제를 제도화하는 선에서 거기에 나타나는 부분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정도로 접근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죽음의 시기가 오면 이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 판단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연명의료 안 받겠다고 써 놓은 말기 환자인데 중환자실에서 가서 잠깐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으며 지혈만 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에는 판단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예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 생각을 안 하고 싶어서 문서만 작성해놓게 되면 가족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거 써놓으셨지만 나는 인정 못 해. 그때 어머니가 뭘 잘 모르고 쓰셨을 거야.” 가족이 이렇게 주장하면 난감해지는 거죠.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도 보면 연명의료의향서에 환자가 작성한 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50% 정도라고 해요. 임종 시기가 되면 사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는 등 상황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아주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수시로 얘기를 나누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예를 들면 연명의료 안 받고 호스피스 받겠다고 집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호흡 정지가 오면 가족들은 당황해서 119에 연락을 해요. 119 구급대가 출동하면 일단 응급처치를 해야 되니까 기도삽관 하고 인공호흡기 하고 응급실에 갔다가 그 상태로 2~3일 요양병원 갔다가 사망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는 것도 목적 자체를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죽음에 대한 논의를 주변 사람들과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죽음 불안과 죽음 회피

그래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료진도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죽음 불안'은 내 죽음이든 다른 사람 죽음이든 죽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냥 불안하고 무섭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정상적인 반응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거든요. '죽음 회피'는 죽음 불안이 너무나 커서 아예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말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를 뜻해요. 의료진이 죽음 회피적인 태도를 가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 반응이 이런 거예요. 환자가 말기 상태여서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환자한테는 상태가 괜찮다고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가족들한테는 객관적인 정보만 주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걸 강조하는 거죠. 책에도 썼는데, 마지막 날 가족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겪은 일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는 “여명이 서너 개월이니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면서도 환자분한테는 희망을 꺾고 싶지 않아서, 가족들의 부탁이 있기도 해서 마지막까지 “다 좋습니다. 수술하고 경과 좋아요. 식사 잘하십시오.” 이런 정도만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환자분이 퇴원했을 때 환자분은 다 나아서 퇴원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셨고, 마지막이 멀지 않다고 들은 가족들은 환자분 몰래 장례 준비를 하셨죠. 그런데 환자분이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가족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가족이 면회만 오면 막 흥분하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배경에 죽음 회피적인 태도가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의 과목을 하나 개설해 봤었는데요. 학생들한테 자기 상실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면 그 20살짜리들한테 그렇게 사연이 많아요. 처음에는 아픈 경험을 말하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었는데, 걱정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가족을 잃은 친구부터, 할머니하고 함께 유학을 갔다가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먼저 돌아오셨어요. 학생이 연수를 잘 마치고 돌아오라고 가족들이 안 알려줘서 할머니 장례도 못 봤다는 학생도 있었어요. 죽음의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어른들이 못 한 거죠. 공부에 방해 안 되게 하려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 결과 학생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애도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완치의료와 완화의료

이상적으로 볼 때 질병의 경과에 따라서 전문적인 의료적 돌봄, 즉 메디컬 케어가 다르게 주어져야 된다고 해요. 처음 질병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모두가 100%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차원에서의 의료를 완화의료라고 한다면 그 시기에도 완화의료가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자 상태가 나빠질수록 완화의료 비중이 점점 커지는 거죠. 더 이상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완화의료만 하는 국면이 호스피스라고 볼 수 있죠.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는 임종 이후까지를 생각해요. 사별 돌봄이라고 해서 사별 가족에 대한 돌봄까지를 포괄하는 거예요.

WHO에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질병의 초기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정신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실제로 완화의료를 조기에 한 그룹들이 종양내과 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고통을 줄여주면 사실은 생명 연장에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말기 돌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2010년에 병원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2012년에 책이 나왔어요. 이때 박사과정 중이었는데, 말기 환자가 집에 계시다가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계속 가족들한테 죽여 달라고 하였고, 실제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구속됐던 일이 있었어요. 계속 너무 아파하니까 가족들끼리 합의해서 아버지를 살해했는데 그 일을 실행한 아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을 모르는 가족한테 유서 같은 걸 문자로 남기고 자살을 하려 한 거예요. 가족이 그 아들의 자살을 말려달라고 경찰 신고를 했고,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알려져 아들이 구속된 일이 있었거든요. 연명의료중단이 가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책을 쓴 직후라 그 기사에 뭔가 뜨끔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에서 말기환자를 돌볼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얘기하면, 그래서 누군가가 연명의료를 더 받지 않을 거라고 하면, 대학병원에서는 다들 말기환자를 내보내려고 할 텐데, 그러면 저렇게 방치하는 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모색하느라 박사과정 때 가정호스피스를 2년 정도 따라다니며 참여관찰을 했어요.

아직 호스피스가 제도화되지 않을 때였는데, 가톨릭재단에서 하는 한 수도회가, 임종

자 돌봄을 목적으로 설립된 '마리아의 작은 수녀회'가 있더라고요. 메리 포터 수녀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것으로 유명한 분인가 봐요. 우리나라에도 그 기관이 있어서, 서울에서 가정 호스피스를 하는 팀을 따라다녀 봤는데, 의사가 일주일에 이틀만 가정방문을 나가는데도 1년에 80명 넘게 집에서 모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 경험을 보면서 죽음의 문제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형태로 문서화하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든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삶의 마지막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할 때 말기 돌봄에서 꼭 고려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가 생애 마지막 1년 중 90%는 집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2000년대 이후에 한 20년 넘게 지금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보니 자연사하는 경험이 의료진에게도 없고 가족들에게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내는 말기의 삶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요. 생애 말기에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이미지가 없고, 생애 말기면 다 주렁주렁 의료장비를 달고 병실에 누워 있는 이미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기 암 환자를 예를 들면 말기로 진단받고 병을 치료받고 있더라도 대개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년 중에서 거의 90%는 집에서 보낼 수밖에 없고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 입원'이라고 해서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통증 조절이 어려워져서, 혹은 장례식장을 못 잡을까봐 등 의학적 상태에 따른 필요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입원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애 말기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든 사회 변화를 준비하든 간에 생애 마지막 시간의 거의 90%는 집에서 보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집에서 보내는 시기의 돌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는 곳, 즉 숨을 멎는 장소보다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직 살아 있는 이 시기를 어디서 어떻게 지내냐가 더 중요한 건데요. 국내 연구에서 그 시기를 어디서 보내고 싶냐 질문했을 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시설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더 나이 들고 독립적으로 살 수 없을 때는 시설 가시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속내를 알고 보면 생애말기의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는 별로 없고 온전히 가족들이 이 부담을 져야 되니까 내린 결론들이에요. '그냥 내가 집에서 지내고 싶은 욕

심을 버리고 병원으로 가는 게 가족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혹은 집에서 지내면 통증을 조절 받지 못하니까' 이런 이유로 병원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누구나 다 원하는 곳에서 사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의료적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집의 의미

옛날하고 달리 우리가 그 집에서 계속 안 살아와서 집에 대한 애착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집이 단순히 공간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 생각해요. 제가 가정 호스피스팀과 가정방문을 갔을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의 아빠가 말기 뇌종양으로 임종 직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문하면 아이가 손님 왔으니까 신나서 뛰어다니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방문하기 며칠 전까지 아빠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간병하는 할머니도 따라가고 손님들도 다 병원으로 가잖아요. 아이가 혼자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밥 차려 먹어야 되고. 대부분 이때쯤 되면 아이들도 이제 뭘 아니까 굉장히 두렵죠.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빠지고 퇴근한 엄마한테 혼나고 이런 게 일상이다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고 할머니도 돌아오고 손님들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아이 아빠가 왜 마지막에 굳이 집으로 돌아오셨을까요? 아이하고 함께 있는 마지막 시간에 아이 아빠는 자신의 고통 이런 것이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이들한테 어떤 기억을 남길까, 혹은 돌아가신 이후에도 얼마만큼 아이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준비해 둘 것인가에 오로지 관심이 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시기가 편안하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건대 많은 경우에 가족이 있는 분들은 당신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집은 굉장히 다른 의미인 거죠. 아이하고 같이 있으면서 좋은 시간을 갖는 공간이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집이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27만 명 정도가 사망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다들 그렇게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기 상태에 집에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게, 그 시기를 알차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돕는가에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되는데 딱 '숨이 멎은 장소가 어디냐' 혹은 '숨이 멎는 순간에 혼

자 계셨냐', '고독사냐, 아니냐' 이런 뭐랄까 조금 지엽적이고 현상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시기에 외롭지 않게 잘 보내고 고통스럽지도 않다면 죽는 순간에 혼자여도 그렇게 안 좋은 죽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간혀서 혼자 외롭게 죽는 거랑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살다가 혼자 죽는 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하여튼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지는 초고령 시대의 삶을 어떻게 서로 도와서 혹은 최대한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줄 거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전문가의 역할

WHO의 임종기 돌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종기에 해야 할 일로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순화해서 말하면 죽음을 준비하고 규칙적으로 방문하여 조용히 살살 움직이면서 환자분을 편안하게 해 주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런 돌봄은 반드시 의료진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특히 강조하는 것은 의사소통인데 어느 때보다도 환자와 가족, 의료진 사이에 활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죠. 그런데 연명의료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죽음과 관련된 대화를 원활하게 하지 못해요.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을 지라도 죽음에 이르는 과정 자체는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의료전문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환자들이 경험하는 고통스런 증상들을 관리해 주는 거죠. 그 외에도 질병에 따라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려주고, 지금쯤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 때이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시기 별로 환자 돌봄의 목표나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등의 안내자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요. 호스피스를 생각하면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비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 경험에 따르면 당사자에게는 24시간 전화해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환자분이 막 숨차 하는데 119를 불러야 돼요?" 이런 상담할 때, '그건 임종이 임박한 증상이니까 119에 연락을 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불러서 임종준비를 하라'든가 하는 얘기를 해주어 환자와 가족의 혼란과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돕는 게 더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존엄한 죽음의 가능성에 대하여

존엄한 죽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편안하고 자연스런 죽음을 의미한다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자꾸 법·제도나 의료적인 접근에만 초점을 둔다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의외로 사람들이 존엄한 죽음을 몸 편한 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설,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까지를 생각하는데 존엄성이란 말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잖아요. 생애 말기에 있는 분들 당사자들에게 생애 말기의 존엄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존감을 지키는 거나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거, 삶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몸 편하고 마음 편한 건 오히려 우선순위의 뒤쪽에 있더라고요. 저희가 방문하던 분 중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호스피스를 받기를 원하셔서 그 분이 입원할 수 있는 호스피스기관을 소개해 드렸는데 자녀분들이 노발대발하며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조그맣고 산속에 있는 그런 시설에다가 우리 아버지를..."하면서 막말을 하시는 거죠. 존엄한 죽음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의 기준에서 존엄하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생각할 점은 우리가 죽음의 질이라고 얘기 하지만 사실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임종과정, 그 순간이 바로 삶이잖아요. 마지막 시기의 삶인데, 이거를 죽음의 질이나 삶의 질이나 이렇게 보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죽음의 질이라고 생각하면, 그 시기를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로 생각하면 가족들 중심으로 초점이 옮겨가게 되는 것 같아요. 환자분이 경험하는 그 순간들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삶이라고 생각하면 죽어가는 당사자, 바로 그 분한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하고 싶은 건 뭐지?' 그런 차이 때문에 저는 '죽음의 질'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애 마지막 시기의 삶의 질'이라고 말해요.

죽음이 가까워진 때에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 시기의 삶을 의료라고 하는 전문영역에 의뢰하고 의존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죽음을 의료 문제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남아 있을 사람들의 삶이 복잡하게 서로 엉켜 있는 문제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특별한 전문적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똑같은 통증 관리인 것 같지만 말기 암의 통증관리가 달라서 전문가가 약 먹는 것만 잘 조절해드려도 환자분이 다 나은 것 같이 편안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완화의료적 전문성인데, 이런 전문적 도움이 있으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중요한 거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못지않게 이런 역량을 갖춘 개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잘못하면 “그래도 또 어떻게 검사를 안 해볼 수 있어. 주기적으로 몇 번씩 검사는 한번 해서 암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그런 건 확인해봐야 되는 것 아니야?” 하면서 의료적 처치를 계속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생애말기에 암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환자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암 덩어리가 호박만큼 커진 상태에서 그것이 바깥으로 자라는데 9개월 이상 사시는 분도 본 적이 있거든요. 생애 말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몰라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무의미한 의료적 처치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죽음의 과정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사회 전체 사람들의 죽음 역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자기의 상실 경험이나 죽음에 회피적인 태도를 성찰하는 역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준비되는 만큼 존엄한 죽음의 가능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발상을 완전히 바꾸면 가정 호스피스, 가정에서 맞이하는 존엄한 죽음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료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상태로 죽음을 논의하게 되면 어렵지 않을까 해요.

제3절 우리가 생각한 것들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자본주의에서 배제되고, 민주주의로 보장되지 못한 생명들의 이야기

이들이 다루고 있는 존재는 한국사회에서 배제되고, 고립된 존재다. 그들은 생산성이 낮은 생명이고 상품성이 낮은 생명이며 정치적 목소리가 없는 생명이다. 약하고 힘없는 존재다. 5명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특정한 생명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틀의 핵심 전제를 각각 보여준다. 이들의 목소리에 등장한 생명은 모두 '정상성'에서 벗어난 존재들이다. 이들은 정상 부부의 아이가 아니라서, 가난해서, 장애가 있어서, 아프고 곧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고기'라서 비인간들로 취급되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결국 생명의 이야기라고 정리했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민주주의로 보장되지 못한, 그렇게 사그라드는 생명의 이야기이다. 그것은 추상화된 '국익', '일반', '정상' 등의 단어로 배제되어 왔던 어떤 측면들, 또는 어떤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끊임없이 민'생'을 말하지만 정작 생명의 끊임없는 희생을 밟고 나아가는 추상의 어떤 것에 대한, 한국사회-한국국가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시설국가'라는 개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생명에게 주어진 유일한 공간이 바로 시설이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시설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수의 개인이 상당 기간 동안 바깥 사회와 단절된 채 거주하고 일을 하는 장소"(2018: 1)라고 정의한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다. 한국사회는, 우리는, 안전과 치료와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들을 가두었다. 고병권은 한국 사회가 '시설사회'라고 말한다.

“삶에 대한 포기가 존재하고 생명에 대한 관리를 누군가에게 의탁해야 하는 사회

는 '시설' 사회이고 '시설병'을 앓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서로의 삶을 가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그것을 국가나 기업에 의탁할 수밖에 없다. 생명권력은 그런 포기의 환경 속에서 곱팡이 번지듯 커져간다. 그리고 삶의 관리, 생명의 관리를 떠맡으면서 권력과 부를 생산하고 취득해나간다.”(고병권, 2014: 80)

결국 시설에 있는 삶은 사회적으로 죽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무수한 생명이 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다. 15,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시설에서 자라고 있다. 약 3만 명의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약 만오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넓은 의미에서의 홈리스로 살아가고 있다. 약 50만 명의 노인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적절한 돌봄이 있다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들이다. 한국인의 80%가 병원에서 죽는다. 한국에서 가축 전염병이 크게 퍼졌을 때 350만 마리가 살처분되었다. 그 후 전염병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른바 예방적 살처분 정책으로 무수한 생명이 좁은 축사에서 살다가 산채로 묻히고 있다.

한국 사회가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한국은 변화가 급격하고 광대한 '역동적' 사회라고 평가된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변했는가? 박상훈이 말한 바 있듯이 “외견상 빠르고 잦은 변화와 구체제의 여러 구조적 특징들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 아닐까?”(박상훈, 2017: 22)

2 민주화 30년의 사회적 단면

이러한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즉 근대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많은 이들이 생명을 가두고, 관리하는 방식을 권위주의 체제의, 전체주의 체제의 방식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의 질서에 맞지 않는 생명을 고립된 장소에 가두어 관리하는 방식은 오늘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질서인 자유주의의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제 격리는 근대성과, 시민권과 영토 개념과 생명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Bashford and Strange, 2003).

이것이 근대성의 일반적인 성격이라면,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것은 바로 아시

아라는, 한국이라는 맥락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압축성'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다. 장경섭은 그것을 시간과 공간 양 측면 모두에서 매우 밀도 있는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것의 결과는 사회의 여러 핵심 제도와 규범 간의 비일관성이다. 여러 이질적인 요소의 공존이다(Chang, 2011).

그것의 한 결과는 발전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것은 약자들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근하게 나타난다. 때로는 복지의 이름으로, 때로는 치료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그것은 폭력이다. 다만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사람들도 발전감을 느끼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더뎌지거나 심지어 멈추게 된다면 더 이상 발전의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다섯 명의 이야기는 결국 1987년 절차적으로 민주화된 이래 30년간 한국사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삶을 규정해왔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한 답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로부터 배제되고, 민주주의로도 보장되지 못한 삶의 이야기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그것은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아프고 죽어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은 상품화되고, 의료화되고 있다. 그것의 결과는 바로 '시설사회'(장애여성공감, 2020)다.

이러한 해석에서 다시금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정리해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이머징 시민'(emerging citizen)이라고 부르려 한다. 이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무엇을 경험한 이들이다. 그렇기에 기존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이견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머징이라는 표현은 미래학에서 이머징 이슈를 말할 때 담는 의미를 떠올리면서 붙여 본 것이다. '이머징'이라는 것은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정책 커뮤니티에는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지만 꼭 놀라운 것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에서 확인한 목소리는 한국사회가 좀 더 진지하게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이머징 시민의 목소리가 갖는 의미는 '소수 의견'(dissenting opinion)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 말은 원래 법체계에서 쓰는 말이다. 어떤 판결을 내릴 때에

다수 의견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두는 경우가 있다. 다수 의견이 아니고,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그 의견을 기록해 두는 것은 소수 의견의 힘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을 바꿀 수도 있다. 다수 의견이 될 수도 있다. 다수 의견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보면 이머징 시민의 역할을 소수 의견을 기록하는 판사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당장은 사회를 움직이는 가치가 아니지만 언젠가 그렇게 기록된 가치가 사회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당장 바꾸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의 자각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3 현장의 목소리

우리가 들은 목소리는 사람을 격리하는 식으로는 그들은 물론,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언젠가 이들과 같이 '시설'에서 삶을 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을 가둔 '생산성', '효율성', '정상성', '치유 폭력' 등이 코로나를 불러 왔기 때문이다. 미래는 특정 생명을 가두는 시설을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설화를 추동하는 '정상성'을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려면 시설에 갇힌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마땅할 장소가 있다면, 그곳은 바로 '대화하는 곳', 즉 의회일 것이다.

이들이 말한 것은 많지만, 또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정리해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책을 설계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다섯 명 모두 이야기의 영역도 주체도 달랐지만 놀랍게도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지점이 있었다. 바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기지 않는다는 비판이었다. 전문가적 논리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의 위험함이었다. 정은주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현장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의 연락을 받고도 의아했다고 말한다.

“저는 이런 자리가 정말 놀라웠던 게 사실은 어떤 정책을 담당하거나 전문가로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별로 안 들으시고, 듣고 싶을 때는 그냥 설문지

쪽 돌려 가지고 그거 수합해서 하고 그렇게 하지 이렇게 직접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시도를 사실 별로 못 봤어요. 오늘도, '왜 나를 불렀을까? 이걸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은주)

문선희도 말한다. 통합적인 현장 지식이 없는 전문가의 단편적 의견으로 백만명의 사람이 잘못된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었다고 말한다.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제일 마음이 안 좋았던 거는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깨졌다는 거였어요. 밀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어떤 전문가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서 제가 여쭙봤어요. “밀봉하면 썩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3년 후에 이 땅이 사용 가능합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나면 자기는 바이러스 전문가니까 밀봉하면 3년이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라질 거라고 말한 거지 그 땅이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순전히 바이러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다. (...) 전문가들이 말한 건 뭔가. 파묻으면 바이러스는 죽는다면. 근데 왜 바이러스도 안 죽은 거야. 동물들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발언할 권리는 전문가밖에 없고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서 정책이 나오고 정책이 나오면 100만 명이 투입돼서 이 일을 해내야만 하고. 이걸 뭔가 우리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문선희)

김형숙은 죽음이 의료 영역으로, 의료인의 손에 맡겨지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죽음이 가까워진 때에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를 의료라고 하는, 특히 우리나라같이 굉장히 민간기관 중심으로 돼 있는 데에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갑자기 맡기고 의뢰하고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죽음을 의료 문제로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과 남아 있을 사람들의 삶이 영겨 있는 문제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의료 영역으로 축소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형숙)

백정연 또한 장애를 삶으로 보지 않는 정책적 시각의 편견과 한계를 지적한다.

“장애는 그냥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장애를 가지고 사는 환경이 나쁘고 이 사회가 불편한 거지 장애 자체가 주는 불편함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백정연)

김윤영은 당사자의 참여 없는 정책 결정의 논리를 떠받치는 환상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책 기획으로 새로운 제도를 멀끔하게 잘 만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계급이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 없이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을 계속 불러오고 있는데, 이 환상이 빈곤층을 빈곤 문제 해결의 주체로 호명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 정부도 전문가를 선호하지 빈곤층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빈곤층 자신의 의견이 빈곤 문제에 대해서 발화되는 것은 오염된 의견이라고 아주 빠르게 치환돼 버려요. 보통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대표할 수 있잖아요. 빈곤층의 목소리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쉽게 치부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발언권 자체를 빼앗고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김윤영)

이들의 목소리는 결국 의회라는 장소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의회는 여러 역할을 하지만, 의회라는 말은 대화하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의회는 질서를 세우고 집행하는 행정부와는 다른 장소다.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곳, 대화로 서로의 이해를 조정해 나가는 곳이 의회다.

박성원은 의회라는 곳의 의미를 미래학의 맥락에서 인상적으로 풀어낸 바 있다. 그는 정치적이라는 말의 뜻을 현상 유지에 대항해 변화를, 대안을 추구하는 태도와 행위라고 정의한다(Park, 2012: ii). 그러한 대안 만들기에 참여하는 것이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의회 역시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쉽지 않다. 현실의 의회에는 다수자의 목소리만 힘을 얻는다. 또는 힘 있는 소수자의 목소리만 전달된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목소리가 종종 들려오는 곳도 바로 의회다. 소수자의 목소리는 가끔이지만 사회를 바꾸기도 한다. 그것은 보통 의회에서 시작된다. 1980년대에 형제복지원이라는 수용시설에서 강제로 갇혀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한중선이 2012년부터 10년 동안 낸 목소리가 ‘과거사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4 선호를 ‘포착’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작업으로 ‘미래선호’ 작업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작업에 비추어 보면 선호라는 것은 우리가 ‘포착’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구체적인 맥락에서 계속 대화를 한다는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직화된 방식으로 선호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역할은 이른바 소수자의 목소리를 국회(의원)에 전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나눌 수 있도록, 목소리를 전달하고, 장소를 만드는 것일 수 있다. 여러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전달해 나름의 ‘선호’와 ‘의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선호나 의사는 공적 논의를 거치면서 집합적으로 형성된다(박상훈, 2017: 128). 총량 중심의, 평균 중심의 접근과는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보는 관점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구체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이슈의 사회성·역사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제도와 실천(효과)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제5장

청년세대의 선호미래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표: 왜 청년인가? 왜 미래인가?

제2절 청년 정책연구의 설계

제3절 청년들의 현실인식과 선호미래

제4절 이머징 소수로서의 청년

제5절 탈북 청년들의 미래상과 사회 참여의 정당성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표: 왜 청년인가? 왜 미래인가?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대한민국의 청년 정책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오랫동안 부침을 거듭해 오던 청년 기본법이 2020년 제정되었고, 2022년 한 차례의 개정을 거쳐 재입법되었다. 청년 기본법은 청년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였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정책에서 배제되었던 청년 문제가 비로소 종합적인 법적인 틀 내에서 주목 받을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전경숙, 2021). 청년기본법의 제정을 전후로 하여 서울, 대전, 부산, 경상남도 등을 비롯한 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참여 거버넌스 조직들이 만들어 졌고,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연합해 현장 청년들의 정책 건의사항들을 취합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 또한 미약하나마 그 시작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미래 연구자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현재 대한민국의 정책 연구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년 담론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첫째로, 많은 정책 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청년 정책이 얼마나 다양한 청년들의 실질적인 사회적인 욕구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 전경숙은 청년 집단의 주요한 사회적 특성으로 이질성을 꼽은 바 있다.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대, 혹은 노동 시장에서 부침을 겪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과도기를 거쳐 안정화 되리라는 식의 기성세대의 상상은 말 그대로 타자화된 청년 세대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를 청년 전체의 현실로 잘못 외삽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전경숙, 2021). 이러한 잘못된 현실인식은 청년기본법을 기반으로 5년마다 새로이 수립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5년을 주기로 국무총리에 의해 새로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때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청년 세대의 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청년 세대의 이질성에 주목하지 않는 청년 정책은 막상 현장의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허울뿐인 정책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둘째, 청년 정책을 둘러싼 연구는 청년들의 “현재”의 문제에 주목하기에 급급하여, 이들이 어떤 “미래”를 원하거나 혹은 원하지 않고 있는지 묻지 않고 있다. 청년 정책참여 거버넌스의 운영 실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청년정책 추진단은 수백 명의 청년 참여단 거버넌스를 구축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시도의 주 목적은 청년들의 입장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청년들이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관점이다(박수명, 2013). 청년들이 “배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절대적인 역량과는 상관 없이 사회적인 구조에 의한 것이다. 비정규직일수록, 혹은 미취업 상태일수록 사회적 배제는 심각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들의 “현재”의 배제 상태에 집중하다보면, 이들이 “지금”을 넘어 “미래”에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미래 지향점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책 속에서 구현 가능한 것으로 응원받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즉,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정책은 지금의 청년 문제를 수집하는 데에 급급하여, 이들이 청년기를 넘어 성장하였을 때 살게 될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까지 상상해 내지는 못하고 있을뿐더러, 미래에 새롭게 닥쳐올 청년 문제가 무엇이 될지에 대한 전망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년들 스스로가 어떤 동기로 정책 참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부재하다. 위에서 지적하였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정책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정책 참여의 장에 나서줄 것임을 기본 전제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청년 거버넌스 참여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많은 청년들이 급속도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 동인이 고갈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몇몇 소수의 적극적인 활동가들을 제외하면, 청년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청년정책을 운영자들의 시각이 청년들을 매우 협소한 의미의 소극적 전문가로 대우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문제적 상황에 대해 토로할 수 있는, 즉 청년 문제를 진단해 내는데 있어서의 ‘증상’과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까지 함께 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장의 청년 정책 경험자들의 증언을 더 울 널리 수집해 청년들이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을 확장시키고 다듬을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이 점점 더 그 외연을 확장시키며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당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 바로 북한에서 이주한 청년들이다. 북한 이주 주민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독특한 사회적인 위치성을 갖는데, 이는 빈곤, 학력 격차, 젠더 갈등 등 기존의 한국 사회의 소외의 양상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던 변수들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위치성이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일원이면서도 주변부를 맴도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이들이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든지, 직접적인 차별을 경험한다든지 하는 요소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대한민국에 정책하게 된 북한 청년들의 목소리도 들어 봄으로서, 이들의 정책적 요구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청년 계층이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현상 인식과 해결책의 제안에 있어서 독점적인 권위를 가져야 할 이유는 없다. 이는 청년뿐 아니라 모든 사회 그룹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하다. 즉, 사회적 집합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식론 중에서, 그 어떤 집단의 인식론이 다른 집단의 인식론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사회학적인 관점을 준용하자면, 실질적으로 사회의 일부 집단들은 사회에 대한 인식론과 현상 진단에 있어서 주도적인 권한들을 행사해 왔다. 이머징 이슈를 연구할 때 주요 초점 대상으로 삼는 정책 결정자 및 전문가들이 바로 그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으로 제도적 에스노그래피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존재론(social ontology)의 전략을 활용하고자 한다. 도로시 스미스에 의하면 사회적 존재론이란 사회의 실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제도들로 인해 구성되고, 다양한 사회 제도들의 배치 (arrangement)가 어떻게 구조화 되어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불리한 일상을 경험하는 집단의 인식론을 그 분석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 즉, 도로시 스미스에 의하면, 매일 매일 문제를 경험하는 소수 약자 집단의 사회적 인식론이 사회의 실제적 질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증언일 수 있다는 것이다(Smith, 2005).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담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드러내고자 한다.

종합하자면, 본 장이 드러내고자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드러내되, 특히 이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현재의 문제들과 미래에 닥쳐올 문제들에 대한 관점들을 고루 조망한다. 둘째, 청년들의 '현재'의 정책 수요를 단

순히 수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원하는 한국 사회의 미래상, 혹은 원하지 않는 미래상을 수집해 본다. 셋째, 북한 이탈 청년으로 대표되는 독특한 위치성의 소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통해 청년 인구의 정책적 “소수성”의 의미를 제고한다. 넷째, 정책적 소수집단인 청년 집단을 미래학 연구자의 관점에서 재 개념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왜 미래 연구자들이 청년들의 정책 참여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하는지 깊이 있는 담론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어지는 장은 다양한 청년들의 정책 선호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초점 집단 인터뷰 연구(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관찰한 청년들의 정책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이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 집단 인터뷰를 분석해 청년 집단의 소수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청년 정책연구의 설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본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주목한 청년 집단은 청년 정책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국의 다양한 청년들이다. 청년 정책 참여 경험을 가진 청년들을 선별적으로 분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체 청년 인구 집단을 무작위로 선별해 내는 방식으로 청년 집단의 “대표적”인 담론을 일반화 가능한 차원으로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이러한 대규모 조사 연구는 다양한 정책 연구 보고서들에서 이미 다루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 혹은 전국 단위의 청년 정책 거버넌스인 청년 유니온 등의 단체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정책 보고서들이 이미 이러한 성취를 이루고 있으며, 입법부의 정책연구에서도 청년들의 정책 수요 자체를 수집하는 작업들은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일반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인구 집단의 담론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목적성을 갖고 특수한 집단의 담론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데에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 정책에 대해 고민해 본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왜 정책 참여 활동에 투신하였는지, 어떤 경험들을 하였는지, 어떤 점들이 아쉬웠는지 수집하고자 했다. 즉, 청년들의 정책 의제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해당 경험을 이미 갖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관점을 수집한 것이다.

이들은 이미 정책 참여 경험을 통해 청년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본 경험이 있고, 실제로 정책 제안을 해 본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의 좌절과 성취감을 맛보았다. 이러한 경험담을 풍성하게 수집하고, 특히 참가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점집단 인터뷰 방법론을 활용하기 위해 정책 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응한 청년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이 표에 정리하였다.

〈표 5-1〉 미래워크숍에 참여한 청년들

이름	식별코드	지역	연령대	성별	정책 참여경험 (조직 및 직책)
강○○	참가자 1	제주	30대	남	전)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윤○○	참가자 2	서울	20대	여	현)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김○○	참가자 3	부산	20대	남	현) 사단법인 부산청년들 이사장
김○○	참가자 4	광주	20대	여	현)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김○○	참가자 5	서울	20대	남	현) 한국청년정책학회 기획위원장
염○○	참가자 6	울산	20대	남	전) 울산청년정책포럼 공동대표
윤○○	참가자 7	대전	30대	남	현) 청춘스럽 팀장
윤○○	참가자 8	대전	30대	남	전)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안○○	참가자 9	경남	30대	남	현) 경남 합천군 울곡면 청년회
김○○	참가자 10	경남	20대	여	전)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3기 실무운영팀
남○○	참가자 11	전남	30대	여	현) 여수시 청년위원회 위원
서○○	참가자 12	서울	20대	여	현)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윤○○1	참가자 13	서울	20대	남	현)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윤○○2	참가자 14	서울	20대	남	현)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이○○	참가자 15	서울	20대	여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	참가자 16	서울	20대	남	현)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김○○	참가자 17	서울	30대	여	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대표
조○○	참가자 18	서울	30대	여	전) 청년참여연대 사무처장
김○○	참가자 19	세종	20대	남	전) 세종시청년센터 정책지원팀 팀원
김○○	참가자 20	경남	30대	남	현)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4기 실무운영팀
이○○	참가자 21	강원	30대	남	현) 춘천시 청년청 사무국장

참가자들 중 국회미래연구원에서 현재 청년미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들은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정책 간담회를 초점 집단 인터뷰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점 집단 인터뷰 질문은 연구팀이 공동으로 도출해 내었으며, 대화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할 것을 사전에 협의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 청년위원회의 집단 인터뷰에는 연구팀 2인(연구 책임자 및 연구 참여자)이 참석하여 함께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외 인터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초점집단 인터뷰에는 연구 참여자 1인이 단독으로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의 인터뷰 기법은 반 구조화된 인터뷰 기법(semi-structured interview)의 초점집단 인터뷰였다고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초점집단을 나누어 인터뷰를 진행한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정책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정책 참여 경험을 나누고, 그 한계점에 대해 토로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개인 인터뷰로는 획득할 수 없는 심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던 질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5-2〉 미래워크숍 질문과 주요 주제

범주	질문
현실 인식	본인과 주변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
	과거 세대 청년들과 구분되는 지금 청년들의 어려움
	청년이 겪는 사회 문제의 발행 원인
미래 전망	미래 청년들은 앞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인지
	미래에 해결될 청년 문제와 그렇지 못할 청년 문제
미래 전략	꼭 피했으면 하는 회피 미래상 및 도래 원인
	구현되길 원하는 선호미래상
참여 동인	청년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
	청년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들
청년 의제	청년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청년 정책/청년 정책 참여의 사회적 의의

위 질문 중 “미래 전략”과 “미래 전망”에 대한 질문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으며, 대부분 참가자가 타 인터뷰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질문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질문을 확보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다. 사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이들 청년 정책 참여 유경험자들은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의 의의를 증언하는 인터뷰에 다수 노출된 경험이 있었다. 이에 따라 많은 청년은 실제로 매우 정형화된 답변을 내놓는 경우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정책 참여 유경험자들을 전략적으로 연구한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점이다. 질적 연구 데이터

에서는 발화(account)와 실제 관념 혹은 행위를 비판적으로 비교하여 구분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래 전략”과 “미래 전망”에 해당하는 범주의 질문들은 이들 청년이 다른 연구에서는 접해보지 못한 질문들이었다. 이러한 질문들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감은 본 연구의 깊이를 더해 주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잠재적인 한계점으로는 연구자가 이들의 정책 활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하지 못하고 인터뷰에 단편적으로 의존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자는 실제로 지역의 청년정책 거버넌스에 가입해 활동하며 청년정책 활동을 경험해 보았다.

본 연구자는 2022년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고 청년내일센터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대청넷)”에 참가해 개인 활동가로 활동하였다. 대청넷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조별 활동과 개인활동으로 나뉘어 활동하는데, 조별활동가들은 특정 정책 의제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개인 활동가들은 청년들을 널리 만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정책 주안점들을 대전시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자는 대청넷 개인 활동가들 사이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년 연구자들의 당사자적인 체험 과정을 일부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대청넷 활동 경험은 그 자체로 본 연구의 자료로 활자화되지는 못했지만,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석적인 시각을 확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초점집단 인터뷰의 분석 과정에서는 근거이론적인 접근을 활용하였다. 근거이론적 접근은 미리 상정한 이론적 가정 없이, 데이터로부터 분석의 범주와 주제, 이론이 자발적으로 창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적 연구의 전략이다.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에 의하면, 근거이론적인 접근은 특히, 기존의 구조화되고 이론화 되어버린 담론에 반해, 새로운 관찰을 수행하는 데에 유리하다(Glaser and Strauss, 2017). 본 연구가 청년 정책에 대한 기존의 담론으로부터 선회 하여, 새로운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근거이론적인 접근은 적절한 방법론이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범주와 이론이 데이터로부터 순수하게 창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연구를 위해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는 이미 참가자들의 응답의 범위와 범주를 구조화 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범주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5-3〉 청년세대 인터뷰의 범주와 주제

영역	범주	하위범주	주제
현실인식	청년 앞에 산적한 사회적 과제들의 과중함과 해결 불가능성	주택, 취업, 지역, 남녀, 문화	주택 가격이 너무 높고, 수도권 주택의 질이 너무 낮음 지방의 집값은 수도권보다 낮지만, 지방에선 취업이 불가 지방의 문화/기반 문제의 어려움
	청년 내부에서 존재하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문제의식	수저론, 세대론	진짜 문제는 청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불평등한 것이 문제 세대간 불평등보다 청년 내부 불평등이 더 극적으로 경험됨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더욱 두드러지는 세대 내 불평등
미래인식	미래도 나아지지 않다는 강력한 비관	청년 문제의 영속성, 청년 문제의 노년 문제화	지금의 빈곤 청년들은 빈곤 노인으로, 지금의 1인 가구 청년들은 미래의 독거노인이 될 것 과거의 청년문제는 지금의 청년문제와 달랐고, 과거의 문제들은 무사히 해결되어 지금의 기득권들은 더 이상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졌다
	미래의 청년들은 지금의 청년들보다는 고생하지 않으리라는 낙관	인구감소와 사회적 변화, 경쟁의 감소	미래의 청년들(지금의 10대들)은 지금의 청년들이 겪는 대부분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인데, 왜냐하면 경쟁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이며, 또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않는 문화'가 더욱 확산할 것이기 때문
미래전략	각자도생을 위한 생존전략 강구	사회적 무력함 앞에서 더 이상 사회를 믿을 수 없다는 극단적 입장	어차피 사회는 잘 변하지 않고, 우리는 포기하는 법만 배움. 결국 믿을 건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재난들을 볼 때마다 배우게 된다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모두가 생존할 수 있다는 이타적 전략	아직은 사회를 바꾸기 위한 시간이 남았으므로, 청년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꿔야 함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안에서 홀로 고고하게 살아남을 방법은 없는 것 같다는 입장

영역	범주	하위범주	주제
청년참여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전문가라는 인식	청년문제 = 청년이 경험하는 특수한 문제	지금의 청년들이 경험하는 주거 문제, 비정규직 문제, 수도권 과밀화 문제 등을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더욱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함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성세대는 이미 실패했으므로 청년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청년문제 = 범사회적 문제의 표상으로서의 문제	청년들은 청년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일 뿐 아니라, 기성세대가 해결하지 않고 전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임. 전문가들은 실패했고, 청년들을 배제할 정당한 권위가 없다.

제3절

청년들의 현실인식과 선호미래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본 절은 심층적인 초점 집단 인터뷰의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 번에 걸쳐 수행된 초점집단 인터뷰는 매 회차마다 그 흐름이 조금씩 달랐으므로, 천편일률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 인터뷰 속기록을 바탕으로 범주화 하여 도출해 낸 인터뷰의 주요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청년들은 작금의 청년 문제를 단편적인 현재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으며,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역사성의 귀결이자, 미래의 새로운 사회 문제로의 연결점으로 청년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청년들이 지금 당장의 근시안적인 자구책에만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상정하는 다수의 청년 정책들의 근본 가설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년 정책 참여 경험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사회학적 상상력 (sociological imagination)을 바탕으로 객관화 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다양한 레퍼토리로 과거의 사회 문제와 현재의 청년 문제 사이의 연결고리를 구술하였다.

둘째, 청년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예측했으나, 미래에 새로 청년으로 편입될 세대들이 겪을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이었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점차 심화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그러한 사회 문제의 구심점에 본인들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았다. 모든 역사적/사회적 문제들이 한데 모여 지금의 청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 상황은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며, 자신들이 청년을 넘어 중년, 장년층에 편입되어도, 현재 자신들이 ‘청년’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은 그대로 계승되어 새로운 ‘중년 문제’ 혹은 ‘장년 문제’와 ‘노인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청년 문제가 지금 현재의 청년들의 자구책 해소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청년 정책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현재의 청년들은 미래의 청년들, 즉 지금 유년기와 학창시절을 통과하고 있는 세대들이 지금과 같은 심각한 청년 문제는 겪지 않게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 근

거는 한국 사회의 사회 문제들이 해소되기 때문이 아니라,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았다. 청년 인구가 줄어들에 따라 미래의 청년들은 경쟁의 문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인식이다. 즉, 이들은 현재의 청년들이 겪는 취업난, 주거비용 문제, 급여-물가 불일치, 도농격차, 수도권 중심화 등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경쟁률'의 문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미래 청년들에 대한 낙관론을 통해 청년들의 현실인식이 경쟁과 생존을 바탕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넷째, 이와 같은 이유들을 근거로 하여, 청년 정책참여 경험자들은 청년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전문성의 의미의 재구성을 통해 주장하고 있었다. 이들의 인식에 의하면 현재의 청년 문제는 한국사회의 누적되어온 사회 문제들이 고착화된 결과물이며, 그 누구보다도 청년들이 정면에서 해일과 같이 몰려오는 병폐들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기성세대 정책 전문가들은 이들이 얼마나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오도록 방기한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청년들은 이들이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기존의 전문가들의 '전문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에, '대안적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책 참여의 정당성을 갖는다. 이는 현재의 청년 정책이 청년들의 당사자성에만 의의를 부여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격하시켜왔던 것과는 대조된다.

1 청년들의 현실 인식

가. 주거와 일자리

먼저 청년들이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지금 현재의 청년들의 고충의 내용은 일자리의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주거 불안의 문제가 언급되었다. 일자리와 주거로 요약되는 물질적 조건이 청년 세대의 어려움이라는 점은 이미 많은 정책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이행기의 기간인 청년 기간 동안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반론도 가능하다. 즉, 청년이 단순히 자신들의 불안정함에 대해 투정을 부리고 인식한다면,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 결정자들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청년들이 토로하는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는 정책 결정자들의 선입견과는 다르게 매우 구조적이고 거시적이었다. 당장 자신들의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그 질이 좋지 않은 것은 사회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미래에도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감이 더 고통스럽다는 고백이 기록되었다.

“지금 사회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했고 저희 계속 일을 해도 가난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게 소득이 얼마나 다르든 그래도 불안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고 내가 뭘 하든 언제나 내쳐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오면서 계속 누군가보다 조금 더 잘해야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뭔가 안정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정규직을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뭔가 투잡을 생각하고 그리고 옆에서는 투자하고 주식하고 이래서 나보다 더 많이 되는 느낌이 들고 ‘저걸 해야지 내가 궁극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나?’라는 환상 속에 다 같이 빠진다거나. 그게 결국 ‘네 삶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어떤 공적인 공언을 못 하는 거죠. 그걸 국가로부터나 사회로부터 전혀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갈구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인터뷰는 청년들이 느끼는 정서적 불안감의 속성에 대해 고백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지금 현재의 직장이 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만 환원할 수 없는 범 사회적인 심리적 현상으로 비춰진다. “네 삶이 지속 가능하다”는 공적인 공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백, 그리고 “계속 누군가보다 조금 더 잘해야지 잘 살 수 있다”는 구조에서 살아왔다는 고백은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현실적 고통이 현재의 시간축을 벗어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발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일자리의 질은 중요하며, 특히 고용 형태에 따라 만족도 차이가 컸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한 청년은, 이런 점에서 오히려 서울이 품고 있는 허상이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직업이 집약되어 있는 공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고, 그 안에서 큰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는 일자리가 없지는 않은데 그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냐가 더 중요한 이 슈인 것 같아요. 그냥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으로 준다든지 굉장히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더 청년 노동자들을 대하는 어른들이라고 할까요. 어른 들 아니면 사용자들의 생각들도 많이 각박해진 거죠. ‘너희가 원래 열심히 안 하지 않냐’, ‘너 여기 아니면 돈 별 데 없지 않냐’, ‘너희 없어도 일할 사람 많다’ 이런 생 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서울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감정 노동 또한 높은 강도로 요구한다. 이 감정노동은 단순히 “스트레스”로 표현할 수 없는 다층적인 속성이 있다. 청년들은 서울이라는 공간이 약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성공을 향해 지역 에서의 익숙한 기반을 포기하고서라도 서울로 몰려든다. 그러나 서울은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어떠한 일을 해서라도 서울에 붙어있고자 하지만, 최소한의 삶의 조 건만을 충족해 나가며 서울에 지금 붙어있을 정도의 대가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 그 과정에서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제 주변에 지역에서 서울 올라와서 일하는 친구들이 확실히 많아요. 그 친구들이 훨씬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 대구 사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서밖에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고 하더라고요, 대출 을 엄청 많이 받아서라도. 어떤 일을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서울에서 살 기 위해 대출금을 갚기 위한 일자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가 알던 그 친구 같 은 경우에는 일을 하는 데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친구였거든요. 일을 본 인이 왜 하고 이것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 는 친구였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 지 않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

이러한 직업적 현실은 과거의 청년들과는 대비되는 현재 청년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시대적 문제다. 서울에 밖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지방에 소득 수단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이 청년은 서울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전국

적인 현상에 편승해 어떻게든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이 주류사회로 편입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계산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서울에서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 주류 사회에 편입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역으로 그는 노동의 가치 혹은 존재의 가치를 잃어가며 매일 매일의 물질적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동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일자리의 질이 나빠진 것은 누적된 사회문제로 인한 것이다. 즉, 청년이 경험하는 청년 문제로서의 노동시장의 문제는 비정규직을 양산해 오고, 수도권 과밀 현상을 심화시켜 오던 기존의 기득권들이 자신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를 미래에 전가한 결과이다. 청년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기성세대는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권은 누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미래로 전가한 무책임한 집단이다.

“제가 옛날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다들 말하는 건 우리 때는 대학교 때 공부 안 해도 그냥 알아서 기업들이 데리러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수십 장의 이력서를 내도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경제성장률 자체가 그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없고, 그리고 그전에는 1차 산업에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일자리였다면 지금은 한 사람이 굉장히 여러 사람의 몫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한 사람을 세 명처럼 부려 먹는 그런 악습이 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인 변화도 물론 개입하였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첨단화 되면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줄어들거나 더 이상 수익성이 있는 경제활동이 아니게 되었다. 새로운 산업 구조에서 노동력은 기계에 의해 쉽게 대체되고, 청년들은 인간 뿐 아니라 기계와도 일자리를 경쟁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요인에도 불과하고, 노동 구조를 불안정 노동 혹은 비정규 노동 중심으로 재편해 온 것에는 사회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정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관리자 직급에는 현 상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시대가 지키고 앉아 있다.

나. 지역과 공동체

그렇다면 청년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오고, 이를 위해 비정규직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일까? 청년들의 응답은 일자리 자체가 비수도권에 너무 적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평생의 기반이 되어줄 정도로 비수도권의 사회/경제적 구조가 공고하지 못하다는 지적으로 나뉘었다. 가령 다음 청년은 지역 일자리의 절대적인 빈곤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에서는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그런 것보다 그냥 일자리만 있었으면 좋겠다. (...) 지역에서는 남을 수 있는 사람은 농업과 관련된 분들, 아니면 공직으로 가서 공무원이 되는 분들을 제외하면 없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꿈은 다른 거지만 결국에는 현실에 맞춰서 자꾸 맞춰 나가는 경우가 많고 (...) 서울에서 사는 친구들이 있고 서울에 있다가 고향 갔다가 용인 갔다가 안양 갔다가 안산 가고 이러는 친구들이 여럿이 있는데 “내려와라”라고 하면 이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왜? 거기는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만큼 기회도 많다. 누군가한테 “너 거기 있으면 아는 사람이 있냐? 누군가한테 도움 받을 수 있냐?” “지역보다 차라리 더 많다. 여기는 헐헐 단신이지만 그래도 도움을 청하려면 어디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는 좀 많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서 (...)”

이 청년은 지역에 절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앞으로의 미래 전망을 함께 논의할 멘토조차 찾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상상해 나가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서로를 응원해줄 청년 공동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공동체는 지역이 단순히 즐길 거리가 적거나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붕괴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청년들은 미래와의 관계 안에서 현재의 전략을 평가하는 냉정한 시선을 이미 견지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방은 미래를 도모할 수 없는 땅이다.

“(...) 어떤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이 남아 있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청년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문화나 이런 쪽으로 조언을 얻으려면 아무도 없는 거죠. (...) 저

도 지금 만약에 나가게 되면 안 돌아오겠다. (...) 청년들이 인생을 배우는 청년 멘토들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모든 것이 온라인 정보에 의해서만 알게 되잖아요. 자기가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거기서 지식을 받고 노동에 대한 노동법에 대한 것들도 다 네이버 지식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그거 아니고 정말 실생활에 자기 나이를 10년 정도 더 살아온 청년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서 얻어지는 그런 인생의 지혜를 전혀 알 수 있는 루트가 없다 (...)"

따라서 지방 청년 공동체의 붕괴는 일련의 악순환의 구조에 놓여 있다.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와 더 풍족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그로 인해 남은 청년들 또한 쉼 자리를 잃고 지방을 떠난다. 학창시절에는 다 함께 어느 지역에서건 나름대로의 유대감을 가지고 이행기를 거쳐 왔지만, 성인이 되어 자신이 태어난 곳을 비로소 떠날 수 있는 기쁨이 마련된다면 지체 없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다.

“만날 수 있는 장 자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청년들의 이행기에 맞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잖아요. (...) 대학에 들어가면 요새 말하는 학생회 아무도 안 들어가잖아요. 또는 동아리에 전혀 들어가지 않죠. 또는 지역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거에 청년은 전혀 들어가지 않죠. (...)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본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더 온라인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공간을 가지다 보니까 오히려 청년들이 더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요약하면, 현재의 청년 문제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언급되는 주거의 문제와 일자리의 문제를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회 문제와도 얽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가령, 주거의 문제라고 했을 때, 정책 결정자들은 부동산 가격의 문제를 떠올리겠지만, 청년들에게 있어서 주거의 문제란 집값의 문제 뿐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터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 사람들의 부재를 뜻하기도 한다. 일자리의 문제 또한 단순히 직업 선택의 기회가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들은 안정적이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지역에서 청년으로 살아나가면서 성장을 도모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의 부재를 괴로워한다.

다. 사회변화와 청년 문제

과거의 청년 문제와 지금의 청년 문제 사이의 여러 차이점 중, 가장 자주 언급된 것이 미디어, 특히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였다. 극단적으로는, 과거의 청년들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어려움에 놓여 있었을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남의 사정을 잘 알기는 어려웠으므로 막연히 침묵하게 어려움을 묵묵히 감수했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었다. 반면, 지금 세상은 청년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삶이 난관에 부딪힐 때면, 청년들은 클릭 몇 번으로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며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는 듯한 타인을 찾을 수 있다. 상대적 박탈감의 시대가 된 것이다.

“너무 청년들이 정보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바로 핸드폰만 켜도 뉴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뉴욕 청년은 뭐 먹고 있는지 알잖아요. 과거에는 정보의 단절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일 열심히 잘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내가 10년 전 친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그런 걸 부추기는 환경들(...) 그런 것들이 SNS나 정보를 통해서 보임으로써 남의 눈 되게 많이 의식하고 남들처럼 따라가야 되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찌 됐든 마음적으로나 뭔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청년들이.”

이 상대적 박탈감의 시대는 단순히 청년들이 철없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해 가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육한 것은 다름 아닌 기성세대다. 청년들은 이미 상대적 우월감과 절대적 우월감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남과의 비교에 익숙해 졌다. 따라서, 남과 비교해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논리적인 귀결이다. 이런 청년들 앞에서 꿈을 품고 야망을 가지라고 격려하는 기성세대들의 목소리는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소리가 된다. 청년들은 지금의 기성세대가 그런 충고를 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요즘 청년들이 주눅들어 있다. 맨날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줄은 모른다. 그런 이야기 하면 저는 정말 욕이 나올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크면서 성적은 전교 1등과 비교당하면서 욕먹고, 먹고 사는

건 최빈국 결식아동들과 비교당하면서 행복한줄 알으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컸어요. 크고 나니까 그 소리가 너무 어이가 없는거죠. (...) 폰만 켜면 나보다 잘난 청년들이 수백억씩 통장을 인증하고 웃고 있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

청년들은 자신이 지방에 살든, 비정규직에 종사하든, 친구가 적든, 연애하고 있지 않든, 어쨌거나 나름의 방식으로 행복할 방법을 박탈당했다. 나름대로 행복을 향해 매진할 길이 보이지 않으니, 그들은 행복해 보이는 남들의 모습을 쫓아 지방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서울로 올라온다. 그러나 서울에는 답이 없고, 청년 문제는 점점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2 청년들의 미래 전망

가. 단편적 미래 인식에 대한 스케치: 개인 전략 vs. 사회 전략

청년들은 “미래”를 단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응답자들은 인터뷰 초반 아이스 브레이킹의 과정에서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관점을 추상적으로나마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복되는 답변들을 감안하였을 때, 수집된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부루마블 게임”, “약속”, “안보이는 것”, “불확실성”, “숙제”, “희망을 원함”, “밝음”, “노후준비”, “손을 타는 것”, “터널”, “좋지 않은 것”, “청년과 중장년이 조화되는 세상”, “내가 바뀌어야 대비되는 것”.

위의 개념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낙관 혹은 비관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들이 존재한다. “안 보이는 것”, “약속”, “밝음”, “좋지 않은 것” 등의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막연하게 열려 있는 불확실한 대상으로서의 미래 인식이 존재한다. “불확실성”, “희망을 원함” 등의 응답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분적으로나마 대비 가능하고, 그렇게 개개인이 최선을 다해 대비해야 하는 존재로서의 미래 개념이 존재한다. “부루마블 게임”, “숙제”, “터널”,

“내가 바뀌어야 대비되는 것”이라는 답변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함께 구성해 나가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민주적 규범성으로서의 미래 개념도 등장하였다. “손을 타는 것,” “청년과 중장년이 조화되는 세상” 등의 답변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흥미로운 응답은 미래를 각자도생의 전략을 통해 개인 차원의 미래 전략을 통해 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바라보는 인식과 사회적으로 함께 그 미래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관점 사이의 차이점이었다. 예를 들어 미래를 “부루마블 게임” 혹은 “내가 바뀌어야 대비되는 것”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미래가 근본적으로는 알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각자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미래를 “손을 타는 것”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미래의 불확실한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의 책임이 개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고, 근본적으로 사회 전체가 함께 좌충우돌하며 손을 보태 함께 만들어 가기 이해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전략이 개인화 되어 나타나거나 혹은 사회적 접근을 통해 성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대비점이 존재한다.

“미래라고 하는 거는 약간 부루마블처럼 게임과 같은 걸 생각을 해봤는데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고 항상 변수랑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를 ‘부루마블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루마블 게임은 주사위를 굴려 부동산 투자를 하는 보드게임이다. 선제적으로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면,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수익을 얻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루마블은 개인의 운과 불확실성을 근본으로 하되, 위험을 감수하는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임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보드게임은 현재 청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대들이 유년기에 종종 하던 게임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보드게임으로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인식하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개인 차원의 위험감수적인 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나에게 미래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터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터널이라는 거는 처음 들어갈 때랑 나올 때의 풍경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풍경이 불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터널 나왔더니 계속 밤이고 그러면 어찌죠? (웃음 (...))”

“결국 이게 잘 안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완전한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내가 나의 미래를 제대로 그리고 있나?’ 이런 생각도 요즘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미래에 내가 이런 공익 활동이나 청년 활동 같은 거를 안 바뀌는 세상을 좀 다 같이 바꿔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안 바뀌나? 그냥 세상은 안 바뀌니까 나 혼자 그냥 나를 바꿔야 되나?’라는 그런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에게 미래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위 증언들에서는 청년 정책에 참여했던 경험이 오히려 좌절감을 가져다 준 사례들이 관찰된다. 한 참가자는 조세 정책과 관련한 청년 정책에 참여했지만, 관료적인 질서에서 새로운 변화를 끌어내기에 자기 영향력이 부족함을 통감하였다. 그 결과 그는 세상은 원래 잘 바뀌지 않는 것이니, 이에 맞추어 자신을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나 혼자 그냥 나를 바꿔야 되나?”라는 자문이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각자도생의 전략 외에는 선택할 수 없도록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손을 타는 것”이라고 증언한 청년은 반대되는 경험을 고백하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저는 미래가 우리의 손을 많이 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손 탄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미래가 좀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 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래는 불평등하지 않고 혐오와 차별이 없고 불안정한 노동이 사회에서 조금 더 안전망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시민들,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 아니면 정치인이나 아니면 언론인들 그리고 그 외에 어쨌든 저는 누구나 다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회에 있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의 손을 많이 타야 하는 게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은 “선호 미래”의 민주적 구현의 정당성을 미래학을 참고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설파하고 있다. 이 청년은 자신이 규범적으로 지향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 청년이 회피하고 싶은 미래는 혐오, 차별, 불평등, 불안정한 노동 등이 존재하는 미래다. 사회가 변화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바뀌어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한다면, 이런 미래는 결국 와 버리고 마는 것이 된다. 서로 다른 청년들의 미래 전략에 대한 관점이 양립 불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히 청년들의 미래 관점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정도로만 정리할 사안은 아니다. 이들의 미래 관점은 각자가 경험해온 경험과 환경의 궤적 내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나 혼자 나를 바꾸어야 하나?”라고 자문했던 청년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운동가였다. 그는 다양한 NGO에서 장기간 노동 운동에 참여했고, 실제로 유관기관과의 협업 경험 또한 갖고 있었다. 활동 지역과 그 반경을 고려하면 그는 청년 정책 활동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정책 무대의 핵심에 가까이 위치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은 그에게 오히려 더 큰 절망을 안겨다 주었다. 정치의 중심부에 다가갈수록 그 벽이 오히려 견고하다는 점을 강하게 느끼게 된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나아질 거는 잘 모르겠고요. (...)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다 그때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고착화돼서 우리가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 여성이나 소수자나 환경 논리 같은 게 계속 무시되어 왔고 그게 그냥 덮어진 상태로 와서 저희같이 그게 더 불공정하고 더 공고해져서 저희가 그 거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저는 계속 사람들이 까먹는 것 같아요. (...) 그냥 사회운동이나 어떤 진보적인 그런 거에도 힘한 게 그때그때 바뀌는 거죠. (...) 그러니까 결국 정책 결정자는 기성세대가 하게 되어 있고 (...)”

그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소위 ‘단맛과 쓴맛’을 모두 맛보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다보니, 지금 ‘청년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날 조짐이 있었던 오래된 문제들이었다는 점도 발견했다. 긴 세월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비정규직 문제, 여성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 왔음에도,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고, 청년들이 이제 그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책 결정자는 기성세대가” 하게 되

어 있으므로, 이 청년이 결국 각자도생의 전략 이외에 합리적으로 미래에 대비할 방법이 과연 있을 것인지 문득 체념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나. 지금 청년과 미래 청년: 청년 집단의 코호트 인식

다수의 청년들은 자신들의 현실은 극히 비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들의 미래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희망이 막연히 부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었다. 현재 자신들이 겪는 청년 문제가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누적되어 온 것인 만큼,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며, 그 영향 또한 평생에 걸쳐 자신들을 따라 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저희 아버지 세대들 말씀을 해드리면 (...) “우리는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세대였다. 진짜 공장에서 미싱 돌려도 되고 거리에서 진짜 넘마주이 쓰레기 줍고 해도 먹고 살고 자식 낳고 키우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세대였다. 그 일이라도 시켜주면 될 만한 자원이었다. 나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걸 이야기를 들었어요. (...)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한테 그 일을 시킨다면 이 사회가 너무 무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을 시키면 안 되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지 못하고 있는 건 그건 어쨌든 사회의 문제인 거고.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 하면 이 세대 갈등이 다음 세대에 가서도 이 세대 갈등이 없을까? 저는 똑같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어쨌든 똑같이 기성세대가 될 테고 정성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다음 세대나 저희 윗세대가 저희보다 인구가 많듯이 저희가 저희 밑 세대보다 인구가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들이 가진 걸 포기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나?”

“고용노동지청장님이 관내 대학생들 모아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자리 많은데 왜 안 가냐.” 속으로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자기 자식 보내면 내가 가라고 한다.’ 내가 그 얘기하려다가 그 얘기하면 길어질까 봐 얘기 안 했는데.”

다시 한 번, 지금의 청년 문제는 과거 청년들, 즉 지금은 기성세대로 성장해 버린 사람들이 겪었던 청년 문제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이 보인다. 과거의 청년들은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세대”로 자라났다. 무슨 짓을 해서든 삶을 꾸려 나갔고, 그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들은 모든 기회를 자신의 노력에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배우면서 자랐다. 고등교육을 받기까지, 모든 고통과 서열 안에서 성공의 목표를 향해 내달려온 세대다. 이런 세대에게 과거의 청년들이 그러했던 결국 그들의 종착역이 “아무 일이나” 해서라도 먹고 살기위해 발버둥쳐야 하는 사회였다면, 그들은 거짓된 목표를 향해 질주한 삶을 봤던 셈이 된다.

경쟁 체제에서의 교육과 취업 환경을 반영하듯, 이들은 사회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자원 분배의 문제로 보았다. 자신들은 출산율이 아직 높던 시절의 마지막 생산물이고, 이후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현재 유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인구는 지금의 청년들에 비해 연 평균 출산율이 절반에 가까워진 시대에 태어났다. 즉, 각 세대에게 동등한 정도의 기회와 자원이 주어진다면, 지금의 유소년들이 자라 청년의 인구에 편입할 때, 그들은 지금의 청년들보다 많은 양의 개인의 몫을 챙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 취업난이든 주거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어쨌든 되는 거니까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 반대로 생각했을 때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런 문제들이 아예 없던 게 아니었고 심지어 진짜 고대사회부터 원래 있었던 문제들이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넘어갔고 (...) 군대 용어로 짬 처리한다고 그러죠.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자체를 봤을 때에는 (...) 왜냐하면 큰 목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동안. 진짜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을 위해서만 그런 큰 목표였지 (...) 이후에는 민주화라는 목표가 오래 지속됐죠. (...) 그런 모든 것들을 하고 97년도 IMF까지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원래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그거를 이제 어찌 됐든 기성세대에서 좀 더 경험을 해봤으니까 해결을 좀 해주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기성세대에서는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갔으니까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들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

청년들은 지금 잔치가 끝나 음식이 거의 떨어진 잔칫집에 몰려와 앉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형국이다. 이전 세대의 청년들, 혹은 사회 전체는 사회를 관통하는 목표의식이 있었다. 위 청년이 말하듯, 조국의 독립이든, 민주화든, 경제 성장이든, 사회가 함께 나누

던 단순한 목표가 있어왔던 것이다. 이 목표지점들은 거대하지만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개개인을 통제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목표에 순응하지 않는 개개인들을 자율적으로 소거하고, 각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희생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들기도 했다. 이 와중에, 단순한 목표들, 즉, 정치 제도의 민주화의 목표의 그늘 안에 소수자와 취약집단의 발언권은 미래로 유예되었고,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 하에 대기업과 불안정 노동시장 중심의 기형적인 경제 구조가 축조되었다. 이렇게 미래의 짐으로 유예되어 넘겨진 것들은 셀 수도 없이 많다. 건강 보험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국민 연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모든 잔치에서 이미 배부르게 모든 과실을 맛본 기성세대는 긴 평균수명을 누리며 지금의 청년들의 부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청년들에게 물려준 것은 해결되지 못하고 “짬 처리된” 사회 문제들 뿐인데 말이다.

그러니 지금의 청년들도 그렇게 자신들에게 내려와 버린 사회문제들을 후손들에게 “짬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나 그렇게 회피해 나갈 수 없으며, 그래서 안되는 것 아닌가 하는 내면의 목소리도 양립한다. 한 청년은 “솔직히 저는 지금의 MZ세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청년들은 완전히 다른 인간들이예요. 그 친구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 말할 때, 저는 솔직히 기후보다 노동이 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저는 그들에게 기성세대인 거예요”하고 고백한다. 이 고백은 자신들이 한번 더, 자신들에게 물려 내려온 기후 환경에 대한 문제를 미래의 청년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면서도, 동시에 지금 당장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회 문제를 헤치고 나가야 하는 이중의 과업을 요약해 주고 있다.

미래의 청년들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매우 극단적인 한국 사회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으로부터 파생되기도 한다. 첫째, 미래의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고,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그 시점에서 노동시장에 내몰려 있는 미래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재구조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미래 청년의 문제는 사회의 진보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잿더미에서 다시 청년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되면서 해결된다. 이는 청년들이 스스로 사회를 변화시켜 더 나아지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라기 보단, 노동 인력이 사회의 증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자본주의적 사회 구조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필연적인 “맞춤 현상”이다.

“극단적으로 사회가 파괴되기 시작하면 맞추겠죠, 청년세대한테, 라는 생각이 들어요. (...)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만두고 있는 거잖아요. 임금구조든 여러 가지 차원이든 그 세대에게 맞추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예 안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한 3년 차, 4년 차 된 사람보다 지금 초임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월급이 더 높은 경우들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단지 이견 급여 문제긴 한데요. 다만 이런 것들 차원에서 일각에선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낙관하는 부분이 한 축으로 있고 (...)”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태풍 때문에 포항에 포스코가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이거를 재가동하는 데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하루 일당 150만 원 부르니까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보수를 주면 일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쉬우면 바뀌겠죠.”

둘째, 미래의 청년들은 모든 상황이 더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행을 주관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 있다. 지금의 청년들은 주관적 낙관주의와 객관적 어려움 사이의 괴리로 인해 청년 문제를 경험한다. 반면, 미래에는 청년들조차 사회에 대해 기대하는 것도 없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낙관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청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지만, 청년들은 더 이상 문제를 문제라고 볼 힘도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양극화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게 분명히 나는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신조차도 발전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확고한 미래를 굳혀놓고 사회를 바라본다면 아예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 자기가 계속 돌파를 하다가 실패하는 경험을 계속 누적해서 쌓아가다 보면 오히려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을 더 괴롭히는 셈이 되니까 그런 확률적인 이유 때문에 오히려 포기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

요약하면, 청년들은 미래세대에 새롭게 청년이 될 인구들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는 않았다. 이는 무엇보다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가장 암울한 것 같다는 동질적인 코호트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 범위가 넓을지언정, 현재의 청년들은 자신들이 기성세대가 해결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누적시켜온 문제들을 정면에서 떠안아야 하는 시대라는 세대 의식을 갖고 있었다. 자신들이 또 다시 미래 세대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식은 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3 청년들의 미래 전략: 회피 미래와 선호 미래

청년들은 어떤 미래 다가오기를 바라거나, 혹은 어떤 미래가 다가오기를 바라지 않는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다가오기를 바라는 미래상의 모습은 비교적 추상적이고 가치중심적이었지만,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회피미래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도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상호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도 나타났다는 점이다. 회피미래상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치 않는 미래가 실제로 구현되어버릴 것만 같다는 불안감이 함께 언급되었다.

청년들의 선호미래로는 이들이 현재 사회에서 문제로 느끼는 지점들에 대한 대안적인 아이디어들이 등장했다. 가령,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무책임한 것이 현대 사회의 문제”라고 주장하던 청년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갖는 사회가 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으며, “요즘 청년들은 남과 비교해 자신을 너무 평가 절하하는 것 같다”고 말한 청년은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작은 재능이 모두 소중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랐다. 즉, 선호미래의 모습은 각자가 진단하는 현재 사회의 문제와 비추어 안티테제적인 성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호미래를 실제로 구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식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청년들에 의한 민주적인 선호미래가 구현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 참가자는, 자신의 활동 경험을 설명하며, 기성세대의 경직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비판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 정책에다가 몇 가지를 제안했는데 몇 가지가 실제로 반영이 됐다.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 정책에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몇 가지 중에 몇 가지가 반영이 됐다. 그래서 몇 퍼센트 중에 몇 퍼센트가 올 한 해에 반영이 됐다라고 항상 그게 산출이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제가 활동했었을 때는 한 80~84%의 꽤 높은 수치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걸 좀 더 자세히 봤을 때는 그 수치가 약간 차별성이 있었던 획기적이거나 그런 아젠다가 아니었고 기존에 있었던 걸 조금 그냥 다시 재생하는 그런 아젠다들이 대부분 수용됐었고 현실적이고 지금 진짜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은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게 한 10~15%였어요.”

그는 기성세대가 청년 혹은 청소년들의 정책적인 건의를 겉으로만 중요시하는 척 할 뿐이지, 사실은 거의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류상 찍히는 높은 “청소년 정책 반영률”은 착시효과에 불과한 것이다. 그는 심지어 “정치권 내에서 청년을 약간 소비하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청년들의 선호미래가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청년은 그것이 청년 개개인의 상황으로부터 기반한 선호미래가 사회 전체의 선호미래로서의 정당한 대표성을 띄기 어렵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다시 말 해, 개별 청년들이 비교적 매우 구체적인 선호미래상을 가질 수 있는데, 선호미래상이 구체적일수록, 그것은 지엽적인 속성을 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그러나 지엽적인 선호미래상은 따라서 정치인들에게는 구현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선호미래의 정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러독스이다.

“실질적으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 대부분의 주제가 되게 광활하지 않고 그냥 나의 삶을 소소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경매에서 뭐가 났는데 나 이거 얼마에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송아지 되게 잘 샀는데 얘가 엄청나게 잘 커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자기 가족 얘기를 많이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마 그리는 꿈을 제가 물어봤을 때 “네가 선호하는 미래가 무엇이나?”고 물어봤을 때는 아마 그런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치의 개념이 너무 감투 중심, 정당정치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도 값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풍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진짜 정치의 근본적인 개념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풍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런 거를 함께 브레인스토밍 하고(...)”

가령, 농촌의 한 청년의 선호 미래는 자신이 키우는 송아지의 값이 올라가는 사회가 될 것이다. 도시의 무직 청년은 자신이 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사회를 원할 것이다.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노부모를 바라보는 한 청년은 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사회를 원할 것이다. 이 모든 선호미래들은 구체적이고 선명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기반한 건의사항들이다. 이러한 선호미래들은 결국 일관된 정치적인 동인을 바탕으로 정책화되기 힘든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호미래의 구체성이 반드시 선호미래의 실현 불가능성으로 연결되어야만 할까?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정치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청년들은 선호미래의 잠재적 다양성과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연결시켜 커다란 테두리로 묶어 일관되고 추상적인 선호미래“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진짜 요즘에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생활정치라고 하잖아요. 포도 값이 왜 굳이 올라야 할까. 포도 값이 오르지 않아도 나한테 돌아가는 게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구조의 방식이잖아요, 유통 구조의 방식. 그런 것만 조금 더 조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게 정치인이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 대입을 해 보면 생활정치라고 해서 우리 생활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바뀔 수 있는 게. 또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버스 이용하는 것도 저상 버스가 올 때만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법률로 조례안으로 만들어져서 증차를 한 거고 (...) 내가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거를 좀 알려주어야 할 것 같고. (...) 국회 자체도 정말 어렵고

누구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내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나?’라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부터 저는 좀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어렵지 않고 ‘오니까 금방 들어올 수 있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네?’ 이렇게 (...)

이처럼 선호미래“상”을 구축해 나가는 길은 청년,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이 “생활 정치” 혹은 “일상의 정치”(politics of everyday life)를 구현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일상의 정치를 가로막는 것은 비단 기성세대만의 잘못은 아니며, 청년 세대만의 패착도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인 저변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장차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선호미래상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달성하기 어려운 속성의 띄었던 것에 반해, 회피미래상은 분명하게 성취될 수 있어 보일 정도로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한 청년은 “갈등 사회”를 회피미래상으로 제시했다. 갈등사회란 명확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들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이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계속해서 점화되는 사회를 뜻한다. 이 청년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 조장 세력”들로 인해 갈등 사회가 도래하고야 말 것 같다는 구체적인 불안감을 호소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큰 악당은 선동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끝까지 논의를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토픽만 던지고 사라지는 “이런 게 문제라더라”,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삶이 악화되는 거다. 너희 이거 모르지?”라고 하고 토픽만 던지고 사라지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런 갈등 없이 혹은 서로 적대감 없이 살던 다수가 그런 소수에 의해서 이렇게 더 갈등이 극심해지지 않나(...)”

그에 따르면 선동가들은 답이 없는 갈등의 요소를 남기고 사라지는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의 표현에서 건전한 사회 비평가들과 악질적인 선동가를 구분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예를 들어 젠더와 인종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젠더 불평등과 인종

불평등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것의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함께 의식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끝없이 갈등의 가능성에도 불과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쉬지 않는다. 이러한 비판적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되는 사회는 겉으로는 갈등이 없어 보이고 평화로운 사회이지만, 사실은 깊숙한 차원에서까지 사회 문제가 비가시화된 형태의, “깊은 불평등”의 사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청년은 사회를 더 진보시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비판적 시각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회피미래를 초래하는 불안한 사회 요소로 인식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청년의 증언에서도 드러났다. 한 청년은 “타인을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회”를 회피미래로 제시했다. 그런데, 타인을 경쟁자라고 인식하는 것은 이미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그는 “학업이나 입시 경쟁 사회를 거치면서 초중고를 진학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경쟁률을 봐가면서 또 눈치싸움을 통해 그때부터 이미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또 과거 기성세대로 따지면 오로지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빨리빨리 문화가 형성되면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고 오로지 그 사회에서도 특정 집단이나 특정 소속 안에서 내가 이 사람보다는 무조건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경쟁심이나 견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피미래상이 구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청년의 발언은 다른 초점집단 인터뷰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 개인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공감하는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한 참가자는 자신이 외국어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시절을 예로 들며, “취지와는 다르게 일방향적인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의 세태를 비판했고, 한 참가자는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은 경쟁 속에서도 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경쟁보다는 자아성취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막상 대학원에서조차 경쟁 지상주의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다는 체험을 토로하기도 했다.

회피미래상에 있어서 수도권 지역 청년과 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이의 불일치도 드러났다. 지방의 한 청년은, 자신의 회피미래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살기 좋아지는 사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수도권 GTX를 짓지 말라고 요구하고 싶다고 하며, 수도권이 점점 살기 좋아지는데 누가 지방으로 와서 살겠냐고 항변했다. 반면, 수도권에서 구직중인

한 청년은 그나마 차가 없이도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수도권 장점이라면서, 도시의 다양한 인프라 덕분에 이 삭막한 서울에서도 환대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즉, 청년들의 회피미래—경쟁 지상주의적인 사회, 갈등이 조장되는 사회, 수도권이 점점 살기 좋아지는 사회—는 자신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실 인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으며, 상호 상충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미 구현되어 버린”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을 회피미래로 거론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청년들의 회피미래는 이미 자기 실현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회피미래는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미래”임과 동시에 “이미 다가와 버렸고, 자신들에 의해서 민감하게 감지되고 있는” 도처의 미래다. 청년들의 회피미래는 선언적이면서도 예측적이고,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재난 감지 신호와 같다.

4 청년들의 정책 참여 동인 및 청년 정책의 정당성

그렇다면 청년들은 왜 사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가?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비 청년집단의 주장과 비교해, 청년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치 및 정책 참여의 정당성에 대해 깊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초점집단연구에 의하면,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현재 사회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사자적인 전문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계속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건데 만약에 사회 변화가 기존하고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들(기성세대)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과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사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분들의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죠. 그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왜 그분들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그거는 결론적으로 그 자체가 안 맞잖아요. (...)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다면 새로운 관점과 그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기성세대가 정말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면, 지금의 청년들은 왜 고통받고 있는가? 더 나아가, 청년 문제의 배경이 되는 각종 사회 문제는 애초에 왜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는 말인가? 청년들의 인식에 의하면, 위에서도 언급 되었듯이, 청년들은 사회 문제를 최전선에서 경험하는 탄광 속 카나리아와 같은 존재들이다. 높은 민감도를 갖고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또 이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체험하는 청년들에게 타자화된 전문가가 각종 처방을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청년들은 이것이야말로 정책 입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도피의 모습이라고 본다.

“행정에서 정말 잘 해주셨으면 정말 청년정책 거버넌스라는 게 들불처럼 번지듯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지 않았겠죠. 이 꼬라지 정말 안 낫겠죠. (...) “청년들은 그냥 가진 생각만 이야기해라. 도움을 달라. 우리가 못 했던 경험을 좀 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정작 행정에서 청년들이 의견을 내서 이렇게 뭔가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 정책이 행정만 거치면 제대로 청년들한테 가 닿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행정 손만 거치면 이상하게 뭔가 우리의 생각을 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달라지는 거죠.”

물론, 청년들을 대변하는 정책 기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 행정에서도 이러한 청년 정책기구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 시스템을 거치면 청년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왜곡된다. 청년들은 “이 꼬라지”라고 표현하며,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청년 정책의 현황을 꼬집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자신들이 인지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궁극적으로 모두 정책의 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러한 방식으로 청년 민원인 상대하듯 하는 청년 정책의 경향성에 대해 더욱 비판적이다.

“특히 청년정책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납작하게 보려는 것들이 있어요. 되게 단일하게 규정하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이 단어 안에 있는 그런, 되게 납작하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 사실 강남에 사는 25세 청년과 광주 북구에 사는 25세 청년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청년들의 정체성, 위치성, 계급성들이 따져져야, 그것들이 계속 그것들이 계속 설명되어서 해석되어져

야 조금 더 실효성 있고 촘촘한 정책 설계가 가능한데 ‘청년들이 취업률이 되게 높다. 일자리를 많이 주면 되겠지?’라고 이런 식의 원포인트적인 접근들이 저는 계속 청년정책을 망쳐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 사실 그 현장의 목소리가 100% 다 담긴다고 모두 좋은 정책은 아니지만 그것이 결핍됐으면 그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연구에 참여한 초점집단 인터뷰 대상자들이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경험자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청년을 주제로 한 정치 참여에 열정을 가졌던 경험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청년”이라는 단어의 압박함에 답답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청년적 정체성이 정치권에서의 참여 자격이자 제한사항으로 작동하던 경험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청년들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 이상의 전문성을 가졌다고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단편적으로 “청년이 경험하는 문제”라고 정의한 사안들에 대해 청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준다. 그러나, 청년들의 정책 참여자로서의 자격은 거기에 그친다. 청년들 사이의 다양성, 청년을 넘어선 사회 전체의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많은 청년들은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문제”를 고발하는 단편적인 접근을 벗어나야 하며, 청년들의 다면적인 정책 설계자로서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정책 설계의 장이 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이는 청년에 대한 기존의 정책 담론을 뛰어넘는 것이다. 청년은 자신들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민주사회의 일원이자, 미래 사회의 잠재적 위기를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는 “카나리아”와 같은 전문가로서 자신들의 청년적 전문성을 활용하고 싶어 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 주목해야 할 정책 참여자로서의 청년 집단의 새로운 정당성이다.

제4절 이머징 소수로서의 청년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본 연구는 청년의 시점을 렌즈로 하여 국민들의 선호 미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목표로 시작했다. 제 3절의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년들은 과거의 청년들과 미래의 청년들 사이에서 지금 자신의 “청년됨”에 대해 조망하는, 시공간을 넘어서는 사회학적인 상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과거의 청년들은 느낄 필요가 없었던, 그리고 미래의 청년들은 느낄 수 없게 될 다양한 사회적 모순들이 지금의 청년들에게 감지되고 경험되고 있다. 청년문제는 따라서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만이 오롯이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청년들은 자신들의 “소수자성”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소수자성은 자신들의 시대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전 세대의 청년들, 이제는 중장년층이 되어 버린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이 겪은 사회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필요가 없었다.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비롯한 몇 가지 문제들에 몰두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소명을 다 하였다고 인식하였고, 불평등, 환경, 도농 격차, 수도권 중심 개발, 노동 시장 양극화, 젠더 갈등 등의 사회 문제들은 후대의 몫으로 넘긴 채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사회를 운영해 왔다. 지금의 청년들은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고 계승된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경험한다. 기성세대는 이를 “청년 문제”라고 몽뚱그려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남겨진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지금의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문제들을 회피하고 떠넘길 수조차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다. 반면, 후대의 청년들은 자연스러운 인구 감소의 결과로든, 사회 문제의 비가시화를 통해서든, 지금의 청년들과 같은 수준으로 “청년 문제”를 온몸으로 경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다. 즉, 지금의 청년들은 전무후무하게도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누적된 사회문제들을 정통으로 경험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감내해야 할 “소수자 집단”이다. 지금의 청년 문제는 차차 “중년 문제” 그리고 “노인 문제”와 같이 이름만 바꾼 채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 셋째, 따라서 청년들은 자신들의 정책 전문가로서의 가치를 사회 전체가 이해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청년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이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제의 당사자이자 평생 이 문제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지금의 청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성이 없다고 치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의 청년들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가장 잘 성찰할 수 있는 탄광 속 카나리아와 같다. 이들이 감지하는 사회 문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회피미래는 사실 사회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약한 신호”일 수 있다.

미래학에서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란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초보적이고 산발적인 신호들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수많은 이슈 중, 어떤 것이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이머징 이슈”인지를 판별해 내는 일은 기술적(technical)인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social)인 작업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적 그룹들은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다른 종류의 미래를 상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신호들”을 역산하여 감지해 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업인이 판별해 내는 이머징 이슈는 주로 미래의 시장 환경을 결정할 것으로 추정되는 신호일 테지만, 과학기술자들이 판별해 내는 이머징 이슈는 미래의 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할 가능성이 있는 원천 기술에 대한 것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청년들이 주목하는 “이머징 이슈”는 청년 집단의 위치성에 기반한 이머징 이슈일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청년의 관점에서 본 이머징 이슈”가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 이러한 청년 중심의 이머징 이슈가 갖는 가치, 더 나아가 이러한 방식의 이머징 이슈를 생산해 내는, 새로운 사회적 가능성과 중요성을 갖는 집단으로서의 청년집단에 대해 분석했다.

청년이 바라본 이머징 이슈는 단순히 청년이 느끼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동의어가 아님이 도출되었다. 오히려 청년들은 청년 문제를 청년 당사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문제로 환원시키는, 기성세대의 “납작한” 접근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금의 청년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성을 원거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했다. 즉,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도출해 내고,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함께 숙고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했다. 이러한 정책 역량은 기성세대의 전문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 기성세대는 이미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청년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은, 따라서 기성세대가 청년을 지나치게 저평가하거나, 자기의 전문성을 고평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증상이다.

소수자성을 자각하는 청년들은, 따라서 설득력 있는 이머징 이슈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이머징 이슈가 비로소 진짜 사회의 모습으로 부상하게 될 미래 사회에서 이를 온몸으로 감당하게 될 “이머징 소수(Emerging minority)”로 불릴 수 있다. 이는 이머징 이슈의 대표성이, 역설적으로 사회의 특정 소수집단에 의해 더욱 민감하게 성취될 수 있다는 표상이기도 하다.

미래 연구를 위해서는 사회의 인구학적, 경제적, 정치적 주류 계층의 ‘대표성 있는’ 목소리만을 수집할 것이 아니라, 얼핏 주류집단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집단들, 가령 청년 집단과 같은 특수 집단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머징 소수의 이머징 이슈는 결코 ‘우리’와 다른 ‘소수’ 목소리가 아니며, ‘우리 모두’의 공통된 미래의 문제를 암시하는 가장 설득력 있고 민감한 경고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5절

탈북 청년들의 미래상과 사회 참여의 정당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탈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대화의 의미와 필요성

가. 문제의식

탈북 청년들에 대한 심층연구, 조사는 한국의 청년정책 차원에서도, 탈북 정책 차원에서도 아직까지 공백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부상한 다양한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시도에서 탈북 청년들의 존재가 대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일정책, 탈북정책 차원에서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와 함께 탈북 청소년 실태조사를 진행해왔으나 청년층에 대해 주목을 돌린 적은 없다. 남북하나재단의 연례조사 외에 탈북민 관련 조사는 통일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인권조사가 존재하지만 청년 인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가 청년정책 차원에서 특유의 '소수자'로서의 사회적 위치성을 갖는 탈북 청년, 특히 그들이 상상하고 선호하는 본인과 한반도의 미래상에 주목하고 그들의 미래 선호를 한국의 미래 전망, 미래 전략에 포괄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탈북 청년들이 그들이 이주해 정착하는 한국 사회에서 갖는 '문제적' 성격 때문이다. 이들의 '문제성'은 '탈북', 그리고 '청년'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배가된다. 우선 이들의 '문제성'은 청년보다는 '탈북' 경험이 낡은 소수자로서의 측면에서 나온다. '탈북' 청년들은 여느 탈북민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회와는 매우 이질적인 체제에서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냈고 한국 사회의 제도, 가치, 문화 등을 습득하고 체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경험한다. 동시에 이들은 일상 속에서 거의 언제나 북한과의 비교적 시선, 비교적 의식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점에서 '이중적 의식'(double-consciousness)을 가진 존재라고 볼 수 있다(Du Bois 1999;

Cheah 2003). 탈북민은 이주자로서 한국사회의 일상에서 명백한 남북한간 위계구조를 경험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한편, 한국사회에서 느끼는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일종의 ‘식민적’ 사고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다음으로 탈북 ‘청년’의 측면에서는 최근 탈북민의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를 고려할 때,¹⁸⁾ 일부 청년들에서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이 상대적으로 빠른 동시에 북한에서의 가치관, 문화에 대한 의식, 비교적 시각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특성은 ‘남한 직행’, ‘외부의 가족/친지 존재’, ‘일정한 경제적 수준’의 성격이 강해진 2010년대 탈북민들의 경우에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2). 즉, 최근 10년여 기간 탈북, 입국한 20대 탈북 청년의 경우, 2000년대 청소년으로 입국해 한국 사회에서 청년기를 맞은 탈북 청년과 적응과정 및 가치관이 이질적일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 후자에 비해 보다 다양한 방식, 경로로 자신의 목소리, 요구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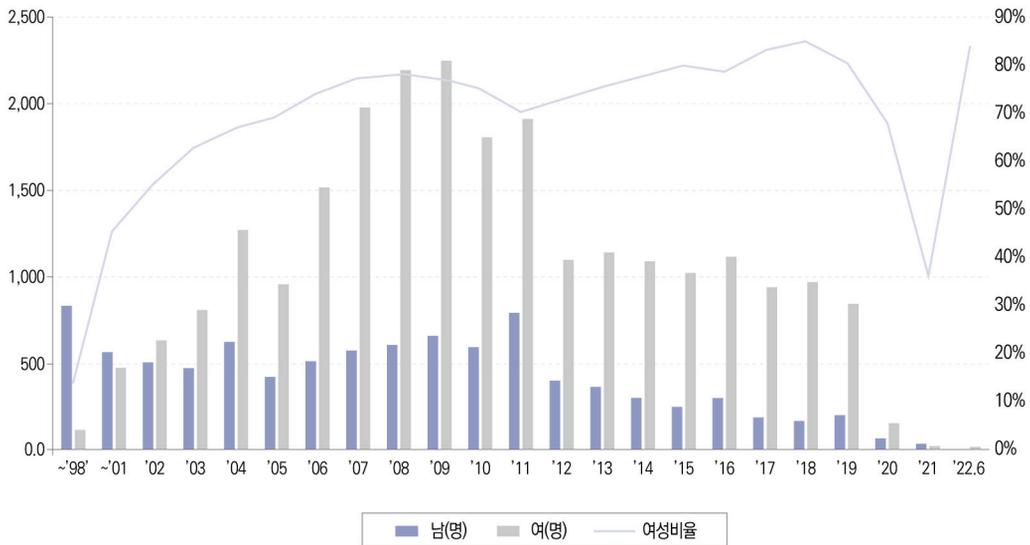
탈북 시점, 경로에 따른 청년 내부의 이질성과 더불어 본 연구는 탈북정책 측면에서 최근 관심이 부상하고 있는 ‘제3국 출생’ 청년을 조사에 포괄함으로써 논의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했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대부분 중국 체류 탈북민들의 자녀로 제3국에서 나고 자랐다가 국내 입국한 경우로,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¹⁹⁾ 그러나 2015년부터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학생수가 북한출생 탈북민 자녀 학생수를 초월하는 등 이들의 법적 지위 및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²⁰⁾

18)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난 이후 시작된 탈북은 2016년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누적 3만 명을 넘어서면서 탈북 이주의 규모와 출신지역, 이동 경로, 젠더 구성 등이 변화해왔다. 2000년대 후반 연간 입국 인원이 2000명대 후반을 유지했던 탈북민 규모는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크게 감소했고 최근에는 팬데믹의 여파로 국내 입국 탈북민이 십여명 대로 줄어들었다. 식량난이 심각했던 19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중반의 탈북 이주가 북중 경계지역인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2010년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는 시장화의 확대, 북중교역 활성화로 경제난이 일정하게 해소된 배경에서 국경지대 통제가 강화되면서 탈북민 수가 감소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북중간 물리적 경계를 강화하고 통제가 삼엄해지면서 위험이 높아지고 전문 브로커를 동반한 탈북 이주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에는 탈북의 ‘계층화’ 추세가 발견된다(최은영, 2022). 또한 국경통제 강화로 인신매매를 통한 탈북이 줄어들면서 ‘이주의 여성화’로 대표되던 탈북민들의 젠더 구성도 변화하는 상황이다(이희영, 2012; 최은영, 2022).

19) 북한이탈주민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어(제2조 제1호), 제3국출생 자녀는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의료급여 규정, 공유재산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정착지원시설(하나원) 내의 예비학교 입학, 고등교육법상의 특례입학 등 몇 가지 제한적인 지원만 허용된다(이규창, 2022).

20) 2021년 4월 현재 북한출생 학생 789명(34.5%), 중국 등 제3국 출생 학생 1,498명(65.5%)의 비율이 나타난다(탈북청소년

이러한 탈북 청년 내부의 이질성을 의식하고 이에 따른 균열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점은 앞서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연구의 문제의식과 상통한다. 기성 탈북민 단체들이 주로 보여주었던 반복적 ‘인정투쟁’에 비해 최근 젊은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정착 현실과 직결된 직업, 건강, 복지, 교육 등 보다 실용적인 의제에 대한 다각적 관심을 표출하는 추세에서 보듯(김성경 2014: 57), 일부 탈북 ‘청년’들의 한반도 통합, 한국사회 내 분단문화, 냉전구조와 관련된 입장 및 실천은 한국의 통일정책에 있어 새로운 담론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그림 5-1]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더욱이 한국사회의 청년정책의 측면에서 탈북 ‘청년’의 존재는 20-30대 청년 다수의 한국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비판의 관점인 형평, 공정의 논리에서도 ‘문제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다. 청년세대의 중국 혐오, 조선족 혐오가 증가하는 맥락에서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집단, 한국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집단 등으로 탈북민에 대한 혐오 감정 증가는 대량탈북 시기 이전의 탈북민들이 국가적으로 ‘영웅’ 대접을 받거나 경제난 이후

년교육지원센터, 2022; 이규창, 2022).

기성세대가 탈북민을 동정, 보호의 대상으로 대하던 것과는 큰 간극을 보인다.²¹⁾ 탈북 '청년'들을 한국의 청년정책 거버넌스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기존 한국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주류적 청년담론, 정책실천과 충돌할 수 있으며 탈북민, 탈북 청년의 존재에 대한 기존의 인식, 정의를 허무는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둘째, 앞서 살펴본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집단과 마찬가지로 탈북 정책 차원에서 탈북자 조사에서 미래전망, 미래선호에 대한 질문을 던진 적은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미래에 대한 인식, 욕망, 선호, 의지를 드러내는 본 연구는 특히 탈북연구 및 정책, 남북관계 연구, 통일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기존의 탈북민 설문 및 심층면접을 통한 의식조사가 탈북민들이 북한에 살았던 시기, 혹은 탈북 이후 중국 체류시기 등 과거의 경험, 그들이 재북 당시 남한에 대해서 가진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을 묻거나 한국 정착 이후 현재의 생활상 실태와 고민을 질문해 온 반면, 본 연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본인의 미래를 포함해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선호하는 미래는 어떤 것인가 등 미래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탈북 청년들은 미래 전망과 미래 선호에 관해 현재 남북한 사회에 대한 평가와 소망, 스스로의 가치관과 현실적 우려 등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사회에서 탈북 청년들이 처한 독특한 맥락과 정착의 문제들을 드러냈다. 미래에 대한 질문은 인터뷰에 참가한 탈북 청년 내부에 존재하는 한국사회 정착에 대한 만족도와 향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 자기개발 전략상 차이와 함께 향후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희망의 내용,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상, 바람직한 남북한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 등에 대한 다양한 생각의 차이들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북관계, 통일정책과 관련해, 본 연구의 탈북 청년들의 미래전망, 미래선호에 대한 질문은 크게 두 가지 차별성을 가진다.

하나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21년 공론조사에 기반한 한국사회의 선호미래로서 '성숙사회'(김유빈 외, 2021) 비전을 제시하고 이러한 미래상에서 본인과 한반도 통합의 미래에 대한 예상을 물었다는 점이다. 탈북민들에 대한 종전의 의식조사, 심층면접이 한

21)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탈북민들이 일상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거나 조선족으로 밝히는 사례들에서 한국사회이주자, 이방인의 '서열'을 확인할 수 있다(김성경, 2014: 51).

국사회의 현 상태를 일종의 '주어진 것'으로 두고 남북한 통합 여부나 방식, 조건에 대한 선호를 물었다면, 미래 시점의 보다 바람직한 지향, 국민적 선호를 바탕으로 탈북민들에게 한국/북한, 한반도의 미래 전망, 미래 선호에 대한 응답을 조사한 본 연구는 참여자로 하여금 남북한 모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데 상대적으로 보다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다른 하나는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남북한 통합과정의 장기성, 점진성을 바탕으로, 통일 자체의 정의를 좀 더 다양화하고 정책영역별로 통합이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진행될 가능성, 이 경우 통합이 더 필요하거나 빨리 가능하리라고 보는 영역(예를 들어 환경, 보건의료 등)을 질문함으로써 탈북민들의 한반도 통합에 대한 선호미래의 내용을 다각화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탈북 청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선호하는 한반도 미래상을 '성숙사회'라는 한국사회의 중장기적 변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한편, 한반도 통합과정에서 영역별, 단계별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본 연구는 탈북민들을 한국의 통일정책의 참여자로 포괄하는 동시에 한반도 통합의 다양한 거버넌스 틀을 구상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생산하는 일종의 새로운 정책참여 거버넌스의 방식을 실험했다고도 볼 수 있다.

종합하면, 한국사회에서 독특한 '문제적' 위치성을 갖는 탈북 청년의 관점에서의 미래전망, 미래선호를 듣는다는 것은 기존에 대표, 재현되지 않던 인구집단을 포괄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이고 유연한, 실제 시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중장기 미래전략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 탈북 청년들의 미래대화(FGI)의 대상과 질문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경험자들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탈북 청년과의 미래대화 역시 초점그룹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본인과 한반도의 미래상과 관련된 집단 인터뷰 형식으로 미래대화 참여 의향이 있는 탈북 청년 20대 그룹과 30대 그룹 각각 6인을 모집했다. 탈북민 인터뷰의 특성상 참여자는 기존의 다른 탈북민 심층조사에서 인터뷰 경험이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희망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모집했다. 초점그룹인터뷰는 2022년 5월 26일에 탈북 청년 20대 그룹과 30대 그룹을 각각 진행했다.

〈표 5-4〉 인터뷰에 응한 탈북청년들

이름	식별코드	연령대	성별	현재 소속
박○○	참가자 A	30대	여성	주부
박○○	참가자 B	30대	여성	자영업
오○○	참가자 C	30대	남성	회사원
조○○	참가자 D	30대	여성	주부
최○○	참가자 E	30대	여성	대입준비
홍○○	참가자 F	30대	여성	주부
이○○	참가자 G	20대	남성	대학생
이○○	참가자 H	20대	여성	대학생
김○○	참가자 I	20대	여성	대학생
김○○	참가자 J	20대	여성	대학생
홍○○	참가자 K	20대	남성	운송업
김○○	참가자 L	20대	여성	주부

초점그룹인터뷰에 응한 참가자들의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인터뷰 질문은 연구팀 중 연구책임자와 청년정책 관련 연구자, 북한정치 전공 탈북민 인터뷰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함께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질문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사전에 주제 중심으로 간략화한 질문과 순서에 대해 공지를 받고 미래대화에 참여했다. 인터뷰 과정에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던 질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5-5〉 초점그룹인터뷰 과정과 주요 내용

범주	질문
시작 질문	나에게 미래는 OOO다
가능 미래	15년 뒤의 나의 미래는 어떤 것 같은가?
	15년 뒤의 우리 사회의 미래는?
선호 미래	15년 뒤의 미래 가능성 중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선호하는 미래는?
미래 담론의 남북 비교	북에서 살 때와 남에서 살 때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지?
	탈북의 다양한 여정을 거쳐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성숙사회 선호미래 평가	성숙사회가 실현된다면 나의, 한반도의 미래가 어떤 것 같은가?
한반도 통합에 대한 함의	성숙사회가 실현된다면 한반도 통합의 미래에 어떻게 작용할 것 같은가?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고려할 때) 남북한 관계에서 좀 더 빨리, 혹은 좀 더 느리게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면?
마무리 질문	미래대화 이후 미래에 대해 느끼는 가장 큰 우려 혹은 희망이 있다면?

탈북청년들의 미래대화 분석은 총 12명 참가자의 발언에 대한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탈북청년들의 미래전망, 미래선호, 그리고 한반도 통합에 대한 인식 및 정책적 요구 등을 본 연구의 미래대화의 초점(기준에 비가시화된 다양한 국민 선호의 미래정책 반영)에 맞춰 분석했다. 탈북청년들과의 미래대화 분석은 일종의 초보적 연구(pilot study)로 아직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의 크기를 감안해 깊이 있는 질적 분석을 시도하기 이전에 미래전망, 미래선호에 대한 이들의 목소리들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탈북청년들의 '소수적' 위치성을 드러내는 다수의 발언은 현재 한국, 한반도의 현실 평가 및 미래전망, 미래선호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했다. 이어 한반도 통합의 미래, 정책적 방향 및 대안과 관련해서는 한국 사회 시민들의 일반적 인식에 비해 매우 강한 탈북청년들의 통일 선호, 동시에 강한 회의적 전망 및 우려(남북관계의 비동등성, 한국 사회의 탈북민들에 대한 낮은 수용도)를 담아내고 중장기 한반도 미래전략의 방향성에 대한 이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2 탈북 청년 미래대화(FGI) 결과 분석

가. 탈북 청년들의 '소수적' 위치성

미래대화에서 대다수 탈북 청년들은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적 차별, 배제를 거의 상수에 해당하는 일상적 조건의 문제로 지적했다. 일상적으로 느끼는 차별의 경험은 30대 그룹에 비해 20대 그룹에서 눈에 띄게 이야기되었는데, 이는 이미 직장 혹은 가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일상을 사는 30대에 비해 대학 등 공간에서 한국사회의 또래 집단과 일상적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는 20대들의 일상적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대 그룹에서 특히 탈북 청년들의 다문화 사회적 적응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한편으로 30대 그룹 역시 남한 태생 주민들과 접촉, 교류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몰이해, 이방인으로 대하는 시선과 태도를 상시적으로 느낀다고 지적했다.

20대 그룹에서는 항상적으로 느끼는 차별적 태도, 시선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출신, 정체성을 가능한 한 숨긴다는 발언이 공통적으로 등장했다. 탈북 청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피상적 관계에 머물거나 가까운 다른 탈북 청년들과 생활하는 등 다양한 문화적 배제에 대한 자신들의 방어 메커니즘을 형성해왔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적응과정에서 숨기거나 한국 태생 또래집단과의 차이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20대 그룹과 달리, 30대 그룹의 경우에는 역양, 용어 사용 등에서 이미 숨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겪는 차별적 언행을 지적하고 자신은 아니더라도 자식, 후대에는 남한 사회에서 제대로 정착할 것이라는 희망을 보이기도 했다.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깊게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나중에 너무 깊게 생각했다가... 되게 북한 사람들은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그런 게 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건 앞에서는 다 이렇게 막 칭찬하고 이러는데 뒤에 가서는. 북한 사람이라고 대학교에서 밝히잖아요. 밝힌 순간부터 “재 북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선배들도 말하는 게 굳이 북한 사람이라고 밝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친구가 생기는 게 3일이면 다 없어진다고. “북한 사람이다” 해서 3일은 친구가 막 다가오는데 3일이 지나면 친구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람들의 이면적인 그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참가자 H)

어떻게 보면 제가 탈북민 자녀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또 제 동세대 친구들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제 앞에서도 막말을 하는데, 북한의 그런 사회에 대한 상황.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밝히면 내 뒤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또 숨기게 되는 것도 있고. (참가자 J)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5년 정도 됐는데 5년이라는 시간에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탈북민이라고 해서 나가서 굳이 안 밝히는 이유도 있지만 밝혀봤자 저희한테 득 되는 게 없더라고요. 열 번을 잘하다가 한 번을 못하면 “재는 북한에서 와서 저런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는 분들도 계시고요. 앞에서는 천사마냥 밝게 그러고 뒤에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참가자 L)

처음에는 “내가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다 호감적으로 “신기하다” 이렇게 되게 많이 다가오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트렌드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잘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야, 너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아, 너 북한 사람이니까 모르겠구나.”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20대에서는 “북한 사람이다” 이런 걸 못 하는 것 같고. (참가자 I)

15년 후에 한반도의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젊은 저랑 동년배 또 래들하고도 같이 일을 해봤고 나이 드신 분들도 같이 일을 해봤지만 보통 한국분들 60년대 초중반 분들이라든가 나이 이제 한 60대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북한이라든가 가끔 제 출신성분 같은 거를 오픈해도 그렇게 크게 놀라거나 어떤 반응이 없이 “아유, 그래. 어려서 고생 많이 했겠다” 그냥 이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시고 거리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두는데, 젊은 또래라든가 동년배들 보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선배이거나 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더 잘하거나 진짜 하다못해 목소리라도 더 높든가 해야지 안 그러면은 얹잡아보는 경향이라든가 ... 사적으로라든가 술한잔 먹고 어디 노래방에 간다든가 어떠한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그런 차이는 조금 있고 그런 데서는 동년배들한테는 숨기려고 해도 일단 아무리 말씨도 말투 같은 거 역양이나 이런 걸 잘 하려고 해도 깊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서는 티가 잘 안 나지만 그런 문화적인 차이에서는 꼭 티가 나고, 아직 젊은 세대는 북한이라는 그런 거를 이해를 잘 하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1도 없고. ... 앞으로 우리 2세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대에서는 좀 힘들고 때로는 한국에서 태어난 오리지널 동년배 애들한테도 조금 차별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있긴 한데 우리 2세대에서는 평범하게 그런 차별 같은 게 없이 그냥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자 K)

왜냐하면 저 혼자 살다가 죽으면 또 그만이지만 저희는 자식이 있어서 그래도 나이 먹기 전에는 자식 앞으로 뭔가를 좀 해놓고 자식을 봐야 그래도 자식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살아갈 때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좀. 그런데 제가 뭘 하려고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장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장 일에는 제가 도저히 체력이 따라갈 것 같지 않고. 그런 게 조금은 걱정됐어요. (참가자 D)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소수적 위치성은 탈북 청년들이 입국해 겪은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직장 생활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응, 통합에서 성과가 예상되는 청년이든 가정주부로서 사회진출을 위해 역량개발을 원하는 청년이든 다수의 탈북 청년들은 한국 사회의 성격을 지나친 파편화, 고독과 우울감 증대, 낮은 사회적 포용도, 경쟁 심화, 불신 만연 등으로 파악했다. 탈북 청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북한의 생활과 비교해 최소한의 생존과 관련된 경제적 조건이 해결되었으나 삶의 질, 만족도, 행복의 관점에서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공간으로 평가했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 및 한국 사회 내 탈북 청년의 위치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의 가능성, 선호미래를 밝히는 데 직접적으로 투영되고 한반도 차원에서의 가능성, 선호미래 제시에 반영되었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미래상과 관련해 성숙사회의 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로 이어졌다.

한반도로 봤을 때는 발전하면 할수록 살아가는 게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제가 왔을 때보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월급도 오르고 했는데 물가도 그만큼 많이 올라가지고 삶은 더 빠세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내가 5년 뒤면 10년 뒤면 잘 정착해서 풍요롭고 시간적으로도 좀 여유롭게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마음은 급하고 여전히 뭔가에 쫓기듯이 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복지가 좀 더 잘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가자 B)

근데 여기 와서는 뭔가 다 주어졌어요. 자유도 있고 먹을 것도 진짜 많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한데 솔직히 가족들하고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든 다 되는데 솔직히 일하게 되면 알바할 때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자고 이런 삶도 반복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많이 누릴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함도 조금 떨어진 것 같고. (참가자 E)

세상이 발전하고 이러는 만큼 사람들이 좀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인간들로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진짜 야박하고 사람들 마음이 너무 간사한 것 같아요. 좀 따뜻한 인간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타고나기를 나쁜 사람은 없겠지만, 물론 나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부라든가 좋은 일 하는 그런 데도 많이 참여는 못 하고 있지만 서로 인간답게들 사는 그런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참가자 K)

나. 한반도 평화·통합에 대한 선호미래의 키워드

한반도 평화·통합에 대한 선호미래와 관련해 다수의 탈북 청년은 통일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30대 그룹에서 통일에 대한 찬성, 정서적 열망이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응답은 특히 가족을 이복에 두고 온 탈북 청년들의 경우에서 강렬하게 나타났다.

저는 지금 첫째도 둘째도 일단은 계속 통일이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살고 있으면서 진짜 힘든 때도 있지만 진짜 북한보다는 너무 훨씬 살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저만 이렇게 살기 좋고 행복하고 하는 게 너무 북한에 계시는 부모 형제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일단은 통일이 빨리 돼서 될수록 진짜 빨리 돼가지고 부모 형제랑 다 같이 그냥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자 A)

저는 그냥 한반도 통일이인 것 같아요. 통일이 15년 뒤에는 —그전에 되면 더 좋고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다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고. (참가자 E)

반면 일부는 통일이 중장기적 시야에서 통일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뿐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20대 그룹은 통일에 대한 염원보다는 통일 가능성에 대한 강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들은 국내 입국한 탈북민들의 사회적 통합이 요원한 현실에 비춰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한 남북한의 통합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불가능에 가까운 통일보다는 적어도 서신 왕래, 여행이 가능한 공간으로 남북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는 응답들이 존재했다.

한반도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한국에 온 지 10년 됐는데 그때 제가 하나원에 왔을 때 설문조사할 때 그분들이 3년 안에 통일이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통일이 안 된다’에 표시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분들이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반대쪽으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어찌면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통일이 안 됐으면 하는 이유가 6.25 때 내려올 때 당시 북한에서는 지주라고 하죠. 그분들이 땅문서를 가지고 내려오신 분들도 되게 많고 통일이 되면 법적인 문제도 그쪽의 법과 이쪽 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분들은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지식도 많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발전을 시킨다든가 할 때 북한에 있는 분들은 노동력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가자 B)

저도 남북 간의 통일은 정말 진짜 바라지만 근데 그게 이제는 몇십 년간 아직도 통일이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 통일이라는 그 문이 그렇게 쉽게 열리겠나 하는 생각에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통일이라는 그 문은 진짜 쉽게 열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요. (참가자 D)

15년 후 북한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상태로는 통일이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 거는 남한도 세대교체가 계속되지않아

요. 세대교체가 되면서 북한에 대한 환상과 그런 게 점점 깨지고 나만 잘 사는 시대에 있고. 또 저희 대학교도 보면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되게 적어요.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 빼고는 북한에 대해 저희가 굳이 통일을 하면 힘든 점도 많고 불이익도 차려지는 것도 많잖아요. 또 북한을 개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고.

저는 약간 여행 다니는 것처럼 일단은 그렇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문이 이렇게 다 열리지는 않는다고 해도 한국에서도 일단 마음만 먹으면 저희가 여권이나 이런 걸 떼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일단은 그렇게 해서도 저희가 진짜 가보고 싶잖아요. 저희가 태어나서 자라난 곳이고 하니까, 고향이고 하니까 가보고 싶고. 하면서 차츰차츰 개방이 됐으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참가자 E)

그냥 북한을 저도 생각해 봤을 때는 통일은 힘들더라도 그래도 그냥 서로 38선 같은 거라도 해제가 돼서 추석 날, 진짜 설 명절날 고향 땅에도 가보고 싶고 그냥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참가자 K)

한반도적 시야를 바탕으로 다수의 탈북 청년들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사회가 사회적 약자, 소수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제가 공통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 말은 저희 고향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미 같은 그런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저희 탈북민들 3만 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왔지만 그 사람들도 맞춰주기 힘든 그런 사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혹시나 통일 됐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맞춰줄까. 경제성장도 좋은 일이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든가 각각에 맞춰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맞춰주는 게 통일에서 더 빠른 전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가자 G)

적응이 어려운 탈북민 그리고 제3국 탈북민들 혹은 다른 소수 분들에게 사실 지금 관심 자체도 사회적으로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이라도 있으면 하는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참가자 J)

앞으로는 북한에서 왔다고 차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다 같은 한민족이고 같은 동포고 사람인데 굳이 북한이고 남한이고 굳이 이렇게. 어차피 저희도 남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에서 공부를 똑같이 하고 그랬으면 지금 지식 같은 것도 별다른 차이가 없이 공부도 잘하고 사회 정착도 잘했을 건데 저희가 그쪽에서 배운 거랑 이쪽에서 배운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차원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공부 쪽이랑 그런 면에도 그렇고 차별 같은 게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앞으로 나온 미래는 그런 차별 같은 게 좀 없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참가자 L)

성숙사회라는 한국사회의 선호미래의 상과 관련해, 탈북 청년들은 자신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소수적 위치성, 비대칭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의식과 결합시켜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선호미래를 위해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큰 관심과 공감대를 보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경제성장도 중요하고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발전하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털 누리고 털 입고 털 먹더라도 주위를 돌아보면서 다 더불어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만 너무 잘 사는 게 아니고 돌아보면서 도와주면서 그래서 더불어서 다 같이 그런 삶을, 그런 성숙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가자 E)

특히 신뢰나 연대, 공동체의식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공감을 하고 국가나 개인의 성장, 그다음에 발전과 환경, 효율과 형평성 이런 게 서로 양립 불가한 항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가성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인프라 같은 게 인터넷이 안 되는데 개인이 성장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구조고, 돈이 없으면 환경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없고 연료가 부족해서 산에 있는 나무를 다 굶어다 때기 때문에 산림이 다 파괴돼서 환경이 오히려 더 파괴된단 말이죠. 그래서 발전을 포기한다고 해서 환경이 저절로 좋아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노예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건데 노예들이 다 떠나면 사회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약자와 동행을 해야 되고, 또 문화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의식을 하는 데 좀 투자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가자 C)

저도 2015년도에 한국에 왔는데요. 18대 대통령 때부터 한국에 와서 이제 세 번째 대통령을 보게 되는데. 뭔가 대한민국도 하나의 국가고 한 개의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든가 그런 세력에 너무 의존을 하는 것 같고. 솔직히 남북한의 문제면 남북한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간섭을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주장을 가지고 북한이랑 좀 더 진지한 협력이나 타협을 통해서 좋은 긍정적인 자세로 성숙한 이미지로 하면 좋은 미래나 좋은 결과들이 더 빨리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참가자 K)

한편 제3국 출생 청년은 탈북 청년 내부에서 자신이 갖는 이질성, 차이를 지적하며 다양한 이주 배경의 청년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성숙사회가 한반도 통합, 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인식을 밝혀 중장기적 관점에서 초국경적 이주 과정에서 다양한 경계, 정체성을 가지게 된 탈북민 사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진 않았고 제3국 중국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태어난 친구들을 보면서 혜택을 받는 그런 거를 엄청 부러워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떤 방송이나 나가서 “제3국 탈북 청소년들도 챙겨줘라” 이런 식으로 좀 하기도 했고 국회에 간 적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물론 탈북민들도 이제 많아지고 제3국 출생 청소년들도 많아질 텐데 그런 친구들을 좀 돕고 싶은.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친구들도 대부분 한국 학우들인데 그런 친구들한테 제대로 제 출생의 그런 것도 밝히지 못하고 그런 친구들이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부정적인 것밖에 안 들고. 그런 주장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저는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사회에서는 한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아닌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미래로 갈수록 나라 간 우호적 사이는 더 멀어질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참가자 J)

다. 한반도 통합을 위한 중장기 미래전략에 대한 정책대안

탈북 청년들은 중장기 미래의 한반도 통합을 위한 점진적, 단계적 경로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실현가능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일차적으로 국내 탈북민 인구에 대한 포용을 시작으로 남북한의 비대칭적 격차 완화, 보다 대등한 관계 설정을 중요하게 지적했다. 통일의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보다 실현가능한 통일의 상에 대한 점진적, 단계적 시나리오와 관련해, 탈북 청년들은 무엇보다 인식적 차원에서 남북 주민들, 혹은 국내 탈북민과 한국 시민들의 관계적 전환을 중요한 요소로 주목했다. 인식적, 문화적 전환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청년층 사이의 소통의 어려움, 변화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일단은 통일을 준비하려면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북한 사람들의 생각이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합쳐진다는 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그게 진짜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게 높은 사람들이 의견도 많을 것 같고, 또 통일이 된다고 해도 북한 사람들을 되게 많이 차별할 것 같고, 통일이 되면 만약 다 같이 어울린다고 해도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통일을 하려면 서로에 대해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이해하려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북한도 좀 더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해야 통일이 됐을 때 서로에게 미안하지 않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돼야 통일이 되면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어울릴 수 있고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통일이 돼야 기본적인 통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 I)

하지만 지금 저도 20대지만 20대의 남북한이 이렇게 만났을 때 무엇을 주제로 대화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너무나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껍들이 우리 나이대보다 후세들에게는 좀 더 다가오는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식 세대 때는 좀 더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G)

또한 통일을 향한 단계적, 영역별 고려가 가능하다면 어떤 대안들이 존재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탈북 청년들은 장기적 지평에서 좀 더 빠른 속도, 범위로 나아갈 수 있는 영역, 단계들에 대해 의료, 환경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북한 사회의 개방, 개인

의 성장의 측면도 지적했다. 다른 영역에 비해 남북한이 좀 더 속도를 내고 공유할 수 있는 교집합의 문제로서는 기후변화 환경협력에 대한 양측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었고 초보적인 협력을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의료 분야가 지적되었다. 또한 장기적 한반도 평화·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포용, 존중, 공존의 가치가 지적된 바와 같이 협력의 방법, 경로와 관련해서도 상호 이해, 인정이 강조되었고 미래세대 간의 유의미한 소통의 중요성도 지적되었다.

저는 일단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류 공통의 가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데 북한은 환경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보전 같은 것도 같이 협력을 하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 복원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산림이 잘 복원돼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피해도 많이 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을 빨리 복원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같이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식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옛날에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북한도 최근에는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거는 또 북한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지 않을까. 북한 사람들이 없는 속에서 어떤 행복한 문화를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서로 협력을 하면서 교류하면서 배우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가자 C)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환경. 환경을 생각했을 때 북한보다 남한이 환경을 더 많이 침해하지 않나. 일회용품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안 하는. 많은 그런 거를 대응하려고 하잖아요. 특히나 식료품, 식품에서도 북한은 나무 때고 탄 때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친환경적으로. 환경 문제가 제일 그럴 것 같습니다. (참가자 H)

저희가 의료 그런 것도 도울 수 있잖아요. 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빨리 통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미래 세대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나 매스컴에 노출된 북한 지도부라든가 핵

이라든가 이런 데만 노출이 돼 있어서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데 북한이 일상이라든가 그들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교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디 호텔에 가서 하룻밤 먹고 자고 사진 찍고 오는 거는 교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대화가 통하는 게 교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가자 C)

3 탈북 청년들의 정책적 참여를 통한 한반도 미래전략 구성의 의의

상기한 분석으로부터 탈북 청년들의 미래대화를 통한 한반도 미래전략 구성과 관련해 본 연구는 크게 다음의 정책적 의의를 지적한다.

첫째, 한국사회가 기존 성장사회 구도에서 벗어나 성숙사회로 변화하는 선호미래는 특히 한국사회에서 소수적 위치성을 갖는 탈북 청년들의 선호와 긴밀히 연관될 뿐 아니라 호혜적인 남북관계의 기본적 전제조건으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이들의 정책적 의견에 주목해야 한다. 탈북 청년들과의 미래 대화로부터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소수적' 위치성을 갖는 탈북 청년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 공존, 통합 문제가 곧 미래 한반도의 통합가능성의 시금석이 된다는 이들의 인식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책적 입장에 따르면, 국내입국 누적 수 3만여 명의 탈북민 인구가 구조적, 문화적 차별과 배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정, 정착할 수 없음,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의 어려움의 상태를 지속하는 한 비대칭적인 남북한 두 정치단위의 물리적 통합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명하다. 따라서 탈북 청년들의 미래 대화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합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서 한국사회 내부의 선호미래에 대한 점검과 그 민주주의적 반영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구체적으로 탈북 청년들의 미래 대화는 이들이 통일에 대한 강한 감정적 열망을 갖고 있는 동시에 그들 스스로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통합불가능성의 현실과 직결해 탈북 청년들이 미래 한반도의 통합에 대한 근본적 우려, 부정적 시각을 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탈북 청년, 나아가 탈북민들의 미래 통합에 대한 부정적 시나리오, 불신이 통

일에 대한 정서적 기대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심화될 때, 이를 우리가 한반도 통합에 대한 수요와 관련한 중요한 동력이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시점에 들어서는 신호라고 분석할 수 있다. 중단기적으로 한국사회 내 지속적인 타자화의 구조에서 탈북 청년들이 남북관계에서 통합보다 분립, 병립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선호가 통합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인 열망을 압도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예상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현재 한국사회 청년층의 무관심과 함께 미래세대의 한반도 통합에 대한 지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탈북 청년들은 이주의 과정을 거친 그들의 생애사적 과정을 통해 북한 청년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는 이질성을 갖지만 이산가족, 고향방문 등 강한 개인적 열망의 측면에서 통합에 대한 찬성이 높게 나타나는 인구였던 만큼 이들의 통합에 대한 부정적 견해, 우려의 시각은 향후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탈북 청년들의 미래 대화는 이들이 고려하는 한반도 양측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하고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조우하는 미래 전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계적, 영역적 고려가 필요한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탈북 청년들의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한 남북한의 통합에 대한 우려, 사회적 포용의 증대, 인권적 관점의 심화 등 통합의 전제조건에 대한 요구는 우선 한반도 미래전략에서 기본적인 시작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준다. 다음으로 남북한이 보다 먼저,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고려와 관련해, 탈북 청년들의 시각은 정책적으로 유용하다. 이번 미래 대화에서 보다 통합의 속도, 범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단계, 영역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지지는 못했으나, 탈북 청년들의 관련 의견으로부터 한반도의 점진적, 장기적 통합 전망에서 한국 내부의 예상, 기대에만 근거를 두는 것보다 보다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 가까운 입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향후 탈북 청년들의 미래 대화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통합의 영역별 시나리오에 대한 단계적 순서, 경로, 속도 및 범위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제3국 출생 청년을 포함시킴으로써 최근 변화하는 국내 탈북민 인구 지형을 반영하는 동시에 초국경적 이주의 맥락을 갖는 탈북민 커뮤니티 자체의 현실에 바탕해 복수의 경계선, 정체성을 고려하는 미래 대화의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제3국 출생 청년은 탈북민 인구집단이 탈냉전 이후 장기적 시간대에서 어떻게 확산, 변화되어왔는지 잘 드러내는 사례로, 오랜 기간 중국에 체류한 탈북민들이 낳은 자녀들을 의미하며 최근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정착한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 국내입국 탈북민 수가 감소하는 한편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입국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최근의 국내입국 탈북민 인구지형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제3국 출생 청년들을 포함해 다양한 탈북 청년들의 정책적 입장을 청취하는 것은 보다 보편적 이주, 난민의 맥락에서 탈북민들의 현실적 요구, 딜레마를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제3국 출생 청년을 포괄해 탈북 청년들이 경험한 다양한 월경, 초경적 이동의 네트워크 속에서 그들에 대한 맥락화된 이해를 높이는 것은 한반도 미래전략에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다양성, 이질성, 변화하는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별적 특수성을 풍부하게 이해하는 한편 이들이 한국사회의 적응, 통합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냉전적 문화, 배제적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미래의 통합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제6장

선호미래 실현성을 높이는 과학기술

제1절 선호미래 실현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제2절 선호미래, 정보통신기술로 접근하다

제 1 절

선호미래 실현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제6장은 선호미래에 대한 논의에서 자칫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미래실현의 조건을 과학기술 관점에서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1절에서는 선호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제2절에서는 앞장에서 제시된 ‘이머징 시티즌’의 선호미래 중에서 소수약자와 미래세대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6개 시·도 지역사회 주민의 필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과학기술은 국가 안보 또는 경쟁력 향상 등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이에 국가적 목표는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의 핵심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과거 산업화 시대에 국가 R&D의 핵심 가치는 경제성장이었다.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경제성장이 열어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로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127조 1항(1987.10.29. 전부개정)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 과학기술은 국민의 행복보다는 기업과 국가의 외형적 발전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개인보다 조직·국가를,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환경보다는 경제이익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낮은 행복 지수와 높은 자살률, 양극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축적되었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초래한 팬데믹과 전례 없는 폭염·가뭄·홍수·산불 등 이상기후, 여기에 겹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식량안보 위기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였다.

이에 개인의 삶의 질, 안전과 건강, 공정성, 환경보존과 같은 질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박성원 외, 2021).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의 역할은 ‘경제성장’에서 ‘국가난제 해결’과 ‘국민·사회문제 해결’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2001년 1월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2010.2.4. 전문개정)는 ‘국가경쟁력

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과학기술 진흥의 목적을 확장하였다. 관련하여 정부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삶의 질과 행복을 목적으로 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민생활(사회) 문제해결 R&D 예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벤트성 문제해결 연구개발 사업이 이루어져 연구 성과의 실질적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9;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2.6.23.).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장에서의 사회문제해결 R&D 적용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사회적 수요가 높은 문제해결 목표의 설정, ▲최종수혜자(국민) 및 현장수요자의 참여, ▲문제현장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책수단 또는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4.16.).

과학기술로 국민이 바라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표설정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문제해결/니즈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현장 실증, 시장 공급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법·제도·정책적 근거 없이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더라도 글로벌 기후변화, 고령화, 양극화 등 최근 대두되는 국가적 난제들은 기술적 수단만으로 해결하는데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선호미래 실현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과학기술-인문사회 영역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1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사회변화의 동인이면서 인구, 에너지, 경제, 환경, 문화, 지배구조 등 다른 사회변화 동인 자체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백신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류의 사망률을 낮추고 수명을 늘려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증기기관 발명과 산업혁명 이후 증가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면서 국제사회는 파리기후협정(2015)을 체결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탄소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디지털 시대를 열어 경영, 금융, 커머스, 게임, 소셜 네트워킹, 교통, 여행·숙박, 미디어 콘텐츠 등 경제·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꾸

어 놓았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은 산업구조, 경제활동 방식, 라이프스타일과 직업군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더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상담·민원 대응 업무, 뉴스 기사 작성, 면접 평가, 법률 자문, 학습 지원, 질병 진단, 작물 재배, 운전하기, 요리하기, 음식서빙, 그림 그리기, 작곡하기, 소설 쓰기……. 이 작업들은 현재 로봇과 AI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분야다.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Deepmind)가 개발한 AI ‘알파고’가 2016년 이세돌 바둑 9단과의 세기의 대결에서 이긴 후로, AI는 그야말로 사회·경제 변화의 중심에 놓였다. 그동안 사람들이 컴퓨터가 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전문가와 창작의 영역에도 AI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처럼 AI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영상·이미지 인식, 예측, 판단 등 핵심기술의 활용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분야의 핵심기술은 AI가 주변사물과 사람, 교통체계를 인식하고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필요한 인식·판단·제어 기술이다. 이러한 핵심기술의 활용 범위는 자가용 시장을 넘어 화물·유통 차량, 재고 정리 로봇, 음식 서빙·배달 로봇과 더불어 무인항공·선박 시장까지 확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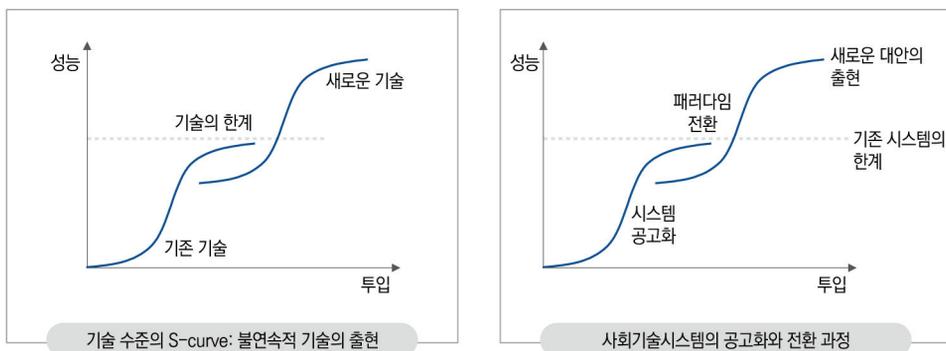
한편, 기술은 법·제도적 기반 없이는 일정 수준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 실생활에 자율주행 기술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동을 자동화하는 기술이 수반하는 다양한 변화를 사회가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사람이 아닌 AI를 운전자로 정의해야 하고,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의 문제, AI가 사고 회피를 위해 인명피해의 경중을 판단하는 상황에 대한 윤리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제도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이 잘 갖추어지고 국민의 수용이 이루어질 때 기술의 확산과 실효성이 극대화된다. 자율주행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저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공익적 활용 가치가 있어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7.27.)되어 시행(2022.1.28.)되고 있다.

미국의 기술사학자 토머스 휴즈는 이와 같이 기술과 사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사회기술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으로 설명하였다(Hughes, 1987). 사회기술시스템 이론은 기술과 사회가 다른 한 편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기술이 사회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사회가 기술발전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기술시스

템은 물리적·가상적 인공물, 기업 및 정부 등의 조직, 과학기반, 법·제도, 자연자원 등으로 구성되며 각 요소는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시스템 전체의 목표에 기여한다.

사회기술시스템은 성장 과정에서 마주한 문제가 해결되며 공고화되기도 하고, 문제해결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시스템과의 경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공고화된 사회기술시스템의 경우 산업의 표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오랜 기간 공고화된 시스템이 모멘텀(momentum)을 가지게 되어 관성을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성은 주로 사회기술시스템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형성된다. 하지만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는 새로운 기술적·법적 기반과 이해관계자, 문제해결 방식이 출현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과정은 ‘기술수준의 S곡선’으로 표현되는 불연속적 혁신과 유사해 보인다(그림 6-1). 기술 출현 초기에는 기초지식이 부족하여 많은 투자를 해도 성능이 느리게 진보되지만, 어느 순간 기술적 이해도가 쌓이면서 성능이 급속도로 발전한다. 이후 기술이 가진 한계점에 도달하면 투자를 더 늘리더라도 성능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는 종종 불연속적 혁신(discontinuous innovation)이 출현하여 기존 기술을 진부하게 만든다. 불연속적 혁신이란 기존 기술과 다른 지식 기반에서 발전한 새로운 기술이 시장(수요자)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기존 기술이 선형적으로(linearly) 발전된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절되고, 불연속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출처: (좌) Schilling, M. A. (2012). 및 (우) 저자 작성

[그림 6-1] 불연속적 혁신과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지금 한국사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기후변화 속에서, 그리고 심화되는 양극화와 고령화, 인구감소 등 사회구조변화 속에서 기존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팬데믹·전쟁이 초래한 경제위기에 취약계층이 더 크게 노출되고, 석유 기반으로 운영되는 산업·경제구조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로 마음이 아픈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그간 외형적 성장과 효율성 중심으로 발전해온 사회기술시스템이 앞으로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2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에서 보는 선호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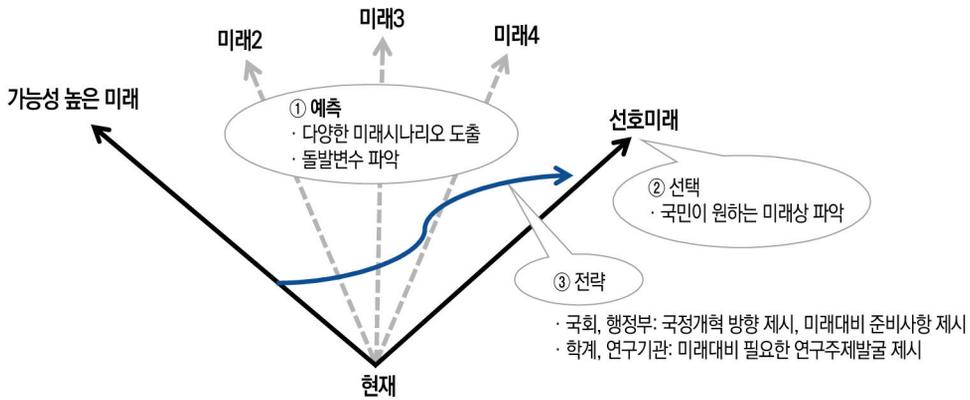
미래학에서는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일관성과 논리성을 갖추어 제시하는 시나리오 기법을 자주 활용한다. 이 중 Ramirez와 Wilkinson(2014)이 제시한 ‘Both and’ 프레임은 미래와 현재, 과거를 모두 그릴 수 있어 사회기술시스템의 미래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좋은 도구이다([그림 6-2]). 아래 그림은 ‘both and’ 프레임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문제해결력과 사회 수용성을 기준으로 4가지 과거, 현재,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유형은 기술력도 부족하고 기술 확산과정에서 사회적 수용성도 낮은 상태(과거),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현재), 사회는 원하지만 아직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상태(현재), 과학기술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사회적 수용도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미래)로 나누었다.



출처: 박성원 외(2019), 일부 수정하여 작성

[그림 6-2]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의 ‘Both and’ 프레임

‘Both and’ 프레임은 특정한 사회기술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요인을 진단하기에 유용한 도구이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까지 고려하려다 보니 미래를 한 가지 모습으로만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다소 아쉽다. 현재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6-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려면 가능한 미래와 선호미래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에서 가치를 뺏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미래로 시야를 확장하여 미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출처: 김유빈 외(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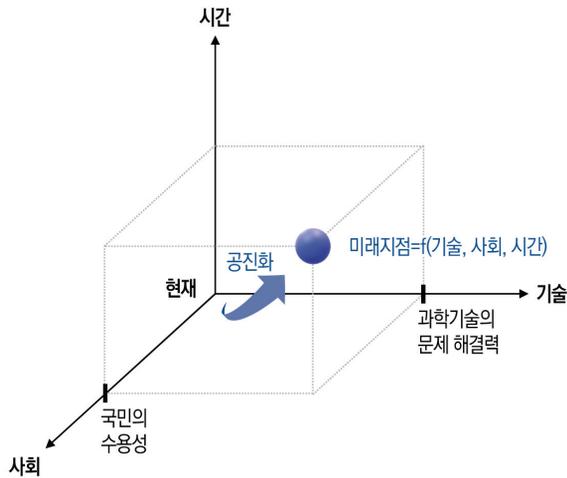
[그림 6-3]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연구 프레임

이에 따라 시간의 개념을 하나의 축으로 더하여 ‘both and’ 프레임의 1사분면을 중심으로 그래프를 3차원으로 바꾸어 표현해보았다([그림 6-4]). 3차원 공간의 좌표에서 사회, 기술, 시간 축이 모두 0인 꼭짓점은 현재를 의미하며, 3차원 미래 공간은 사회, 기술, 시간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모든 미래, 파란 원으로 표시한 좌표는 현재에서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coevolution)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의 어떤 지점이다.

$$\text{미래지점} = f(\text{사회, 기술, 시간})$$

[그림 6-4]에서 기술과 사회는 쌍방향으로 얽히면서 공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일례로, 지난 2년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지침은 메타버스 기술이 사

회·경제·문화 활동에 활발히 접목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사회 변화 → 기술 수요 증가). 이에 따라 메타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각국과 기업들은 메타버스 기술의 근간이 되는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²²⁾ 이로 인해 XR 디바이스 및 몰입형 콘텐츠·상호작용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연·패션·유통·예술 산업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확장되는 추세이다(기술발전 → 수요 증가 및 산업 변화). 메타버스 기술이 제공하는 자유로운 가상공간 표현과 콘텐츠 제작의 가능성은 문화 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낳고 있다. 메타버스의 영향력이 더 넓은 범위의 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투자와 수요가 늘어나고 기술발전은 가속화될 것이다.



[그림 6-4] 'Both and' 프레임의 3차원 확장에 따른 3차원 미래공간

3 백캐스팅을 통한 선호미래 실현

백캐스팅(backcasting)은 선호하는 미래비전을 먼저 설정한 후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서, 사회기술시스템 수준에서의 전환과 기획·관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Quist, 2008; 성지은 외, 2012). 백캐스팅은 현재 상태에서의 조건대로라

22) 기술시장 규모는 해당 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그룹인 pwc는 2019년 메타버스 시장이 455억 달러(65조 원)라고 발표하였고,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은 2022년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618억 달러(88조 원) 규모라고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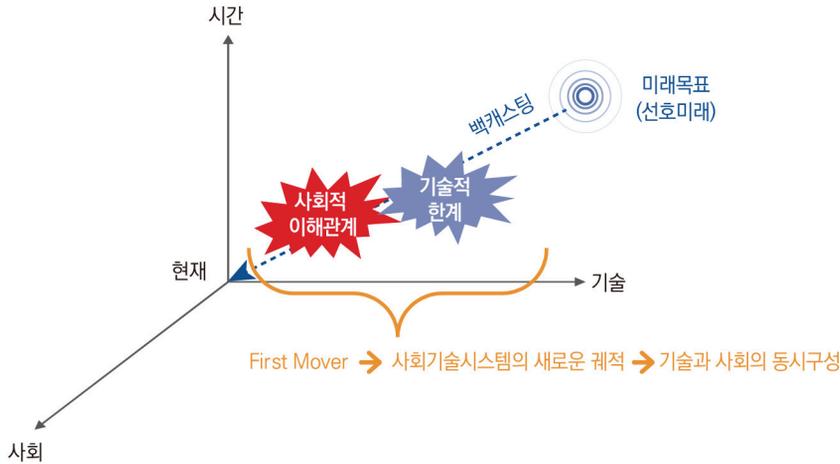
면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조망하는 포캐스팅(forecasting)과 대비되는 접근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포캐스팅이 현재에서 미래를 조망한다면, 백캐스팅은 미래에서 현재를 거꾸로 바라보고 목표한 미래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정책 수단을 구성해 나가는 방식이다.

최근 국가 R&D 부문은 선도자(first mover) 전략을 수립하는 관점에서 백캐스팅 방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2). 선진국의 산업기술을 빠르게 따라잡는 기존 추격자 전략의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먼저 미래를 상상하고 이를 실현하는 선구자적 능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AI 시장이 ICT 산업을 넘어 교통, 도시, 의료, 국방, 농업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어 선도자 전략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미세 먼지, 팬데믹, 기후변화 등 예상하지 못한 변화나 국가적 난제에 대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함에 따라 포캐스팅 방식만으로는 장기적 R&D 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현대 경영학의 거장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가 남긴 유명한 말이다. 이는 다가올 미래를 수동적으로 관망하기보다는 원하는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려는 능동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미래를 상상하고 이를 실현하는 선도자는 다른 경쟁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세상을 바꿔버리기도 한다.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Edison)이 그랬고, 기업가 스티브 잡스(Steve Jobs)도 그러하였다. 급격한 기술발전, 시장의 빠른 변화, 정치적 불확실성, 예측하지 못한 대형 위기(X-event) 등으로 미래는 예측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바라는 미래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다가올 미래를 그저 관망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모방을 넘어 우리만의 새로운 궤적을 개척해나가는 선도자 전략은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중요하다. 사회문제에 대한 기술적 솔루션은 지식, 기법, 스킬, 도구, 기계, 소재 등 공학적 요인이 그 솔루션이 적용되는 조직·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와 믿음, 행정적·정책적·산업구조적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유사한 문제해결 사례에 대한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문제해결 효과를 가지려면 우리의 가치체계와 사회구조에 맞는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 결국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가 창조해야 하며, 그 과정은 문제가 해결된 미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백캐스팅이 수반되어야 한다(그림 6-5).



[그림 6-5]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의 백캐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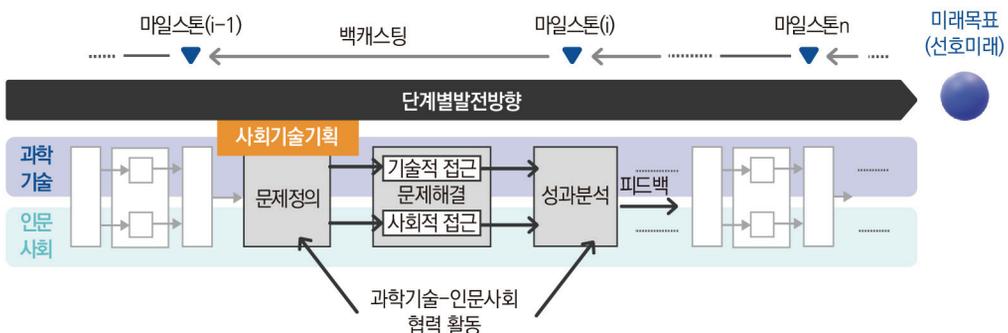
[그림 6-5]와 같이 백캐스팅을 통해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의 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술과 사회의 동시구성(co-production) 능력이 필요하다(송위진, 2013). 또한 백캐스팅을 통해 도입하는 새로운 기술과 정책들이 사회기술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사전에 다방면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사회기술시스템의 관성을 벗어나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 이해관계의 충돌과 저항이 발생하거나,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실현에 활용되는 기술적·정책적 수단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예측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기술시스템의 변화와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한다면 미래비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6]은 백캐스팅을 바탕으로 미래비전에 도달하기 위한 사회기술로드맵(society-technology roadmap)의 개념적 프레임워크이다. 로드맵이란 목적지를 찾아가는 경로와 의도한 경로대로 잘 가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마일스톤(milestone)을

표시한 약도이다(조남재, 2014). 일반적으로 로드맵은 기업, 국가가 중장기적인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을 안내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마일스톤은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미래비전에 도달하기까지 복수의 마일스톤이 존재할 수 있다.

사회기술로드맵은 선호미래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확보와 더불어 입법·정책 등 사회적 접근방법을 동시에 고려하여 작성하는 로드맵이다. 여기에서 하나의 마일스톤 구간은 ‘문제정의-문제해결-성과분석-피드백’의 프로세스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영역이 모두 포함된다.

우선 문제정의 단계에서는 선호미래와 현재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위해 해결되거나 충족되어야 할 기술적, 사회적 조건을 목표로 정의하는 사회기술기획 활동이 수행된다. 사회기술기획은 미래사회 비전과 기술 및 법·제도적 수단을 같이 연계한다는 점에서 기술획득 중심의 기술기획과 차별화된다. 문제해결 단계에서는 선호미래와 현재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과 관련된 R&D를 수행하고, 법·제도적 장치 등 사회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정책 연구·수립 및 입법 과정이 이루어진다. 문제해결 활동 이후 성과분석 단계에서는 기술적, 사회적 접근방법으로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검토한다. 3차원 미래 공간에서 미래비전과 실제 도달한 지점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다음 마일스톤을 위한 문제정의에 이를 반영하는 피드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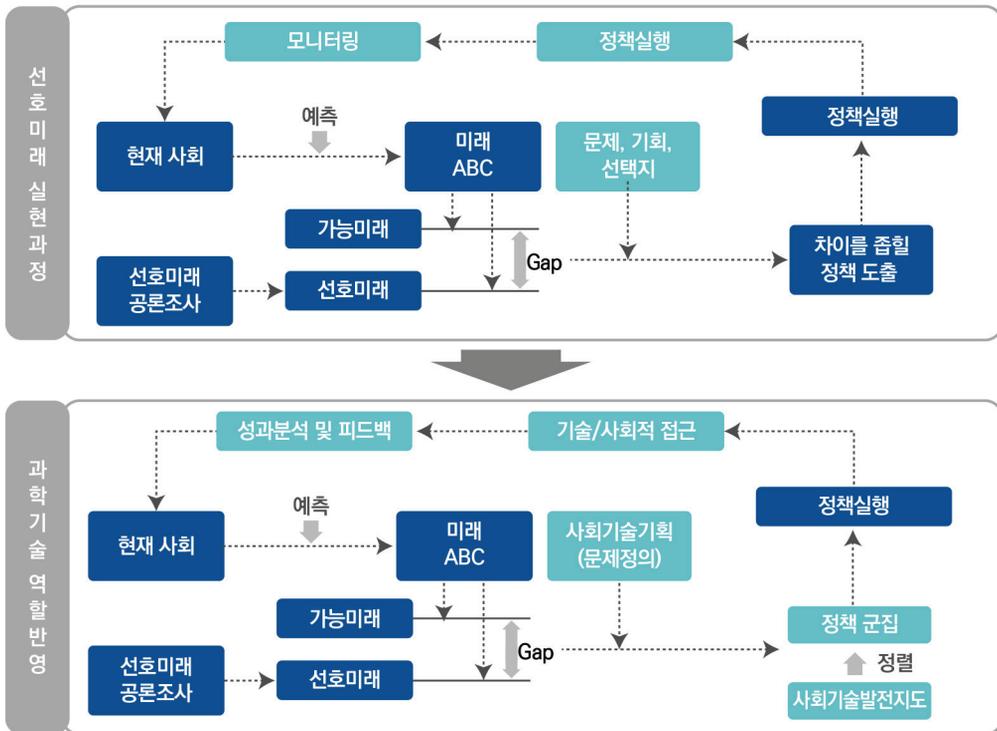
[그림 6-6] 사회기술로드맵(society-technology roadmap)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제정의와 성과분석 단계에서 과학기술 영역과 인문사회 영역이 협력하고 목표·성과달성도를 공유하는 것이다. 마일스톤마다 기술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가 서로 연계되고, 보완하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인문사회 영역에서는 기술적 수단의 문제해결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목표를 추구하고,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사회적 수단의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기술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미래비전에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라면, 한 번의 계획과 실행으로 목표에 도달하기보다는 중간 마일스톤을 추가하는 편이 좋다. 하나의 마일스톤에서 다음 마일스톤으로 넘어갈 때마다 백캐스팅이 반복되어야 하고, 각 구간의 백캐스팅은 최종 목적지인 미래비전을 향해 정렬되어야 한다. 각 마일스톤의 구간 사이의 피드백은 다음 마일스톤과 이전 마일스톤 사이의 분절을 방지하고, 원하는 방향과 실제 진행되는 방향의 차이를 조정하는데 필수적인 활동이다.

[그림 6-7]은 선호미래의 실현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반영한 도식이다. 우선, 가능미래와 선호미래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사회기술기획([그림 6-5] 참조)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기술적, 사회적 정책 군집(policy cluster)²³⁾을 도출한다. 이후 예산과 국민의 요구, 글로벌 동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선택된 정책들이 실행된다. 그리고 기술/사회 문제해결의 달성도 및 해결방식을 평가하여 성공/실패요인을 검토한 후에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마일스톤에 반영한다.

23) 정책군집은 각 부문의 개별적인 정책들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일한 비전 하에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가지는 형태로 재배열되거나 전체 목표에 부합하도록 정렬되는 정책통합적 접근을 통해 도출된다(송위진, 2013)



출처: (상) 박성원 외(2019), (하) 박성원 외(2019)에 과학기술 역할 반영

[그림 6-7] 선호미래 실현 과정과 과학기술의 역할

제2절

선호미래, 정보통신기술로 접근하다²⁴⁾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실용적 접근의 필요성

본 절에서는 우리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작은 성공담’의 기반이 되길 바라는 의도를 가지고, 정해진 답은 아니겠지만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접근방법의 예제를 작성하였다. 작은 성공담들이 ‘우리가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즉, 선호미래 실현에 대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과제(task)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belief)으로 정의된다(Bandura, 1977). 이 개념을 본 연구에 빌려오면,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높아진 모습은 2021년 국민 선호미래상인 성숙사회(개인과 지역사회의 자율과 분권으로 발전하는 사회)의 모습과도 닮아있다.

우리 사회의 선호미래 실현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성숙사회 실현을 위한 목표 달성에 ‘성공’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때 목표의 크기보다는 성공 여부가 중요하다. 작은 성공이더라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점차 더 큰 목표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쌓인다. 둘째, 비슷한 성공 경험을 확산하고 공유하는 일이 도움이 된다. 유사한 사례에서 목표 달성에 성공한 것을 보게 되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셋째, 주변의 격려가 도움이 된다. 정치적 아웃사이더, 비주류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인사이더, 주류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은 성숙사회를 위한 작은 성공담을 축적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훌륭한 실용적 도구이다. 큰 자본 없이 간단한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적정기술’의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술은 어느 도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용도가 달라지

24) 본 절은 민수진(Ph.D,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과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기 때문이다. 비싼 자율주행차는 기득권을 위한 기술이 되겠지만, 획기적으로 비용을 낮춘 저렴한 자율주행차는 도서산간의 주민,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이들만 놓고 보면 소수이겠지만, 이들은 누군가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 또는 가까운 지인일 것이다. 이머징 시티즌의 바람(needs)과 어려움(pain)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이유다.

본 절에서는 미래비전 달성을 위해 어떻게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제3장에서 소개한 6개 시·도 지역사회 시민(이하 지역 시민)과의 미래워크숍 주제를 활용하였다. 시·도연구원과 연계한 미래워크숍의 6개 주제는 고령장애인, 귀농귀촌 청년, 이주민 여성, 지역공연예술인, 제주해녀, DMZ 접경지역 주민 등 소수약자와 미래 세대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6개의 주제에는 기후변화,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과 같은 메가트렌드가 스며들어 있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 청년, 지역 공연예술인, DMZ 접경지역 주민, 이주민 여성, 제주해녀, 고령장애인 등 6개 그룹의 미래워크숍 주제로부터 각각 다음과 같은 6개의 구체적인 미래비전을 정하였다: ▲농업 진입장벽 해소, ▲디지털 창작·발표 활성화, ▲생태보전지역 탄소흡수 기여 인정, ▲실생활 문화수출 활성화, ▲제주해녀문화 보존, ▲내 집에서 늙어가기.

아래에서는 지역 시민이 처한 환경과 니즈(needs)에 집중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다만 본 절은 미래워크숍이 완료되기 전에 작성되어 구체적인 인터뷰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 내용들은 상기 6개 미래비전과 관련하여 지역 시민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적(PEST,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echnology) 환경을 기반으로 니즈와 이에 대한 접근방법을 도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시민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에 기반을 두고 (1) 원하는 것(gains)과 (2) 어려움을 겪는 점(pains)으로 니즈를 정의하였다(Needs). 그리고 이러한 니즈와 관련된 정책, 경제, 기술적 환경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을 도출하였다(Approach). 다만 과학기술은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R&R(Role and responsibility)과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기술(ICT)로 한정하였다.

2 귀농귀촌 청년: 농업 진입장벽 해소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활동은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인구와 경제 유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귀농한 청년들이 농촌 생활에서 마주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 인프라 문제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귀농 직후 부족한 경험, 정보, 기술로 생기는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면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물론 청년 창업농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 니즈(Needs)

(1) 사회문화적 배경

농촌사회가 늙어가고 있다. 이미 전체 농가의 60%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엄진영 외, 2020),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농촌지역(군)은 2020년 22개에서 2022년 44개로 2배 증가했다(이상호, 2022). 통계청의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의 절반 가까이(46.8%)가 65세 이상으로 전국 평균(17.1%)보다 노인이 약 3배 많다. 농가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7.2세로 매우 높고, 농가인구는 221.5만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23.9% 감소했다.

한편, 팬데믹을 지나면서 2021년 귀농·귀촌 인구는 51.5만 명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이 중 30대 이하 귀농·귀촌 인구는 23.6만 명(45.8%)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었다.

하지만 귀농인구와 귀촌인구를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면 젊은 세대의 이동은 귀촌 인구가 중심임을 알 수 있다. 2021년 전체 귀농·귀촌인구 중 귀촌인구가 49.6만 명(96.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귀농인구는 2만 명 수준(3.8%)으로 그 비중이 매우 낮다. 그리고 각각의 연령별 특성을 비교해보면, 귀농인의 경우 30대 이하 인구는 10.5%에 불과하지만, 귀촌인의 경우 30대 이하가 46.8%나 차지하고 있다. 귀농인구에서는 50대(33.0%)와 60대(36.0%)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귀촌인구의 연령 구성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지역 분포 특성도 다르다. 귀농인구 분포가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이지만, 귀촌인구는 경기도에 가장 많다. 결국 도시에 살던 젊

은 층의 경기도 농촌지역(읍/면) 이주는 늘어났지만, 농업인으로 전향하는 젊은 인구는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된다.

(2) 원하는 점

청년층이 귀농한 이유는 자연환경(16.6%)보다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26.4%)을 보고 귀농하거나, 가업의 승계(26.2%)와 같이 직업·경제적 이유로 귀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장년층이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로 귀농하는 경향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과도한 경쟁과 높은 청년 실업률, 도시에서의 높은 물가와 주거 비용으로 피로가 누적된 청년층에게 귀농이 새로운 선택지가 된 셈이다.

(3)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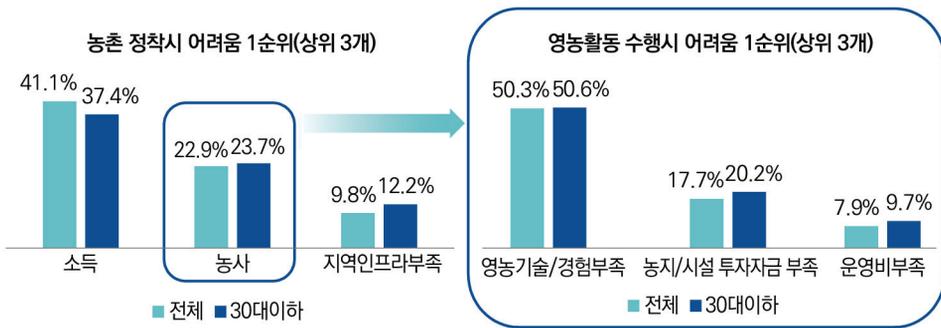
젊은 세대의 농가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40대 이하 농가는 2020년 7.4천 가구(7.2%)에서 2021년 5.8천 가구(5.6%)로 감소하였다.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농촌에 왔다가도 다시 도시로 돌아가거나, 기존의 농촌 청년 인구가 도시로 유출된다면 농촌 인구를 유지하기 어렵다. 어떤 점이 이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걸까.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귀농·귀촌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농촌에 정착하는 귀농 청년들이 경험하는 주된 어려움은 소득(37.4%), 농사(23.7%), 지역인프라 부족(12.2%) 순이다([그림 6-8] 참조). 우선 소득과 관련하여, 귀농인들은 특히 농촌 정착 초기에 소득하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첫해의 평균 소득은 2,622만원으로, 이는 귀농 직전과 비교하면 30% 감소한 수준이라고 한다. 심지어 이 중 농업 소득은 768만원으로 귀농 첫해 소득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겸업 활동을 통해 얻는 실정이다. 또한 농촌 정착 시 청년 가구는 자금 부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 조사에 따르면 귀농·귀촌 정착 자금은 평균 1억 7703만원(2016년 기준)이며 젊을수록 보유한 정착 자금의 규모가 작고 농업 투자가 저조한 경향이 있었다(김정섭·이정해, 2017).

둘째로, 귀농 청년은 농사와 관련된 기술/경험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영농 지식과 노하우가 없어 초기에 많은 귀농인이 시행착오와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는 농지와 시설 투자에 대한 자금 부족과 맞물려 청년 귀농 가구에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귀농인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토양의 성분과 미세 기후가 달라서 교재에 나온 재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마지막으로 교통, 병원, 문화시설, 교육 인프라 등 농촌에서 부족한 지역 인프라는 청년 가구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이다. 청년들이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 청년의 귀농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30대 이하 귀농 가구에서 지역 인프라 부족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비중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편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1.12.)

[그림 6-8] 귀농 청년가구가 응답한 정착/영농활동에서 어려운 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점도 문제다.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귀농 지원정책에 대해 아쉬운 점으로 지원자격/절차가 까다롭고(32.3%),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움(27.5%)을 꼽았다. 이 외에도, 정착 지역의 토양·수질·기후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작물의 종류와 예상 소득 정보, 적절한 가격의 부동산과 농지 가격 정보, 농산물 판로 정보 등 알아야 할 건 많지만, 귀농 초기에는 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 농사에 필요한 많은 정보가 오랜 기간의 경험과 노하우 등 개인이 소유한 무형의 지식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나. 접근방법(Approach)

(1) 정치적 환경

정부는 농촌 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농업 인력부족과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을 지속 추진해왔다. 관련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40세 미만의 창업농을 선발하여 정착지원금, 농지,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한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귀촌 준비·정착 지원, 귀농소득 및 귀촌생활 만족도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한다. 이 외에도,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촌의 거점지역에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거주하는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2) 경제적 환경

전례 없는 폭염, 산불, 홍수 등 이상기후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면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악의 가뭄을 맞아 곡물 수확량이 지난 5년 평균과 비교하여 16% 감소했다. 특히 농지가 많은 프랑스에서는 가뭄으로 옥수수 수확량이 19% 감소하였다. 인도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식량확보에 큰 타격을 받아 밀 수출을 금지했다. 이 가운데 주요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 간의 전쟁까지 겹치면서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2%, 식량 전체 자급률은 45.8%에 불과하여 (2020년 기준), 전쟁·기후변화등 식량안보 위협에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3) 기술적 환경

국내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 및 자원 등 농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관련하여 최근 농업 분야에서는 사람의 기술과 노하우를 자동화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일기예보와 식물의 성장 상태, 재배환경을 고려해 알아서 식물에게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다. 스마트팜 데이터와 영상을 통해 식물의 질병과 재배환경을 진단하고 농장주가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성인식 인공지능도 나왔다.

(4) ICT 접근방법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고려하여, 농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ICT 접근방법으로서 '농촌 복합 플랫폼커뮤니티(Platformunity)'의 구축을 제안한다. 플랫폼커뮤니티는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합성하여 만들었다. 농촌 복합 플랫폼커뮤니티는 농업활동에 필요한 유·무형 자산 공유플랫폼임과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농촌 복합 플랫폼커뮤니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과 인프라가 부족한 귀농귀촌 청년을 위한 저비용의 모듈형 스마트팜을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임대한다.

둘째, 기존의 실내 위주로만 상용화되던 범위를 넘어 실외 농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장비 공유 시스템을 도입한다.

셋째, 소비자가 직접 오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작물의 상태를 현실처럼 확인할 수 있는 오감(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상호작용 기반 가상공간 장터를 마련하여 판로 개척에 도움을 준다.

넷째, 판매된 작물을 자동으로 배송해주는 자율주행 농산품 배송로봇 공유 시스템을 가상공간 장터와 연계한다.

다섯째,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모듈형 문화생활 공간을 제공한다. 모듈형 문화생활 공간은 문화예술 서비스와 여가활동은 물론 교육, 의료 등 생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사회적 실재감(presence)을 느끼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상 교육 시스템, 거점 병원 의사로부터 진료와 처방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 시스템, 언제 어디서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공연예술 시스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섯째, 모듈형 문화생활 공간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 메타버스 커뮤니티를 구축한다. 지역사회 구성원은 메타버스 커뮤니티를 통해 각종 모임을 주최하거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및 친구와 교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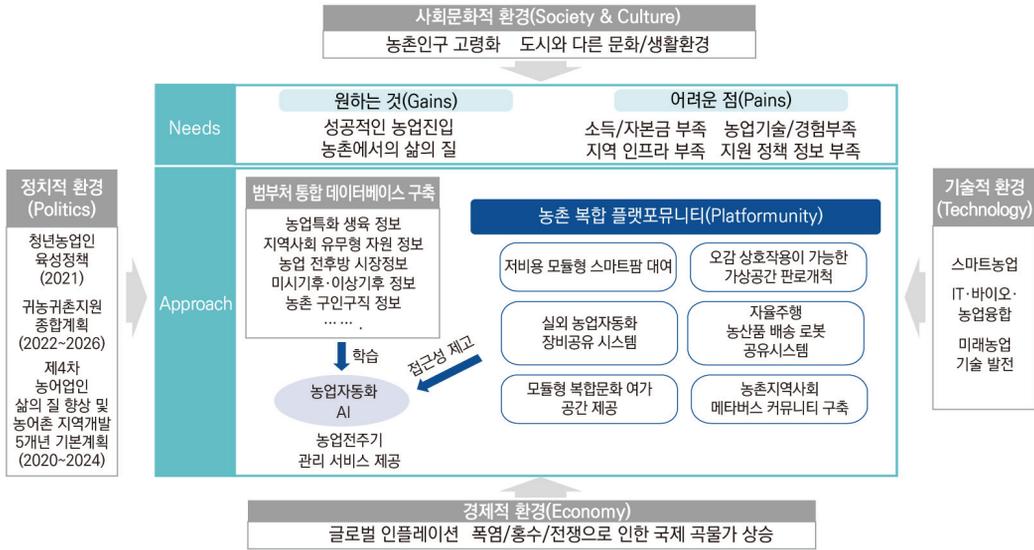
나아가, 플랫폼커뮤니티와 ‘농업자동화 AI’를 연계하여 농업 활동의 전주기를 지원한다. 농업자동화 AI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작물별로 적절한 온도, 습도, 바람 등의 생육 정보, 유·무형의 지역사회 자원 정보, 농업의 전·후방 산업의 업체 및 시장 가격 정보, 농촌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 정착 지역의 미시기후/이상기후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출처: ETRI 공식 유튜브, ETRI가 만드는 2035 미래상

[그림 6-9] 농업자동화 AI 상상도

위에서 사회문화, 정치, 경제, 기술적 환경을 기반으로 도출한 귀농귀촌 청년의 니즈와 농업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ICT 접근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6-10] 농업 진입장벽 해소와 관련된 PEST 환경, 니즈 및 ICT 접근방법

3 지역공연예술인: 디지털 창작·발표 활성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콘텐츠 소비량도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공연예술기관 및 단체의 휴업·폐업이 잇따르는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활동 기회가 크게 제한되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온라인 전시와 발표를 통해 코로나 상황에 대응해왔으나, 온라인 중계에서는 공연예술의 핵심인 현장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에 한계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관객을 온라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황중계보다는 오프라인 공연 현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객이 몰입할 수 있는 방식의 디지털 콘텐츠 창작과 발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공연예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발표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가. 니즈(Needs)

(1) 사회문화적 배경

코로나 이후 확산된 비대면 문화는 사람들이 일하고, 만나고, 노는 방식을 크게 바꾸었다.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보고, 친구들과 메타버스에서 약속을 잡아 만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다. 지난 3년간 우리가 경험하였던 일상의 변화는 코로나 이후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적응된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비대면이 편리함과 효용을 주는 부분에서 특히 그럴 것이다.

비대면 문화는 콘텐츠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인 예가 메타버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모이기 힘든 시기에 가상공간은 전시회, 팬사인회, 브랜드홍보 마케팅, 선거 유세와 더불어 문화예술 발표/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 등 OTT(Over-the-top) 서비스 확산 추세와 결합되면서 사람들의 콘텐츠 소비 행태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은 자본과 인력을 가진 대형 제작사/방송사에서 개인 크리에이터로, 대중적인 콘텐츠에서 개인의 관심사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로 시장이 분산되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와 디지털 콘텐츠 확산은 공연예술계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횟수는 2021년에 1.4회로 전년 대비 1.7회 감소했지만, 매체를 이용한 간접관람 횟수는 32.4회로 전년도와 비교해 6.8회 증가하였다. 또한 팬데믹 이후 진행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7%)가 '공연 실황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경우 유료로 결제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2) 원하는 점

공연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 정책과 더불어 디지털 창작·발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문화 향유 및 여가활동의 중심이 비대면으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예술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연예술인은 보다 많은 발표의 기회·공간, 창작 인프라가 필요하다. 온라인에서는 공연예술을 발표/전시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공연예술인들이 활동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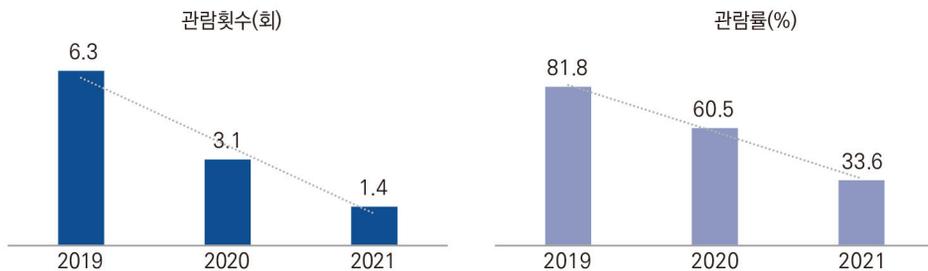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전염병 확산이나 지역적 제한이 없으므로 오프라인보다 잠재적으로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다.

(3) 어려운 점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공연예술 기관/단체는 지난 3년간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전국 문화예술행사 연평균 관람률은 2019년 6.3회(81.8%)에서 2020년 3.1회(60.5%)로, 2021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1.4회(33.6%)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문화예술공간 이용률 역시 2019년 69.2%에서 2020년 48.9%, 2021년 36.3%로 떨어져 반토막이 났다.

예술경영지원센터(2021)의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계 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공연예술기관 중 45.8%가 2020년에 휴업/폐업을 경험하였고, 공연 횟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4%, 코로나로 인해 공연 중단을 경험한 비율은 44.9%, 공연 취소를 경험한 비율을 77.6%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조사에 응답한 기관/단체 중 코로나19로 인력조정을 한 공연시설은 34.9%, 공연단체는 35.1%였으며 매출액이 전년 대비 70~100% 수준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38.5%나 되었고, 50~70% 수준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율도 23%에 이른다.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경영상 어려움 1순위는 운영비 36.7%, 작품제작비 15.9%, 인건비 15.1%, 임대료 14.5% 순으로 나타나 모두 재정적 어려움과 관련되었다.



출처: 통계청(20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그림 6-11] 코로나19 발발 이후 문화예술 직접 관람 횟수 및 관람률 감소

이에 공연예술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동안 창작과 발표를 위한 대안적 활동 공간으로 온라인을 활용하였다. 위에 설명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 ‘공연 실황 녹화물 스트리밍’을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1%였다. 이어 ‘온라인 생중계’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1%, ‘웹공연 등 숏폼(short form) 콘텐츠 제작’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4%였다(중복응답).

하지만 아직은 다양한 가상공간에서 작품 전시 및 발표가 활성화될만한 공연예술 친화적 플랫폼 및 디지털 제작도구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자본과 인력 규모가 영세한 지역 공연예술인에게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발표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용적 도구가 필요하다.

나. 접근방법(Approach)

(1) 정치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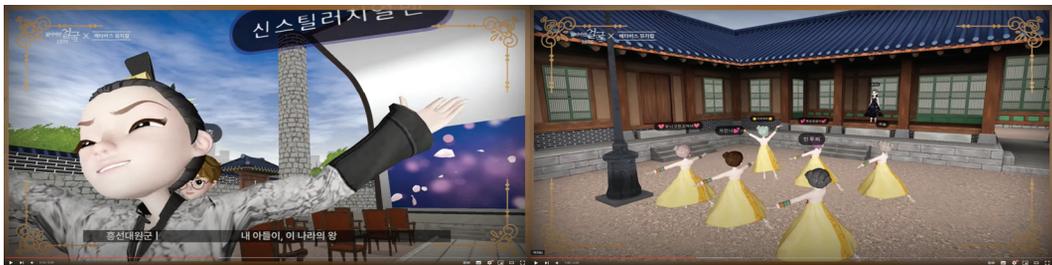
이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2020년부터 공연예술 분야의 팬데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공연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긴급 일자리 지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 공연 실황 생중계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손수나·유지연, 2022). 그러나 문화예술 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순수 공연예술인의 창작/발표 기회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연예술계 디지털 콘텐츠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2022년부터는 메타버스 예술창작 프로젝트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기술을 예술창작과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여 새로운 예술활동을 선보이는 문화예술기관/단체/기업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 경제적 환경

글로벌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K-콘텐츠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가상공간에서 국내 공연예술창작 작품의 글로벌화도 노려볼 수 있다. 이미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는 메타버스가 새로운 수익 창출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글로벌 스타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온라인 콘서트로 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미국에서는 힙합가수 트래비스 스콧(Travis Scott)이 메타버스 플랫폼 포트나이트(Fortnite)에서 45분의 라이브 공연을 펼쳤다. 이 라이브 공연에 1,230만명이 실시간으로 참여하였고 2,000만 달러(한화로 약 289억 원)의 공연 수익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메타버스 활용은 국내 공연예술계의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뮤지컬과 가상공간의 결합이 초기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뮤지컬단은 2021년에 국내 뮤지컬 업계 최초로 고전창작뮤지컬 ‘작은아씨들’의 무대 ‘조 마치의 집’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구현하였다. 같은 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인 ‘고성오광대탈춤’의 넷째 마당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을 모티브로 하여 전통춤사위와 VR 기술을 결합한 관객참여형 공연 ‘비비런’을 창작하고 광주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한국 예술종합학교 아트앤드테크놀로지(AT)랩은 2022년에 보다 본격적인 시도를 보여주었는데, 명성황후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잃어버린 얼굴 1895’의 세계관인 경복궁 일부를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 구현하고, 관객들을 초청하여 뮤지컬 주요 곡의 집단 군무를 시연하였다.



출처: 이프랜드 공식 유튜브

[그림 6-12] 제페토에서 선보인 ‘잃어버린 얼굴 1895’ 주요 장면

(3) 기술적 환경

‘비대면’ 공연예술의 개념은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해 ICT 서비스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공연예술계의 ICT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3차원 가상세계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메타버스 기술의 영향이 컸다. 가상세계는 공연전시공간의 확장 및 변형에 제약이 없고, 현실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오브제나 연출의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외 어느 지역이든 관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품의 확산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하여 블록체인 기술은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원본과 사본을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향후 미술작품 전시,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공연예술이 몰입감 있는 차세대 가상공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증강/가상현실(AR/VR) 등 확장현실(XR) 기술을 포함한 초실감 콘텐츠와 디바이스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 기술로는 영상을 통해 3차원 공간을 구현하는 기술, 초실감 디바이스 사용자가 느끼는 멀미와 시각적 피로도를 개선하는 기술, 대용량 입체영상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데이터 압축 기술, 미디어 환경 최적화 기술, 홀로그램 구현 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초실감 콘텐츠는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을 넘어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촉감을 느끼는’ 오감(五感) 상호작용으로 확장될 것이다. 관련 기술로는 유해가스를 식별하는 전자코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이 최근 개발되었고, 후각 데이터를 전송하고 발향장치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또한 피부에 부착해 실시간으로 촉각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패치, 맛을 감지하는 센서, 맛을 결정하는 향과 미각정보를 생성하는 기술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 앞으로 오감 데이터를 생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진보된 기술이 실용화되면 현실과 가상과의 경계는 더욱 희미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실감 콘텐츠의 확산을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지연 없이 전송하기 위한 초고속 이동통신 기술이 필요하다. 지금 세계 주요 통신업계에서는 6G(6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 6G는 5G 최고 속도의 약 50배의 성능을 가진 극초고속 이동통신 기술이다. 데이터는 더 빠르고, 통신 지연시간은 더 짧으며, 더 안정적인 통신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대용량의 초실감 콘텐츠의 전송을 가능하게 만든다.

(4) ICT 접근방법

미래에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연예술인도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마음껏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예술의전당’을 제안한다. 디지털예술의 전당은 디지털 콘텐츠, 나아가 인간의 오감 상호작용이 가능한 콘텐츠의 (1) 창작공간, (2) 전시/공연공간, (3) 관람공간을 포괄하는 플랫폼이다.

첫째로, 창작공간은 물리적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 오감 가상공간과 콘텐츠 제작도구를 제공한다. 공연예술인 누구나 이를 활용하여 기존 오프라인 공연무대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포맷으로 예술 콘텐츠를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이 제작도구는 전문적인 장비나 인력이 없이도 가상공간에서 오감 콘텐츠를 쉽게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를 탑재하고 있다.

이 제작도구는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창작공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세한 규모의 공연예술단체를 포함하여 누구나 새로운 시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 창작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더 많은 크리에이티브가 디지털예술의전당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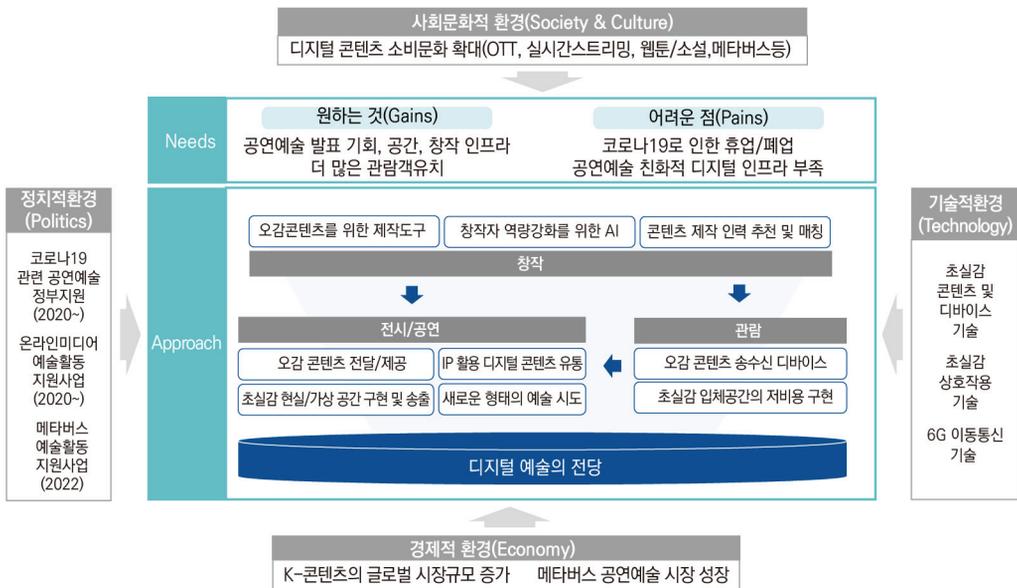
더불어 기존의 공연예술 창작/발표에 익숙한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가상공간에서의 창작/발표 활동 과정에서 부족한 지식이나 역량을 코칭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또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력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전시/공연공간은 인간의 오감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공창작물을 실제처럼 경험할 수 있는 가상세계/홀로그램 기반 확장현실 인프라를 제공한다. 공연예술 크리에이티브는 확장현실 공간에서 자신의 콘텐츠를 공개할 수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시도할 수 있다. 디지털예술의전당은 이를 위해 가상공간 또는 현실공간에 초실감 콘텐츠를 입체적으로 구현하고 송출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현재 서비스되는 메타버스보다 훨씬 정교하게 구현된 3차원 공간에서의 N:N 상호작용을 지원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한다. 공연/전시공간에서는 예술콘텐츠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여 수입원을 다각화할 수도 있다.

셋째, 관람공간에서 사용자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오감 콘텐츠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바이스 또는 초실감 입체공간을 통해 공연예술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

다. 이러한 디바이스 또는 입체공간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오감 콘텐츠를 저비용으로 구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미래에 디지털예술의전당에서 다양한 디지털 공연 예술 콘텐츠가 생산되고 관람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관람할 수 있게 된다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오감 콘텐츠 송수신 또는 초실감 입체공간 구현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연예술인을 둘러싼 PEST 환경을 바탕으로 도출한 니즈와 ICT 접근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6-13] 디지털 창작·발표 활성화와 관련된 PEST 환경, 니즈 및 ICT 접근방법

4 DMZ 접경지역 주민: 생태보전지역 탄소흡수 기여 인정

DMZ 접경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 위치한 생태보전지역은 산림 탄소흡수로 상당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추진체계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탄소흡수 기여분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전국 탄소흡수량 측정과 잘 작동하는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의 개

선과 탄소흡수량 측정과 예측, 관리 자동화를 위한 AI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DMZ 지역에 위치한 생태보전지역 주민의 경우 강력한 군사적 및 환경적 규제로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정책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가. 니즈(Needs)

(1) 사회문화적 배경

탄소중립 정책은 그간 탄소배출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사회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구성원 사이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생태·자연 1등급 지역, DMZ 접경지역 등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주민들은 탄소중립 선언 이전부터 공익 가치를 위해 지역발전의 기회비용을 희생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 생태보전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탄소를 배출하여 부를 축적해온 사회 구성원과 동일한 탄소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생태보전지역은 대도시와 산업체 구성원과 비교해 탄소배출로 인한 혜택은 적게 받았지만, 탄소흡수원의 유지와 보호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2) 원하는 점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생태보전지역의 탄소흡수 기여분을 인정하여 지역사회 경제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생태보전지역이 구조적으로 얻는 불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소흡수의 공익적 가치를 행정구역(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계측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 또는 가치의 일정 비율을 주민(소유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사회구성원 간의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탄소배출과 탄소흡수의 균형을 맞출 때 효율성보다 공정성에 가치를 두는 ‘성숙한 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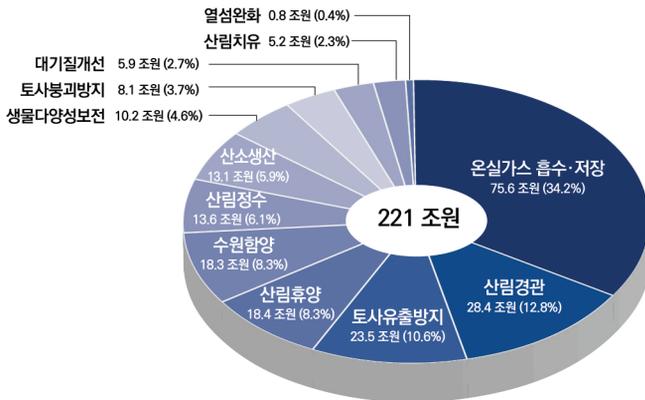
(3) 어려운 점

국립산림과학원 보도자료(2020.4.1.)에 따르면, 온실가스의 흡수와 저장을 통해 전국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는 75.6조 원 수준에 이른다. 이처럼 생태보전지역을 포함

한 산림 지역이 탄소흡수로 국가에 상당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익적 가치는 대부분 탄소배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축적해온 대도시나 산업체의 사회구성원들이 더 많이 누리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인증받아 거래할 수 있는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도입되긴 하였지만, 상쇄사업에 참여한 소유자/법인에 한정하여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어 제도의 적용 규모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상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흡수량의 거래 기반이 미흡한 점도 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이다.

산림의 탄소흡수량이 많아질수록, 산업체에서 탄소를 감축하는데 드는 비용적 부담은 전체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막상 탄소감축에 기여하는 쪽은 생태보전지역인데, 그로 인한 혜택은 주로 도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생산이나, 산업체의 활동 등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사회 구성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출처: 국립산림과학원(2020.4.1.)

[그림 6-14] 국내 산림의 기능별 공익가치 평가액(2018)

나. 접근방법(Approach)

(1) 정치적 환경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사회는 2015년 겨울, 프랑스 파리에서 지구 온도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였다. 파리기후변화협정²⁵⁾ 채택 이후, 국제사회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하고 탄소저감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의 원인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와 기후변화가 지목되면서, 학계에서는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강조하는 추세이다.

우리 정부도 2020년 12월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의 NDC를 대폭 상향하여 UN에 제출하였다. 이후 2021년 9월에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다. 이에 정부 관계부처 및 전국 지자체에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또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한편, 산림은 탄소흡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 UN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수단으로 지목하였으며, 2021년 11월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산림복원에 노력하자는 ‘글래스고 정상선언’에 전 세계 산림의 90%를 차지하는 120개국 이상이 서명하였다. 넓은 산림을 보유한 일본, 중국, EU, 미국 등은 NDC 달성을 위해 산림흡수원을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산림흡수원을 탄소감축목표에 반영하고 있다(산림청, 2018).

(2) 경제적 환경

탄소저감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국민의 부담이 발생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식량 부족과 자연 재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정부 관계부처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작년에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38조원 규모에 이른다.²⁵⁾ 이대로 탄소배출이 증가한다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부산 해운대 및 인천 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를 비롯한 저지대 주민 300만 명이 침수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미국 환경단체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 이는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인구에 준하는 규모이다.

25) 당사국총회 참여국들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최대 2도 이하, 더 나아가 1.5도(인류 안전 및 생태계 보전이 확보되는 한계선)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협정을 맺었다.

26) 경향신문 (2022.9.5.)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 38조” ‘탄소세 도입’이 절실한 이유. 지면보도.

(3) 기술적 환경

ICT와 AI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기술은 크게 ▲탄소저감 솔루션, ▲기후 변화적응, ▲탄소중립 인프라/거버넌스로 구분할 수 있다(최새솔, 2021). 탄소저감 솔루션의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 공정 최적화 등 에너지와 관련된 솔루션이 포함된다. 기후변화적응 기술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예측과 자연 보호, 정밀 농축산업 등 인류의 적응을 위한 기술이 해당된다. 탄소중립 인프라/거버넌스는 탄소 정보 인프라, 탄소 측정 및 계량화, 시민 경각심 제고를 위한 기술들이 포함된다. 각 유형에서 원격 센서, 데이터 통합, 정밀 시뮬레이션, 데이터마이닝/수요예측, 시스템 최적화 및 동적 제어, 예측적 관리 등의 ICT가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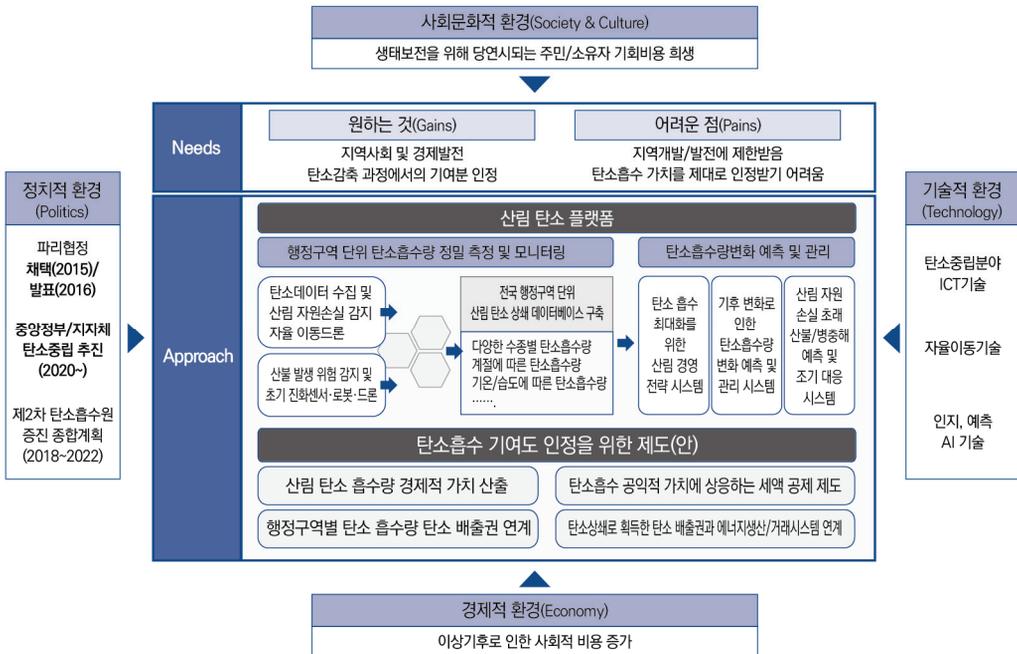
한편,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관리 부문에서는 인간의 개입이 없이도 스스로 목적지로 이동하는 자율이동 기술, 사물을 인지하고 데이터를 통해 패턴이나 추세 등을 예측하는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관련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 조사를 위해 2023년 7월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과 드론, 항공라이더, 사물인터넷, 디지털트윈 등을 활용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외 드론을 활용한 지능형 산림재해 예방, 위성 및 라이다 센서 기반의 산림원격 탐사, 인공지능을 통한 산림수종 직별 등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4) ICT 접근방법

생태보전지역 주민의 탄소흡수 기여분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산림탄소 플랫폼'을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행정구역 단위의 산림 탄소흡수량 정밀 측정 및 모니터링, 탄소흡수량 변화 예측 및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다.

산림 탄소흡수량 정밀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산림의 주요 수종 외 다양한 수종까지 포함한 생태계 수준의 탄소흡수량, 계절과 온·습도에 따른 탄소흡수량 등 탄소흡수데이터를 전국 행정구역 단위로 수집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지역을 정밀하게 스캔할 수 있는 자율이동 드론·로봇을 활용하여 전국의 연간 산림탄소 흡수량을 정밀하게 측정한다. 또한 저비용의 센서, 자율이동 로봇·드론을 활용하여 산불, 병충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산림자원 손실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탄소흡수량 변화 예측 및 관리 시스템은 산림탄소흡수 데이터베이스를 기후변화 예측 모델과 결합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탄소흡수량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산림경영 전략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존 산림의 수종이 기온 상승으로 더 이상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을 예측하여 적정 시기에 재조림 또는 신규조림 지역을 추천하는 식이다. 또한 위에 서술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하여 병충해나 산불의 조짐이 감지되면 조기 방제/진화가 필요한 위치를 재난안전시스템에 알리고, 근처의 산림 모니터링 드론 및 로봇을 통해 자동으로 조기 방제/진화에 대응한다.



[그림 6-15] 생태보전지역 탄소흡수 기여와 관련된 PEST 환경, 니즈 및 ICT 접근방법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생태보전지역의 탄소흡수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적인 변화가 함께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산림탄소 플랫폼을 바탕으로 산림탄소흡수량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평가된 가치를 에너지 생산/거래 시스템과 연계하거나, 탄소흡수량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지역 내 연간 탄소흡수량을 탄소배출권과 연계하여 거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림 6-15]에는 생태보전지역을 둘러싼 PEST 환경을 바탕으로 도출한 니즈와 이에 대한 ICT 접근방법을 요약하였다.

5 이주민 여성: 실생활 문화수출 활성화

인구감소가 시대가 다가오에 따라 외국인 인력 유입이 생산인구 확보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귀화율이 상당히 높지만, 경제활동 참여율은 낮은 실정이다.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취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의 교육경험이나 문화적 배경을 강점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보유한 문화적 다양성을 온라인에서 활용하면 어떨까. 글로벌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주민이 생활하는 한국 지역에서의 실생활 문화를 출신국 시장에 수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니즈(Needs)

(1) 사회문화적 배경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2040년에는 고령인구가 35.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전국 시군구의 10곳 중 4곳은 초고령화가 진행된 상태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교육환경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층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머지않은 미래에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에서는 생산인구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 인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한 주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1.7.7.). 외국 인력의 유입은 최근 코로나19로 주춤하는 추세이지만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귀화 등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정주(定住)하는 이민자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1년에 196만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장기체류자는 157만명이다. 같은 해에 경제활동에 참여한 이민자는 94만명으로, 이 중 69만명이 고졸 이

상의 교육경험을 가지고 있다(고졸이 40만명, 대졸 이상이 29만명).

(2) 원하는 점

이민자들은 단순히 출신국이 아닌 곳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이주 국가에 들어오면 서부터 소수자가 된다. 특히 결혼이민자 중에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본국에서는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기회를 찾을 수 있지만, 이민을 왔다는 이유로, 언어적 한계 때문에, 출신국에 대한 차별적 인식 등으로,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재력과 의지를 가진 이주민이 양국 언어능력과 문화적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어려운 점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이민자는 단순노무 직종(35.4%)과 도소매·음식·숙박업(37.1%) 등 이들의 문화적 배경 및 교육 배경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직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통계청·법무부,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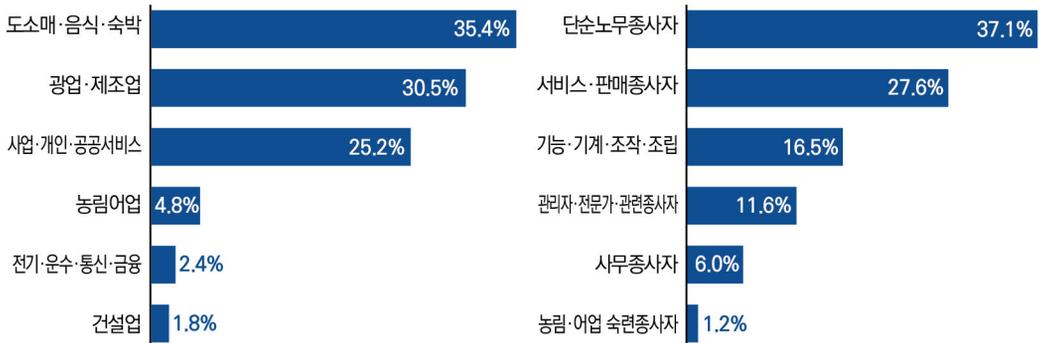
특히 대졸 비율이 여성 31%, 남성 29%로 성별 간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이민자의 임금 수준은 눈에 띄게 열악하다(윤자호, 2022). 여성이민자의 48.2%가 200만원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고, 35.4%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는 한편, 남성이민자는 54.3%가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의 월평균 임금을 받고 22.5%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이민자에 비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별도의 계약없이 취업하는 경향이 있다(김이선 외, 2020).

〈표 6-1〉 이민자 성별 취업·복지 실태

(단위: %)

		여성	남성
취업		53.5	79.3
노동 환경	4명 이하 사업장	51.6	33.7
	임금200만원 이하	55.1	28.2
	근로기간계약안함	62.7	43.6
	고용보험미가입	70.8	63.8
	산재보험미가입	53.6	29.9
인터넷 이용 안 함		33.5	21.5
지난 1년간 차별 경험		22.8	19.8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0)



출처: 통계청·법무부(2021)

[그림 6-16] 여성 이민자 산업별·직업별 취업 현황

나. 접근방법(Approach)

(1) 정치적 환경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여성 가족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주민 여성에 대한 취업과 창업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기존에 제공되는 취·창업 교육이 요식업 및 복지 분야 자격증이나 통·번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된 단기교육 위주로 이루어져 이주민의 문화적 특장점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취업 및 창업 교육과 지원정책들은 이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지만, 많은 이주여성이 생활 한국어 이상의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소통능력의 문제로 진입장벽을 느끼는 실정이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21) 결과에서 결혼 이주민이 한국생활에서 주로 느끼는 어려움 1순위가 언어 문제(22.9%)로 나타난 점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²⁷⁾

또한 법무부(2021.7.7.)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법무처 인구정책 TF 외국인정책반을 구성하고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다. 외국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IT 원격근무자 체류자격을 신설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쿼터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미 정착한 기존 이주민의 생산가능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2) 경제적 환경

이에 따라 이주배경을 가진 여성 주민이 그들의 강점을 바탕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이어나가는데 필요한 언어능력 함양과, 이들의 문화적 강점을 살려 활동할 수 있는 분야의 발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유·무형의 실생활 문화를 수출하는 방안이 있다. 한국 문화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실생활과 관련된 제품이나 콘텐츠를 수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액은 2020년에 14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15년간 엔터테인먼트 음반, 웹툰, 영화·드라마 등 K-콘텐츠 수출은 9배 성장했으며, 이로 인해 관계된 화장품·가공품 등 소비재 수출도 덩달아 증가하는 견인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출신국 시장 소비자를 잘 이해하는 이민자가 제품/콘텐츠 등 유·무형의 실생활 문화를 소개하고 마케팅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 경제적 어려움(21.0%)과 외로움(19.6%)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소셜 커머스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점도 이민자들이 가진 문화배경 및 출신국 커뮤니티를 활용한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관련된 사례로, 경상북도가 결혼이민여성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레이디’ 사업이 있다. 글로벌레이디 사업은 지역의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결혼이주 여성이 립스틱, 도자기, 인삼열매추출액 등 지역기업 생산품을 출신국에 판매하는 개인 무역 사업,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 등 기존 노동시장을 침해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발굴한 바 있다.

(3) 기술적 환경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 인구는 충분하므로, 온라인 채널을 통한 실생활 문화수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글로벌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사용자 수는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각각 50.3억 명과 47억 명을 돌파했다. 2022년에는 5G 통신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의 세계 보급률이 50%를 넘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고화질 영상 등 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4) ICT 접근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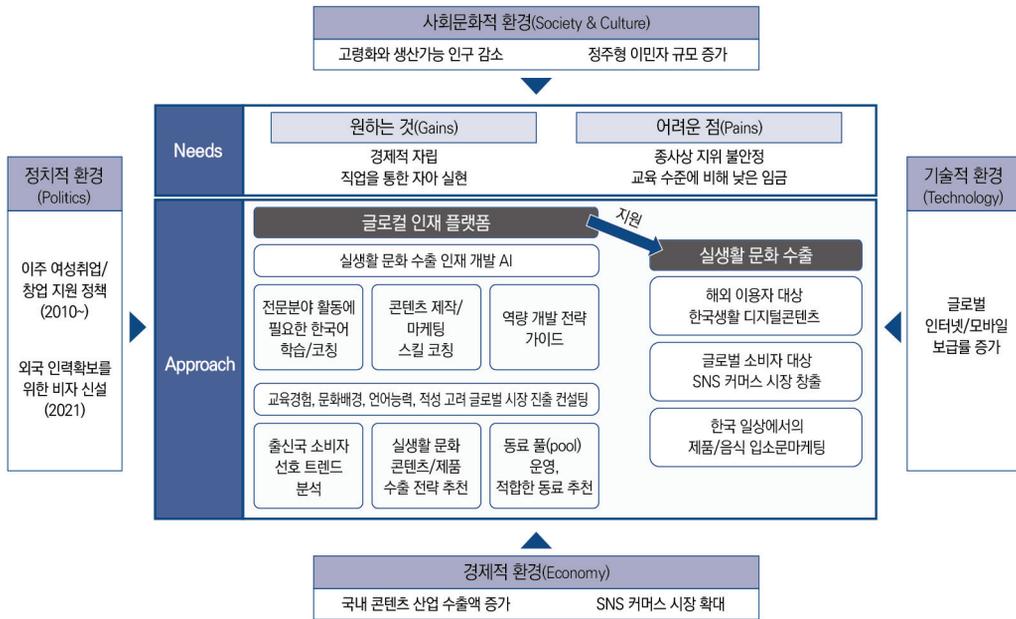
앞서 소개한 글로벌레이디 사업은 한국의 실생활 문화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출신국에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안이 이민자 인재양성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이주민이 기존의 경제활동이나 육아 등 다른 사정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거주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참여 자체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간과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실생활문화 수출 활동을 도와주는 ‘글로벌 인재 플랫폼’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글로벌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을 합성한 말로, 실제로 생활하는 한국 지역의 문화를 세계로 수출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글로벌 인재 플랫폼이라는 명칭을 고안하였다. 글로벌 인재 플랫폼은 이주민이 생활하는 한국 지역의 실생활 문화수출에 특화된 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온라인 서비스가 중심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글로벌 인재 플랫폼의 첫 번째 기능은 실생활 문화수출 인재 개발이다. 이는 이민자들이 유·무형의 실생활 문화를 성공적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업무 스킬을 코칭해주는 인공지능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플랫폼에서는 원어민 수준의 고급 한국어 학습과 코칭을 지원한다. 한국 정착 초기에 배우는 생활 한국어 수준을 넘어 표준어 발음 교정, 시사용어, 경제 전문용어, 사자성어 및 속담 등 사회 진출에 필요한 한국어 학습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더불어 콘텐츠 제작이나 제품 마케팅, 판매에 필요한 스킬을 코칭하고 종합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한국어 및 관련 지식과 스킬에 따라 역량개발 전략을 가이드한다.

글로벌 인재 플랫폼의 또 다른 기능은 AI가 이민자의 교육배경, 문화배경, 출신국 트렌드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알고리즘과 SNS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출신국 소비 및 문화 트렌드 분석이 포함된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하려는 실생활 문화 콘텐츠 또는 제품의 수출 전략을 다각도로 추천해준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재 플랫폼에 등록된 인재 풀(pool)에서 나에게 잘 맞는 협업 상대를 추천해주는 기능도 포함한다. AI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와 최적의 조합인 동료들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능도 있고, 플랫폼에 등록된 개인의 성향과 문화적 배경, 교육 및 전문지식 배경 등을 필터링하여 인재를 추천 받을 수도 있다.

글로벌 인재 플랫폼의 이러한 기능은 해외 문화수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해외 온라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국 생활과 관련한 디지털 콘텐츠를 수출하거나, SNS 커머스를 통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6-17] 실생활 문화수출 활성화와 관련된 PEST 환경, 니즈 및 ICT 접근방법

[그림 6-17]은 이주민 여성의 실생활 문화수출과 관련된 PEST 환경, 니즈 및 ICT 접근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6 제주해녀: 제주 해녀문화 보존

지구온난화와 해양 오염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제주해녀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해녀의 수도 꾸준히 감소하면서 ‘제주해녀문화’의 보존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고령의 해녀들이 조업 중 신체적 한계와 돌발상황으로 다치거나 죽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안전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해녀의 조업 안전을 위한 기술을 잠수복과 수경에 적용하되, 조업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착용감과 활동성이 좋고, 방수가 가능해야 하며, 가벼워야 한다.

가. 니즈(Needs)

(1) 사회문화적 배경

해녀는 생계를 위해 별도의 장비 없이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성들이다. 해녀는 산소 장치를 쓰지 않으므로 오로지 개인의 잠수 능력에 의지해 해산물을 채취한다. 테왁(부표) 하나에 의지하여 바다로 뛰어드는 제주도민의 정신을 대표하는 제주해녀문화(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국가무형문화제 제132호)는 과거부터 여성의 지위향상과 생태친화적인 어로활동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화석연료기반 경제사회 구조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수산자원이 사라지고 있다. 해조류와 수산물이 수온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저 암반의 33.5%에서 미역, 감태, 모자반 등 해조류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갯녹음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바다가 사막화되면 대형 해조류 사이에 의존하여 살던 바다생물들의 먹이와 서식지가 함께 사라지게 된다.

제주바다의 오염문제도 해녀의 조업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된 오·폐수, 육지 하천에서 유입되는 건축폐기물, 주변 양식장에서 방류하는 오염물질 등으로 바다가 오염되면서 수산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 원하는 점

해녀들은 바다 생태계와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조업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를 원한다. 문제는 바다 먹거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해녀의 소득원도 함께 줄고 있다는 점이다.

(3) 어려운 점

제주특별자치도 집계에 따르면 해녀는 1970년대에 14,000명 수준에서 2021년 기준 3,437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 중 91.2%는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고령, 질병, 사망 등으로 해녀는 꾸준히 감소하고, 바다에서 채취할 수 있는 먹거리의 양 자체도 줄어들어 해녀의 수가 늘기 어려운 탓이다.

해녀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조업 중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 소방 안전본부에 따르면 해녀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 53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41.5%는 심정지 사망사고에 해당한다. 낙상사고(20.8%)와 어지러움(15.1%) 사고는 그 다음으로 많았다. 전체 안전사고자 중 70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 접근방법(Approach)

(1) 정치적 환경

정부에서는 고령 해녀를 위한 해녀은퇴수당 제도, 해녀 생업지원 대책 등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은퇴 전에도 제주해녀문화 보존 목적의 소득보전 수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몸이 좋지 않으면 계속 조업 활동을 하는 고령 해녀들이 많다. 은퇴수당이 30만원씩 3년간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사고 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해녀안전지킴이' 장비 2,510대를 순차적으로 보급했다. 해녀안전지킴이는 몸에 벨트처럼 착용하는 센서장치로, 해녀가 잠수 중 2분 이상 물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착용자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하지만 해녀들이 해녀안전지킴이 착용 시 조업에 불편함을 느껴 활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또한 단순 위치추적만으로는 응급상황의 신속한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후 제주도는 테왁에 부착하는 무선위치발신기를 2021년부터 도입했다. 발신기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모바일 앱으로 위치 신호가 전송되는 통신 장치이다. 그러나 테왁은 조업 중 휴식을 취하거나 채취한 해산물을 보관하는 수면 위의 부력재 어구이기 때문에 바닷속에서 발생하는 위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제주도는 모슬포수협을 통해 해녀들에게 실시간 조업 위치 및 건강정보(심박 수, 산소포화도, 혈압 등)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시범보급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녀의 안전을 위한 디지털 장치를 보급하는 추세이다. 제주 다음으로 해녀가 많은 경상북도는 테왁과 호미에 안전사고 예방 기술을 적용하였다. 스마트 테왁은 해녀가 잠수 중 일정 시간 수면에 부상하지 않으면 경고해주며, 스마트 호미는 과도한 잠수 또는 작업이 감지되면 진동으로 경고해준다.

(2) 경제적 환경

사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증가는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전국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은 38.4%로, 고령자 3명 중 1명이 일을 한다. 경기연구원 연구원이 2022년 4월 전국 60세 이상의 경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6%가 71세까지 일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김운영, 2022).

(3) 기술적 환경

해녀들이 잠수하여 해산물을 손으로 채취하는 작업은 상당히 고강도의 노동이다. 해녀 작업에 특화된 기술은 아니지만, 최근 근력 등 신체적 능력의 증강을 위한 웨어러블(wearable)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말 그대로 옷처럼 입는 로봇이다. 초기 형태의 근력증강 웨어러블 로봇 기술은 형태가 크고 무겁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볍고 활동성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최근 산업계에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근력강화 웨어러블 슈트를 도입하고 있다([그림 6-18] 참조). 물건의 하중을 상당부분 분산시켜 반복작업에 의한 피로를 개선함이 목적이다. 기술이 진보하면서 점차 일반 의류에 가까운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이 개발되는 추세이지만, 잠수복에 근력증강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속에서도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출처: (좌) 충청투데이. (2012.6.30.), (우) 보안뉴스. (2022.7.30.)

[그림 6-18] 근력증강 웨어러블 로봇 활용 사례(한국타이어, cj대한통운)

웨어러블 로봇과 결합할 때 효과가 큰 생체신호 측정기술은 심박수, 뇌파, 심전도, 체온,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생체신호를 비접촉·비침습 방식으로 측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를 뽑지 않아도 혈당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부착식 센서가 최근 개발되었다. 또는 뇌에 직접 칩을 심지 않고도 외부에서 뇌파를 측정하거나 뇌의 활동을 분석하여 사람의 의도를 예측하고 이를 디지털 기기 제어에 적용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생체신호 측정기술을 응용하면 잠수하여 조업 중인 해녀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카메라 센서(영상), 레이더 센서(음파), 라이다 센서(레이저), 자이로센서(가속도) 등 다양한 센서들을 융합하여 주변 환경과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다중센서를 해녀의 안전장치에 적용한다면 잠수 중 주변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는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4) ICT 접근방법

미래기술 관점에서 고령 해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적용한 근력증강 잠수복과, 안전 기능이 탑재된 지능형 수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근력증강 잠수복의 도입을 제안한다. 현재 해녀들이 사용하는 고무 잠수복은 체온을 유지해주고 해파리 등 외부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지만, 전통적인 의류 기능 외 부가적인 첨단안전 기능은 없다. 직물 또는 유연 재질로 만들어져 근력을 증강해주는 웨어러블 잠수복, 즉 근력증강 잠수복이 있으면 해녀들의 작업효율을 높이면서도 신체적 한계에 따른 위급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수작업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들을 위해 장갑을 포함하여 잠수복이 제작된다면 부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잠수복의 근력보조 기능은 조업 마무리를 위해 채집한 해산물을 옮기는 과정도 수월하게 해줄 것이다.

또한 ‘근력증강 잠수복’은 비접촉식/비침습형 생체신호 감지 센서를 통해 해녀의 잠수활동 정보와 안전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사고 및 위급상황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해경과 119구조대에 구출 신고를 보낸다. 또한 사전에 체력의 한계 또는 과도한 잠수로 신체에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여 경보하고, 체력 고갈 등 자력으로 움직이기 어

려운 상황에서는 부력을 조절하여 수면 위로 띄워준다. 조업 중 돌발상황으로 잠수복이 손상되더라도 비상 구조모드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제안하는 접근방법은 근력증강 잠수복과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고 HUD(Head Up Display)가 탑재된 '지능형 안전 수경'의 도입이다. HUD는 전면 유리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해주는 기술로, 해녀의 수경에 적용한다면 안전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경의 전면에 입수 후 현재까지의 잠수 시간과 수심 정보를 초점을 맞춰 옆에 띄워주고, 잠수복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심박수, 산소포화도, 혈압, 체온 등 생체신호에서 이상 상태가 감지되면 위험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조업 중 위험상황에 처한 경우 주변의 동료 해녀들에게 수중 통신장치를 통해 구조신호를 보내고, 수경 디스플레이에 위험에 처한 해녀의 위치를 알려주면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된다.

더불어 수경의 HUD에 증강현실을 적용하여 고령의 해녀들이 가까운 물체를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채집 가능한 생물들을 인지하여 투명 디스플레이에 표시해주는 편의 기능을 포함한다. 만약 잠수 중 햇빛이 잘 닿지 않아 어두운 환경에 있다면 수경에 탑재된 센서가 조도를 감지하여 조명을 비추고 적절한 밝기로 조절하여 시야를 확보해준다. 또한 수경에 초소형 다중센서를 탑재하여 조업 중 마주칠 수 있는 해파리, 돌고래, 상어 등 위험생물을 감지하고, 위험반경에 들어오는 경우 더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당 생물이 기피하는 음파를 자동으로 송출한다.

해녀의 수경에 상기한 안전 기술들을 적용할 때는 수경의 크기와 무게가 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준으로 활동성이 있고 충격에 강하며 가벼워야 한다. 또한 잠수복과 수경이 저전력으로 작동되고 무선충전이 되면 실용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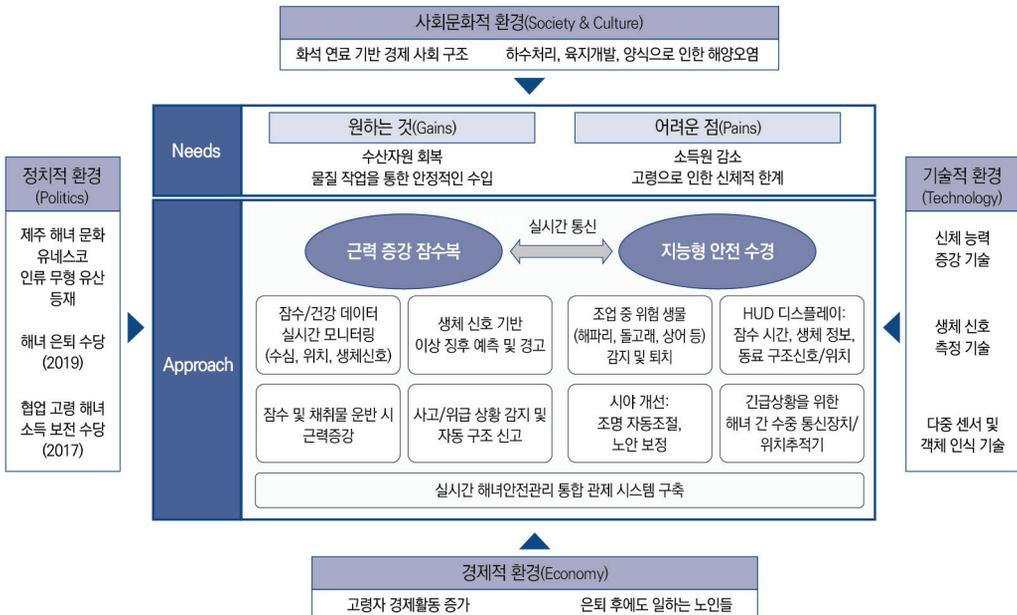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무단 복제 및 사용 금지

[그림 6-19] 지능형 안전 수경 상상 이미지

마지막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해녀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해녀의 근력증강 잠수복 및 지능형 안전 수경을 통해 안전 상태를 진단·예측하고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령해녀를 둘러싼 PEST 환경을 기반으로 도출한 니즈와 ICT 접근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6-20] 제주해녀문화 보존과 관련된 PEST 환경, 니즈 및 ICT 접근방법

7 고령장애인: 내 집에서 늙어가기

우리나라는 3년 뒤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사회가 된다. 많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생활하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병에 걸리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여생을 보내게 된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는 노인들도 자신이 살던 집에서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을 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격의료 가능한 AI 병원, 신체적 장애와 한계를 보조/보완하는 기술, 가사노동을 대신해주는 로봇 등이 필요하다.

가. 니즈(Needs)

(1) 사회문화적 배경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을 기준으로 900만 명을 넘었다. 현재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 수준으로, 통계청은 이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았다. 50년 뒤인 2070년이면 고령인구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전 세계 246개국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반면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22년 71.0%에서 2070년에는 24.9%까지 줄어들어 고령인구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2) 원하는 점

“내 집에서 늙어가기(AIP, Aging in place)”. 노인이 인생의 후반기를 자신이 원하는 지역 또는 집에서 친숙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다가 좋은 죽음(well-dying)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노인실태조사(2017)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절반 이상(57.6%)은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3) 어려운 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병에 걸리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병원·시설에서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집에서 가족이 돌봄과 간병을 제공하는 데 엄청난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돌봄서비스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몸이 아프고 약해진 상태에서 낯설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생활환경에 처하고, 친숙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거의 단절되는 상황은 고령자의 정서적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실제로 주거환경, 건강만족도, 사회활동, 경제적 상태 등이 우리나라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전명진·문성원, 2016) 또한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삶의 질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손신영, 2006). 사회적 유대감과 자립적 생활이 삶의 질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 접근방법(Appro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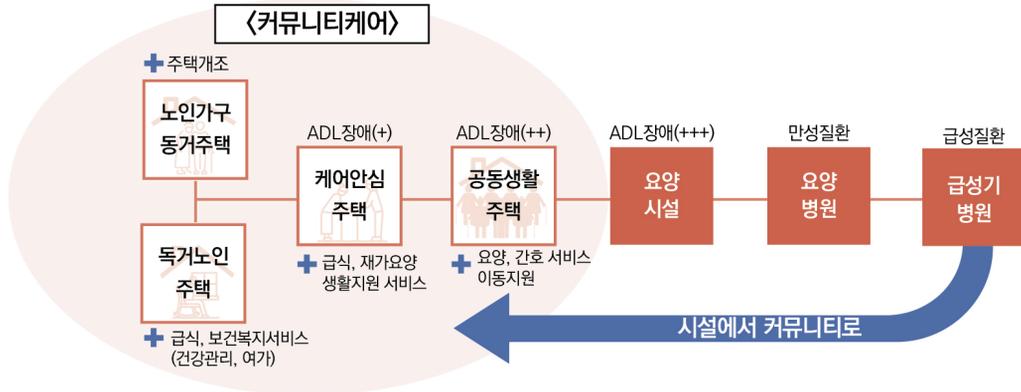
(1) 정치적 환경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2018년 11월에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2022년까지 지자체를 선정하여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법·제도적 기반과 인프라를 확충하며,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확산하며, 2026년 이후로는 보편화하겠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사업 내용은 ▲주거 지원 인프라, ▲방문건강/방문의료, ▲재가 장기요양·돌봄, ▲민관서비스 연계를 핵심요소로 담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거 지원 인프라의 경우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을 확충하여 고령자가 평소 사는 집에서 건강관리와 각종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독립생활과 낙상예방을 위한 집수리를 지원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마을 소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건강/방문의료의 경우 고령자를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방문건강서비스를 확대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 또는 장애인,

중증정신질환자, 요양병원 퇴원환자, 호스피스 말기환자의 경우 의사, 간호사 등이 방문의료를 제공한다.



출처: 보건복지부(2018)

[그림 6-21] 주거 지원 인프라,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개념도

재가 장기요양·돌봄의 경우 커뮤니티케어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하고,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 등 다양하게 나뉜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또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식사배달, 법률지원, 안부확인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고 개발한다.

민관서비스 연계의 경우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케어안내창구를 신설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2) 경제적 환경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직결되어 기존 산업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산업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39조원 규모였던 국내 실버산업 시장은 2020년 72조원에서 10년 뒤에는 168조원 규모로 두 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김문선, 2022). 최근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고령층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고령층에 비해 문화여가 생활에 상대적으로 익숙하며 경제적 여유도 있으므로, 실버산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기술적 환경

고령자의 AIP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기술은 가사노동을 자동화하고, 집에서 원격으로 치료받으며, 신체적 한계를 보완해주는 것이다.

가사노동 자동화 기술은 최근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등을 통해 실생활에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사노동을 대신하는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미래에는 청소, 설거지는 물론 요리, 물건·옷감·식기 정리정돈, 아이 돌보기, 필요한 물건 찾아 가져다주기, 장보기 등 가사노동을 스스로 하는 반려로봇이 개발될 것이다.

또한 의학기술과 ICT가 발전하면서 원격의료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의사가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을 하는 기술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 ICT와 결합하면서 더 빠르게 발전하는 추세이다. 미래에는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개인 맞춤형 의료 수요는 증가하는 한편 지역소멸로 의사와 병원 등 의료자원은 점차 부족해질 것이므로, 원격의료 기술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더불어, 고령화·장애로 인해 신체적 능력이 상실되거나 저하된 경우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신체증강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의 활동 증진을 지원하는 의류형 근력보조/보완 기술이 있다. 일상생활 중 사용자의 움직임과 근력,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인식하여 헬스케어, 자세교정, 보행 보조 등 신체의 운동기능을 보조한다. 나아가 미래에는 뇌/신경과 연결되어 반영구적으로 손실된 신체감각을 대체하여 신체 기능과 감각을 복구시켜주는 기술도 개발될 것이다.

(4) ICT 접근방법

앞으로는 자신이 원하면 병원과 요양시설에 가지 않아도 원래 살던 집에서 치료를 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접근방법으로, 고령화·장애로 상실되거나 저하된 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신체증강 기술의 활용을 제안한다. 착용감이 좋은 의류 형태로 제작된 신체증강 웨어러블 장치와 시스템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근력을 보조하고 자세를 교정할 수 있다. 또한 감각 또는 신체의 일부를 상실하였다면 뇌 신경과 연결한 인공감각이나 인공신체로 대체/복구하여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지

많은 노인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부족한 체력을 보조해주거나,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운동 자세를 교정해주고 외부의 유해한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주는 착용형 웨어러블 기기로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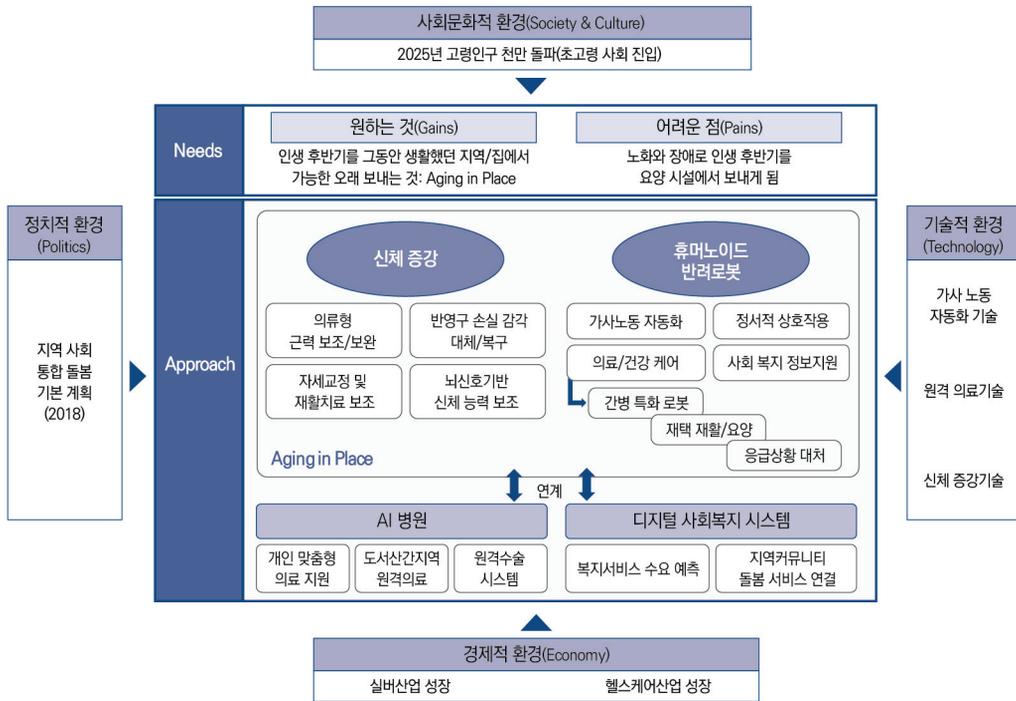


출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21)

[그림 6-22] 신체증강 기술 및 반러로봇 기술 상상도

두 번째 접근방법으로, 고령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가사노동을 대신해주고, 정서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형태의 반러로봇을 제안한다. 반러로봇은 요리, 세탁, 청소, 옷정리, 폐기물 처리 등 각종 가사노동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AI가 탑재되어 고령자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 고령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검색하여 알려주고, 음성으로 주인과 소통하여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알아서 신청해준다. 필요한 경우 일부 로봇들은 간병에 특화된 하드웨어와 응용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나, 집에서의 재활치료와 요양에 특화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로봇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상태가 위중한 경우 가까운 119구조대에 구조 요청을 보낸다. 구조대원은 AI 병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가까운 의료시설과 병상 수 및 의료진 현황을 확인하고 가장 빠르게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향한다.

반러로봇은 디지털 사회복지시스템과 연계된 공유경제 형태로 제공되거나, 보급형 로봇을 개발하여 저소득층도 접근 가능한 비용으로 생산 가능해야 한다. 여기에서 디지털 사회복지시스템은 고령자들의 복지서비스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커뮤니티 돌봄서비스를 연결하거나 반러로봇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6-23] '내 집에서 늙어가기'와 관련된 PEST 환경, 니즈 및 ICT 접근방법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신체증강 웨어러블 로봇과 반려로봇이 감지하는 건강신호를 바탕으로 가상의 'AI 병원'이 연결되어 개인맞춤형 의료 진단,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중증 환자도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도 진료 받고, 합병증 발생 시 간단한 원격검사로 조기에 발견하여 의료기관과 연결한다. 거주지역에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수술기기를 구비한 지방 거점 병원에 원격으로 접속한 대도시의 의사가 현지 의료진에 참여하여 로봇으로 원격수술을 진행한다.

[그림 6-23]에는 고령자의 Aging in Place와 관련된 PEST 환경과 니즈, ICT 접근 방법을 정리하였다.

제7장

연구의 의미와 미래 과제

제1절 연구의 의미

제2절 연구의 미래 과제

제 1절 연구의 의미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올해 미래정책의 국민 선호 연구는 예년과 달리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민을 ‘이머징 시티즌’이라는 개념으로 재정의해 보았다. 미래연구의 쓸모가 ‘전망’에 있다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민도 미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론에서 설명했듯 이머징 시티즌은 ‘지금은 소수지만 장차 다수가 될 시민들’이고, 이들이 당면한 현재의 문제는 곧 우리사회의 미래에 커다란 문제로 비화할 문제들로 정의한다. 미래에 다수가 될 시민들, 미래 문제를 미리 경고하는 시민들을 미래연구가 관심을 보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올해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는 ‘3+1’의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지역사회의 소수와 약자를 만나는 것, 소수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가를 만나는 것, 세대의 측면에서 소수와 약자로 볼 수 있는 청년세대(탈북청년 포함)를 만나는 것이 앞서 언급한 ‘3’의 의미라면, ‘+1’은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소수와 약자의 문제를 풀어낼 아이디어를 내보는 시도였다. 각각의 연구 문제와 프레임, 접근의 방법을 달리하면서 병렬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이머징 시티즌의 선호미래’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장차 다가올 미래에 다수가 될 ‘지금의 소수와 약자’를 만나보았다. 애초 우리의 예상대로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조만간 우리가 겪을 문제이기도 했고,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도 했다.

예를 들면, 다문화 이주민 여성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주민’임을 깨달았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서 이곳에서 살면 원주민이라는 공식은 없는 것 같다. 비록 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우리는 여러 이유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이주민처럼 살고 있다. 이주민의 삶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공동체의 붕괴, 돌아갈 곳의 부재, 끊임없는 불안감,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차별,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늘 새로움에 적응해야 하는 피곤함 등이다. 이들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일

까. 우리 모두 이주민으로 이런 사회를 경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소수약자를 위한 활동가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활동가도 만나보았다. 장애인의 탈시설을 도와주는 활동가도 있었고, 장애인과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활동가도 만나보았다. 이들은 소수와 약자를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에서 엿본 것은 우리도 장차 소수와 약자가 된다는 예감이었다.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떠올려보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도시에서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척 힘들다. 공공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움직이기 어렵다. 음식점 주문도 요즘에는 키오스크에서 버튼을 눌러 스스로 하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 셀프 주유소의 증가도 장애인에게는 불편한 일이다.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가 스스로 차에서 휠체어를 내려 그걸 타고 주유하고 계산도 해야 한다. 만일, 앞뒤로 주유하는 차량이 붙어있으면 움직일 수 없다. 주유는 불가능해진다.

우리사회는 이런 장애인을 집이나 시설에 묶어두려고 한다. 이들이 움직이면 도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버스는 이들 때문에 정차 시간을 늘려야 하고, 지하철은 돈을 들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도로도 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니도록 턱을 없애야 하고, 음식점이나 카페도 장애인에게 편리하도록 출입문 구조나 화장실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많이 바뀌었지만 앞으로 바뀌어야 할 것은 더 많다.

우리의 미래를 예상해보면 많은 사람이 고령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나이가 들면 여러 이유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 걸리는 병도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차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들을 만나 도시와 거주환경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우리가 이머징 시티즌을 연구하는 이유다.

청년세대 연구도 이머징 시티즌의 관점에서 조명해보았다. 청년 연구는 많은 연구기관에서 수행되었지만 우리는 청년을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고' '보이지 않으며'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로 규정했다. 직장과 거주지를 안정적으로 잡지 못해 늘 짐을 싸고 풀기를 반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년세대는 분명 존재하지만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성의 정치권에서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지하와 아르바이트를 밤늦게까지 전전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청년의 처지를 이렇게 정리해보았다. 물론,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많을 것이다.

청년들에 대한 재정의에서 핵심적 키워드로 제시한 mobile, silent, invisible은 소수와 약자를 대변하는 키워드이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 보면 자연이 착취당하는 쪽인데, 자연을 위에서 제시한 3가지 키워드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는 관점도 소개한 바 있다(Dasgupta, 2021). 이를 통해 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청년세대를 이머징 시티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사회가 맞이할 문제를 앞서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미래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는 이머징 시티즌을 만나면서 이들이 당면한, 그리고 앞으로 더 문제가 될 요소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지역연구원과 함께 모색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전국 시도별로 왕성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과 국회미래연구원이 협업해 이머징 시티즌을 발굴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지역사회의 관점과 지역정부 및 국회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노력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기관과 협력해 이런 노력을 확산하려고 한다.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대안을 내놓는 노력도 병행해 보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협력해 이머징 시티즌이 제기한 문제 중에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논의했다. 사회문화적 배경, 시민들이 바라는 것, 어려운 점들을 정리하고 이를 다시 정치, 경제, 기술, ICT 등의 접근방법으로 해법을 모색했다. 농업의 진입장벽의 해소, 디지털 창작의 활성화, 생태보존지역의 탄소흡수의 기여 인정, 다문화 이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활용하는 방법, 제주의 해녀 문화 보존, 거주지에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방법 등에서 과학기술의 해법을 탐색했다.

우리는 6개 지역에서 주민들과 미래워크숍을 하면서 과학기술분야 전문가와 동행했고, 이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그 자리에서 시민들과 토론하기도 했고, 연구진끼리 모여 기술을 통한 해결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미래 과제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연구의 한계와 개선점²⁸⁾

우리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연구와 자료를 기초해서 만들어진 미래 비전으로 ‘성숙사회’를 제시했다. 이는 경제성장보다 다원가치 존중 사회, 중앙집권적 거버넌스를 넘어 지역사회의 자율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사회,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따뜻한 공동체 등을 담고 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성장 중심의 정치경제체제로부터 표출되는 물질만능주의, 기득권주의, 개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연구에서 지역의 자율과 분권사회에 대한 참여자들이 단순 의견 제출자가 아니라 주권자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지역 풀뿌리공론장의 필요성에 입각한 법적, 제도적 참여방식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확장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가 성숙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징을 대변하면서도 소수와 약자 그룹에 속한 시민들을 선정한 것은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서울중심의 강고한 기득권사회에 균열을 내기 위한 사회논리에 부합하며 국가와 시장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부상 및 강화의 측면이 짙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시민으로 귀농귀촌청년, 공연 예술인, DMZ 접경지역주민, 여성 외국인 노동자, 돌봄노동자, 해녀 등을 선택해 현재 우리사회의 성장만능, 강자우선 사회라는 미성숙한 구조를 극복하려는 했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치적인 민주 공론장 형성을 위주로 하면 서도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기구)이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국회 차원에서 입법행위나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와 분권의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8) 과제의 한계와 개선점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세심하고 유익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인용하면서 미래 과제를 제시해보았다.

한편으로 풀뿌리시민공론장이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저변에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풀뿌리공론장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방향은 오히려 풀뿌리공론장을 해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풀뿌리시민공론장이 활성화되는데 방해가 되는 법적 제도적 요인들을 제거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문제에 천착하는 지역정당의 창설을 막고 있는 정당법을 개정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민주주의의 대 민주주의

지방과 소수자의 관점에서 새로운 선호 미래를 조망하는 데 있어, 1) 개인과 공동체의 갈등과 조화, 2) 자연적 삶과 경제적 삶의 갈등과 조화, 3) 도구적 합리성과 목적 합리성의 갈등과 조화의 문제 못지않게 민주주의의 문제도 논쟁적일 수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은 규모에 대한 것이다.²⁹⁾ 규모가 큰 민주주의를 할 것인가 아니며 규모가 작은 민주주의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단순화하면 국가나 전국 차원의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시민 삶과 거리가 가까운 지역 차원의 민주주의가 더 중요한가 사이의 논쟁이라 할 수 있다. 생각보다 이 논쟁은 중요하고, 지금도 여전히 국가 중심, 정부 중심의 민주주의에 대해 지역분권, 생활 정치, 풀뿌리 정치, 민관협치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 미래 전망 워크숍에서도 중앙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역(민)의 현실에 기초한 대안 주장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큰 규모의 민주주의에 대한 작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라고 이해될 만하다. 그러나 동시에 미중갈등, 남북갈등, 자본주의 시장체제 등 큰 규모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기도 했다. 입법과 조세, 예산의 방법으로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국회의 역할은 어느 방향을 지향해야 할까.

자율적 운영의 여지를 키울 수 있는 작은 규모로 분권화가 중요한가, 아니면 큰 규모

29) 로버트 달. (1999).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문학과지성사.

의 정치 차원에서 대안의 모색이 더 중요한가, 공공 정책은 마을 단위처럼 시민과의 거리를 좁혀서 결정하고 운영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할까 아니면 광역이나 계층, 세대처럼 포괄적인 단위에서의 접근을 더 중시해야 할까. 어느 것 하나 쉽게 결론짓기 어렵지만,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는 깊고 넓게 살펴져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의 역사적 출발은 후자의 작은 민주주의, 지역 중심의 민주주의였다. 민주주의의 어원을 구성하는 데모스(demos)는 140개로 나뉜 아테네의 지역민을 가리켰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가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규모가 커지면 페르시아처럼 전제정이 불가피할 거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연맹체를 만들어 대항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그 연맹체를 국가로 전환하지 않았고 서둘러 각자의 고향 도시로 돌아갔다. 어린 시절의 기억과 공동의 감각을 가진 대면 공동체에서만 목적 있는 삶을 구현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나고 자란 지역사회 중심의 삶과 민주주의가 그 시대의 이상이였다.

작은 규모의 민주주의는 부를 과시하는 것보다는 질박한 삶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을 지향했다. 달리 말하면 고대 로마의 제정(帝政)이나 현대 자본주의처럼 확장적인 경제를 지향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확장적 경제가 노동 분업이나 전문화, 기능분화를 낳고 이는 필연적으로 계층 간 차이나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려 했다. 프랑스 출신의 정치학자 버나드 마넝이 강조한 것처럼,³⁰⁾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전문가주의 불신'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이 이상은 장 자크 루소를 중심으로 한 근대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즉, 매우 동질적인 농촌공동체를 중심으로 계층 간 큰 차별 없이 자연에 가까운 정치체제를 운영하고자 한 것이다.

자연에 가까운 삶은 시간 개념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처럼 직선의 진보나 성장의 시간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계절의 순환처럼 처음과 끝이 있고, 시작한 곳과 돌아갈 곳이 있는 삶을 자연스럽게 여겼다. 죽음을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기보다는 죽음이 있어야 생성(生成)이 있다고 여겼기에 운명론적 세계관도 중요했다. 자연이라는 우주 속의 한 부분으로 인간과 사회가 존재한다는 관념은 곧 조급한 심성이나 빠른 발전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규모가 큰 민주주의다.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아니라 광역의 국

30) 버나드 마넝. (2004). 선거는 민주적인가. 후마니타스.

가가 중심인 민주주의이고, 노동 분업화된 익명 사회에서 전문화된 기능에 따라 직업 집단을 이루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capitalist democracy)로 작동한다. 거대한 국가 관료제는 목표에 따른 도구적 합리성을 지향하고, 그에 따라 효율성과 빠른 성취가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자리를 잡았다. 인간과 사회가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자연의 개발자 내지 지배자 역할을 하게 된 것도 규모가 큰 민주주의의 특징이기도 하다.

속도도 빠른 민주주의다. 정부는 연 단위, 월 단위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게 움직이며, 경제 발전에서 성취를 내는 것을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 역시 빠르고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선거는 빠른 피드백을 재촉하는 효과를 낳는다. 지역 사회, 마을공동체의 개념은 빠르게 부식된다. 느린 민주주의, 침착한 시민성, 자연 친화적인 삶은 권장될 틈이 없기도 하다.

물론 규모가 큰 민주주의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대의 작은 민주주의가 소수의 남성 중산층만의 민주주의였다면, 현대의 큰 민주주의는 여성과 노동자에게도 시민권과 주권을 갖게 했다. 고대의 작은 민주주의가 노예제 ‘덕분에’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다면 현대의 큰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에서도 고대의 작은 민주주의가 태생을 시민권의 기초로 삼은 데 반해, 현대 국가나 현대 민주주의는 민족과 인종을 가로질러 작동할 수 있다는 점도 특별하긴 하다.

고대 민주주의가 5만 명 안팎의 시민을 가진 민주주의였다면, 현대 민주주의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큰 민주주의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갖는 문제에 획일적인 대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큰 규모의 국가 안에서도 중앙 중심과 지방 중심의 유형은 달랐다.

미국은 가장 큰 규모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모델 국가였지만, 그와 동시에 지방의 중심성을 유지해왔다. 독일 역시 제3제국 시기 중앙집권화의 모색이 있었지만, 전후 다시 분권화된 연방제로 돌아갔다. 수도인 베를린은 전국 평균보다 못 사는 특별한 지방이 되었고, 다원화된 지역 문화의 혼합체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지향했다. 반대로 스위스는 작은 규모의 민주주의이지만 연방제 국가이고 지역들의 연합체제로 민주주의를 운영한다.

우리는 오랜 식민체제와 권위주의 시기를 거치며, 국가 중심적인 체제를 심화시켜왔다. 추격 발전을 위한 산업화에 사회적 자원을 집중시키면서 도시화의 속도도 빨랐다.

근대 엘리트 형성의 패턴 역시 중앙집권화를 심화시켰고, 관료제 역시 중앙 정부 중심으로 위계화되었다. 이런 특징은 민주화 이후 더욱 심화하였다. 경제 성장은 권위주의 시대의 특징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선출된 모든 정부의 최우선 국가 목표였다. 모두가 혁신이든 포용이든, 녹색이든 말하면서도 이를 수단적 가치로 삼아 혁신성장, 포용성장, 녹색성장과 같이 새로운 성장을 지향했고, 그 끝은 혁신성장 국가, 포용성장 국가, 녹색성장 국가와 같이 더 확장된 국가 개념을 발전시켰다.

한국 민주주의는 더 빠른 성장, 더 큰 국가, 더 확장적인 정부 정책, 더 많은 입법, 더 많이 일하지 못해서 문제일까. 아니면 오래 가는 변화, 다르게 살아도 되는 사회, 느린 민주주의의 가치가 부족해서 문제일까. 민주화 35년을 지나는 오늘의 한국 사회는 규모와 속도, 중심성과 다원성, 거리 등의 차원에서 '반성적 성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되는 국가는 120개 정도가 되었지만, 그 모양과 특성은 매우 다르다. 하지만 오랜 식민지, 권위주의, 공산주의를 경험한 나라들, 특히 경제성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추격 발전에 성공한 나라들은 중앙집권적이고 도시 중심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 있어서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80여 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진 발전적 측면 못지않게 그것이 갖는 부정적 유산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사례인 것도 분명하다.

국가 이전, 산업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으나, 그간의 발전과 성장의 토대 위에서 규모가 작은 지역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일상을 보람있게 영위할 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할 수 있다. 빠른 성장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어서 위기에 취약한 경제를 좀 더 균형 있는 내재적 발전의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나갈 수는 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는 존중하면서도, 지나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낳는 불평등과 양극화, 신빈곤층의 누적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좀 더 높은 우선순위로 바꿀 수는 있다.

정부나 국회의 역할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그 방향을 좀 더 오래 논의하고 오래 준비해서 오래 가는 변화를 모색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도 있고, 다원적 가치와 종류가 다른 대안도 허용될 수 있는 사회 형성에 더 큰 정책적 비중을 둘 수 있다. 요컨대 미래워크숍에서 지역의 시민들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규모가 큰 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작은 민주주의, 다원적 문화, 지역 친화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삶의 기반을 키워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3 지역사회의 선호미래 실현의 조건들

우리는 올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을만들기’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구자인 마을연구소 소장에게 지역의 선호미래를 상상하고 추진하는 데에 어떤 추진체계와 지역정부의 협력이 필요한지 물었다. 그가 답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보았다. 연구진이 구소장의 조언을 다시 정리하는 것보다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조언의 문맥과 의미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연구진: 지역사회에서 선호미래를 논의하는가?

구자인: 전국의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시도하는 주민총회 자료를 살펴보면(유튜브로 영상 확인 가능), 주민들 자신의 목소리로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말한다.

연구진: 그렇다면 선호미래를 추진하는 지역사회 체계가 있는가?

구자인: 지자체 단위로 보자면 5년, 10년 앞을 내다보는 책임성을 가지고 미래정책을 끌고 가는 정책그룹(운동세력)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공무원은 순환 보직제도 탓에 책임성이 사라지고, 단체장은 4년 임기로 당장의 성과에 집중한다. 민간 그룹(특히 농촌)은 활동 주체들이 고령화되고, 칸막이를 극복하지 못하며, 공동의 미래상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정책과 생활 현장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 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 제도를 계속 고치고, 우호적인 지원환경을 조성하며 정책과 현장 사이의 괴리를 메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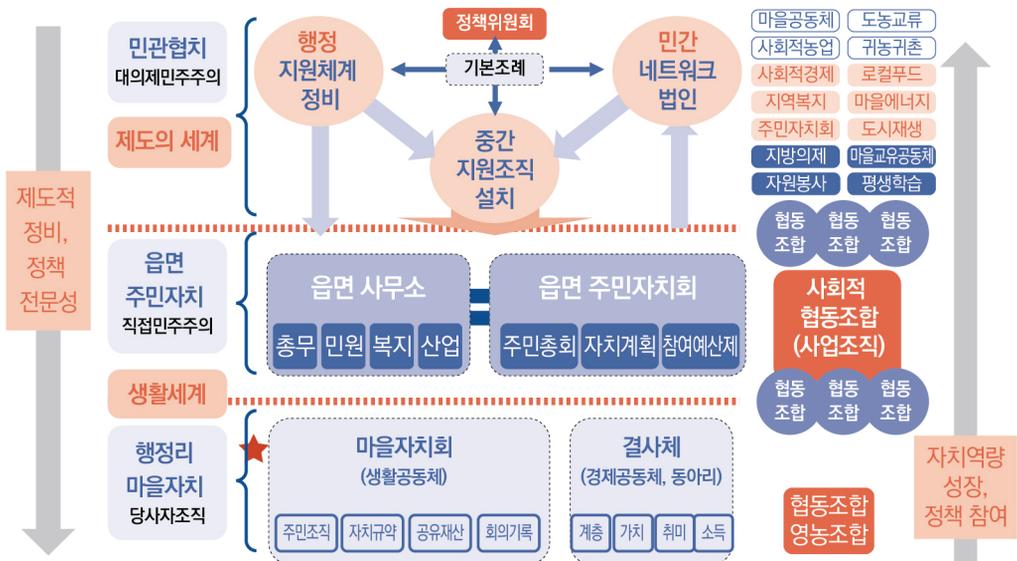
연구진: 국회나 정부에서 선호미래 사회의 모습을 생산하고 확산하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담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구자인: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미래 구상은 ‘그냥 무시, 무관심, 혹은 쓸데없는 일’로 치부한다. 지자체에서도 중장기 구상이 선거 이후에 항상 등장하고, 도시재생이나 농촌협약에서도 20년 장기 구상을 제시하지만 믿는 사람은 없다. 현장과 정책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고, 작은 꿈조차 실현하게 해주지 못하는 중앙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에서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망한다”는 소리까지 한다.

예를 들면, 농식품부 계열에서는 ‘농산어촌 유토피아’란 정책을 시도해왔는데 지역주민들은 용어부터 거부감을 보였다. 마을활동가들은 “더도 말고, 덜지도 말고 5년 앞을 내다보자”고 농촌 마을에서 말하지만, 이조차 쉽지 않다. 꿈과 희망을 포기한 적은 없지만,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혹은 이용당한다는 불신감)이 크다.

연구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체계를 갖춰야 주민들이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구자인: 무엇보다 기초 자치단체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어렵다. 대의제 민주주의로는 한계가 명확하다.³¹⁾ 지자체 규모가 크다 보니 정보를 발신하고 수신하는 경로가 행정망에 의존하고 제도적으로만 이루어진다. 주민들의 실생활권에 해당하는 읍면동 단위로까지 정책이 내려와야 주민들과의 접점이 넓어지고 길어진다. 읍면동을 기반으로 행정통리까지 지원하는 정책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미래설계가 가능하다(그림 7-1) 참고). 보충성 원리에 비추어 행정적 층위에 맞게끔 자치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그림 7-1] 보충성원리에 비추어 행정적 층위에 맞게 강화되는 자치분권 운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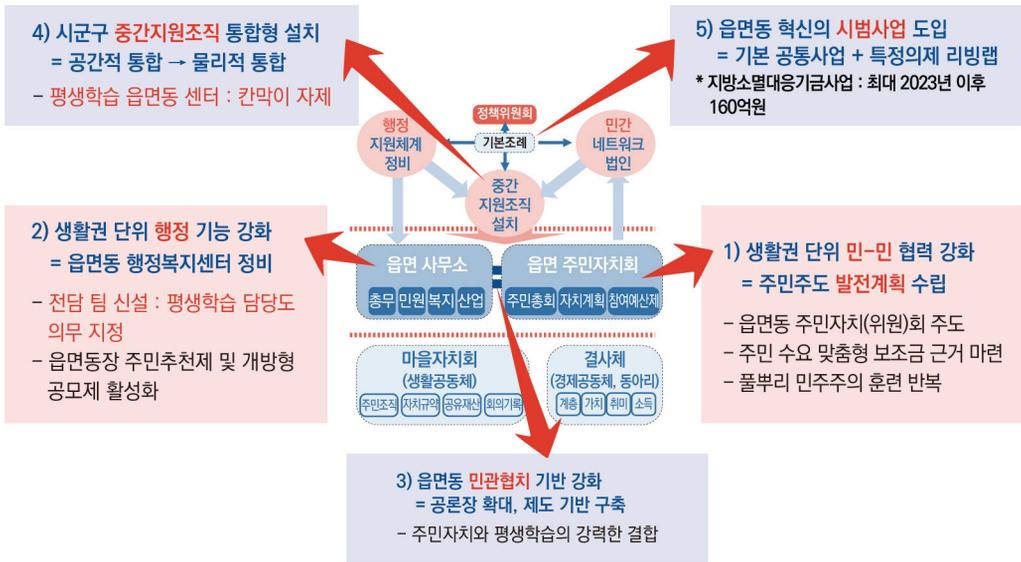
31) 마을학회 일소공도 외. (2022). 마을 9호 트임2 특집 주제 참고

연구진: 선호미래상을 실현하려는 주체, 조직, 자원, 경험이 있는가?

구자인: 전국의 농촌 마을만들기나 주민자치회에서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미래상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깨끗한 환경, 성장의 기회, 좋은 이웃 관계, 사회적 안전망 등 비슷하다. 이런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공공행정의 역할인데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물론, 전국적으로 농촌 마을과 면 단위의 성공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민간 실천이 제도의 장벽에 부닥쳐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12월 22일에 활동가들이 모여 좌담회를 진행했던 경험에서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확인했다. 활동가들이 꼽은 당면과제는 읍면동 생활권 단위에서 '정책 칸막이'를 행정도 민간도 극복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그림 7-2) 참조). 시군구 단위에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난이도로 보자면 시군구 단위의 민관협치형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쉽고, 그 다음이 읍면 단위 시스템이다. 행정통리 단위의 마을 자치 시스템이 가장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풀뿌리 역량 강화에 계속 집중해야 한다. 지금은 부처별로, 지자체 부서별로 정책사업을 집행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균형발전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시재생, 농촌협약 등의 대규모 국도비 사업들이 각각 시행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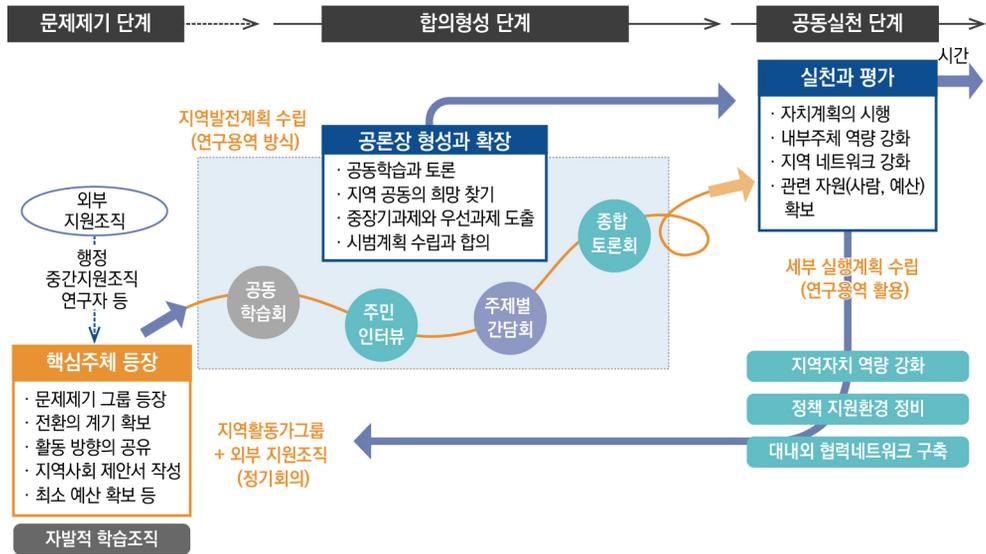
[그림 7-2] 읍면동 단위의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

연구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구자인: 지역 현장에는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이 여전히 어렵게 활동하고 있지만 정책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 특히 농촌은 초고령화 상황에서 민간 활동가도 아주 소수이고, 운동 세력으로서도 매우 제한적인 역할만 한다. 행정 칸막이가 민간 칸막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소수의 활동가조차 동원되거나 ‘힘 빠지는 싸움’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마을만들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그림과 같다. 현장 주체 그룹이 조금이라도 형성되어 있는 ‘적절한 변방’에서 5년, 10년 앞을 내다보며 활동할 수 있는 기반(예산 지원)을 제공하고, 여기에 외부에서 ‘좋은 신호’를 보내고 응원하는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내부에 공론장을 형성하고 합의 과정을 반복하며 작은 공동실천을 전개하면서 시행착오를 수정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선호미래를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다.

연구진: 전국의 시도지역별로 선호미래상이 다를 텐데 국회미래연구원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림 7-3] 읍면동 생활권 단위 지역발전의 3단계 모델

구자인: 시군구 기초지자체의 협조를 받되, 읍면동 단위(특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주민총회를 경험한 곳)에서 미래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선도사례에서 부닥치고 있는 한계를 알아야 법 제도의 정비과제가 도출되고 국회미래연구원의 역할도 확인될 것이다. 주민자치회와 사전에 협의절차를 가지면 이런 기획이 훨씬 더 세련되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대도시-도농 통합시-농산어촌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지역마다 당면과제가 다르다. 특히 생산의 기반(소득의 원천)에 따라 지역 실정이 매우 다르다. 참여 주체를 고려하자면 도시지역은 주말에, 농촌은 농번기를 피해 개최해야 한다. 아울러 소외되는 영역이 없도록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행정망을 통하면 기존에도 발언권이 강한 사람만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주민자치회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읍면동 소생활권에서 개최하면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쉬워진다.

미래워크숍의 진행자 역량도 중요하다. 퍼실리테이터로서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진행해야 한다. 서로의 마음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은 분위기 조성부터 시작하여 노련한 사람이 필요하다.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연속 진행을

권한다. 흔히 농촌 마을에서는 현장 포럼이란 사업을 통해 미래 발전구상을 5~8회에 걸쳐 만든다. 본인들의 실생활 공간임에도 미래 구상에 대해 작은 합의를 하는 데 이 정도 횟수가 필요하다. 미래워크숍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번 행사로는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미래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일치시키는 방향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머징 시티즌'이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결합한 선호미래상을 도출할 수 있어야 실현할 수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추진하는 '소수약자'를 배려하는 선호미래상도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실현 가능해야 한다. 소수약자를 배려하는 지역사회가 되면 좋을 것인데, 당사자의 목소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지역사회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참고문헌

1. 문헌자료
2. 웹사이트

참 고 문 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문헌자료

- 경향신문. (2022.9.5.).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 38조” ‘탄소세 도입’이 절실한 이유
- 고병권. (2014). “살아가겠다”: 고병권이 만나 삶, 사진, 사람. 삶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4.16.).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R&D 가이드라인
- 관계부처 합동. (2021.7.7.).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9). 사회문제해결형 R&D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정책연구 보고서
- 국립산림과학원 보도자료. (2020.4.1.). 아낌없이 주는 숲, 우리 산림의 공익적 가치 221조원: 국립산림과학원, 2018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발표
-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2021).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 경향신문. (2022.9.5.)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 38조” ‘탄소세 도입’이 절실한 이유
- 김귀옥. (2014). 구술사 연구: 방법과 실천. 한울
- 김문선. (2022.7.5.). 주요국의 실버시장 현황과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Trade Brief. No12, 재인용
- 김석호 외. (2021). 국가사회 발전지수 개발을 위한 이론체계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성경. (2014).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이방인’, 탈북자, 북한학연구, 10(1)
- 김유빈 외. (2018). 미래영향 환경변수 및 시나리오 도출 연구: 연구방법과 주요결론,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18-01
- 김윤영. (2022.5.11.). 증가하는 노인 노동, 일하는 노인의 권리에 주목할 때.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보고서

- 김윤영·정환봉. (201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상처를 남긴 이유. 북콤마
- 김이선 외. (2020) 이주여성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사회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정섭·이정해. (2017).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정 포커스
- 김지영. (2022). 프리랜서 연극인 지원정책 제안. 대구 프리랜서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 자료집
- 김형숙. (2012).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 뜨인돌
- 남경태. (2006). 개념어 사전. 들녘.
- 농림축산식품부. (2021.12). 2021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로버트 달. (1999).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문학과지성사
- 마을학회 일소공도 외. (2022). 마을 9호. 시골문화사
- 문선희. (2019). 묻다: 전염병에 의한 동물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기록. 책공장더불어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 예술인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21). 코로나19로 문화 향유, 여가 활동의 비대면화 가속: 2021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국민여가활동조사'·'근로자 휴가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2). 전 세계적인 한류로 콘텐츠 수출액 14조 원 돌파: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2021년 실시) 결과 발표, 보도자료.
- 민보경 외. (202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박경숙. (2022). 대구 연극 창작환경 분석 및 개선과제. 대구경북연구원.
- 박상훈. (2017). 민주주의의 시간: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후마니타스
- 백정연. (2022).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 다양한 몸 사이의 경계를 허물기 위하여. 유유.
- 박성원. (2020).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호.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2021).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국가미래전략 Insight 21호,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외. (2019). 한국인 선호미래 조사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외. (2021a). 이머징 이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외. (2021b).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2022.2.28.). 성장사회와 성숙사회. 한겨레.
- 박성원. (2022.5.16.). 새 대통령이 살펴야 할 3가지 징조. 한겨레.
- 박수명. (2013). 청년 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관하여: 고용, 실업, 비정규직의 관점에서. 한국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pp.113-131.
- 버나드 마넝. (2004). 선거는 민주적인가. 후마니타스
- 법무부 보도자료. (2021.7.7.). 인구감소시대, 외국인 역량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법무부 제3기 인구정책 TF 외국인정책반 과제 발표, 미래인력·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수 외국인재 유치 및 사회통합 지원
- 보건복지부. (2018).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1단계: 노인 커뮤니티 케어 중심
- 보안뉴스. (2022.7.30.) CJ대한통운, 작업자 근력 강화 '웨어러블 슈트' 개발
- 산림청. (2018.1.). 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18~2022)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2).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주민 통일의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성지은 외. (2012).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과 백캐스팅: 네덜란드의 지속가능한 교통·식품·가정 시스템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12(2):81-116.
- 손수나·유지연. (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문화예술 지원정책 방향 연구: 경남 지역 공연예술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과 문화 9(1):1-20
- 손신영. (2006). 농촌 노인과 도시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6(3): 601-615
- 송위진. (2013). 사회·기술시스템론과 과학기술혁신정책, 기술혁신학회지 16(1):156-175.

- 양철. (2022). DMZ 접경지역의 탄소중립 전략의 주요 내용. 국회미래연구원 발표 자료.
- 엄진영 외. (2020).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여성가족부. (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예술경영지원센터. (2021).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피해현황 조사 보고서: 2020년 총결산.
- 유승현. (2015). 지역사회 건강증진 연구방법 및 전략으로서의 포토보이스.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2(1): 77-87.
- 윤자호. (2022.3.30.) 결혼이주여성 노동실태와 현황: 결혼이민자(F-6)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이슈페이퍼 2022-05호
- 이규창. (2022).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정착지원 개선에 관한 연구: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2022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 이테일러. (2022.7.22.) 아름다운 제주 바다 같나요? 여긴 '사막'입니다.
- 이상호. (2022).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 2022년 봄호
- 이희영. (2012).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경험과 정체성의 변위: 북한 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2(1)
- 장애여성공감 엮음. (2020). 시설사회: 시설화된 장소, 저항하는 몸들. 와온
- 전경숙. (2021).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청년정책의 방향성 고찰. 입법과 정책, 13(1), 117-146
- 전명진·문성원. (2016). 노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 노인 비교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2):153~172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2.6.23.) 임무지향적 혁신을 위한 ICT R&D 추진방안, 2022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정은주. (2021). 그렇게 가족이 된다: 핏줄신화를 넘어 또 다른 가족을 상상하며. 민들레
- 제주일보. (2021.1.18.). 고령화에 진입장벽까지... 제주해녀 '사라진다'

- 제주의소리. (2022.8.22.) 물질하면 20만원-은퇴하면 30만원 '제주 해녀 은퇴 논쟁'
- 제주특별자치도. (2021). 해녀어업 보존·육성 및 문화전승 기본계획
- 조남재. (2014). 기술기획과 로드매핑: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주)시그마프레스
- 조선미디어 더 나은미래. (2022.8.24.) 유럽 지역 3분의2, 가뭄에 고통... 500년 만에 최악.
- 최새술. (2021). 탄소중립시대의 ICT: 기회와 도전, ETRI 기술정책 이슈 2021-17
- 최은영. (2022). 북한이탈주민 남한적응 실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조사사업 10년 발표회 발표문.
- 최종렬. (2012). “사회학, 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이론』 41:121-168.
- 최현숙. (2018). 구술생애사의 쓸모: 최현숙의 『할배의 탄생』. 작가들 66:134-160
- 충청투데이. (2021.6.30.). 근력증강 로봇, 직접 입어보니...“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 같아”
- 통계청·법무부. (2021).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통계청. (2021) 2021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 통계청. (2022).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이주여성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사회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1). 지능정보사회로 가는 길: 기술발전지도 2035.
- 한국행정학회 대한민국 미래100년 특별위원회. (2021).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히로이 요시노리. (2021). AI가 답하다 “일본에게 남은 시간은?”. 학교재.
- Alison Bashford and Carolyn Strange. (2003). “Isolation and exclusion in the modern world: an introductory essay.” Pp. 1-18 in Isolation: Places and practices of exclusion, edited by Carolyn Strange and Alison Bashford. Routledge.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 Castleden, H. & Garvin, T., Huu-ay-aht First Nation. (2008). Modifying Photovoice for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Indigenous research. *Social Science & Medicine*, 66: 1393-1405
- Chang, Kyung-Sup. (2011).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 Routledge.
- Cheah, Pheng. (2003). Ch.1 Grounds of Comparison (pp.1-20). Eds. Jonathan Culler and Pheng Cheah, *Grounds of Comparison*. New York: Routledge.
- Creswell, John W. and Cheryl N. Poth. (2021).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학지사.
- Dasgupta, P. (2021). *The Economics of Biodiversity: The Dasgupta Review*. London: HM Treasury.
- Dennis Gabor. (1972). *The Mature Society*.
- Du Bois, W. E. B. (1999). *The Souls of Black Folk*. Eds. Henry Louis Gates Jr. and Terri Hulme Oliver. New York: Norton.
- Glaser, B. G., & Strauss, A. L. (201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Routledge.
- Goffman, E. (2018). *수용소: 정신병 환자와 그 외 재소자들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에세이(Asylums: Essays on the Social Situation of Mental Patients and Other Inmates)*. 심보선 역. 문학과지성사.
- Hughes, T. P. (1987). The evolution of large technological system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s. *New Directions in the Sociology and History of Technology*, BijkerWE, HughesTP, PinchTJ (eds). MIT Press: Cambridge MA, 51-82.
- Inayatullah, Sohail. (2012). "Futures Studies: Theories and Methods." In *There's a Future: Visions for a Better World*. Madrid: BBVA, 2012.

- Park, Seongwon. (2012). "Fostering a Political Society in South Korea through Participation in Futures Studies." Ph.D. dissertation at University of Hawaii.
- Preece, Jennifer Jackson. (2005). *Minority Rights: Between Diversity and Community*. Polity.
- Quist, J. (2008), Does Backcasting Lead to System Innovations to Sustainability? The Case of Meat Alternatives and Novel Protein Foods, Paper for the 2008 Berlin Conference "Long Term Policies: Governing Socio-ecological Change".
- Ramirez, R., & Wilkinson, A. (2014). Rethinking the 2× 2 scenario method: Grid or frame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86, 254-264.
- Schilling, M. A. (2012).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4th Edition). McGraw-Hill/Irwin.
- Smith, D. E. (2005). *Institutional ethnography: A sociology for people*. Rowman Altamira.
- Wang, Caroline., (1997). Photovoice: Concept, Methodology, and Use for Participatory Needs Assessment. *Health Education & Behavior*, 24(3), 369-387.

2 웹사이트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탈북학생 현황: 출생지별 탈북학생 수 변화,”

〈<https://www.hub4u.or.kr/webmdl/sub4uStudentStatus/menuHtmlDetail.do>〉(검색일: 2022.9.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홈페이지〉 (검색일: 2022.9.5.)

ETRI 공식 유튜브, “ETRI가 만드는 2035 미래상 - 기술발전지도(에피소드2),” 〈https://www.youtube.com/watch?v=CQwBu8_sBqo&t=50s〉 (검색일: 2022.12.21.)

게티이미지뱅크, 〈https://www.gettyimagesbank.com/goodsNew?utm_source=google&utm_medium=cpc&utm_campaign=GIB&ACE_REF=adwords_g&ACE_KW=%EA%B2%8C%ED%8B%B0%EC%9D%B4%EB%AF%B8%EC%A7%80%EB%B1%85%ED%81%AC&gclid=Cj0KCQiA14WdBhD8ARIsANao07hKUL6nneJSXfrfjGtGqu6F_vwzk3B8kwSKD7Pr-y3U8xxgcBvvtjAaAmGcEALw_wcB〉 (검색일: 2022.12.21.)

농림축산식품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20년 기준)은 20.2%, 식량자급률은 45.8%이며, 밀·콩 자급률 제고 등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 중,” 〈<https://www.mafra.go.kr/mafra/294/subview.do;jsessionid=pujTAXsvZdNFR+7b9E9w4OIo.inst11?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OSUyRjMzMDAyMyUyRmFydGNsVmllldy5kbyUzRg%3D%3D>〉 (검색일 2022.12.21.)

이프랜드 공식 유튜브, “[#기어이] #이프랜드메타버스컬처프로젝트 #잃어버린얼굴1895x메타버스뮤지컬” 〈<https://www.youtube.com/watch?v=cwl92bvLV-4&t=44s>〉 (검색일: 2022.12.21.)

통계청,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예술행사 관람 통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content-group〉 (검색일: 2022.12.21.)

Abstract

A Study on the Policy of the Future and People's Preferenc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uthors: Park, Seongwon et. al.

Th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has been undertaking a research project that prioritizes th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in the identification of preferred futures and their accompanying policies. This approach is based on the belief that forecasting should be inclusive, involving the input of a diverse range of individual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daily realities of citizens, rather than being the exclusive domain of experts or government officials. This year, the study engaged 120 diverse participants, including residents of the DMZ border area in Gangwon-do, multicultural immigrant women in Daejeon and Sejong, performing artists in Daegu, young farmers in Cheonbuk,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are workers in Kwangju and Ceonnam, and haenyeo (woman divers) in Jeju Island. The research aimed to elicit their hopes for the future and the policies necessary to realize them. Participants expressed a desire for mor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future forecasting.

Moreover, the study sought the perspectives of experts and social activists working on issues such as adoption, disability, poverty, livestock slaughter, and death, to gain insight into the kind of future society that should be pursued for the benefit of marginalized and vulnerable groups. Additionally, young people who were struggling to shape and pursue their own futures

were also consulted. The study also heard from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learned about their aspirations while settling in South Korea. These efforts contributed to the preferred future prese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in 2021 and were critical in the pursuit of a “mature society that prioritizes the needs of marginalized and vulnerable groups.”

The study analyzed the current and future problems discussed by diverse participants, including marginalized and vulnerable groups, and young people, and examined whether they could be address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is process, close collaboration was made with the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and as a result, science and technology solutions were proposed to enhance the feasibility of the preferred future. The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also co-hosted the “Future Photo Exhibition,” in which citizens submitted photographs that they felt represented signs of the future, which were displayed a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Hall.

The study referred to marginalized and vulnerable groups, who will become the majority in the future, as “emerging citizens.” The problems they currently face are likely to become more widespread in society, and their actions offer a glimpse into alternative futures. The study argues that policies that address their needs should be a priority for discussion. It is essential that the dialogue with citizens continues.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useful foundational data for promoting alternative futures for society.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 이머징 시티즌과 미래 대화

인 쇄 2022년 12월 26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현 곤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22호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
인 쇄 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02-6948-9650)

©2022 국회미래연구원

ISBN 979-11-982065-2-7 (93300)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